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

57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강덕상 · 아마다 쇼지 · 장세윤 · 서종진 외 지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발간사

1923년 9월 1일 일본 관동(關東)지방에서 일어난 대지진 직후에 일본 도쿄 등 관동지방에서 자행된 재일조선인 학살은 민족차별과 편견에서 비롯된 한 민족의 일대 수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90년 전 관동대지진의 대혼란과 일본 정부 당국의 사주 속에서 발생한 재일조선인 학살사건의 실상과 의미를 성찰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동대지진 발생 직후 일본 당국은 계엄령을 선포하여 일본 국민을 강력히 통제하는 한편, 언론 보도도 막았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당국과 군·경, 자경단 등 민간인들이 저지른 한인 학살의 진상은 제대로 파악되지 못했고, 일본 내외부로 잘 알려질 수 없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이러한 사실조차 무시하고 조선인 학살 만행을 호도하고 왜곡하려는 일련의 역사퇴행적 동향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동대지진 때 조선인의 피해가 6천 6백여 명에 달했다는 《독립신문》의 보도 내용이 널리 수용되었습니다만, 최근 2만 3천여 명이 피살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추후 정확한 피해의 진상규명과 치밀한 연구가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 학계에서는 학살된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진상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며, 그 교훈을 오늘에 되살리는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 어떻게 기억하고 추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우리 재단은 관동대지진 90년을 맞이하여 지난 8월

22일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90년 전 일본 관동대지진이라는 엄청난 재해 속에서 발생한 '재일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일본과 한국에서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찾고, 성찰해야 하는지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책은 학술회의의 결과물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이 책이 과거 일본에서 일어났던 엄혹한 학살사건을 직시하고, 그동안 묻혀 있던 사실을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여 한일 간 역사인식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작은 주춧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0년이 지나도록 학살사건에 대한 진지한 연구는 물론,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점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 문제와 역사인식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과 갈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은 극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 국내에서 관동대지진 때 피해를 입은 일부 한국인들에 관해 조사를 하고, 그 기록을 남긴 명부가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재단은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연구와 관련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지난 8월의 학술회의에 직접 참가하셔서 기조강연을 맡아주신 강덕상, 야마다 쇼지 선생님과 귀중한 원고를 발표하여 주신 다나카 마사타카 교수님, 모리오카 후미토 변호사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내의 강효숙 교수님, 김인덕 교수님, 김종수 목사님과 우리 재단의 서종진 연구위원, 장세운 연구위원을 비롯해 이 책이 발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훌륭한 책을 만들어주신 출판 담당자들도 사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2013년 11월 10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학준

책머리에 11

제1부 | 한일관계와 관동대지진의 역사적 의의

- 한일관계에서 본 관동대지진 강덕상 19

- 일본 민중은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오늘날 일본의 정치적·사상적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아마다 쇼지
 - I. 머리말 -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필자의 문제의식에 대하여 45
 - II. 관동대지진 전야에 발생한 조선 해방을 위한 일본인·조선인 연대지향의 맹아 46
 - III. 식민지 해방 슬로건을 채택한 1923년 5월 도쿄의 메이데이에 대한 경시청의 대탄압 50
 - IV. 관동대지진시의 조선인 학살 52
 - 1. 관헌이 유포한 조선인 폭동 유언(流言)과 조선인 학살의 용인 발언 52
 - 2. 군대 출동과 계엄령 포고 56
 - 3. 자경단이 만들어진 방법과 그 사상 57
 - V. 조선인 학살의 국가책임을 은폐하는 일련의 공작 64
 - 1. 조선인 폭동의 날조공작 64
 - 2. 학살된 조선인의 유체 은폐 68
 - 3. 관동대지진의 역사서 편찬에 의한 경시청의 책임은폐 69
 - VI.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아시아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인식 변화 70
 - 1.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와 도쿄도 교육위원회의 관동대지진시 조선인 학살사건의 사실(史實) 왜곡정책 등장 70
 - 2. 자유주의사관의 등장 71

3. 자민당 극우파 아베 신조[安倍晋三]의 등장과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 인식의 왜곡 동향	74
VII. 맺음말	80

제2부 | 관동대지진에 대한 연구와 교육

• 관동대진재 당시 피학살 조선인과 가해자에 대한 일고찰 <small>강효숙</small>	
I. 머리말	85
II. 피학살 조선인 수	91
III. 일본 정부의 가해자에 대한 처리	112
IV. 맺음말	125
• 전후 일본의 역사교육과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small>다나카 마사타카</small>	
I. 머리말	129
II. 역사교과서 분석	130
III. 전후 역사교육과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133
IV. 맺음말	136
• 일본 교과서의 관동대지진과 학살사건 기술 내용 분석 <small>서종진</small>	
I. 머리말	153
II. 일본 보수세력의 교과서 공격	155
III. 일본 언론의 관동대지진 관련 교과서·부교재 기술에 대한 보도	158
IV. 초중고 교과서의 관동대지진과 학살사건 기술 사례와 내용 분석	161
1.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총수(總數)	166
2. '조선인' 희생자 수	167

3. 학살의 주체	168
4. 유언비어	169
5. 도판	170
V. 맺음말	172

• 한국 역사교육 속의 재일조선인과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김인덕

I. 머리말	179
II. 한국의 재일조선인사 서술 경향	182
1. 최근의 재일조선인사	182
2. 재일조선인사 서술의 일반	186
3. 1923년 관동대지진 속 조선인 학살 서술	189
III. 관동대지진 속 조선인 학살 서술안	192
1.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193
2. 유언비어	194
3. 일본 사회운동과 치안상황	195
4.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조선인 학살	196
5. 일본 언론	198
6. 6천 명이 넘는 조선인의 죽음	199
7. 일본 사회주의자	200
8. 조선인 학살과 그 뒤	201
9.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의미	202
IV. 맺음말	203

제3부 | 관동대지진과 남겨진 과제들

• 관동대지진시 한인 학살에 대한 《독립신문》의 보도와 최근 연구동향 장세윤

I. 머리말 - 진상구명을 위한 현황 파악의 필요성	207
II. 《독립신문》의 관동대지진시 한인 학살 관련 보도	212
1. 《독립신문》 개관	212
2. 한인 학살 관련 보도내용의 개략적 검토	214
III. 《동아일보》·《조선일보》의 보도 개관	225
IV. 한국 학계의 관동대지진시 한인 학살문제 연구와 서술	229
1. 한국 학계의 연구동향	229
2. 최근 고등학교 교과서의 관동대지진시 한인 학살 서술	231
V. 북한 학계의 관동대지진 관련 서술	234
VI. 일본과 미국 학계의 동향	236
1. 일본 학계의 동향	236
2. 미국 학계의 동향	239
VII. 2013년 관련 학술회의 동향	241
VIII. 맺음말 - 당면과제와 전망	243

• 1923~2013년 관동대지진 90년, 우리들은 국가·민족을 극복했는가? 모리카와 후미토

일본연(日弁連) 권고의 의의와 일본 정부의 민중분단정책의 책임

I. 문제의식 - 배외주의는 다시 힘을 갖는 것인가	249
II. 1920년대 관동대지진시 일본, 아시아의 계급을 둘러싼 상황	250
III. 관동대지진시 학살의 국가책임 - 일본변호사연합회 권고의 의의	252
IV. 국가책임의 본질 - 내셔널리즘에 의한 계급대립의 '회수'	253

V. '일본인으로서 책임'이라는 것은	255
VI. 우리들은 국가·민족을 극복할 수 있을까?	255
VII. 2013년 정세 - 세계적인 공황정세의 계속과 세계의 민중투쟁	257
VIII. 민중·노동자 계급 공통의 적으로서 신자유주의 - 민영화·외주화·비정규화	258
IX. 국가의 책임을 철저히 추급하는 일이 민중(계급)의 국제연대	260

•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을 규명하는 한국에서의
시민운동 김종수

I. 간토 조선인 학살사건 규명활동의 출발	263
1. 계절학교에서 만난 증언자 이야기야 다에코	264
2. 신주쿠 고려박물관에서 열린 간토 패널 전시회	265
3. 간토 조선인 학살사건이 한국 국회로	266
II. 도쿄에서 간토 조선인 학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연대조직 출범	268
III.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한일재일 시민연대 사업	278
1. 사진자료 전시회와 학술 심포지엄	278
2. 학살현장을 찾아가는 스티디투어	285
3.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입법화 운동	294
4.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추도사업	300
5. 학살 희생자 유족찾기 사업	301
IV. 한국에서의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운동의 평가와 과제	304
1.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운동의 평가	304
2.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운동의 향후 사업과 과제	305
찾아보기	307

1923년 9월 1일 관동대지진이 발생한지 90년이 지났다. 당시 일본 당국이 조선인을 비방하는 날조된 유언비어의 확산을 방관하고 계엄령을 선포한 상황에서 군, 경찰, 자경단에게 조선인, 중국인, 일본인 노동운동가와 사회주의자들이 무참하게 학살되었다. 그러나 9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학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학살사건 이후에 당국의 의도적인 방해와 은폐 때문이다. 그 결과 사건의 실체가 정리되지 못한 채 가해자 측의 사죄도 없이 억울하게 희생당한 이들을 위한 추도비조차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고 세월이 흘렀다.

현재 한일 양국은 역사문제로 인해 갈등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양국의 역사인식의 차이는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책임이 모호하게 처리된 것에 기인한다. 해방 후, 한일 양국에서 새로운 세대가 각 분야의 주류로 등장하면서 역사문제로 인한 갈등관계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먼저 과거사의 실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가운데 하나가 관동대지진 당시의 조선인 학살사건이다.

이 책은 관동대지진 당시 학살사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랫동안 선구적으로 연구해 온 강덕상 선생님과 야마다 쇼지(山田昭次) 선생님을 비롯한 연구자와 시민운동가의 글을 엮은 것이다.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부 '한일관계와 관동대지진의 역사적 의의'는 관동대지진과 학살사건에 대한 연

구사 소개부터 쟁점과 문제의식, 현재의 의미 등을 정리한 것이다. 제2부 ‘관동대지진에 대한 연구와 교육’과 제3부 ‘관동대지진과 남겨진 과제’는 제1부에서의 강덕상과 야마다 쇼지의 문제제기와 쟁점들에 대한 각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일 양국의 연구 현황과 함께 새롭게 발굴된 자료 소개, 한국과 일본의 관동대지진 관련 교과서 기술 현황 분석, 당시 언론의 보도 내용 분석, 그리고 현재 한일 양국의 관동대지진 관련 시민운동과 과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관동대지진과 학살사건, 특히 조선인 학살사건의 실상을 이해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증언과 언론 그리고 사진 등의 자료도 적지 않게 실려 있어 관동대지진과 학살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에 수록된 글들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먼저, 제1부는 관동대지진에 대한 기초 자료의 수집·정리와 연구의 개척자로서 강덕상과 야마다 쇼지의 글이 게재되어 있다. 관동대지진 연구의 권위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강덕상은 한일관계라는 큰 틀에서 관동대지진을 바라보고 있다. 관동대지진 관련 연구사를 언급하면서 계엄령 발포 사실에 주목하여 유언비어의 발생과 관련한 ‘관현설’을 보완하고 있다. 식민지 지배하에서 일본의 침략에 대한 조선인의 저항운동으로 계엄령이 선포되고 조선인이 표적이 되었다는 것이다. 식민지 지배-피지배 관계에서 민족대결이라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학살이 자행되었다는 점에서 관동대지진 당시의 조선인 학살을 ‘국가범죄’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재일(在日) 코리언 100년사에서 관동대지진에 대한 기억은 재일 코리언들에게는 트라우마가 되었고 이는 현재의 반한·협한 움직임과 함께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다.

야마다 쇼지는 조선인 학살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현재 일본의 상황에 대해 언급하면서 조선인 학살에 대한 ‘국가책임’과 ‘민중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재

판 기록과 언론 보도, 증언 등의 자료를 제시하면서 관헌들이 조선인 폭동을 날조하고 이로 인한 유언비어를 유포, 군경과 자경단에 의한 학살, 희생자 유해 은폐 등의 실상을 파헤치고 있다. 당국의 사실 조작과 은폐 때문에 희생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학살사건에 대한 국가책임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학살에 가담한 민중들도 학살의 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제2부, 제3부에서도 기술하고 있듯이,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가 주도하여 제작한 부교재의 관동대지진 관련 기술에서 조선인 학살사건 부분을 수정하거나 ‘왜곡’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중심으로 한 자민당 극우파와 자유주의사관을 가진 그룹과의 연대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제2부에서 강효숙은 관동대지진 관련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조선인 희생자 수와 가해자에 대한 처리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 비해 한국의 연구 성과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축적된 연구 성과에 대한 재조명, 종합적인 비교·분석 작업과 함께 학살 현장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특히, 한국에서는 피학살 ‘조선인’의 신원을 규명하고 유족을 찾는 작업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또 당시 조선인 희생자 수를 파악하고자 했던 여러 단체의 노력을 언급하면서 조선인 희생자 수와 관련하여 독일 외무성 소장 자료를 발굴하여 처음으로 공개하고 있다. 향후 이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이 자료에 의하면 종래 알려진 6,661명이라는 조선인 희생자 수 보다 약 4배가 많다.

다나카 마사타카(田中正敬)는 전후 일본의 역사교과서 분석을 통하여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교육 현황을 기술하고 있다. 충분하지는 않지

만, 학살과 관련한 기술이 처음 교과서(고등학교)에 등장한 것은 50년대 중반 이후이며 90년대 중반에 각종 출판물이 다수 간행되면서 관련 기술이 확대되었다고 한다. 교과서의 기술 변화는 지역 활동에서 밝혀진 것과 연구자의 성과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학교 교과서의 기술 현황을 살펴보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발간하는 교과서에서 조선인 학살사건 관련 기술을 누락시키고 있으며 다른 교과서 기술에서도 희생자 수와 학살의 주체를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나가 마사타카는 교과서 기술의 모호함을 비롯한 희생자 수의 ‘애매함’은 국가가 저야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다고 글을 맺고 있다.

서종진은 교육기본법 개정과 학습지도요령 개정 이후에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초중고 검정 교과서의 관동대지진 관련 기술 내용을 분석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다나가 마사타카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일본 보수우익세력의 교과서 공격과 관련해 총 27종의 초중고 교과서 구판과 신판의 비교를 통해 교과서 기술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총수에 대한 기술에 검정의견이 붙어 그 수가 축소되었으며, 희생자 수와 학살의 주체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한 교과서가 적어지고, 학살사건을 연상시키는 도판도 감소했음을 확인하였다. 또 요코하마시와 도쿄도의 부교재에서 ‘학살’이란 용어 대신 ‘살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등의 움직임이 있어 앞으로 교과서 기술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인덕은 한국 역사교육에서의 재일 조선인에 초점을 맞추면서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사건의 서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재일 조선인사에 대한 연구 현황을 검토하여 교과서에서 재일 조선인사에 대한 기술이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기술 현황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 교과서 가운데에는 관동대지진에 대해 언급이

없는 교과서도 있다. 그리고 '관동대지진 속 조선인 학살 서술안'을 9개 항목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사회적 약자로서 조선인, 유언비어, 사회운동과 내무성, 천황제 이데올로기, 일본 언론, 6천명 이상 학살된 조선인, 사회주의자의 희생, 재일 조선인의 조사활동, 기억과 책임 문제 등이다.

제3부에서 장세윤은 관동대지진 당시 '한인' 학살에 대한 언론 보도와 연구 동향을 정리하였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6,661명이라는 조선인 희생자 수의 근거가 되는 《독립신문》에 실린 기사를 포함하여 1923년부터 이듬해까지의 관동대지진 관련 보도 내용을 정리하였다. 또 《동아일보》, 《조선일보》, 《삼천리》 등 당시 언론에 게재된 관동대지진 관련 내용과 기록 등도 소개하여 당시의 상황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각국의 연구 현황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모리카와 후미토(森川文子)는 변호사로서 2003년에 일본변호사연합회가 관동대지진 관련 국가책임을 묻기 위해 일본 총리에게 제출한 권고안의 의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1920년대와 현재의 상황이 정부의 '민중분열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보고, 관동대지진 당시의 계엄령하에서의 위기감 조장과 관헌의 학살과 은폐 등에 국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는 일본변호사연합회의 권고안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국제사회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중수는 '1923 간토헌일 재일시민연대' 상임대표로서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시민운동에 참여한 귀중한 경험과 활동 내용을 정리하였고, 한국과 일본의 시민운동가들과 연대하면서 학살된 재일 조선인의 명예 회복과 진상 조사 등 현재까지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이 글에는 관동대지진의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해 온 많은 관계자들의 증언과 성명서 등의 자료가 함께 실려 있다. 또한 향후 과제로 한일 양국의 연

대를 통해 국회 입법화를 통한 피해자들의 진상 규명, 희생자 추도, 유족 찾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이 책에 게재된 글들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이 책은 국제학술 회의에서 발표한 글들을 엮은 것이므로 글이 중복되거나 용어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 책에의 필자들은 한국과 일본에서 관동대지진에 대해 선구적으로 연구해 온 권위자들이며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전문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동대지진과 조선인학살사건을 이해하고 문제의식을 갖는 데 일반인들은 물론 연구자에게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이다.

마침 지난 11월 19일에 한국 국가기록원이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발견한 '일본 진재시 피살자 명부'를 포함한 조사 자료를 공개했다. 1952년 한일회담 결렬 후 1953년 한일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자료에는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희생자 290명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일본 사법성이 발표한 약 230명이라는 통계 조사가 허구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다. 이미 9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현 시점에서 관동대지진과 관련하여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해주는 중요한 자료다. 이 책이 관동대지진과 학살사건의 실태와 본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향후 이 글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연구와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이 심화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90년 전에 억울하게 희생당한 분들의 한을 풀고 넋을 위로하는 데 미력하나마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관동대지진 90주기 12월
집필자를 대표하여 서 종 진



제1부

한일관계와 관동대지진의 역사적 의의

1. 강덕상 _ 한일관계에서 본 관동대지진

2. 야마다 쇼지 _ 일본 민중은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오늘날 일본의 정치적·사상적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강덕상(姜德相)

한국근대사 전공, 재일한인역사자료관 관장

대표논저로는 『關東大震災』(1975, 中公新書), 『朝鮮獨立運動의 群像』(1984, 青木書店), 『朝鮮人學徒動員』(1997, 岩波書店), 『關東大震災·虐殺의 記憶』(2003, 靑丘文化社) 등이 있다.

한일관계에서 본 관동대지진

재일한인역사자료관 강덕상

필자가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의 연구사다. 일본의 관동대지진이 역사문제가 된 것은 1960년대다. 1960년대는 역사학에 메스가 가해졌던 시기이며 필자가 『역사학연구(歷史學研究)』에 ‘학살의 실태’에 대해서 발표한 것도 바로 60년대인 1963년 7월이다. 동년 9월, 암파서점(岩波書店)의 『사상(思想)』에 도쿄[京都]대학의 마쓰오 다카요시[松尾尊兌] 씨도 같은 주제로 논문을 썼다. 같은 주제이지만,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이것은 ‘유언(流言)’, 즉 조선인이 우물에 독극물을 넣었다, 폭탄을 던졌다, 부녀자를 강간했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어디에서 나왔는가에 대한 문제였다. 마쓰오 다카요시 씨는 유언은 조선 민족에 대한 일본의 뿌리 깊은 민족적 편견과 차별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유언비어가 나온 장소는 한 곳이 아니고 지진지역, 관동 일대에 이르는 곳이 유언비어의 진원지였다고 주장했다.

필자는 유언비어 발생은 일본인 일반이 아니고, 그보다도 조선인을 감시하거나 단속을 전문으로 하던 프로그가 있었고, 그것은 헌병과 경찰이며, 그 경찰당국에 있던 자는 일상적으로 경계시하는 일에 훈련을 받고 있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실제 그러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도 많이 남아 있다. 당시 조선인은 관동 일원에 2만 명밖에 없었고, 거의 공사현장 같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일반 일본인과 접점을 갖고 이웃으로 만나는 등의 관계 속에 조선인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차별감이라는 것은 주변에 다소 이상한 습관을 갖고 있다든가, 생소한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많이 생기게 된다. 주변에서 조선인을 거의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만약 편견이 있었다고 해도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 그리고 재산을 필사적으로 지켜야 할 사람이 '조선인이 독극물을 넣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앞서 말한 마쓰오 다카요시 씨와의 논쟁은 잠시 지속되었다. 결과적으로는 마쓰오 다카요시 씨가 이야기해주었지만, 필자의 주장은 '문제의 요지가 제국주의에 있는 것이지, 민중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민중면제론'에 가깝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인이 당했던 것은 제국주의로부터 희생이며 일본 민중 역시 제국주의에 희생되었다는 입장인데, 아무튼 이 문제는 그 후에도 결말을 보지 못했고, 그 외 관헌설(官憲說), 민간설(民間說), 요코하마설(横浜說) 등의 이야기가 한편에서 빈번하게 나오기도 했다. 이렇듯 관동대지진 중 조선인 학살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은 항상 책임 소재가 애매한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1975년 중공문고신서(中公文庫新書) 『관동대진재(關東大震災)』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그 후 '60년에 생각 한다'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남기는 일에 태만한 일본 사회에 대해 푸념 섞인 글을 쓰기도 했다. 그 후 여러 개별연구가 나왔지만, 그중에서 주의한 것은 진상을 규명하는 일로 지방의 작은 마을, 지바(千葉)의 나라시노(習志野) 주변 어느 마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하는 것을 지역사의 형태로 진행해가거나, 도쿄 아라가와(荒川)의 제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것을 지역사의 문제로서 지역 사람들의 증언을 추가한다든지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사이타마(埼玉)도 같은 식이었다. 개별적인 연구가 누

적되면서 많은 성과를 결실로 얻었다. 당시에는 증언자가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증언을 기록할 수 있었다. 비록 증언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가서야 자신이 본 일을 정직하게 말한다든지, 또는 시대 상황 속에 증언의 내용이 수정될 수도 있다는 난점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당시 지역 사람들의 증언을 기록한 연구를 통해 지역의 작은 부분이 확실하게 만들어져가는 작업이 진행되었고, 일본 연구자 중에는 추도의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이 나왔다.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추도하느냐, 그러한 의미에서 위령비가 어떻게 세워졌고, 누가 세웠는가 하는 위령비 문제가 등장했다. 특히 이 문제에서 주목한 것은 위령비를 세운 일본인도 많지만, 누가 가해자인가라는 문제의식이 모두 소멸되었다는 것이다. 즉, 피해자가 누구이고 가해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관동대지진 80년을 맞아, 조선사연구회에서 「관동대지진 80년을 맞이하여 다시 생각해야 할 일」을 보고했다. 여기에서 마쓰오 다카요시 씨와 사이토 하지메[齊藤一] 씨의 요코하마설에 유언비가 어디에서 나왔나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고, 이 문제가 애매하게 되었지만, 필자는 재차 관현설이 주체였다고 분명히 말했다. 당시 회의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특별히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 후 10년, 필자는 개별적인 연구는 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10년간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고 있는 중에 어떤 위화감이 남았다. 필자의 관현설도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중에 도달한 것이 계엄령이다. 2008년에 나온 설로, '계엄령이 없었더라면' 하는 것이 생각의 시작이었다. 관현설에서 더 보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계엄령이라는 것은 군대가 권력을 장악하는 일이며 내란 또는 전쟁, 이 두 가지 경우 이외에는 발령되지 않는다. 따라서 계엄령이 발령되었다는 것은 내란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내란을 일으켰는가, 바로 조선인이다.

미즈노 렌타로[水野鍊太郎]가 적은 조선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9월 2일 오전 10시경부터 경찰관이 조선인은 죽여도 좋다고 말했다. 여러 지구의 서장이 도처에서 말했다. 이를 들은 사람이 많이 있고, 이것은 곧 계엄령하에서 사람이 살해되었다는 것이다. 계엄령 상태에서는 경찰보다 훨씬 강력한 치안조직인 총검으로 무장한 군대가 가두에 있다. 그 계엄 중에서, 예를 들면 자경단(自警團)이 만들어지고, 그 자경단이 사람을 죽였다고 했을 때, 계엄군이 무슨 이유로 저지하지 않았던가 하는 것이 문제다. 그것은 실제로 살해한 것은 계엄군이었고, 군대가 주력이고 경찰은 별군(別軍), 자경단은 민병(民兵)이었다는 것인데, 도중에 자경단의 살해 행위만이 기억에 남는 식으로 문제가 인식되어왔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필자는 계엄령은 조선인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생각한다. 이를 어떻게 실증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계엄군이 실탄을 갖고 지바의 나라시노와 이치카와(市川)의 고노다이(國府台)에서 도쿄로 진격하여, 고도(江東) 지구를 중심으로 학살을 전개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것은 여러 의미에서 군대의 행동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치카와의 보병여단 제1연대가 어떠한 식으로 출동했는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1일 밤 10시에 출병했는데 아직 계엄령이 내리지 않았던 때였다. 이때는 피난민을 구호한다는 목적으로 군대가 나왔지만, 2일 9시경부터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당시 계엄령이 선포되었다는 것이다. 현지의 장교가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기 때문에, 계엄령으로 군대가 전쟁을 시작했던 것이다. 이를 본 민중들이 자신들도 나라를 위해 힘을 다한다는 의미로 시작했고, 주로 재향군인, 청년단원, 소방단원을 중심으로 자경단이 된 것이다. 그들은 술선해서 능동적으로 권력과 손을 잡았는데, 그것은 이들이 과거 권력을 행사한 사람들, 즉 권력의 OB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계엄령이 조선인에 대한 국민연합의 매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조선인이 적인가? 이 이야기는 관현설을 보강하는 것이다. 거리에 비상선이 쳐지고 자경단원이 통행인 검문을 시작한다. 그때 모두 '15엔 55센'을 말해보라고 했다. 쓰보이 시게하루(坪井重治)라는 시인이 격조 높은 시를 썼습니다만, '15엔 55센'의 발음은 탁음의 연속으로 조선어에는 탁음이 없기 때문에 '쥬코엔 고쥬 고센'으로밖에 발음할 수 없다. 이때 바로 조선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신원이 밝혀진 조선인은 그 장소에서 살해된다. 일본인이라도 방언이 있고 발음할 수 없는 지방인, 류큐인(琉球人)은 조선인으로 오인돼 살해당한 사람도 있다. '15엔 55센'이라는 것은 바로 조선인, 다시 말해 언어나는 것은 민족 그 자체이기 때문에, 조선 민족에 대한 적대사상이 숨겨져 있다. 그러면 '15엔 55센'이 조선인의 민족적 특징이라는 것을 자경단원의 어물전·채소집 아저씨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앞서 나는 관동 일원에 조선인은 2만 명밖에 없다고 말했다. 어물전 아저씨들은 조선인을 본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들에게 '15엔 55센'을 말하게 한 것을 누가 지시했는가. 그것은 바로 관현들이었고 이를 알려주는 증거로 여러 문서가 있다. 다이쇼(大正) 2년, 한국을 병합한 지 3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조선인식별자료(朝鮮人識別資料)에 관한 건(件)'이라는 문서가 있었다. 이것은 내무성 경보국(警保局)이 경찰·관청 창구에서 조선인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로 작성된 문서다. 사복을 입고 떠들면 일본인이라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선인을 식별하여 미행을 하고 조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그 언동에 따라 갑을(甲乙)의 부호를 붙인다. 갑은 민족심이 강하고, 일본에 대한 반항적인 인물이라고 해서 5명의 미행이 붙고, 을은 갑 정도가 아니어도 민족심을 가진 자이며, 기타 낙천적인 자로 구분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다.

신장(身長)

내지인과 차이가 없어도 자세가 곧고 허리가 굽거나 새우등이 적다. 안면은 내지인과 다르지 않지만, 모발이 부드럽고 동시에 적으며, 머리카락은 아래로 자라는 사람들이 많다. 안면에도 털이 적고, 흔히 ‘평평한’ 얼굴이 많다. 수염과 구레나룻은 모두 빈약하다 등.

언어상(言語上)

‘발언에 억양을 높이거나 낮게 깔고 유창하다.’

‘발음에 탁음은 가장 곤란하다.’

‘발음할 때, 라(ㄹ)행 라리루레로(ラリルレロ)는 분명하지 않은데, 예를 들면 라(ㄹ)는 나(+), 리(ㄹ)는 이(イ).’

‘정좌(正座)를 참지 못하고 책상다리를 하며, 그 책상다리에 왼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 위에 올려 무릎을 꼬는 일정한 사례가 있다.’

‘부인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보지 않고 옆으로 보는 습관이 있다.’

‘서류(제증명 서류 또는 신서 등)를 보관할 때는 극히 작게 접어, 내의 및 주머니에 넣어두는 습관이 있다.’

‘일반적으로 혼도시를 차지 않는다.’

등등의 것까지 적고 있다. 즉 ‘이놈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단 말이야. 식별해서 적대시한다’는 관점에 있는 것이다.

‘15엔 55센을 말해보라’, ‘라리루레로를 해봐라’, ‘기미가요를 불러봐라’, ‘도도이쓰(都々逸 에도시대의 노래)를 불러봐라’ 등 조선인이 알리가 없는 것을 관리들은 알고 있어, 자경단원이 된 자들에게 이런 것을 교육시켰고, 자경단원이 조선인을 식별해서 학살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무슨 이유로 조선인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필자는 지진

에서 어떻게 계엄령이 나왔는가를 생각할 때, 이를 전제로 한 30년에 걸친 전사(前史), 즉 갑오농민군과의 전쟁, 그리고 러일전쟁 후 일본의 강점에 반대해서 전 국토를 피로 물들게 한 7년에 걸친 의병전쟁을 포함한 '적대시' 사상의 형성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면관계상 이것은 생략하고 조선총독부라는 권력의 양상, 그리고 3·1운동에 이은 만주, 시베리아에서의 독립전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1910년 조선총독부가 생겼다. 총독은 현역 육해군대장이 아니면 될 수 없었다. 즉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통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헌병정치다. 그것은 군대가 의병을 '토벌' 해서 '차별과 폭력'의 식민지정권을 만든, 활화산 위에서 있는 권력이었기 때문이다.

2천만 조선인의 원성의 눈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고슴도치와 같이 무장해야 했으므로 총독이 현역 육해군대장이고, 헌병이 지배하는 통치밖에 할 수 없었다. 한 손은 검사, 한 손은 판사인 헌병의 권한으로 3개월 이하의 징역, 벌금 100엔 이하의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즉결령으로 현장에서 처형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에도(江戸)시대 이전의 권한을 갖는 정권이 바로 군정이라는 것이다. 군정하에서 조선의 지배 후 토지조사사업을 시작으로 철도와 도로가 만들어졌다.

그 방법은 어떠한가. 한가지 예를 들면, 헌병 통치하의 도로공사를 속칭 '연필 도로(鉛筆道路)'라고 하는데 저 마을에서 이 마을까지라고 정해지면 지역 농민의 전지를 몰수하고 노동력을 징발해, 1일 1식조차 어려운 사람들이 도시락을 갖고 종일 무상으로 사역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말할 것도 없이 극빈한 백성이면 노역에 나가든지 하고, 숙박할 자력이 없어 종일 오이를 씹으며 노역한 다음 밤에는 무상한 노숙의 꿈을 꾸다. 아아

이러한 영세민들의 고통, 어떤 기관에 호소할 수 있으랴. 그들의 원한이 되는 헌병.(中野正則, 「我が觀たる朝鮮」)

권력이 기승을 부리면 부린 만큼 2천만 민중의 원한의 표적이 된다. 역으로 말하면, 그 반동이 가져오는 적의(敵意)가 증폭되었다. 권력을 휘두를수록 조선인은 무섭다는 지배자가 죄악감을 갖는 정권이 되었다. 그것은 조선 민족은 적이다, 민족주의를 제거하지 않는 한 일본인은 안주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발전했다. 즉 조선인이 갖는 고유의 민족성이 적대시할 대상이 되는 것이다.

1913년에 생긴 조선인 식별법은 무서운 식민지 조선인이 일본에 온다, 그렇기 때문에 특징을 보고 식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발상에서 나왔다. 그러한 것을 전제로 3·1운동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3·1운동 탄압은 철저한 무력행사다. 『현대사자료』 25·26은 3·1운동 탄압 자료집이다. 이것은 전부 일본 군부 자료다. 일본 현지의 육군이 토벌한 3·1운동에서 조선인과 대결한 그 매일매일의 전과를 육군성에 보고한 자료다. 이것을 '일차보고(日次報告)'라고 하는데 이 보고서에 나온 숫자만 보더라도 사망자가 수천 명이 된다. 그 하나를 보면, "3월 10일 평남(平南) 맹산(孟山)에 다시 천도교도 100명 헌병분견소에 돌입하여, 보병과 협력 발포격퇴하다. 헌병 1명 즉사, 보조원 1명 중상, 폭민(暴民) 약 50명 사상(死傷)하다." 『현대사자료』 25, 105쪽에 이러한 보고가 있다. 좀 더 상세한 보고에 따르면, "폭도의 사상은 사무실 안과 그 앞에서 총탄에 명중된 자 51명이고, 부상자 13명으로 부상자는 부상 후 도주하다."라고 되어 있다.

사망자의 총계는 67명이다. 100명의 데모에 76발의 탄환이 사용되었다. 67명 사망은 백발백중 몰사했다고 하는, 적의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일본 '새역모' 사람들은 3·1운동의 "재판 결과 사형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 세계 최고의 관용 판결”이라고 하지만, 이미 재판 이전에 무수한 즉결사 형이 있었던 것이다. 일본군 스스로가 충청남도에서 ‘폭민(暴民) 사형 14명, 부상자 불명’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수원(水原) 제암리(堤巖里) 교회에서 방화로 인해 살해된 사람은 데모도 하지 않았다. 지휘관 아리타 도시오[有田俊夫] 중위는 조선인은 독립을 생각하는 불량한 무리라고 인식했다. 『조선독립운동지혈사(朝鮮獨立運動之血史)』를 쓴 박은식(朴殷植)에 따르면, 병력을 사용해서 진압한 사망자는 7,504명이라고 한다. 민중 데모를 진압하는 권력의 모습으로서는 이례적인 것이다. 실제로 당시 일본에서는 쌀소동이 있었는데 조선의 3·1운동보다 과격한 데모였다. 쌀소동은 굶간을 부수고 쌀을 메고 나오는 사태였기 때문이다. 이때 일본 정부의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내각 내무대신은 미즈노 렌타로였다. 미즈노 렌타로는 쌀소동에 계엄령은 내리지 않았고 기병대만 보냈다. 데모대는 기병대에게 강제로 해산되었는데 사망자는 없었다. 3·1운동 이후 중국에서는 5·4운동이 일어났다. 이것은 군벌정부, 그리고 군벌정부 뒤의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에 대한 반권력 투쟁이었다. 중국 전토에서 많은 학생과 노동자가 봉기했는데 사망자는 없었다. 반식민지 권력에서도 사람들은 죽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의 3·1운동은 5·4운동이나 쌀소동과는 다른 엄청난 사망자가 나왔다고 하는 특징이 있다.

이것은 일본의 조선 지배에는 적대시하는 전쟁상태가 저변에 깔려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조선인이 일본의 통치에 묵묵히 따르면 거짓이지만, ‘평화’가 있다. 그러나 일단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면, ‘몰살’이라는 대응이 기다리고 있는 구조다. 1923년에 일어난 지진 4년 전이다. 3·1운동 이듬해 중국의 간도(間島) 연변(延邊), 이곳은 지금의 조선족자치주인데, 여기에 일본군이 난입했다. 왜냐하면 의병전쟁으로 조선영내에서 쫓겨난 의병들이 간도에 있는

조선인들의 거주지를 근거지로 하여 의병전쟁을 계속했기 때문이다. 본국에서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순식간에 용기를 내어 무장투쟁을 재개했다. 또 이 무렵 러시아혁명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파급되어 시베리아에 출병한 일본군이 패퇴를 거듭하여 궁지에 몰리는 상태였다. 더불어 중국에서는 5·4운동이 일어나 일본이 21개조 요구를 철회하지 않을 수 없는 일영동맹(日英同盟)도 파기(1922)되는 시기였다. 단지 민족독립운동이 아닌, 국제적인 반일 기운과 사회주의 사상의 해방운동이라는 국면이 이때부터 보이기 시작했다. 일본군은 이러한 상황들로 인한 식민지방위와 권력방위를 위해 최전선에서 싸웠던 것이다. 이 최전선에는 러시아, 중국만이 아닌 조선이 있었다. 『시베리아 출병 헌병사(出兵憲兵史)』라는 책이 있다. 그중에 일본군과 가장 용감히 싸웠던 것은 조선인 게릴라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니항사건(尼港事件)에서 일본인이 몰살되는 사건이 있었다. 그때 중심적이었던 것은 조선인 게릴라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장의 일본 군부와 관헌은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보았듯이 조선 독립운동에 대한 적대시가 보다 강해져 공포감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조선 지배를 하면서 가장 경계했던 것은 조선 문제가 국제화되는 일이었다. 따라서 모든 수를 써서 방위하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로 전개되었다. 1920년대 일본군 전략에는 3·1운동, 간도문제, 시베리아 출병, 이 3개의 경험이 새로운 조선에 대한 적대관계, 즉 민족문제만이 아닌, 종합적인 사상·주의자까지 포함한 적대관계로 발전한 것이다. 요컨대 이러한 인식이 사상범 색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로 이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헌병대에서는 ‘다이쇼 3~9년 전역(戰役)’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

간도에서는 조선인에 대한 일본군의 군사행동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중 하나의 예로 1920년 10월 중국에 있는 임시정부 계열에서 발행하는 신문 《진단(震壇)》에 나온 기사다.

10월 29일 일본군 수백 명이 돌연 연길현(延吉縣) 세린하(細麟河) 방면에 이르러 한인가옥(韓人家屋) 수백 호에 불을 질렀다. 총살된 한인이 대단히 많았다. 또 다음 날 오전 8시 30분 연길현 거리에서 약 2리 떨어진 모산(帽山) 동남 청구촌(靑溝村) 부근의 한인 부락 70여 호에 일본군이 불을 질렀고, 모두 5백여 발의 총탄을 발사해 그 마을을 포위·공격했는데, 마을 거주 한인 3백여 명 중 다행히 숨은 사람은 겨우 4~5명뿐이고, 기타 남녀노소는 불타 숨지거나 총상을 입었다. 닭, 돼지조차 살아남은 것 없이 시체가 나뒹굴어 땅을 메우고, 피가 흘러 내를 이루니, 보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캐나다 선교사도 동일한 상황을 실제로 보고 소감을 썼다.

이때 간도에서 받은 조선 민중의 피해는 중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 손해상청구를 했는데, 숫자로 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정부가 국제문제로서 청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살해된 자 3,103명, 포로로 잡힌 자 238명, 강간 76명, 집이 소실된 수 2,507호, 불탄 학교 31개교, 불탄 교회 7동이 된다. 작전의 특징은 독립군과 일반시민의 구별이 없다는 것인데, 즉 조선 그 자체가 불량한 적, 일본의 질서에 따르지 않는 이단으로 즉결처형된 것이다. 이것을 행한 것은 조선에 있던 일본군이며 국경을 넘어 공격하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일본의 우익이다. 우익 세력은 흑룡회(黑龍會)의 도야마 미쓰루(頭山滿), 우치다 료헤이[內田良平] 일당이였다. 우치다 료헤이의 문서는 다음과 같다.

朝鮮獨立騷擾. 다시 묵시하기 어려워 明石大將(明石元二郎 憲兵司令官)을 면담해, 그렇게 된 이유를 술하고, 改革意見을 진술하였다. 이듬해 大正九年에는 더욱이 조선에 건너가 해외 불량배들의 음모를 예의주시하고, 內閣諸公 및 總督府 당국자와 연락했다. 주모자인 이희간(李喜侃)을 설득하여 복종시키고, 그 음모를 중지시킴과 동시에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 대장에

게 취지를 설명하고 朝鮮出兵을 청했다. 그 결과 제2의 소요사건으로서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을 겨우 그 분파가 저지른 사건, 이른바 혼춘사건이 일어난 것 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끝나……

우치다 료헤이는 조선군(朝鮮軍)의 '간도 출병'은 자신의 공이라고 자화자찬하지만, 그의 관심은 간도만이 아닌, 보다 넓은 만주, 조선의 국경지대에 있는 조선인이었다. 문서를 인용해보겠다.

이번 시베리아 철병으로 시베리아 과격파 안에 있는 조선인과 만주에 있는 독립단을 통해 자유로이 군사적 연락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通化, 海龍城, 金城, 興京, 懷仁, 寬甸 地方에 속속들이 모이는 滿鮮人獨立團員 30여만 명이 모두 무장해서 일제히 강을 건너 조선땅에 쇄도해온다면, 우리 수비군은 어떻게 이를 막을 수 있을까. 더욱이 그들의 배후에는 미국, 러시아, 중국 3국의 원조가 있고, 거기에 도착 조선인 전부가 이를 지원하는 형세가 역력한 상황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이때에 당국은 더욱 평온하고 점진적인 시정방침을 취함으로써, 대란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을 차분히 고려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모락의 장군 아카시 모토지로(明石元二郎)와 육군대신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가 우치다 료헤이의 음모에 가담해서 어떠한 의견을 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찬성 또는 묵인했다고 보인다. 더욱이 우치다 료헤이의 조선총독부와 조선군 고관들의 협의·양해 사항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9월 1일자 '재외 불량조선인 박멸책'이다.

박멸책의 요점은 친일파 양성과 중국인 마적을 이용하는 일이고, 그 수족이 된 것은 부하 1,500명을 보유한 마적 창장하오(長江好)와 그 참모 일본인 나카노 세이스케(中野清助)였다.

나카노 세이스케의 ‘불량조선인의 토벌에 관한 각서(天樂覺書, 1921. 7)’의 요점을 보면, 창장하오, 나카노 세이스케와 조선총독부의 마루야마 쓰루키치(丸山鶴吉) 참사관, 아마구치(山口) 고등과장, 지바료(千葉) 경기도 경찰부장, 미우라(三浦) 위생과장 등이 7월 초순 조선폰텔에서 회견했다. 여기서 토벌의 경험, 의견교환이 있었고, 그 후 ‘탄환구입의 일체 및 제 비용의 수령’, 별도로 나카노 세이스케(中野清助)에게 사례금 의미로 ‘금(金) 1,500엔’의 교부가 있었다. 중요한 것은 다음의 문언이다.

中野가 말을 바꿔 “우리들이 귀대 후, 불량조선인을 포박할 때의 처치에 관한 질문에 대해, 山口 고등과장이 말하기를, 불량조선인을 포박할 때에 일본 관헌에게 인도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들을 일본 관헌에게 인계하는 것은 실로 나중에 처리가 곤란해질 수 있다. 현재 간도 방면으로도 다수의 불량조선인이 압송되어오면, 누구도 단죄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든지, 혹은 변호사 등의 농간으로 대단히 풀치 아프게 될 뿐만 아니라, 설사 형에 처해져도 출옥 후 그들은 더욱 맹렬한 惡漢이 되어, 어떻게 해도 손을 쓸 방도가 없어 매우 곤란하다. 따라서 이미 불량배로 인정된 자는 즉시 적절하게 살해 해주길 …… 동시에 포박할 때 압송의 증거품 및 성명을 가장 가까운 지역의 일본 헌병에게 통고 또는 인도하도록, 또 가능한 한 일본 헌병과 연락을 유지하길……”

놀랍게도 마적에게 조선인의 즉결처형을 명했다. 나카노 세이스케와 창장하오가 만났다고 하는 마루야마 쓰루키치는 결국 참모 나카노 세이스케의 방책으로 “정말로 창장하오가 제대로 각오해서 해준다면, 지나(支那) 마적의 손으로 불량조선인을 소탕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가장 유효한 방법이고, 특히 일본인 나카노 세이스케가 참모이기 때문에……”라고 회상하고 있다.(『五十年ところどころ』, 丸山鶴吉)

그러면 마적이 어떻게 ‘토벌’을 했는지 그 일례를 들어보겠다.

大正 9년 10월 하순, 부하들을 총 소집해서 …… 안도현으로 향했다. 대개 불량조선인으로 광복단이라 칭하는 奉天省 安圖縣 乳頭山에 있는 40여 호의 조선인과 3호의 중국인으로 구성된 부락으로, 이곳에는 우리 일본인이 한 발짝도 들어갈 수 없는, 일본 배척의 부락이다. 이 전체 부락이 광복단원으로 여러 계획이 이곳에서 나오고, 따라서 우선 우리 부대는 해당 부락을 습격하여 가옥 40여 호를 불태우고 광복단원, 훈련병, 교관 및 제2대장, 외교부장 및 동 부원 3명과 구장, 부구장, 광복단 병졸 등 10여 명을 독가스를 사용하여 살육했다. 기타 17세 이상의 남자는 전부 살해, 남자를 총살한 것은 惠山 경찰서 및 헌병분대와의 협의 결과 등등.

소살(燒殺)·총살 시에 교살·참수·독가스 등 잔인하기 그지없는 처형방법을 쓴 것이다. 이러한 일을 자행한 우치다 료헤이와 당시의 수상을 만나 의견을 들었던 것이다. 일본이 간도에 출병하기 위해서는 중국 영토이기 때문에 구실이 없어서는 안 되었고, 그 구실을 위해 돈으로 마적을 이용했다. 마적에게 돈을 주어 조선인과 마을을 전부 없애버리라는 지령을 내렸다. 그 마적들이 독가스와 다양한 무기로 조선인을 살해하며, 조선총독부의 야마구치 특고과장(特高課長)이 마적의 참모를 만났고, 나카노 세이스케는 후에 훈장을 받았다.

1960년경 필자는 나카노 세이스케를 만났다. 나카노 세이스케는 아오야마(青山)의 도야마 미쓰루 가옥에 살았고 키가 작은 70살 정도의 할아버지였다.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조선총독부가 개입했다, 마루야마 쓰루키치가 개입했다 등 이것을 가르쳐준 것은 동거인이자 당시 우방회(友邦會) 이사였던 시부야 레이지(澁谷禮治)라는 사람이다. 당시 우리들은 우방협회에서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이번 기회에 듣고자 하여 가지무

라 히데키(樞村秀樹) 씨와 둘이서 이야기를 들었다.

관동대지진과 관련되는 이야기로 당시 마적과는 별도로, 특별에 참여한 일본군 대위 사카모토 도시메(坂本俊馬)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이 특별기록을 남겼는데 자신이 서간도(西間島) 일대를 두루 돌아다니며 몇백 명이나 해치웠다고 하는 기록이다. 이 남자는 지진이 났을 때, 고야마(小山) 헌병사령관의 부관이었다.

인간은 자신의 경험, 인간적인 관계에 영향받게 된다. 즉, 앞서 언급한 식민지의 반란과 혁명정세라는 제국주의 위기의 전선에 있던 중요한 집단이 모두 지진이 일어날 당시 일본에 돌아와 당국의 요직에 있었다. 이것이 바로 지진시 학살의 커다란 배경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것이 1920~1921년에 일어난 일이며 지진 2~3년 전의 일인 것이다.

이러한 시간적인 배경, 일본이 아닌 지역에서의 직무와 일본에 돌아왔을 때의 직무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이유로 그런 것이 사상문제가 되었는가. 일단 인맥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

계엄사령부가 생기고 경비부가 생겼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왔다. 대책회의가 열려 참석한 사람은 제국주의의 제1선에서 민족운동을 탄압하고 식민지 전쟁 제1선에 섰던 사람들이었다. 예를 들면 미즈노 렌타로는 지진 당시 내무대신이었는데 이 인물은 3·1운동 때는 조선총독부의 최고 지휘관인 정무총감이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경찰 최고봉이었다. 조선총독부의 내무장관 우사미 가쓰오(宇佐美勝夫)의 경우 지진 당시 동경부지사였다. 조선총독부의 요직에 있던 자가 동경의, 정부 내 제일 중요한 치안 요직에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고급장교, 군인들 중에 관동대지진 당시의 군사참의관(軍事參議官)이 4명 있었는데, 그중 제일 우수한 우쓰노미야 미야타로(宇都宮太郎)는 3·1운동 당시 조선주둔군 사령관이었다. 7천 수백 명이나 살해한 조

선군 사령관이다. 오바 지로[大庭二郎]는 군사참의관인데 3천 수백 명을 죽인 간 도사건 침공군 총사령관이었다.

관동대지진시의 사단장 이시미쓰 마오미[石光真臣]는 동경 주둔의 제1사단장이다. 그는 3·1운동 당시의 헌병사령관이었다. 관동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계엄사령부 참모장인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는 후에 조선총독이 되는 자인데, 시베리아 출병군 참모장이었다. 시베리아 출병군 고급참모 다케다 가쿠조[武田額三]는 이르쿠츠크 특무기관의 기관원으로 관동대지진 당시 야중포 제7연대(市川の江東地區 조선인 학살연대) 연대장이었다. 나카오카 야타카[中岡彌高]도 같은 특무기관원이었다. 지진 당시 조선 헌병대사령관인 나스 다이자부로[那須大三郎]는 시베리아 전쟁 당시 블라디보스토크 파견군 헌병사령관이었다. 이 외에도 필자가 전부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인맥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실무급에서 말하면 고지마치[轟] 헌병대장 특고과장(特高課長) 겸임 아마카스 마사히코[甘粕正彦]는 오스기 사카에[大杉榮]를, 이토 노에[伊藤野枝]의 조카 다치바나 무네키즈[橘宗一]는 소년을 죽인 미치광이지만, 그는 3·1운동이 일어났을 당시 조선 헌병대 경기도 양평 헌병파출소 대장으로 조선에서 활약한 공을 인정받아 포상 하사금 400엔을 받았다. 관동대지진 때 동경 헌병사령관인 고야마 가이조[小山介藏]의 부관 사카모토 순마[坂本俊馬]는 서간동(西間東) 일대의 불량조선인 토벌대장으로 이미 소개했다. 마적 창장하오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사상헌병으로서 명성을 떨친 후쿠베 모리키[服部もりき]는 아카사카[赤坂] 헌병대장이었다. 전부는 아니지만, 조사를 하다보면 이러한 인물들의 경력이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관동계엄사령관으로 참가한 우쓰노미야[宇都宮] 14사단 참모장 이조메 로쿠로[井染祿郎] 대좌는 블라디보스토크 특무기관장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번 불량조선인의 불량행위 뒤에는 사회주의자와 러시아의 과격파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사회주의자의 계획은 중국인과 조선인을 선동해서 불량한 거동 및 부덕한 행위를 보여, 치안을 어지럽히고 관헌이 최악의 재난을 만나 정신없이 분주한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관헌의 무력함을 선전하고, 온당치 못한 유언비어를 여기저기 퍼트려 각종 기괴한 이야기를 선전하면서 관헌을 불신하게 만들고, 관헌과 인민 사이에 대립을 조장하는 한편, 조선인을 선동하여 불량행위를 하게 하고, 내란폭동을 전국적으로 파급시켜 단번에 그들이 희망하는 극단의 민주정치를 실현하려고 기도했다. [...] 그들의 재원은 말할 것도 없고, 上海에 근원지를 두고 있는 러시아 과격파와 불량조선인 사이에 대단히 밀접한 연락이 있었던 것 같다. 윗헤체 체재 중에도 러시아의 과격파와 불량조선인, 사회주의자 사이에 연락이 있었던 것 같다. 요컨대 이번 불량행위가 저 3자의 삼각관계를 근거로 행해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계엄사령부 이조매 로쿠로 대좌의 발언을 보면 지진을 빌미로 조선인뿐 아니라 일본인, 중국인을 포함한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자는 것이다. 위와 같은 말을 하는 인물은 이 외에도 더 있다. 요컨대 식민지 반란과 사회주의적 항일 세력의 출현, 시베리아 출병과 패배, 청산리전투의 대패 등에 따른 위기감으로 지진 당시 계엄령을 발동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따라서 15엔 55센으로 적이 되고 조선인 사상범 색출이 은밀히 행해지면서 그 여파로 중국인 사회주의자가 살해되고, 일본인 사회주의자는 조선인을 선동했다는 죄명을 뒤집어쓴 문제가 여기서 나왔다. 지진이라는 우연, 차별과 편견이 유언비어를 낳고, 흥분한 사람들이 살인자가 된 것이다. 이것은 국내 사관을 벗어나 조선의 민족해방투쟁의 국제화를 배경으로 한 침략과 저항이 낳은 민족대결이었다. 이것이 곧 계엄령으로 나타났고 계엄령은 조선인에 대한 몰살선언과 같은 것이었다. 아직 여러 가지 증명할 것은 남아 있지만, 대체

로 필자의 생각은 이와 같다.

보다 역사적으로 접근해서 1923년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전년, 더욱이 조선 지배에 이르는 한일의 선전포고 없는 한일전쟁, 이러한 것의 연속선상에서 지진 후 학살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야 한다. 자경단이 분별없이 조선인을 적이라고 습격했지만, 이것은 일본의 침략전쟁시의 군대, 즉 이미 조선을 경험하고 있었고, 만주와 시베리아를 경험하고 제대한 후 일본으로 돌아온 사람들, 이들은 군대에 갈 때에도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속성을 갖지 않는 한, 길거리의 어물전 아저씨가 사람을 간단히 죽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은 국가범죄다. 국가가 침략을 행함에 따라 국민이 오염되어갔고, 군대는 당연히 그러한 기능을 갖는 것으로, 굴하지 않는 조선인, 쉽게 부화뇌동하지 않는 조선인에 대한 대항의식을 가졌다. 그리고 급속히 변화가는 국제관계가 뒤엉켜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지진 당시의 살육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유언비어가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러면 필자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과제 '재일(在日) 100년의 역사에 대해 이 사건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일까'에 대해 살펴보자.

일본 정부는 1923년 말 국회에서 2명의 국회의원이 “조선인에 대해 사죄해야 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받았다. 수상인 야마모토 곤노효에(山本權兵衛)는 ‘목하(目下) 조사 중’이라고 답변했을 뿐, 그 후 조사도 사죄도 없었다. 해방 후 한일회담이 타결될 즈음에, 공산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수상은 “과문이지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즉 일본 민중에게 새겨진 유언비어의 취소는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의 하나를 다케히사 유메지(竹久夢二)는 ‘동경재난화신(東京災難畫信)’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즉 아이들 사이에는 ‘자경단놀이’가 유행이 되었다.

“萬이야, 네 얼굴은 일본 사람 같지 않아, 네 얼굴은 아무래도 일본 사람이 아냐.”

두부가게의 만이를 붙잡으면서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한다. 교외의 아이들도 자경단 놀이를 시작했다. “만이를 적으로 하자.”, “싫어. 그럼 나는 죽창으로 찔리잖아.”

만이는 뒷걸음질한다.

“아니야. 우리들은 단지 흉내내는 것이잖아.”

이렇게 말해도 만이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골목대장[ガキ大將]이 나와서 “萬公! 적이 되지 않으면 맞아 죽는다”라고 협박해, 억지로 적이 되어 쫓겨다니던 중, 정말로 만이를 올때까지 두들겨팼다. 아이들은 전쟁을 좋아한 것인데, 당시에는 어른까지 순사의 흉내, 군인 흉내를 내서 기분에 들떠 몽둥이를 휘두르며 통행인 만이를 괴롭히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 극히 평범한 선전표어를 살펴보자.

‘아이들이여, 몽둥이를 갖고 막대기를 갖고 자경단놀이를 하는 것을 이제 멈춰라.’(《都新聞》, 1923. 9. 19)

조선인은 차별받는 것이 당연, 무섭기 때문에 피하는 존재, 폭력을 행사하기에 좋은 대상이 되었다. 이것이 어떠한 차별현상이 되었던가는 한·일 두 문학자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다. 한 사람은 나가이 가후[永井荷風]이고, 다른 한 사람은 김달수[金達壽]다.

앞의 두 글은 나가이 가후의 1930년과 1936년의 일기이고, 뒤의 두 글은 김달수 선생이 쓴 것이다.

날이 저물었다. 三番町에 살고 있어 谷町를 지나 전차가 오는 것을 기다렸다. 못된 장난을 치는 아이들 20~30명이 모여 마귀할멈~ 마귀할멈~ 외치는데, 그중에는 막대기를 든 악동도 있었다. 무슨 일인가 보니 백발에 허리가 흰 조선인 노파, 어느 집 문 앞에서 엿을 팔고 돈을 구걸하는데, 엿을 팔

아 얻은 돈을 악동들이 압수하고, 방망이로 때리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나는 요즈음 아이들의 포악한 행동이 너무 밋다. 이 추운 밤에 먼 나라에서 온 노파가 너무나도 불쌍해 보여, 銀貨 동전 1개를 주고 자리를 뜨지 못했다. (斷腸亭日乘, 1930년 정월 8일)

이날 《東京日日新聞》의 석간을 보니, 오사카의 어느 선착장에 있는 아동보호소에 모인 일본인 소아들이, 조선인 소아가 물건을 훔쳤다고 이를 잡아, 거꾸로 매달아 때린 다음 이불로 싸고, 그 위를 여럿이서 밟아 죽인 기사가 있었다. 소아들은 모두 10세가 안 된 아이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경찰서에서 형사가 하는 것과 같은 고문 방법을 알고 있었고, 이를 실행하니 이 무슨 일인가. 또한 이불로 싸고 밟아 죽이는 것은 에도시대 덴마초의 감옥에서 죄수들이 행하던 것이다. 이것을 지금 소화시대의 어린이들이 알고 있는 것은 무슨 일인가. 인간의 잔인한 성정은 자연스럽게 고금 모두 부합한 것인가. 무섭다. 무섭다. 아아, 무서울 따름이다. (斷腸亭日乘, 1936년 4월 13일)

白衣의 조선옷을 입은 엄마와 나는…… 통행이 많은 거리를 걸어갈 때, 나와 비슷한 또래의 2, 3명의 아이들이 우리를 향해 조센징이다, 야잇 조센징이라고 했다. 나는 그 '조센징'이라는 일본말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멍한 눈길로 그들을 볼 뿐 옆을 지나가려 하는데,…… 그중 한 아이가 '이이-'하며, 나를 향해 눈을 부릅뜨고 빨간 혀를 내보였다. 그래서 나는 처음으로 우리에게 무언가 악의가 있는 말을 던진 것임을 알았다.…… 말하자면 나는 '朝鮮人'을 보고 '조센징'이라는 것이 모욕적이고, 욕이라는 것을 일본에 와서, 바로 처음으로 외출한 첫날에 빨리도 알았던 것이다. 그 후에도 같은 일은 계속 있었다. 지금도 내 인생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 같다. (金達壽의 회상)

그중에는 돌을 던지는 자도 있다.…… 엄마는 '이놈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발밑의 돌을 주워서 던진 일도 있었다.…… 엄마는 나에게 말했다. "너만은 나를 피하지 말고, 이렇게 함께 걸어줘라. 너의 형은 거리에서 나를 만나도, 저 사람이 누구야 하는 얼굴로 나를 피해 가버린다. 너까지 그렇게

한다면 나는 살아 갈 수가 없어.”(金達壽, 「나의 아리랑 노래」)

김달수 선생의 도일(渡日)은 1930년으로 하풍일기(荷風日記)와 같은 시기인데, 선생보다 조금 늦은 1934년에 일본에 와서, 1938년에 소학교 1학년이 된 필자의 체험도 비슷하다. 바로 중일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아이들의 세계에서도 ‘전쟁놀이’가 유행하였고 필자는 항상 중국군, 장제스(蔣介石)군이 되어 쫓겨다니기도 했지만, 일본군 대장은 나카지마 아쓰시(中島敦)라고 했다. 필자는 그때 받은 심리적 외상을 잊을 수 없는데, 장제스에 대한 미묘한 친근감이 지금도 있다. ‘도리마키도리마키엣삿사(とりまきとりまきエッサッサ)’라는 놀이도 있는데, 조선 아이를 5, 6명의 아이들이 둘러싸고 ‘조센징, 조센징’이라고 놀리면 “조선인, 조선인이라고 바보 취급하지마. 같은 밥 먹고 사는데 뭐가 달라”라고 조선인 사투리의 일본말로 대들었다.

여자아이들은 그런 상황에 다치면, 주저앉아 울 뿐이었다. 필자도 길에서 엄마를 만나면 모르는 체했다. 1944년 할머니가 일본에 와서 역 앞에 있는 필자를 발견하시고는 반가워서 ‘덕상아’하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 때, 도망친 일도 있다. 이것이 소학생 때인 1938~1944년의 기억이다.

싸움을 해도 ‘조선놈’이라고 하면 승부는 끝났고, 필자의 어머니는 여동생이 울면, “순사가 오니까 울지 마라.”고 하기도 했다. 일본인 엄마들은 “조선 사람이 오니까 그쳐라.”고 했다. 이 모두가 거짓말 같은 사실이다.

학살의 기억이 재일조선인들 가운데 어떻게 남아 그들을 압박해왔는지, 두 개의 관헌자료를 인용해 살펴보자.

• 공습하의 지진·학살의 기억(1944)

특히 주의를 요하는 것은 점차 공습의 위험성이 증대함에 따라, 내지인과 조선인 모두 관동대지진 때와 같은 사태를 상기하며, 선량한 조선인들이 위협에 처하고 박해를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기우를 품었고, 내지인들은 공습 등의 혼란 속에 조선인이 강도, 절도 혹은 부녀자 폭행 등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위구심을 품게 되어, 쌍방 모두 꽤나 불안해했고, 결국은 유언비어를 낳았다. 그것은 사소한 일에도 의심하게 되는 경향의 일례였다. 실제 내지인들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자위 조치로서 일본도를 준비하거나 조선인에 대한 경계 단속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었고, 나아가 일부 사업주들은 기우가 지나쳐 단속을 경찰의 손에서 군대로 옮겨달라고 공공연히 요망하는 자가 있을 정도였다. 한편 조선인 측에서는 다시 그러한 박해를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경찰에게 보호를 진정하는 사람이 나오는 상황도 발생되어, 일단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세심한 주의와 만전의 조치를 강구해두지 않으면, 불상사를 야기할 위험성이 충분이 있었다(경찰부장 회의에서 보안과장 설명요지(1944. 1. 14).

「치안상황에 대해서」, 『集成』 제5권, 내무성경보국보안과, 15~17쪽.

• ‘의심암귀(疑心暗鬼)’를 낳는 치안당국

첫째, 민족독립운동의 상황이다. 조선인 사상분자 중에는 그 수는 많지 않지만(작년에 검거된 숫자는 168명), 아직 조선 독립의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특히 최근에 그 행동이 점차 모략적으로 변해가는 경향이 있다. 즉 이 사례로서는 작년 경찰청에서 검거한 학생을 중심으로 한 그룹이 공습 시에,

(ㄱ) 방공(防空), 방화(防火)를 방해하기 위해 용수(用水) 기타의 시설을 파괴하는 일.

(ㄴ) 물자수송을 막기 위해 수송기관을 파괴하는 일.

(ㄷ) 혼란을 틈타 악질적인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일반 조선인의 단결을 꾀하고 내지인에 대해 (정부와) 대립시켜, 이를 폭력봉기로 유도하는 일 등을 계획하고 각각 분담을 결정한 사실이 있다.

둘째, 최근에는 이에 대해 경시청에서 검거·조사 중이지만, 동경에 있는 조선인 고학생이 비밀그룹을 조직하여,

(ㄱ) 공습 시, 시내 각지에 조선인을 집합시켜 적기와 호응해서 불온한 행동을 감행하는 일.

(ㄴ) 적의 낙하산부대가 투입될 때, 여기에 참가하여 아군과 항전하는 일.

(ㄷ) 일본과 소련이 개전할 경우, 소련 측에 투항하여 그 원조를 받고, 조선의 독립을 꾀하는 일 등의 불온 계획을 세우고, 책동한 사실이 있다.

셋째, 내지인(內地人)의 조선인에 대한 관계다. 현재 일반 조선인 사이에도 공습,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량한 조선인까지 내지인을 위해한다고 위협시되어 박해를 받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다.

요컨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조선인에 대한 지도 단속은,

(ㄱ) 민족적인 불온분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찰 내사를 엄중히 하고, 단속을 하여 준동의 여지를 없앨 것.

(ㄴ) 일반 조선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태가 발생하든, 반드시 제국의 승리로 돌아온다는 것을 확신시키고, 또 당국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한 절대로 그 신변을 보장할 것을 철저히 할 것.

(ㄷ) 내지인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조선인을 위협시키고 경거망동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 [내무성경보국(1943), 「조선인의 指導取締에 대해서」, 『集成』 제5권, 13쪽]

머리를 베고, 손발을 비틀고, 산 채로 불 속에 던지고, 포박하여 바다나 강에 던지고, 통행인을 톱으로 켜서 순식간에 저 세상으로 가게 하는 잔인한 살해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죄도 없이 방화하고, 독을 풀었다, 강간 등의 오명에

대한 명예회복도 없이 90년이 지났다.

일본 사회는 조선인에게는 살기 어려운 외국이었다. 그것은 해방 직후 일
거에 붕괴, 즉 230만 명의 인구가 반년 사이에 65만이 되었음을 나타낸다. 미
국에 당한 것은 할 수 없으나, 조선인에게 무시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고 하
는 분위기가 일본 전국에 넘쳤고, 그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친 사람도
다수 있었다. 강제연행으로 노동현장에 있던 사람도 같은 생각이었고, 지진의
기억은 재일(在日)의 트라우마가 되었다. 그리고 신주쿠(新宿)에서, 쓰루하시(鶴
橋)에서 한민족에 대한 증오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야마다 쇼지[山田昭次]

한국근대사 전공, 릿쿄대학 명예교수

대표논저로는 『植民地支配・戦争・戦後の責任』(2005, 創史社), 『關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とその後』(2003, 創史社), 『朝鮮人戦時労働動員』(2005, 岩波書店), 「今日における關東大震災時朝鮮人虐殺の國家責任と民衆責任」(2010, 『思想』第1029號) 등이 있다.

일본 민중은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오늘날 일본의 정치적·사상적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릿쿄대학 야마다 쇼지

I. 머리말 -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필자의 문제의식에 대하여

필자에게 주어진 과제는 '일본 사회는 관동대지진시 조선인 학살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어떻게 계승해야 할 것인가'였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한 필자의 문제의식을 언급한다면 다음과 같다.

①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은 1923년 9월 1일부터 6일에 걸쳐 관동 지방의 여러 지역에서 군대·경찰·자경단(自警團)이 저질렀다. 다만 지바현(千葉県) 나라시노(習志野)에 주둔하고 있던 기병대는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조선인을 7일 이후에 주변 마을의 농민에게 넘겨 학살시켰다. 그 조선인은 수용소에서 군인들이 '불령선인(不逞鮮人)'으로 간주한 조선인이었을 것이다.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은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을 지향하는 조선인의 동향과 일본의 사회주의자와 선진적 노동자가 연대지향을 갖기 시작한 상황을 위협하게 본 관헌(官憲)들이 저지른 것인데, 문제는 이런 상황을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현이 일찍이 학살사건 직후부터 행한 조선인 학살의 국가책임 은폐공작이 있었고, 이를 문제시하고 조선인 학살사건 후의 국가책임도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② 일본 민중의 극히 일부는 별도로 하고, 다수는 관현이 일으킨 조선인 학살에 가담해버린다. 따라서 금일의 일본 민중은 조선인 학살의 민중책임을 인정하고, 학살에 가담한 자기의 내적 원인을 해명할 책임을 오늘날에도 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민중책임이고, 자기과오의 내적 원인 규명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이를 회피해서는 다음에서 언급할, 오늘날의 일본의 정치적·사상적 상황과 대결할 수 없다.

③ 관동대지진시 조선인 학살사건의 국가책임 은폐는 전전(戰前)에 행해진 것만은 아니다.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는 움직임에 대해 1990년대에 이를 '자학사관(自虐史觀)'으로 매도하는 내셔널리즘이 자민당과 지식인 사이에 발흥하고, 관동대지진시 조선인 학살의 실태, 특히 학살의 국가책임을 은폐하는 움직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관동대지진시 조선인 학살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두고, 이 동향과 대결하는 일이 오늘날 일본 민중의 중요한 과제다.

II. 관동대지진 전야에 발생한 조선 해방을 위한 일본인·조선인 연대지향의 맹아

관동대지진 전야(前夜)에 해당하는 1921~1923년 전반기까지, 재일(在日)조선인 운동과 일본 사회주의자의 동향, 그리고 노동운동에 양측 연대지향이 나타났다.

1921년 1월 21일~1921년 2월 2일에 걸쳐 코민테른이 모스크바에서 개최한 극동노동자대회에서 가타야마 센[片山潛]과 도쿠다 규이치[徳田球一] 등 일본 대표단은 '일본에서의 공산당원의 임무'에서, 일본 공산주의자가 당면 실현해야 할 4개 과제의 하나로 식민지, 식민지적 세력권의 해방을 거론했다[岩村登志夫(1979. 5), 『極東勤勞者大會日本代議員採擇綱領』, 『史林』 제62권 제3호, 147쪽].

1922년 11월에 도쿄[東京] 조선노동동맹회(朝鮮勞動同盟會)가 결성되었고, 12월에는 오사카[大阪] 조선노동동맹회가 결성되었다[內務省警保局保安課(1975), 『大正十五年中に 있어서의 在留朝鮮人の 概況』, 朴慶植 編,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 제1권, 三一書房, 215쪽].

이 시기에는 재일조선인 노동자의 의식이 급속히 앞서 나가고 있었다. 1920년 내무성 경보국 보안과에서 간행한 『조선인개황 제삼(朝鮮人概況 第三)』에는 재일 조선인 노동자에 관해서, “그들은 일반적으로 지식의 정도가 낮아 시대사조를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 조국회복문제에 관해서 무관심한 자가 많다.”고 기록하고 있다(朴慶植 編, 위의 책, 92쪽). 그러나 1923년 5월 14일부 내무성 경보국 보안과장의 각 부현(府縣) 장관(長官) 앞으로 보낸 '조선인 노동자 모집에 관한 건의명통첩(件依命通牒)'은, “내지(內地)경제의 부진에 즈음하여 이들 조선인의 다수는 취직난에 고통받아 부랑자로 변할 경향이 있을 뿐 아니라, 때때로 사회운동 및 노동운동에 참가하여 단체행동으로 나설 경향도 있다.”며 조선인 노동자의 사상적 성장에 강한 경계심을 표시했다(朴慶植 編, 위의 책, 38쪽).

『전위(前衛)』 1922년 3월 호에 「조선인에서 일본의 노동자로」라는 조선인의 무서명(無署名) 논설이 게재되었다. 이 논설은 조선인 운동은 “편협한 국수운동도 아니고, 또 원래부터 우리들만의 민족운동도 아니다. [...] 우리들도 세계 무산계급의 일부다.”라고 하여, 일본 노동자와의 연대를 구했다(朴慶植 編, 위의 책, 146쪽).

1922년 5월 1일에 도쿄시 시바우라[芝浦]에서 개최된 제3회 메이테이에 참

가한 조선의 사회주의자 백무(白武)는 조선인 친구 4~5명과 함께 인사를 했고, 수천 명의 일본 노동자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그는 사회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 일본 지식인과는 친근감을 갖고 접했는데, 일본 노동자와는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과 교류를 맺으려고, 메이데이에 참가했던 것이다(吉岡吉典(1965. 6), 「조선인이 최초로 참가한 제3회 메이데이 전후-백무 씨에게 듣다」, 『朝鮮研究』 제40호, 32쪽).

1922년 7월 29일자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은 니가타현(新潟縣) 시나노천(信濃川) 지류인 나카쓰천(中津川)의 발전소 공사를 청부한 토건회사 내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학대와 학살을 보도했다. 이른바 '시나노천 조선인 학살사건'이 그것이다. 이해 8월 초순, 경성(京城)에서 조직된 니가타현 조선인학살사건조사회와 도쿄 거주 조선인이 나카쓰천조직(信濃川組織)의 조선인학살사건조사회 회원들이 현지조사를 행했다(山田昭次(1996), 『金子文子-自己・天皇制國家・朝鮮人』, 影書房, 123~124쪽). 그리고 9월 7일 도쿄시 간다구(神田區) 미토시로정(美土代町)의 기독교청년회관에서 나카쓰천조선인학살사건조사회 주최의 조사보고회가 개최되었다. 9월 9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회장 내에 일본인 약 2천 명, 조선인 약 5백 명, 회장 밖에 수천 명이 모였다고 한다. 이것은 일본인 사이에도 재일 조선인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위』 9월호에 게재된 무서명의 논설 「일선(日鮮)노동자의 단결」과 아마카와 히토시(山川均)의 「당면의 문제」는 일본 노동자의 조합운동은 조선 선각자에 대한 민족차별, 임금의 폐지를 운동의 슬로건으로 할 것을 제기했다.

『적기(赤旗)』 1923년 4월 호에 이 잡지 편집부에서 제출한 양케이트 「무산계급에서 본 조선 해방문제」에 대한 27명의 일본 사회주의자·노동운동가와 2명의 조선인의 회답이 게재되었다.

아마카와 히토시는 “우리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식민지의 포기를 권력자에

게 압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고, 그 때문에 “조선의 무산계급과 나란히 그 대표자에 대해 가능한 한 밀접한 관계를 갖는 일이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33쪽).

남갈노동회(南葛勞動會)의 지도자 가와이 요시토라(川合義虎)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日本の 노동자 계급은 조선 식민지의 해방을 외치고,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민족차별폐지를 주장하며, 구체적으로는 조선에서의 군대철수, 日鮮勞動者の 임금평등을 요구하고, 운동의 완전한 일치와, 同一單線에서는 일을 최대의 급무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35쪽).

즉 가와이 요시토라는 궁극적 과제로서 식민지 지배의 폐지, 눈앞의 과제로서는 민족차별임금의 폐지를 주장했다. 1922년 11월부터 전호엄(全虎嚴)은 남갈노동회 가메이도지부(龜戶支部)에 소속해 활동했다[李珍珪(1963), 『關東大震災에 있어서 朝鮮人虐殺의 진상과 실태』, 朝鮮大學校, 141쪽], 따라서 가와이 요시토라는 눈앞의 과제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김종범(金鍾範)과 주종건(朱鐘健)도 일조노동자(日朝勞動者)의 연대를 주장했다(34, 42~43쪽).

다만 일본 논자들 가운데에는 조선인에 대해 많은 일본인 민중이 갖는 편견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발언도 있다. 예를 들면 광부연합조합차합회(鑛夫連合組合車合會)의 사카구치 요시하루(坂口義治)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우리 일본 민족은 이와 같이 두려워해야 할 인류상의 대의를 무시하고, 동시에 조선 민족을 정복·지배하려는 의도를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일본 민족의 대다수인 무산계급은 이미 여기에 착안하고 있다. 단지 남은 것은 각성을 모르는 소수의 권력자뿐이다(38쪽).

사카구치 요시하루의 견해는 관동대지진 당시에 일어난 관민일체(官民一體)의 조선인 학살 사태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낙관론이었다. 기타하라 시즈오(北原靜雄)는 대지진 직후 발행된 잡지 『스스메(進め)』 1923년 10월 호에 게재된 논설 「지진과 사회주의-사회주의자의 금후의 길에 대해서」에서 사회주의자들은 “자경단의 죽창을 보고 새삼 고립의 슬픔을 느낀다.”고 고백했다. 사회주의자는 대지진 때 자신들이 민중에게서 고립되어 있었음을 자각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지만, 궁극적 과제로서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의 폐지와 눈앞의 과제로서 민족차별임금의 폐지가 일본의 사회주의자와 노동운동가의 과제로서 의식된 사상적 의의는 크다.

III. 식민지 해방 슬로건을 채택한 1923년 5월 도쿄의 메이데이에 대한 경시청의 대탄압

도쿄의 1923년 메이데이 준비회는 격론 끝에 메이데이 슬로건의 하나로 ‘식민지 해방’을 채택했다. 이날은 4월 9일자 《호치신문(報知新聞)》에 따르면 4월 8일, 『적기』 5월 호에 따르면 4월 12일이었다.

그러나 경시청은 ‘식민지 해방’을 슬로건으로 게재하기를 허가하지 않았다(『勞動』, 1923. 5. 1). 경시청은 더욱이 사회주의 단체, 기타 사상단체의 메이데이 참가도 금지했다(『讀賣新聞』, 1923. 5. 1).

그리고 사전검열을 엄격히 하고, 5월 1일 전야부터 회장인 시바공원(芝公園) 주변에 많은 경관이 둘러싸고 회장입구에 배치된 ‘조선인 담당’과 ‘주의자(主義者) 담당’ 경관이 회장을 들어가려는 조선인과 사회주의자를 검거했다(『東京朝日新聞』, 1923. 5. 1, 석간).

경시청에서 불허한 '식민지 해방'의 슬로건을 기록한 깃발은 보이지 않았지만, “조선의 동포를 해방시켜라.”는 목소리가 회장에서 울려 퍼졌다(《報知新聞》, 1923. 5. 1, 석간). 연단에 오른 손(孫)모씨는 “자국(自國)의 독립, 프롤레타리아의 해방”이라고 절규하고(《中央新聞》, 1923. 5. 1, 석간) “노동자에게 국경은 없다.”고 부르짖었다(『勞動』, 1923. 6. 1). 그러자 손씨는 “연단 아래 있던 사복에게 끌려 내려져 [...], 4, 5명의 경관이 마구잡이로 차고, 밟고, 구타하고 [...], 게다가 손을 비틀고 신발로 치면서 검거했다.”(《東京日日新聞》, 1923. 5. 2)

데모대가 시바공원을 나와 우에노[上野]를 향해 행진 중에도, 형사들이 조선인 30여 명에게 달려들어 넘어뜨리고 파출소로 끌고가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자동차로 연행할 때에는 조선인들의 얼굴과 손발이 벌겋게 부어올랐다(《報知新聞》, 1923. 5. 2).

나카지마 센파치[中島千八]의 보고 「노동제(勞働祭)를 끝내고」(『赤旗』, 1923년 6월 호)에 따르면, 이 시기 도쿄의 메이데이 때 구속자 수는 다음과 같고, 제4회 메이데이의 구속자는 이전의 메이데이보다 훨씬 많았다.

- 1920년 제1회 메이데이 6명
- 1921년 제2회 메이데이 36명
- 1923년 제3회 메이데이 125명
- 1924년 제4회 메이데이 195명

더구나 관동철공조합(關東鐵工組合)의 고이케 마사쓰구[小池正次]는 제4회 메이데이를 회고하며 “금년 관현의 압박은 예에 따라 극에 달했다. 몰지각한 경관의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압박과 박해는 실로 도를 넘었다.”고 보고했다(『勞動』, 1923. 6. 1).

이상의 분석을 가지고 1924년 도쿄의 제4회 메이데이의 특징을 말하면, 그

이전의 메이데이에 비해 경시청의 탄압은 극심했고, 특히 조선인에 대한 탄압은 더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원인은 제4회 메이데이 준비회가 '식민지 해방'을 메이데이 슬로건의 하나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관동대지진 전야의 정치적·사상적 상황이 이와 같았던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IV. 관동대지진시의 조선인 학살

1. 관헌이 유포한 조선인 폭동 유언(流言)과 조선인 학살의 용인 발언

관동대지진은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44초에 일어났다. 진도 7.9의 강진이었다. 그 후 2일까지 여진이 5회 더 있었다. 대지진이 발생하고 전소된 세대는 28만 1천여, 사망 9만 1천 명에 달했다.

늦어도 1일 저녁부터 경찰관들이 조선인이 방화했다거나 살인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시작하고, 2일 이후가 되면 때로는 군인도 유언비어를 적극적으로 유포하고, 내무성 경보국장(警保局長)과 사이타마현(埼玉縣) 내무부장이 조선인 체포 지령을 내렸다. 내무성 경보국장이 조선인 폭동을 사실로 인정했던 것은 9월 2일이라고 생각된다. 게다가 경찰관은 조선인 학살을 용인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민중이 조선인 학살을 자랑하는 사태가 나타났다. 이하 유언비어의 사례를 열거해보자.

• 9월 1일 저녁에 경관이 유포한 유언비어

① 데라다 도라히코(寺田寅彦)의 '진재일기(震災日記)'에서(9월 2일자)

귀가해보니 화재로부터 도망친 아사쿠사[淺草]의 친척 13명이 피난해 있었다. [...] 어젯밤 우에노[上野]공원에서 숙박하던 중, 순사가 와서 ○○(조선-인용자)인 방화자가 배회하고 있으니 주의하라고 했다고 한다.

② 10월 25일 도쿄시 본향소학교(本郷小學校)에서 개최된 혼고구[本郷區] 구회 의원(區會議員), 구(區)의 유지, 자경단 대회의 모임에서 서정(曙町)의 무라다[村田] 자경단 대표의 보고(報告新聞), 1923. 10. 28).

9월 1일 저녁 서정 파출소의 순사가 자경단에게 와서 “각 마을에서 나쁜 조선인이 살인방화하고 있으니 주의하라”고 두 번이나 통지하고 갔다(하략).

• 9월 2일에 경관과 군인이 유포한 유언비어

① 도쿄시 아자부구[麻布區] 본촌심상소학교(本村尋常小學校) 1학년생 니시무라 기요코[西村希代子]의 작문 ‘대지진 이야기’
(9월 2일-인용자) 저녁이 되자 ○○○(부정한 조선인-인용자)이 공격해오니까라고 순사가 말했습니다.

② 도쿄시 교바시구[京橋區] 고등소학교 1학년생 스즈키 시로[鈴木四郎]의 작문 ‘추억’

(9월 2일-인용자) 날은 서쪽으로 기울었다. [...] 순사가 “오늘밤은 ○○○(불량한 조선인-인용자)의 야간습격이 있으니 주의하라”고 외치면서 돌아다녔다.

③ 가나카와현[神奈川縣] 굴수군(橘樹郡) 증원촌(中原村, 現 川崎市)의 고바야시 히데오[小林英夫]의 일기(1923년 9월 2일자)

이날 오후 경찰로부터 “게이힌[京浜] 방면의 조선인 폭동에 대비하기 위해 출동하라”는 전달이 있었고, 재향군인·청년단·소방단 등, 부락의 혈기왕성한 남자는 각각 무기를 휴대하고 집합하여, 시의 평경(坪境)까지 진군했다(川崎市役所編·刊行(1968), 『川崎市史』, 303쪽).

④ 요코하마시[横浜市] 기자소학교(磯子小學校) 고등학교 1학년생 우치다 도요지[内田豊次]의 작문 ‘지진시의 모습’

9월 2일에 또 두려웠던 것은 조선인 소동이였다.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며 순사와 사람들이 칼과 죽창 등을 갖고 조선인 정벌이라고 말했다.

⑤ 요코하마시 수소학교(壽小學校) 1학년생 기카와 마쓰[木川]의 작문 ‘명호초토(嗚呼焦土)’

(9월 2일-인용자) 이시카와[石川]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무엇일까. 그때 군대가 나타나 ‘조선인이 난폭하기 때문에 온 것’이라고 했다.

• 조선인 학살을 옹인한 경찰관의 발언과 조선인 학살을 자랑하는 민중

① 1923년 10월 22일자 《東京日日新聞》 게재 투서

나는 미타[三田] 경찰서장에게 질문한다. 9월 2일 밤, XX(鮮人-인용자) 내습의 정보를 귀하의 부하로부터 들은 우리들은, 주의에 따라 자경단을 조직할 때, “XX(鮮人-인용자)라고 판단된다면, 본서(本署)로 끌고와라. 저항한다면 ○(殺-인용자)해해도 문제없다”라는 말을 친한 귀하로부터 받았다.

② 도쿄시 혼조구[本所區](현 墨田區)에 거주하고 있던 가와시마 유키[川島]의 수기(手記) ‘대진재직면기(大震災直面記)’

‘○(鮮-인용자)인으로 보인다면 타살해도 좋다.’

이를 순사가 걸어다니면서 말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문제없다. [...] 머리띠를 두른 기세당당한 장년의 남자들이 코앞에 다가올 듯이 하면서 “오늘은 6명 처치했다”, “내가 제일 먼저 손을 써 처치했다”고 득의양양하게 말하면서 유행성 변태적인 몸짓을 하고 있었다.

③ 9월 3일 요코하마시 나카무라정[中村町]에서의 민중의 대화[도쿄 朝日新聞記者, 西川春海(1927), 「조난과 그 전후」, 横浜市役所編纂係 編, 『横浜震災詩誌』 제4권, 横浜市, 431쪽]

“여보시게 조선인은 몇 명 해치웠나?”

“저는 오늘로 6명 해치웠습니다.”

“그거 대단하네.”

“뭐라 해도 몸을 지키기 위해, 공공연히 사람을 죽이는 일이니, 대단한 일이지.”

• 내무성 경보국장과 사이타마현 내무부장의 조선인 경계 지령

① 내무성 경보국장 전문

(9월 3일 오전 8시 15분, 해군무선전신주교송신소(海軍無線電信舟橋送信所)로부터 각 지방장관 앞, 다만 남아 있는 전문에는 “이 전보를 기병에게 시키면 2일 오후면 기억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내무성 경보국장이 조선인 폭동을 사실로 생각한 것은 9월 2일이다.)

동경 부근의 지진을 이용해서 조선인은 각지에 방화하고 불량을 목적으로 하려고 하며, 현재 동경시내에서 폭탄을 소지하고 석유를 뿌려 방화하는 자가 있다. 이미 동경부 내에서는 일부 계엄령을 시행한 까닭에 각지에서 충분히 사찰하고 조선인의 행동에 대해 엄밀한 검색이 가해졌다[琴乘洞 編·解説(1991), 『關東大震災朝鮮人虐殺問題關係史料Ⅱ朝鮮人虐殺関連官廳史料』, 綠蔭書房, 158쪽].

② 사이타마현 내무부장의 지령

(9월 2일 저녁에 내무성에서 돌아온 사이타마현 지방과장이 내무성에서 가져온 지령에 기초하여 사이타마현 내무부장이 전화로 군청 경유로 사이타마현 내의 정촌역장(町村役場)에 보낸 지령)

서발 제8호 다이쇼 12년 9월 2일(庶發第八號 大正十二年九月二日)

사이타마현 내무부장[埼玉縣 內務部長]

군정촌장(郡町村長) 앞

불량조선인폭동에 관한 건

이첩(秘牒)

이번 진재에 대해 동경에 있는 불온한 조선인들의 망동이 있다. 또한 그 사람이 과격사상을 갖고 있는 무리들(사회주의자를 가리킴-인용자)이 이와 연계하여,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점차 그 독수를 휘두를 것 같은 염려가 있다. 이에 정·촌의 당국자는 재향군인분회, 소방대, 청년단과 일치 협력하여 그에 대한 경계에 임하고, 만약 유사시 신속하게 적당한 방책을 강구하도록 시급히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의 내첩이 있기에, 이를 전달하는 것이다[吉野作造(1924), 『압박과 학살』, 96~97쪽].

2. 군대 출동과 계엄령 포고

• 군대 출동

지진이 발생하면, 도쿄 위수사령관(衛戍司令官)은 응급조치를 취해 근위사단(近衛師團)과 제1사단에 도쿄의 경비를 담당시켰다. 그리고 2~3일에 걸쳐 히로사키[弘前], 센다이[仙台], 가나자와[金澤], 우쓰노미야[宇都宮] 등에서 군대가 도쿄에 출동했다. 요코하마에도 2일에 해군육전대가 상륙하고, 3일에는 제1사단 부대가 도착했다. 『관동계엄사령부상보(關東戒嚴司令部詳報)』와 사법성(司法部) 『대지진 후에 형사사범 및 이에 관한 사항 조사서』 등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5일에 걸쳐 군대가 도쿄부와 지바현[千葉縣]에서 조선인 57~60명, 중국인 200명, 일본인 23~26명을 살해했다.

• 계엄령 포고

계엄령이 2일에 도쿄시와 그 인접 5군(郡)에 포고되고, 3일에는 도쿄부와

가나가와현[神奈川縣]에 대해, 4일에는 사이타마·지바 두 현에 대해 포고되었다. 이리하여 계엄사령관은 지방행정사무와 사법사무의 지휘권을 장악함과 동시에 집회개최·신규발행 금지, 병기와 화약의 검사·압수를 시작으로 치안권을 장악했다. 유언비어에 뒤이어 군대 출동과 계엄령 포고는 조선인에 대한 민중의 박해·학살을 한층 촉진시켰다.

3. 자경단이 만들어진 방법과 그 사상

• 자경단 수와 만들어진 방법

깃가와 미쓰시다[吉川光貞] 저 『관동대진재의 치안회고(關東大震災の治安回顧)』(법무성 특별심사국, 1949)에 따르면, 관동지방에 조직된 자경단 수는 3,689개에 달했다. 관동지방 외에서도 자경단이 조직되었지만, 연구가 빈약하기 때문에 그 전모는 불명이다.

자경단 설립과정에는 다음의 세 종류가 있다.

① 지진이 일어난 당초에 야경단으로서 가주(家主), 지주(地主), 정공장(町工場) 경영자 등 지역 유력자가 조직한 것인데, 조선인 폭동 유언비어를 접하고 자경단으로 전환된 것.

② 관동대지진 수년 전 경찰의 하청 치안조직으로서 지역 유력자가 조직한 ‘보안조합(保安組合)’과 ‘안전조합’ 등이 조선인 폭동 유언비어를 접하고 자경단으로 전환한 것.

③ 사이타마현의 사례와 같이 관동대지진시에 관현의 지령에 따라 청년단, 소방단, 재향군인분회 등을 모체로 해서 조직된 것.

· 자경단원이 된 민중의 사상

당시 다수의 일본 민중의 사상 특징을 말한다면, 첫째, 그들은 천황제 국가를 신복하는 국민이었다. 사이타마현 혼조시[本庄市]의 바바 미치히로[馬場道博]는 관동대지진 당시의 민중의식을 회상하며 “당시 일본 국민은 ‘오카미(천황)는 틀림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과 함께, 조선인이 그런 나쁜 짓을 했던가 하는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했다[관동대지진 60주년 조선인희생자추도사업실행위원회 편·간(1987), 『숨겨진 역사-관동대지진과 埼玉의 조선인학살사건』, 增補保存版, 427~428쪽].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도 “책임 있는 XX(官憲-인용자)가, 이 유언비어를 전파하고 동시에 이를 믿게 하는 힘이 있었음은 틀림없는 것 같다.”고 보았다[『조선인학살사건에 대해서』, 『吉野作造選集』 9(1995), 岩波書店, 199쪽].

즉 그들은 천황제 국가에 대해 강한 충성심을 갖고 있는 국가주의자였다. 예를 들면, 1923년 10월 22일에 우라와지재[浦和地裁]에서 열린 구마가야[熊谷] 조선인 학살사건의 법정에서 어느 피고는 조선인 학살의 이유에 대해 “당시는 질서가 문란했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東京日日新聞』, 1923. 10. 22, 석간).

1923년 11월 14일에 지바지재[千葉地裁]에서 열린 지바현 히가시카쓰시카군[東葛飾郡] 우라야즈정[浦安町]에서의 조선인 학살사건 및 일본인 오살사건(謀殺事件)의 법정에서 한 피고는 “단칼에 베어 죽었는데, 국가를 생각했기 때문에 한 것이다.”라고 진술했다(『東京日日新聞』, 1923. 11. 15, 房總版).

둘째, 그들은 무분별하게 사람을 죽이는 불령선인의 조선인상을 갖고 있었다. 박열(朴烈)과 가네코 후미코[金子文子]는 1922년 11월에 간행된 『太(朝鮮人)』 창간호 간행사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를 설명했다.

일본 사회에서 오해받고 있는 ‘불량조선인’은 암살, 파괴, 음모를 꾀하는 자

인가, 혹은 만족할 때까지 자유의 생각을 불태우며 살아가는 인간인가를, 우리들과 서로 유사한 경우에 있는 많은 일본의 노동자 제군에게 고향과 동시에 ……(30자 伏字)는, 『太_い鮮人』을 발간한다.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는 멋대로 사람을 죽이는 불령선인이라는 일본 민중의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잡지를 발행한 것이다. 일본 민중이 이 불령선인 상(像)을 품었던 것은 3·1운동 이래 일본의 신문이 조선인의 독립운동을 보도하는 경우, 대체로 이를 음모, 암살, 방화, 강도라는 딱지를 붙였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면, ‘조선독립운동의 음모’ (《요미우리신문》, 1919. 11. 28)라든가 ‘불량한 조선인의 독립음모의 전말, 암살방화강도를 하다’ (《요미우리신문》, 1920. 8. 18)라고 한 경우다.

• 조선인 학살의 실태

자경단원들의 조선인 학살은 무자비한 모습을 드러냈다. 우선 도쿄의 사례를 거론한다. 사카마키 후치는 백자신사(白鬚神社) 가까운 스미다천(隅田川)에서 본 수많은 조선인 사체의 참혹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끈으로 몸이 결박된 조선인이 강에 빠져 죽어 있습니다. […] 10여 명 정도의 조선인이 모두 묶여져 있고, 3명씩 많게는 10명 정도가 함께 발이 조금 연결되어 있구요. 따라서 모두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존해 있는 사람을 처박아놓았기 때문에, 물을 먹어 배가 부풀어오르고 몸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나체였지요. 똑바로 누운 채로 죽은 자도 있고, 엎어져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얼마인지 셀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 장면을 나의 눈으로 똑똑히 봤지요. 정말로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걸어갔습니다[『日朝協會豊島支部 編·刊(1973), 『民族의 가시-關東大震災와 조선인학살의 기록』, 10쪽].

후타하시 기이치[二橋茂一]는 9월 2일 아침, 도쿄시 미나미가쓰시카군[南葛飾郡] 오시마정[大島町]에서 본 조선인 학살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근처의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어 무슨 일인가 봤더니, 경관이 한 남자를 연행해가는 것을 한 무리의 군중이 조선인, 조선인이라고 욕하면서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던 중 군중은 경관을 밀쳐내고 남자를 잡아채어 가까운 연못에 던져버리고는 3명이 굵은 몽둥이를 갖고 와서 살아 있는 인간을 떡을 치듯이 광광 내리쳤습니다. 그 사람은 비명을 지르고, 연못물을 마셔 고통스러운 얼굴을 들면, 또 내리쳐 드디어 살해해버렸습니다. 일단 사람들은 환성을 지르며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리가 와서 죽어 있는 그 사람을 연못에서 꺼내어 돌아가며 둥글고 굵은 몽둥이로 팼습니다. 육신은 찢어지고 피가 터져 인간의 모습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때리고 고성을 지르고 사라졌습니다. 죽은 자를 또 한 번 죽인다는 말대로 그때의 참상은 지금도 나의 눈앞에 선하게 남아 있습니다[清水機太郎 監修(1975), 『手記・關東大震災』, 新評論, 93~94쪽].

우라베 마사오[浦邊政雄]는 9월 4일 도쿄시 혼조구[本所區]의 피복창터[被服廠跡]에서 다음과 같은 조선인 학살 광경을 보았다.

피복창터 안의 다소 넓은 공간에서 비참한 광경을 목격했다.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피투성이가 된 4명의 조선인을 철사로 묶고 한 되나 되는 석유를 부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거기에 불을 붙였던 것이다. 타오르는 불길에 몸 부림치며 뒹굴면, 이번에는 손에 들고 있던 부지깥이로 짓눌렀다. 그리고 눈에 핏발을 세우며 외쳤다. “이놈들은 우리들의 형제와 자식들을 죽였다.” 나는 도저히 볼 수가 없었다. “아, 아버지(おとつあん), 저쪽으로 가자”고 도망치듯이 현장을 떠나 피복창적 밖으로 나왔다[清水機太郎 監修(1975), 위의 책, 122쪽].

요코하마시에서는 나카무라정[中村町] 주변에서 일본인의 조선인 학살이 집중되었다. 우선 다바타 기요시[田畑潔]의 회상을 들어보자.

요코하마의 나카무라정 주변은 여인숙이 밀집한 지역이다. 여인숙에는 조선인 노무자가 많이 거주하여 수백 명가량 있었던 것 같다. 이곳의 가까운 친구 집을 방문하였다가 지진을 만난 나는, 때문에 세상에 잘 알려진 조선인 학살의 실태를 이 눈으로 자세히 목격하게 되었다. 2일째 아침부터 조선인이 불을 지르며 돌아다니고 있다는 유언비어가 돌면서 곧바로 조선인 사냥이 시작되었다. 네기시교[根岸橋] 옆에 통칭 ‘네기시[根岸]의 별재(別在)’라 불리는 요코하마형무소가 있는데, 거기의 콘크리트벽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죄수들이 일시 해방되어, 이 죄수들을 찾기 위해 7, 8백 명이 가세하여 조사대가 생겼다. 그들은 마을을 구석구석 찾아 돌아다니고 밤새워 산을 수색해나갔다. 발견된 조선인은 경찰관이 연령, 성명, 주소를 확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의 수색대로 연행해갔다. 얼떨떨한 상황에서 경찰관 자신도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의 냉랭한 분위기였다. 그리고 조선인을 둘러싸고 변명을 하나도 듣지 않는 문답 무용이고, 손에 쥔 죽창과 칼로 조선인을 괴롭혔다. 그것도 단순히 베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제각기 괴롭혔다. 놀랄 정도로 너무나도 잔혹했다. 머리를 찌르는 자, 죽창을 눈에 꽂아 세우는 자, 귀를 베어내는 자, 등짝을 때리는 자, 발등을 찌는 자…… 조선인의 신음과, 의기양양한 소리를 내는 일본인의 고성(高聲)이 섞여서 이 세상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처참한 장면이 전개되었다(『진홍색 강』, 『湖』, 1971년 9월호, 98~99쪽).

역시 나카무라정에서 이 광경을 본 미다 겐지로[美田賢二郎]도 “그것은 지금 생각해도 오싹한데, 전주에 철사로 묶어놓고 두들겨패거나, 솔개로 머리에 구멍을 쪼거나, 죽창으로 찌르거나 아무튼 엉망진창이었다.”고 회상했다(『振り下ろされたトビ(내리 찍힌 솔개)』, 『湖』, 1971년 9월 호, 100쪽).

• 아키다 우자쿠의 자경단론

재일조선인들과 친하게 교류하고 있던 아키다 우자쿠(秋田雨雀)는 자경단원이 된 일본 민중의 사상의 공허함을 묘사한 희곡 〈해골(骸骨)의 무도(舞跳)〉를 1924년 1월 15일에 탈고했다. 그는 1월 10일 일기에 “국민사상의 공허를 나체로 한 것처럼 하자.”라고,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고 있다. 이 희곡에 등장하는 청년은 자경단원을 평하여 “타인이 입힌 의복을 소중하게 입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現代史會 編, 『關東大震災』, 草風館, 244쪽). ‘타인이 입힌 의복’이란 국가가 국민에게 입힌 의복, 즉 국민사상 또는 국민도덕을 가리키고 있다.

이 청년은 자경단원을 향해 조선인을 가리키며 “이 사람을 봐라”라고 말한 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자연으로부터 받은, 단 하나의 생명 뿐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이다!/ 너희들은 대체 무엇이나?/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죽은 도덕뿐이다./ [...] / 제군은 생명이 없는 인형이다!/ 사람(死體)이다!/ 해골이다!”라고 말했다(現代史會 編, 위의 책, 257~258쪽). 즉 아키다 우자쿠는 조선인이야말로 국가주의에 오염되지 않은 진정한 인간이고, 일본 민중은 국가에 조종되는 꼭두각시 인형이며 밀랍화된 시체고 해골이라는 것이다.

아키다 우자쿠는 1923년 11월 26일자 《요미우리신문》에 게재된 논설 “민족해방의 도덕(道徳)에서 “친절, 무사기(無邪氣), 상호 부조적(相互扶助的)인 정신조차도 그것은 완전히 자기의 민족에 한정되는 것이고, 일부 이해를 달리한 민족에 대해서는 모든 잔학하고 무도한 행위를 낳는다.”고 하였다. 일본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도덕과 우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에서 해방될” 필요를 호소했다. 즉 아키다 우자쿠는 일본인은 국가를 초월한 보편적·인류적인 윤리에 입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했던 것이다. 그의 제언은 다시 내셔널리즘이 발흥하고 있는 금일의 일본의 정치적·사상적 상황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다.

• 관헌에게서 탄압받은 위에 민중에게서 고립된 사회주의자들

경찰은 이른 시기부터 일본인 사회주의자에 대해 탄압했다. 즉 1923년 9월 15일자 《호치신문》 석간에 따르면, 9월 1일 밤부터 경시청 산하의 경찰서는 사회주의자를 구속하고, 오사카[大阪]에도 연락해 사회주의자를 구속했는데 ‘그 수는 60여 명에 달했다’. 1923년 10월 12일자 《오사카마이니치신문[大阪毎日新聞]》에 따르면, 경시청 특별고등과는 관내 각서와 협력하여 1개월에 걸쳐 20여 사회주의단체를 급습하여 사회주의자를 일망타진하여 검거했다. 더구나 검거는 군대의 힘을 빌렸기 때문에 난폭함이 극에 달하고 ‘60여 명의 검거자 중 부상당하지 않은 자는 전무한 모양이었던 것’ 같았다. 사회주의자들이 경찰에서 석방된 것은 10월 7일경이었는데(《國民新聞》, 1923. 10. 12), 사회주의자 중 ‘시내에 머문 일이 일부 민중의 분노를 사 생명을 위협받는 공포심에서 자발적으로 귀향을 신청하는 자가 있어’, 히라바야시 하쓰노스케[平林初之輔]는 신슈[信州]에, 미즈누마 다쓰오[水沼辰夫]는 부인의 고향인 지바로 낙향했다(《時事新聞》, 1923. 10. 13).

도쿄부 미나미가쓰시카군[南葛飾郡] 오시마정[大島町]에서는 9월 2일부터 조선인 학살이 시작됨과 동시에 평소 사회주의자와 경찰에 반항적이던 사람을 자경단이 나한사[羅漢寺] 묘지로 끌고가 죽창과 칼로 참살하였다(좌담회, 『純勞動組合・南葛勞動會 및 龜戸事件』, 『勞動運動史研究』 제36호, 1963. 5, 40쪽).

9월 3일, 가메이도[龜戸] 경찰서는 남갈노동회(南葛勞動會)의 가와이 요시토라[川合義虎]를 비롯한 노동자 7명, 가끔 가와이 요시토라의 집을 방문한 스즈키 나오이치[鈴木直一], 순노동조합(純勞動組合)의 히라사와 게이시치[澤計七], 나카네 우하치[中筋宇八], 총 10명을 구속하고, 그들을 나라시노[習志野] 기병연대의 군인에게 살해토록 했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날 가토 준조[加藤文三]의 『가메이도 사건[龜戸事件]－숨겨진 권력범죄』(大月書店, 1991)에 따르면, 9월 4일 밤부터 5일

미명에 걸쳐 일어난 일인 것 같다.

9월 16일에는 도쿄 헌병대분대장 아마카스 마사히코[甘粕正彦]가 무정부주의자 오스기 사카에[大杉榮]와 그의 처와 조카를 살해했다.

• 도쿄 노동운동과 조선인의 연대 지향 포기

1924년 5월 1일 제5회 도쿄의 메이데이 준비회에 즈음하여 조선인과의 연대를 포기하였다. 준비에 즈음하여 “조선인 측 제출 표어인 ‘식민지 해방’과 같은 것은 주최자 간사회에서 부결되기도 하고, 또 위원으로 조선인 중 1명을 추천한 것도, 위원회에서는 항상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內務省社會局部(1924, 7), 제1부, 『朝鮮人勞動者에 관한 상황』, 朴麗植 編(1975), 『在日朝鮮人關係史料集成』 제1권, 三一書房, 447쪽 所收).

사회주의자에 대한 관헌의 탄압과 민중에 의한 고립은, 일본인 노동운동 지도자의 조선인과의 연대 지향 포기를 가져왔다.

V. 조선인 학살의 국가책임을 은폐하는 일련의 공작

1. 조선인 폭동의 날조공작

• 관헌들의 조선인 폭동의 날조 방침 결정

1923년 9월 5일 임시진재사무국(臨時震災事務局) 경비부(警備部)에 각 방면의 관리들이 모여 ‘선인(鮮人)문제에 관해 외부에 관헌이 채택해야 할 태도’를 합의 결정하려고 했다. 관리들 내부에서도 조선인 폭동의 실재가 의심스럽고, 조선

인 폭동을 사실로 인정하고 조선인 학살을 일으킨 국가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의논한 끝에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조선인 폭행 또는 폭행하려고 한 사실을 적극 조사해서 긍정적으로 노력할 것. 동시에 아래 사항에 대해 노력할 것.

1. 풍설(風說)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를 사실로 할 수 있는 한 긍정할 수 있도록 힘쓸 것.

2. 풍설 선전(風說宣傳)의 근거를 충분히 조사할 것.

(姜徳相·琴秉洞 編·解説(1963), 『現代史資料6 關東大震災와 朝鮮人』, みすず書房, 80쪽).

참으로 궁여지책의 결정이었다. 유언비어를 사실로 다루고 이를 흘린 국가 책임을 은폐하려는 결정이었다.

• 조선인 폭동을 날조한 사법성 발표

사법성(司法省)은 10월 20일 '일부 불령선인'의 범죄가 있었다면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금희의 變災에 즈음하여 조선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졌는데, 지금 그 진상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반 조선인은 대체로 양순하다고 인정되지만, 일부 불량 조선인 무리들이 있어 일정 범죄를 저지르고 그 사실이 유포되기에 이른 결과, 변재로 인한 민심 불안에서 공포와 흥분이 극에 달해 왕왕 무고한 조선인 혹은 내지인을 불량조선인으로 오인하여 자위의 수단으로 위해를 가한 사범이 생겼기 때문에 당국은 이에 대해서도 엄밀히 조사하고 이미 기소된 것이 수십 건에 이르고 있다. 요컨대 일부 불량조선인이 범죄를 일으켰기 때문에 誤殺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1〉 사법성 조사에 따른 관동대지진시 조선인 '범죄'의 신빙성 분석표

사건 증거의 신빙성 정도	죄명	건수	인수
① '범인'의 성명 불명	유언비어	2	2
	방화	1	1
	협박	1	30
	강간	1	1
	강도	1	15~16
	상해	1	1
	공무집행방해	1	1
	강도상인(傷人)	1	3
	살인 예비	2	1
	방화살인미수	1	5
	살인	1	1
	강간살인	1	4
	교량파괴	1	1
	폭발물취체규칙위반	2	2
	절도	3	16+수명
	독살 예비	1	1
	소 계	20	85~86
② 30명 정도의 일단의 사건, 1명을 제외하고 성명 불명, 그러나 성명 불명자도 소재 불명	강도	1	약30
	소 계	1	약30
③ '범인'의 성명은 판명, 다만 범인은 소재 불명, 도망, 사망	강도강간	1	1
	살인미수	2	3
	소 계	3	4
①, ②, ③ 합계		24	119~120
④ 정희형(鄭熙衡)은 조사 중, 오해모(吳海模)는 예심 중, 변봉도(卞奉道)는 공판 중	강도(정희형)	1	1
	폭발물취체규칙위반(오해모)	1	1
	총포화약취체벌칙위반(변봉도)	1	1
	소 계	3	3
⑤ '범인'의 성명은 명확하지만, 도망, 소재불명, 사망을 기록하고 있지 않음	절도	11	11
	횡령	1	1
	절도횡령	2	2
	장물운반	1	2
	소 계	15	16
총 합계		42	138~139

출전: 司法省, 『震災後에 있어서 刑事事犯 및 이에 관한 事項調査書』[姜德相·琴秉洞 編·解説(1963), 『現代史資料6 關東大震災과 朝鮮人』, みすず書房]

주: 원문에 '자칭 金某' 라든가, '자칭 李玉源' 등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이 표에서는 ①로 분류했다. 원문에 '數名'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은 이 표에서는 인수 합계로 합산하지 않았다.

사법성 발표의 진부를 검토하기 위해 사법성이 작성한 ‘진재(震災) 후에 있어서 형사범 및 이에 관한 사항 조사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선인의 범죄를 내용별로 정리한 것이 <표 1> ‘사법성 조사에 따른 관동대지진시 조선인 ‘범죄’의 신빙성 분석표’다.

이 표의 ①의 경우에는 유언비어, 방화, 살인, 강간, 강도 등이라는 무서운 죄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러나 ‘범인’의 성명은 불명이다. ②의 경우에 속하는 강도의 ‘범인’ 30명 중 29명은 성명이 불분명하고, 성명을 알 수 있는 1명은 소재불명이다. ③의 경우에 속하는 강도강간, 살인미수의 ‘범인’은 모두 소재불명, 도망, 사망이다. 확실한 증거도 없다. 이 ①②③의 난에 속하는 조선인 ‘범인’은 합계 119~120명에 달하고, ‘범인’ 총 합계 138~139명의 약 86%에 달한다.

④의 경우에 속하는 3명은 취조 중, 예심 중, 공판 중이고,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법적으로 말하면, 판결을 내리지 않은 사람은 용의자라도 범죄인이 아니다. 그런데도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성이 그들을 범죄인으로 해버렸다. 그 중 한 사람인 오해모(吳海模)에 대해서는 1923년 11월 3일에 도쿄지재(東京地裁)는 다이나마이트와 뇌관을 갖고 있었지만, 남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증거불충분으로, 폭발물취급 규칙위반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도쿄 아사히신문》, 11월 3일 석간). 어느 것이든 이 3인을 범인으로 판정할 수 없다.

⑤의 경우에 속하는 사람은 절도, 횡령, 장물운반죄를 범한 사람이다. 그들의 성명은 알 수 없고 동시에 소재불명, 사망이라고 기록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도쿄구 재판소가 1923년 9월 1일~11월 30일까지 접수한 절도 수는 4,409건이나 되었다(《법률신문》, 1923. 12. 25). 이와 같이 절도가 다발했던 것은 지진화재로 사는 데 빈궁했기 때문이다. 조선인의 절도, 횡령, 장물운반의 원인도 동일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정치성은 없

다. 도쿄지방재판소 검사 쇼나다니[正南谷知淵]는 조선인 범죄에 대해서 “혹은 다소 절도 기타의 범죄를 범했을지도 모르지만, 유언비어와 같은 범죄는 절대 아니라고 믿는다.”고 말했는데(《日刊新秋田》, 1923. 9. 10, 기타 동경에서 떨어진 지방의 여러 신문), 이것은 옳은 견해였다.

2. 학살된 조선인의 유체 은폐

경찰은 조선인 학살의 실태를 숨기기 위해 학살된 조선인의 유체를 은폐했다. 도쿄부 미나미가쓰시카군[南葛飾郡]을 흐르는 아라카와[荒川]의 요쓰기바시[四ツ木橋] 부근의 하천에 매몰된 조선인의 학살된 유체는, 1923년 11월 13일과 14일에 걸쳐 재차 경관이 어딘가에 갖고 갔다[관동대지진시에 학살된 조선인의 유골을 발굴하고 추도하는 모임 편(1992), 『바람이여 봉선화의 노래를 실어 - 관동대지진 · 조선인학살로부터 70년』, 교육사료출판, 66~67쪽].

혼쵸[本庄] 경찰서의 순사 아라이 겐지로[新井賢次郎]는 동 경찰서를 습격한 자경단이 9월 4일 밤부터 5일 아침에 걸쳐 학살한 조선인의 유체를 태울 때에, 상부로부터 “숫자를 알 수 없도록 하라.”고 명령받았다[關東大震災 六十周年朝鮮人犠牲者調査追悼事業實行委員會 編 · 刊(1987), 『숨겨진 歷史 - 關東大震災와 埼玉의 朝鮮人虐殺事件』, 증보보존판, 100쪽].

경시총감은 1923년 11월 6일자 내무성 경보국장 앞의 보고서에서, “그들[경시청(警視廳)]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 ‘재일본관동지방이재조선동포위문반(在日本關東地方罹災朝鮮同胞慰問班)’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인 학살상황을 조사하고 있던 조선인 조사단을 가리킨다 - 인용자의 유골인수 방법의 신청에 대해서는 이를 거절”했다고 보고하고 있다[姜徳相 · 琴乘洞 編 · 解説(1963), 앞의 책, 326쪽].

이 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조선인 총 학살 수는 6,661명이었는데,

그러나 이 중 3,240명에 대해서는 ‘이상은 시체조차도 찾을 수 없는 동포’라고 기록하고 있다(《독립신문》, 1923. 12. 5). 여기에 학살된 유체까지 경찰이 은폐하여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조선인들의 무상감이 표명되어 있다.

3. 관동대지진의 역사서 편찬에 의한 경시청의 책임은폐

경시청은 1925년에 『대정대진재화재지(大正地震災火災誌)』를 발행했다. 이 서적에는 유언비어에 대한 경시청의 행동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경찰관이 조선인 폭동이 일어났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더구나 조선인을 죽여도 상관 없다고까지 말한 것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본청은 유언비어의 유래경로와 그 진상을 정찰조사함과 함께, 유언비어를 퍼뜨린 자의 수사·검거에 노력하고, 자경단 기타 자위단체와 더불어 개인의 무기휴대를 엄금하고, 오로지 구호 업무에 종사하는 방침을 세우고, 점차 이를 지도하고 또 죄를 범하는 자를 검거함과 함께, 게다가 유언비어 중 믿을 만하지 않은 것을 선전하면 검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조선인의 수용 보호에 대해서는 특히 주의를 기울였다(12~13쪽).

본서의 445~451쪽에는 9월 1일부터 3일에 걸쳐 퍼진 유언비어가 41개나 열거되어 있는데, 경관이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은 한마디도 기술되어 있지 않다. 경시청은 본서를 통해 유언비어를 퍼뜨려 민중이 조선인 학살을 유발한 중대한 책임을 완전히 은폐했다.

VI.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아시아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인식 변화

1.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와 도쿄도 교육위원회의 관동대지진시 조선인 학살사건의 사실(史實) 왜곡정책 등장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가 발행한 시립중학교용 부독본 『밝혀진 요코하마』 2009~2011년도판에는 관동대지진 당시, “자경단 중에는 조선인을 학살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2012년도 판에는 “유언비어를 퍼트린 군대와 경찰, 재향군인회, 청년회를 모체로 해서 조직된 자경단 등은 조선인에 대한 박해를 행하고 또 중국인을 살상했다. 요코하마에서도 각지에서 자경단이 조직되어 이상한 긴장상태하에서 조선인과 중국인이 학살된 사건이 일어났다.”고 변경되었다. 그런데 2012년 7월 19일에 열린 시의회 어린이청소년교육위원회에서 아마다 다쿠미(山田巧) 교육장(教育長)은 “학살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강하다. 일정의 주관이 들어간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중전의 표현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개정하고 싶습니다.”라고 발언했다. 그리고 시교육위원회는 2013년 5월 8일에 2012년도판을 회수하고, 2013년도판에서는 “자경단 중에 조선인과 중국인을 살해하는 행위에 가담한 자가 있다. 요코하마 시내에서도 다수의 희생자가 나왔다.”고 ‘학살’을 ‘살해’로 고쳤다. 게다가 2012년도판에 쓰여 있던 군대와 경찰의 조선인 학살 기술은 삭제했다. 이러하여 시교육위원회는 조선인 학살의 국가책임은 은폐해버렸다.

도쿄도 교육위원회도 고교일본사 부독본 『에도(江戸)에서 도쿄(東京)로』 2012년도판에서 관동대지진시의 조선인 ‘학살’이라는 문구를 2013년 판에서 없애 버렸다.

2012년 판 기술

‘關東大震災朝鮮人犠牲者追悼碑’(東京都墨田區橫網町公園에 건립된 碑를가리킨다-山田)는 대지진의 혼란 중에서 조선인이 학살된 것을 보고, 1973년(昭和 48)에 세워졌다.

2013년 판 기술

‘關東大震災朝鮮人犠牲者追悼碑’는 지진발생 50년에 해당하는 1973년(昭和 48)에 세워지고, 碑에는 대지진의 혼란 중에서 “조선인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다.”고 기록되었다.

2. 자유주의사관의 등장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배경은, 이전 일본의 아시아 침략과 식민지 지배 인식을 자학사관이라고 매도하는 이른바 자유주의사관의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1995년 7월, 당시 도쿄대학 교육학부 교수였던 후지오카 노부카쓰(藤岡信勝)가 중심이 되어 ‘자유주의사관연구회(自由主義史觀研究會)’가 발족되고, 더욱이 동 연구회가 모체가 되어 1997년 1월 30일에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설립되었다. 이 모임의 설립취지서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戰後の 역사교육은, 일본인이 계승해야 할 문화와 전통을 잊어버리고, 일본의 자라를 상실한 것이다. 특히 근현대사에서 일본인은 자손대대로 사죄하는 일로 운명 지어진 죄인처럼 취급되었다.

이 설립취지서에도 ‘새역모’가 지향하는 바가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의 역사에 눈을 감고 이른바 애국심, 즉 내셔널리즘을 발흥시키려는 의도가 나타나 있다.

‘새역모’는 중학교용 역사·공민 교과서를 편찬하고, 2000년 4월 후소사(扶桑社)에서 문부성에 검정을 신청했다. 이 교과서는 2001년 4월에 검정에 합격

〈표 2〉 '새역모'와 '교과서개선의 모임' 편수의 역사교과서가 묘사한 관동대지진사의 조선인 학살

① 2000년 4월에 검정을 받기 위해 제출한 '새역모' 편집, 扶桑社版 중학교용 역사교과서 白表紙本

(관동대지진에 관한 기술은 없다)

② 2001년 4월 김정합격 '새역모' 편집, 扶桑社版 『새로운 歷史教科書』

1923년(大正 12) 9월 1일에는, 관동지방에서 대지진이 일어나 도쿄·요코하마 등에서 대화재가 발생하고, 약 70만 명이 피해를 입어 사망, 행방불명자는 10만을 넘었다(關東大震災). 이 혼란 중에서 조선인, 사회주의자 사이에 불온한 음모가 있다는 소문이 퍼져, 주민 자경단 등이 사회주의자와 조선인, 중국인을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③ 2005년 4월 김정합격 '새역모' 편집, 扶桑社版 『새로운 歷史教科書』

1923년(大正 12) 9월 1일에는, 관동지방에서 대지진이 일어나 도쿄·요코하마 등에서 커다란 화재가 발생하고, 약 70만 호가 피해를 입어 사망, 행방불명자는 10만을 넘었다(關東大震災). 이 혼란 중에서 조선인과 사회주의자 사이에 불온한 기도가 있다고 하는 소문이 퍼져, 주민 자경단 등이 사회주의자와 조선인, 중국인을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④ 2009년 4월 김정합격 'つくる會' 편집, 自由社版 『新編 新しい 歷史教科書』

1923년(大正12) 9월 1일에는, 관동지방에서 대지진이 일어나 도쿄·요코하마 등에서 대화재가 발생하고, 약 70만 명이 피해를 입어 사망, 행방불명자는 10만을 넘었다(關東大震災). 이 관동대지진의 결과 일본 경제는 커다란 타격을 입었는데, 지진이 많은 근대도시 건설에 얻은 교훈이 많고 지진설계의 기준 마련과 도시방재의 연구가 시작되었다.

(주) 이 혼란 중에서 '조선인과 사회주의자 사이에 불온한 기도가 있다고 하는 소문이 퍼져, 주민 자경단 등이 조선인과 그들로 혼동한 중국인, 일본인을 죽이기도 하고, 군인이 독단으로 사회주의자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다.

⑤ 2011년 3월 김정합격 '교과서개선의 모임' 편수, 育鵬社版 『새로운 日本의 歷史』

1923년(大正 12) 9월 1일, 관동지방에서 발생한 대지진은 도쿄·요코하마라는 인구밀집지를 직격했습니다(關東大震災). 이 지진은 사망·행방불명자 10만 수천 명, 소실가옥 45만이란 대피해를 초래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교통과 통신이 두절된 혼란 속에서 조선인과 사회주의자가 주민이 조직한 자경단 등에 살해된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동시에 대지진 후에는 後藤新平 등에 의해 새로운 도시계획이 진행되었습니다.

⑥ 2011년 3월 김정합격 '새역모' 편집, 自由社版 『새로운 歷史教科書』

1923년(大正12) 9월 1일에는 관동지방에서 대지진이 일어났다. 도쿄·요코하마 등에서 대화재가 발생해서 사망, 행방불명자는 10만을 넘었다(關東大震災). 이 대지진의 결과, 일본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는데, 지진이 많은 근대도시 건설을 위해 얻은 교훈은 많고, 지진설계의 기준 마련과 도시방재의 연구가 시작되었다.

했다. 다만 역사교과서는 검정에 즈음해서 137개나 수정을 요구받았다고 한다. 이리하여 후소샤에서 『새로운 역사교과서』와 『새로운 공민교과서』가 발행되었다.

그런데 '새역모'는 2006년 6월에 분열하여 '새역모'에서 탈퇴한 야기 히데쓰구[八木秀次](高崎經濟大學 교수) 등은 '일본교육재생기구(日本教育再生機構)'를 조직하고, 더욱이 교과서운동을 위해 '개정교육기본법에 기초한 교과서개선을 추진하는 유식자(有識者) 모임'(약칭 '교과서개선 모임')을 설립했다. '교과서개선 모임'은 후소샤의 자회사(子會社) 이쿠호샤[育鵬社]에서 중학교용 역사와 공민교과서를 발행하고, 새역모는 자유사(自由社)에서 발행했다.

'새역모'와 '교과서개선 모임'이 작성한 중학교용 역사교과서에 묘사된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상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작성한 것이 <표 2>다.

①에 기재된 '새역모'의 백표지본(白表紙本)에는 관동대지진의 일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검정을 통과한 ②에는 조선인, 중국인, 일본인 사회주의자의 학살이 언급되어 있다. 이것은 검정에 즈음해서 문부성이 수정을 요구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학살'이라고 하지 않고 '살해'라고 표현하고, 동시에 학살자로서는 자경단만이 거론되어 군대나 경찰의 학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학살의 국가책임을 은폐하고 있다. ③, ④, ⑤, ⑥의 란에 거론한 교과서는 모두 동일하다. 그리고 ⑥에 거론된 교과서에 이르러서는 백표지본과 같이 조선인 학살에 관해 완전히 침묵하고 있다.

⑥은 이와 같이 자유주의사관에 따라 관동대지진시의 일본 관청에 의한 조선인 학살의 사실은 역사교과서에서 배제되고,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검정도 이를 방치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자민당 극우파 아베 신조[安倍晋三]의 등장과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 인식의 왜곡 동향

자유주의사관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것과 역사관을 같이하는 자민당 극우파 아베 신조[安倍晋三] 등의 움직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아베 신조는 관방부장관(官房副長官) 당시에 '새역모'의 중학교용 역사교과서의 검정합격에 전력을 다했다. '새역모' 회장이었던 니시오 간지[西尾幹二]의 회상에 따르면, '새역모'의 중학교용 역사교과서의 검정합격을 위해 아베는 다음과 같이 분투했다.

아베 관방부장관은 정부 내에서 단 혼자서 자신의 처지가 위험해질 때까지, 교과서 문제로 우리들을 지원했다. [...] 지금이기 때문에 말하지만, 아베 씨는 외무성이 차관 이하 수뇌부에서 연구회를 만들어 검정방해를 위해 교과서 내용을 체크하는 것을 알고, 내 앞에서 외무성 관료에게 전화를 걸어 월권을 강한 어투로 질책하고 방향을 바꾸려고 했다[西尾幹二(2003), 「小泉純一郎와 安倍晋三-누가 진정한 개혁자인가」, 『voice』 12월호, 54쪽].

외무성 수뇌부는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실태를 숨긴 교과서가 등장하는 결과가 되면 아시아제국에게서 비난받아 일본의 외교가 곤란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새역모'의 중학교용 역사교과서 내용 검토를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베 신조는 외무성 수뇌부의 움직임을 방지하여 이 교과서의 검정합격에 노력했던 것이다. 그리고 현재 그가 당수로 있는 자민당은 2012년 12월 6일의 중의원의원 선거운동을 할 때 11월 21일에 발표한 공약에서 “학사관 편향 교육을 행해서는 안 된다”, “‘근린제국조항’ 등 교과서 검정제도를 고치자”고 주장했다(《朝日新聞》, 2012. 11. 28). 이 검정기준의 ‘근린제국조항’이

란 1982년에 문부성이 교과서 검정에서 아시아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 지배의 실태를 애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시되어, 중국을 비롯한 한국, 북한에서 항의가 나왔기 때문에 동년 8월 26일에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관방장관은 교과서 기술을 ‘정부 책임으로 시정한다’는 정부 방침을 발표하고, 11월 24일에 관보에 게재된 ‘근린(近隣) 아시아제국의 근현대 역사사상을 다루는 데 국제이해와 협력의 견지에서 배려가 필요한 것’이라는 추가 교과서 검정기준을 가리킨다. 자민당 공약의 이 ‘근린제국조항’의 수정방침은 아베 신조 등의 자민당 극우파의 주장이 자민당의 주장으로 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1990년대 중반부터 아베 신조 등 자민당 극우파의 현재까지의 동향과 그 동향이 인기를 모으게 된 과정을 최소한도 언급하기로 한다.

1993년 8월 9일 비자민(非自民) 8당 연립내각의 수상에 취임한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는 그다음 날 기자회견에서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대해서 “나는 침략전쟁이었다, 틀림없는 전쟁이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朝日新聞, 1993. 8. 11). 즉 8월 11일, ‘영령에 대답하는 의원협의회’, ‘유가족의원협의회’, ‘모두 야스쿠니 신사[靖國神社]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즉 자민당의 정국관계삼협의회(靖國關係三協議會)의 좌장 등은 관방장관을 만나 호소카와 모리히로 발언은 “유감스러운 발언, 유족의 심경을 생각해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讀賣新聞, 1993. 8. 12). 삼협의회(三協議會)는 동년 8월 23일 ‘대동아전쟁을 어떻게 총괄하는가’를 테마로 ‘역사검토위원회’의 설치를 결정하고, 동 위원회는 1995년에 『대동아전쟁의 총괄』을 출판했다. 이 책은 ‘대동아전쟁’은 일본의 자위전쟁이고, 아시아 해방의 이념을 갖은 전쟁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아베 신조는 1993년 7월 18일 총선거에서 막 중의원의원이 된 시기였는데, ‘역사검토위원회’에 위원으로서 참가했다(역사검토위원회 편·간, 『대동아전쟁의 총괄』, 443~446쪽).

1994년 6월 30일 무라야마 도이미치[村山富市] 사회당 위원장을 수상으로 하는 사회당·자민당·사키가케 3당 연립내각이 구성되고, 7월 12일에 결정된 공동정권 구상에는 '전후 50년을 계기로 과거의 전쟁을 반성하고, 미래의 평화에의 결의를 표명하는 국회결의의 채택'이 거론되었다[和田春樹·石坂浩一·戦後50年 국회결의를 구하는 모임 편(1996), 『日本은 植民地支配를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 梨の木舎, 114쪽]. 아베 신조는 이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1994년 12월 1일에 결성된 '전후 50주년 국회의원연맹'의 사무국 차장이 되고, 1995년 6월 9일 국회결의에 즈음해서는 이에 반대하여 국회를 결석했다[和田春樹·石坂浩一·戦後50年國會決意를 구하는 모임 편(1996), 위의 책, 91~93쪽, 138쪽].

1996년 6월 27일 중학교 교과서의 검정결과가 발표되고, 모든 역사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가 등장했다. 후지오카 노부카쓰는 문부대신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기술의 삭제를 요구했다[藤岡信勝(1997), 『自虐史觀の病理』, 文藝春秋, 12~26쪽]. 우익 국회의원도 이 교과서에 반발하여 1997년 2월 27일 중의원·참의원 의원 62명이 참가하여 '일본의 앞날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모임'의 창립총회를 열었다[産經新聞, 1997. 2. 28]. 그 후 참가 의원이 증가하여 1997년 11월 현재 회원은 107명이 되었다. 아베 신조는 사무국장이 되었다[일본의 앞날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모임 편·간(1997), 『歴史教科書에의 의문- 젊은 국회의원에 의한 역사교과서 문제의 총괄』, 516~517쪽].

아베 신조는 2000년 4월 5일 구성한 제2차 모리 요시로[森喜朗] 내각의 관방부장관에 취임하고, 2001년 4월 26일 발족한 제1차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내각에서도 관방부장관에 취임했다.

아베 신조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에 관해서 일본인 대중에게서 인기를 모았다. 오가와 준이치로 수상은 2002년 9월 17일 방북해서 김정일(金正日) 총서기와 회담했다. 이 회담에서 김정일은 일본인 납치를 인정·사죄하고, 납치

피해자 중 8명은 사망하고, 5명은 생존해 있음을 발표했다. 동시에 북일국교 정상화 교섭의 재개, 북한에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죄, 국교정상화 후의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 등을 기록한 ‘일조평양선언(日朝平壤宣言)’을 양측에서 채택하였다. 이때 아베 신조는 고이즈미 준이치로를 수행하고, 일본인 납치문제의 처리를 담당하게 되었다.

2002년 10월 15일 납치피해자 일본인 5명이 일시 귀국한다는 조건으로 귀국했다. 그러나 10월 24일 일본 정부는 5명을 북한에 돌려보내지 않고 영주 귀국시키고, 더욱이 평양에서 5명의 가족을 불러들이는 방침을 결정했다. 이 방침에 따라 5명 모두 받아들였다(《아사히신문》, 2002. 11. 8). 2002년 11월 17일 아베 신조는 귀국한 5명의 북한에 남은 가족 전원을 일본으로 출국시키는 확약이 없으면, 2차 국교정상화의 일정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표명했다(《아사히신문》, 2002. 11. 18).

아베 신조는 “북한은 (중략) 가능한 한 빨리 정상화하고 싶다, 국가 재건에 일본의 원조를 바라고 싶은 생각인 것 같다.”고 하고(《아사히신문》, 2002. 11. 2), 또 “국교정상화가 진행되지 않아 초조한 것은 북한이다.”라고 했다(《아사히신문》, 2003. 4. 16). 더구나 아베 신조는 “북한은 이쪽에서 강경한 태도를 취한다고 해서 바로 폭발하는 단순한 국가가 아니다. 그건 고사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적시에 압력을 넣으면 일시적으로든 정책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여 강경정책을 주장했다(安倍晋三(2005), 「부시의 大勝은 日本의 찬스-일미동맹으로 북한제재를 국련안보리에 제기한다」, 『voice』 1월호, 74쪽). 즉 아베 신조는 경제적인 곤란에 직면해 있는 북한이 조속히 국교를 정상화하고, 일본에서 경제원조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는 약점을 이용하여 강경정책을 주장했던 것이다.

2004년 5월 22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은 재차 방북하였는데, 그 결과 납치 피해자의 자녀 5명이 일본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인정한 납

치피해자 16명 및 납치 가능성이 있는 다수의 '특정 실종자'의 해결이 남아 있었다. 2005년 10월 31일 제3차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에서 관방장관으로 승격한 아베 신조는 11월 7일 기자회견에서 납치문제의 전면적 해결이 국교 정상화의 전제임을 강조했다(《아사히신문》, 2005. 11. 7. 석간).

납치는 명백한 범죄다. 그러나 아베 신조의 강경정책은 북한에 대한 일본의 가혹한 식민지 지배의 실태를 모르는 일본 민중의 다수로부터 일면적인 피해자 인식에 기초한 내셔널리즘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오다케 히데오(大嶽秀雄)는 “아베 신조 씨는 [...] 북한에 엄격한 태도를 취해 일약 주목받고 국민적 인기를 얻은 정치가다.”라고 평했다(安倍晋三 저, 『『아름다운 나라로』를 읽는다』, 『論座』 10월호, 37쪽). 실제로 아베 신조의 인기는 높았다. 2005년 10월 31일~11월 1일에 걸쳐 아사히신문사가 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 다음의 수상으로 가장 기대되는 인물이 아베 신조이고, 그의 지지자는 33%에 달했다. 두 번째는 아소 다로(麻生太郎)였는데, 지지율은 5%로 아베 신조는 아소 다로를 크게 따돌리고 있다(《아사히신문》, 2005. 11. 2).

2006년 9월 20일 아베 신조는 자민당총재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20일 밤부터 21일에 걸쳐 아사히신문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신조가 총재가 되어 잘됐다고 하는 사람이 57%나 되었다(《아사히신문》, 2006. 9. 23). 그리고 9월 26일 제1차 아베 내각이 발족했다. 9월 29일자 《아사히신문》 투고란에 게재된 회사원 이노 미토시오(飯野己子男)의 투고문 ‘납치 해결 신내각에 기대’에는 “아베 신조 내각이 탄생했다. 나는 북한에 피랍된 납치피해자의 구출에 기대하고 싶다.”고 쓰고 있다. 여기에서도 일본 민중의 대다수가 아베 신조에게 크게 기대한 점을 나타내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의 최초의 방북에 즈음해서 재일조선인 작가 김석범(金石範)은 일본 정부와 도쿄도가 불문인 채로 80년이나 방치하고 있는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문제를 언급하여, “나는 평양 회담에서 그것을 의제로 하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와 같은 역사적 사실과 마주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아사히신문》, 2002. 9. 1).

즉 그는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평양 회담에서 일본인 납치문제를 거론할 때 일본이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통해 일본이 범한 죄를 염두에 두기를 바란다고 요망한 것이다. 그러나 고이즈미 준이치로도 아베 신조도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 책임을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평양 선언에는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사죄의 말은 있었지만,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은 부정되고 일한조약과 같이 경제원조만이 약속되어 있다. 많은 일본 민중이 북한에 대한 보상을 염두에 두지 않고, 아베 신조의 강경정책에 공감한 결과가 된 것도 평양 선언의 이러한 결함에 의한 바가 컸기 때문이다. 나카무라 요조(中村陽三)는 2002년 9월 19일자 《아사히신문》에 게재한 투고문 “양국민의 비극, 국가의 보상이야말로”에서 “일조(日朝) 간의 진실한 평화는 양 정부가 관여한 범죄에 대해서 서로 사죄하고 보상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중의 내부에 이러한 견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를 갖는 사람은 소수에 그쳤다. 도쿄대학 법학부 교수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는 “납치문제로 국민은 ‘국가’라는 옷을 자위(自衛)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깨달은 것은 아닌가.”라고 보았다. 환언하면, 납치문제는 “이제까지 박약했던 일본인의 국가의식이 각성하는 과정이다.”라고 평가했다(《마이니치신문》, 2003. 9. 11).

극우파 아베 신조가 당수인 자민당이 “자학사관, 편향교육 등을 시키지 말라”든가, “근린제국조항’ 등 교과서 검정제도를 수정한다”는 등의 사항을 지향하는 일은 중대한 문제다. 그러나 이 이상으로 중대한 일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가 명확히 된 것을 계기로 이 문제에 관한 아베 신조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 책임을 보류한 내셔널리즘으로 일본의 민심이 급

경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정치적·사상적인 상황에서 도쿄도 교육 위원회와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의 관동대지진시의 조선인 학살 사실의 말살이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들은 일본의 민심이 현재 자민당 극우파의 언동에 이끌려 식민지 지배 책임을 중단하고, 내셔널리즘으로 기울어가는 사상적·정치적 위기상황에 현재 직면해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또한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VII. 맺음말

재일조선인 역사가 금승동(琴乘洞)은 그가 편찬해 1996년에 녹음서방(綠音書房)에서 간행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문제 관계자료Ⅳ 조선인 학살에 관한 식민지조선의 반응』의 해설 말미에서, 이 사건의 연구와 추도를 위해 전후의 일본이 노력해왔음을 이해한 뒤에, 일본인의 운동에 조선인 학살의 국가 책임을 묻는 행동이 결여되어 있음을 다음과 같이 엄격하게 비판했다.

대지진시의 조선인 학살은 천하가 주지하는 명백한 대량 학살사건인데, 일본 정부의 답변이 전혀 없고, 그 정부의 비열함을 추궁하는 국민적·대중적 또는 국제적인 운동기반도 없고, 국회에서의 본격적인 논의도 없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원래부터 진지하게 선의에 가득 찬 많은 개별연구도 있고, 대지진 기념일마다 자기의 책임이라고 보는 죄책감과 성의에서 나온 커다란 움직임, 그리고 연구발표도 적지 않게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나라 전체라기보다는 정부 자체의 답변도 없고, 그것을 재촉할 정도의 운동체도 없다는 것을, 나는 어떤 이

유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전후(戰後) 일본인의 운동 진행방향을 평가하면서, 거기에 보이는 국가책임 추급의 결여를 지적한 예리한 비판이었다. 필자는 그의 비판에 따라 조선인 학살사건의 조사와 조선인 희생자를 추도한 뒤에, 조선인 학살사건의 국가책임을 묻는 민중책임이 있음을 역설하여, 2003년에 『관동대지진시의 조선인학살과 그 후-그 국가책임과 민중책임』을 간행했다.

2010년 9월 24일 그때까지 관동 각지에서 조선인 학살사건의 조사와 희생자 추도를 행해온 사람들이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책임을 묻는 모임'을 결성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정치적·사상적 상황은 전술한 바와 같이 극히 좋지 않다. 아베 신조의 병으로 아베 신조 내각은 2007년 9월 25일 퇴진했지만, 2012년 12월 26일 제2차 아베 신조 내각이 구성되고, 일본을 다시 군사대국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헌법개약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정치적·사상적 상황과 대결하면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의 국가책임을 묻는 운동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제2부

관동대지진에 대한 연구와 교육

1. 강효숙 _ 관동대진재 당시 피학살 조선인과 가해자에 대한 일고찰
2. 다나카 마사타카 _ 전후 일본의 역사교육과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3. 서종진 _ 일본 교과서의 관동대지진과 학살사건 기술 내용 분석
4. 김인덕 _ 한국 역사교육 속의 재일조선인과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강효숙(姜孝叔)

한일근대비교사 전공, 원광대학교 사학과 강사

대표논저로는 「동학농민전쟁에 있어 고부봉기의 위상: 사발통문과 일본 측 자료를 중심으로」(2013,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7, 한국민족운동사학회), 「간도영유권에 관한 재 고찰」(2013, 『전북사학』 43, 전북사학회), 「일본인의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인식」(2011, 『동학농민혁명의 기억과 역사적 의의』, 전북사학회) 등이 있다.

관동대진재 당시 피학살 조선인과 가해자에 대한 일고찰

원광대학교 강호숙

I. 머리말

2013년은 관동대진재 당시 조선인 학살 90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1923년 9월 1일 정오 즈음에 도쿄(東京)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관동(關東)지역에 대지진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직후 조선인이 우물에 독약을 풀었다, 일본인을 살해한다, 폭력을 행사한다는 등의 루머에 휘둘린 일본 군·경·민에게 수많은 조선인이 학살당했다. 이 사건은 대체적으로 ‘관동대진재 당시 조선인 학살’ 혹은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사건으로 칭하여지고 있다. ‘대진재’라 칭하는 것은 1차적으로 대지진이 발생한 직후에 2차적으로 화재, 쓰나미 등 재난이 발생한 까닭이다. 이 글에서는 2차적 재난을 포함한 의미로서의 ‘대진재’라 칭하고자 한다.

관동대진재 당시 조선인 학살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수십 년에 걸쳐, 특히 일본 학계에서 그 발생 배경, 루머, 가해자, 도쿄·지바(千葉)·요코하마(横浜)·사이타마(埼玉)·도치기(栃木)·이바라키(茨城) 등지에서 자행된 조선인 학살자

수, 학살장소와 유해 매립장소 조사 등 다각적인 시각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왔다. 몇 년 전부터는 일본 정부를 넘어 일본 민중에게 그 책임을 묻는 연구가 발표되었고 시민단체의 관련 활동도 전개되고 있다.

현재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서 ‘관동대진재(關東大震災), 조선인(朝鮮人)’이란 동시 검색어로만 328건의 관련 문헌이 확인되는데, 이 가운데 2012년에 9건, 2011년에 12건이 새로이 연구되어 발표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2011~2012년 동안에 서너 편이 새로이 발표되고 발간되었을 뿐이다.

현재 공개된 해방 전의 일본 측 관동대진재 관련 문헌은 1923년 문헌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의 「조선인학살에 대해(朝鮮人虐殺事件に就いて)」¹⁾라는 논문이 눈에 띈다. 다음 해 요시노 사쿠조와 안광천(安光泉), 식민편집부²⁾에서 「조선인학살(朝鮮人虐殺)」을 발표하였지만 그 후 1945년 해방을 맞이하기까지 공개된 문헌 중에 관동대진재와 관련한 조선인 학살문제를 다룬 문헌은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해방 이후 일본 학계의 관동대진재 당시 피살 조선인에 관한 연구는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며, 관련 용어는 몇 번의 과정을 거쳐 40주년을 맞이하는 1963년에 이르러 비로소 ‘피학살 조선인’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즉 1958년에 사이토 히데오(齊藤秀夫)는 ‘조선인 소요(朝鮮人さわぎ)’³⁾라는 부정

-
- 1) 吉野作造(1923), 「朝鮮人虐殺事件に就いて」, 『中央公論』 38-12
 - 2) 吉野作造(1924), 「朝鮮人虐殺事件」, 『壓迫と虐殺』; 安光泉(1924), 「朝鮮人虐殺を顧みて」, 『進め』 2-9, 進め社; 植民編輯部(1924), 「朝鮮人虐殺問題批判」, 『植民』 3-2, 日本植民通信社. 참고로 1926·1927년의 요코하마[橫濱]시청에서 발간한 『横浜市震災誌』(第三~五册)라는 문헌이 확인되지만 자료를 수집하지 못해 조선인 피해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 3) 齊藤秀夫(1958. 11), 「關東大震災と朝鮮人さわぎ」, 『歴史評論』 99

적인 칭호를 사용하였는데, 1960년 재일동포 연구자인 강재언이 ‘조선인 박해’⁴⁾로 바꾸었다. 매우 조심스러운 표현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40주년을 맞이한 다음 해인 1963년 7월 재일동포 연구자인 강덕상은 「대진재하 조선인 피해자수 조사(大震災下朝鮮人被害者數の調査)」⁵⁾라는 발표를 통해 ‘조선인 피해자’라는 용어를 조심스럽게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는 같은 달 『역사학연구(歷史學研究)』에 발표한 「관동대진재의 조선인 학살 실태(關東大震災に於ける朝鮮人虐殺の實態)」⁶⁾라는 논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인 학살’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두 논문의 조사 및 발표 시기의 정확한 순서는 알지 못하지만, 강덕상은 위의 「대진재하 조선인 피해자수 조사」를 통해 단순히 조선인의 ‘피해’로만 멈출 수 없는 ‘학살’ 이상의 학살자 수와 참혹함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입증 가능성이 되었기 때문에 ‘조선인 학살’로 바꾸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인식은 일본인 학자에게도 전달되었는지 같은 해 9월 역사잡지인 『역사평론(歷史評論)』에서 하니 고로[羽仁五郎]와 요시오카 요시노리[吉岡吉典]⁷⁾가 ‘조선인 학살’, 혹은 ‘학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같은 해 10월 도자와 니사부로[戸澤仁三郎]·후지시마 우나이[藤島宇内]⁸⁾와 마쓰오 다카요시[松尾尊兎]⁹⁾가 ‘조선인

4) 姜在彦(1960. 9), 「關東大震災と朝鮮人迫害」, 『朝鮮問題研究』 4

5) 姜徳相(1963. 7), 「大震災下朝鮮人被害者數の調査」, 『労働運動史研究』 37. 참고로 이에 앞서 1961년 김일면은 「關東大震災と朝鮮人虐殺(上)」을 통해 ‘조선인 학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논문을 수집하지 못해 내용은 확인하지 못한 상태.

6) 姜徳相(1963. 7), 「關東大震災に於ける朝鮮人虐殺の實態－特に40周年を記念して」, 『歷史學研究』 278

7) 羽仁五郎(1963. 9), 「關東大震災朝鮮人虐殺事件40周年を迎えるにあたって」, 『歷史評論』 157; 吉岡吉典(1963. 9), 「關東大震災時の虐殺事件に學ぶ二つの立場」, 『歷史評論』 157. 같은 號에 강덕상의 관련 글도 함께 게재되었다[姜徳相(1963. 9), 「つくりだされた流言－關東大震災における朝鮮人虐殺について」, 『歷史評論』 157].

8) 戸澤仁三郎・藤島宇内(1963. 10), 「對談: 關東大震災における朝鮮人虐殺の責任－自警團を中心に」, 『日本人の立場から 朝鮮研究月報』 22

학살'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그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계 용어와 일반적인 용어로 계속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1963년 이후 일본 학계가 자연스럽게 '조선인 학살'이란 용어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관동대진재 당시 일본 군·경·민이 자행한 조선인 학살이 말 그대로의 '학살' 그 자체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조선인 학살은 소·대규모를 넘어선 집단학살(genocide)의 형태로 일본 관동지역 여기저기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학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집으로는 금병동이 간행한 아동들의 증언, 일본 지식인과 조선의 반응 그리고 일본 관청자료 등으로 구성된 자료집이 연구의 흐름을 잡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⁰⁾ 같은 시기에 강덕상을 비롯하여 일본인 학자 야마다 쇼지[山田昭次], 다사키 고시[田崎公司], 사카모토 노보루[坂本昇], 다나가 마사타카[田中正敬], 오사카 히데아키[逢坂英明], 히라카타 지에코[平形千恵子]·오타케 요네코[大竹米子] 등이 일본 육해군 관계 자료집, 신문보도자료, 계엄령자료집을 발간하였다.¹¹⁾ 재일동포 배소(裴昭)의 사

9) 松尾尊兌(1963), 「關東大震災下の朝鮮人虐殺事件」(上), 『思想』 471, 岩波書店

10) 琴秉洞 編·解説(1989), 『關東大震災朝鮮人虐殺問題關係史料1－朝鮮人虐殺關連兒童證言史料』, 綠蔭書房; 琴秉洞 編·解説(1991), 『關東大震災朝鮮人虐殺問題關係史料2－朝鮮人虐殺關連官廳史料』, 綠蔭書房; 琴秉洞 編·解説(1996), 『關東大震災朝鮮人虐殺問題關係史料3－朝鮮人虐殺に關する知識人の反應(1),(2)』, 綠蔭書房; 琴秉洞 編·解説(1996), 『關東大震災朝鮮人虐殺問題關係史料4－朝鮮人虐殺に關する植民地朝鮮の對應』, 綠蔭書房; 姜德相·琴秉洞 編(2004), 『關東大震災と朝鮮人〈現代史資料6〉』(オンデマンド版), みすず書房

11) 山田昭次 編·解説(2004), 『關東大震災朝鮮人虐殺問題關係史料5－朝鮮人虐殺關連新聞報道史料(1)(4), 別卷』, 綠蔭書房; 平形千恵子·大竹米子 編(松尾章一 監修)(2003), 『政府·戒嚴令關係史料〈關東大震災政府陸海軍關係史料1〉』(オンデマンド版), 日本經濟評論社; 田崎公司·坂本昇 編(1997), 『陸軍關係史料〈關東大震災政府陸海軍關係史料〉』, 日本經濟評論社; 田中正敬·逢坂英明 編(1997), 『海軍關係史料

진자료집은 조선인 학살장면을 확인시켜주는 귀중한 자료집이기도 하다.¹²⁾ 또 관동대진재 당시 발생한 조선인 문제와 관련하여 현장을 답사하고 증언 등을 인터뷰 기록영화로 남긴 자료인 오충공 감독의 〈숨겨진 손톱자국(隠された爪跡, 1983)〉과 〈버려진 조선인(拂い下げられた朝鮮人, 1986)〉은 각 작품마다 3년이란 시간을 필요로 했을 만큼 귀중한 내용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다.¹³⁾

관동대진재 당시 조선인 학살 연구의 대표적인 연구자인 강덕상, 금병동, 야마다 쇼지는 자료집 발간 외에도 현지답사를 통한 연구를 진행해온 중심적인 학자다. 특히 강덕상의 경우 ‘피해자 수’, ‘학살 실태’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또한 ‘계엄령’과 조선인 학살 분위기를 조장한 일본정부의 기묘한 움직임과 일본 사회의 분위기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야마다 쇼지는 강덕상, 금병동과 함께 오랜 세월 같은 방향을 향해—즉 일본 정부의 실책을 반성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1970년 중반부터 한국·중국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후 꾸준히 관동대진재 당시 피학살 조선인 문제를 다루어왔다. 또한 피학살 조선인 문제 연구활동과 더불어 일본인에게 널리 알려 반성과 참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특히 일본 군·경·민이 자행한 조선인 대량학살이 문제가 될 것을 두려워한 일본 정부가 첫 매장장소에서 조선인 유골을 파헤쳐 어딘가로 옮겨간 사실을 밝혀내고 옮겨진 유골매장지를 규명하고자 노력해왔으며, 일본 정부에 대해 끊임없이 진실 규명을 요청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노무현 정권 때는 한국 정부기관에서 일본 정부를 향해 유골매장 장소를 밝혀달라고 요청해줄기를 청원하기

〈關東大震災政府陸海軍關係史料〉, 日本經濟評論社; 平形千恵子・大竹米子 編 (1997), 『政府・戒嚴令關係史料(關東大震災政府陸海軍關係史料)』, 日本經濟評論社

12) 裴昭(1988), 『寫眞報告: 關東大震災朝鮮人虐殺』, 影書房

13) 오충공(1983), 〈隠された爪跡〉; 오충공(1986), 〈拂い下げられた朝鮮人〉

까지 하였다. 나아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학살의 책임을 일본 정부와 일본 민중에게 묻고 있다. 1963·1964년에 피학살 조선인 관련 자료집을 상·하로 발간하고, 유언비어와 관련된 논문을 발표하였던 마쓰오 다카요시를 비롯한 마쓰오 쇼이치[松尾章一], 다카사키 소시[高崎宗司] 등 학계의 대부적인 존재감을 지니는 연구자들이 관련 연구에 많은 힘을 기울였다. 이외에 유언비어 보도와 관련, 자경단 및 경찰·재향군인·군대, 조선인 차별, 계엄령, 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었고 발간되어 왔다(이상 참 고문헌 소개는 생략함).

한편, 50주년이 된 1973년에 시민단체인 추모사업실행위원회협회가 결성되어 사이타마현·지바현·가나가와현[神奈川縣]·이바라키현·도치기현·군마현[群馬縣]·도쿄 등지에서 '희생자 조사'와 '추모사업'이 병행되었다. 현제도 각 지역에서는 해마다 추모회를 개최하고 있고, 관련 연구자들과 더불어 유해 매장지와 희생자 수를 규명하기 위한 자료 수집 및 구술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현장 답사도 전개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변호사연합회의 법제적 활동이 추가된다.

이처럼 일본 측 연구동향은 자료조사 중심의 학계 연구자와 구술·현장조사 중심의 관련지역 시민단체의 운동사적 움직임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율사들의 법제적 차원 활동이 더해지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 측 조사와 연구는 대단히 미미한 상황이다. 일본문헌 번역서를 제외하면,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Riss 등에서 '관동대지진', '관동대진재'로 검색할 경우 논문과 단행본을 모두 합쳐 수십 건에 그친다. 한국 학계의 관련 연구가 미진한 이유로는 사건 현장 자체가 일본 국내인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들 수 있고, 그로 인해 자료수집과 구술조사, 현장답사 등의 어

려움을 기본적으로 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건 규모의 방대함으로 인해 개인적인 연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문제점도 있다.

지금까지 재일동포 학자와 많은 일본인 학자들이 다각적인 관점에서 조사와 연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는 이미 축적되어온 연구 성과물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지금까지는 자료조사와 구술조사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선행연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보다 객관적인 비교·분석·정리가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선행연구와 조사를 토대로 실태조사에 집중하여 학살자 수 및 유해 매장장과 이장 장소 등 사후처리에 관한 깊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한국이 아니면 조사와 연구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구주제가 있으니, 다름 아닌 피학살 조선인의 신원을 규명하고, 그 유족을 찾는 일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먼저 기존 연구 속에서 나타나는 피학살 조선인 수의 비교와 1924년 3월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새로운 자료 소개를 통한 피학살 조선인 수에 대한 재검토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가해자의 중심에 있었던 자경단 — 그들은 그들에게 학살당한 조선인과 같은 민중이었다 — 에 대한 사법적 처리문제를 기존 연구를 통해 간단히 살펴본 후, 군마현의 후지오카(藤岡) 사건의 「판결문」에서 드러나는 피학살 조선인과 가해자에 대한 차별적 재판 내용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II. 피학살 조선인 수

90주년을 맞이하는 2013년 현재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일본의 관동지역, 특히 도쿄, 지바현, 사이타마현,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가나가와현을

중심으로 일본 군·경·민이 자행한 피학살 조선인 수는 많은 부분 밝혀졌지만 명확하게 규명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사건 발생 직후 일본 내에서의 관련 조사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당시 일본 정부가 사건 자체를 은폐시키려 했던 것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¹⁴⁾

국내에서는 9월 7일 오후 8시 30분경 서울 경운동 천주교당에서 유성준 이하 21명이 회동하여 '재동경이재조선인임시구제회(在東京罹災朝鮮人臨時救濟會)'를 발족시킬 것을 발기하고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구제회를 발족시켰다. 이 글에서는 다른 모임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이 모임을 '구제회'라 칭하기로 한다. 9월 8일에는 구제회의 임시회장으로 유성준이 선정되었고, 구제회의 목적을 재동경이재조선인 1만 5천 명을 응급 구제하는 데 두었다. 이미 6일에는 제일유학생 신태옥, 임정교를 통해 유학생회에서 상무위원 5명을 선정하고 일본 이재조선인 상황조사위원 3명을 선정하여 구제에 힘쓰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고받았고, 유학생회의 김낙영과 연락하여 다방면으로 조사할 것을 결정하였다. 여기에서 사건의 현장인 일본 현지의 조선인 유학생들이 어느 곳보다도 빨리 상황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구제활동 등을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종로 경찰서는 구제회가 조선인들이 도쿄 지역에서 학대받고 가혹한 조사를 받은 증거를 모아 여론을 환기시키고, 이 단체가 일본 당국에 대항할 목적으로 실정 사찰에 노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요주의 단체 및 인물로 경성 지방법원 검사에게 보고하였다.¹⁵⁾

14) 山田昭次(2011), 『關東大震災時と朝鮮人虐殺とその後－虐殺の國家責任と民衆責任』, 創史社, 98~102쪽

15) 「在東京罹災朝鮮人臨時救濟會發起會ノ件」(京鍾警高秘 제10471호-2, 1923. 9. 8, 경성종로경찰서장 발송, 경성지방법원 검사正 殿). 구제회에는 臨時在京日本留學生會,

상해임시정부는 1923년 9월 10일 외무대신 조소앙의 이름으로 일본 정부 야마모토 곤노효에〔山本權兵衛〕에게 외무부 발행 131호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일 항의 공문」¹⁶⁾을 보냈는데, “사람들에게서 살기(殺氣)가 일고 천재지변과 화를 한국인에게 전가하여, 방화자도 한국인이요, 폭탄을 투척한 자도 한국인이라고 하며, 군사를 일으키며 전쟁을 선포하고 큰 적을 만난 것같이 민군(民軍)을 부추겨서 무기를 들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노인, 어린아이, 학자, 노동자 할 것 없이 한국인을 대량 학살하였으며, 물불 가리지 않고 한국인을 찢러 죽였습니다…….”라며, 루머와 일본 민중의 조선인 학살을 비판하였다. 이 문서를 통해 당시 상해임시정부는 일본 정부가 관동대진재의 원인을 조선인에게 전가하여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앞세우고 자경단을 부추겨 조선인을 학살한 것을 일종의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당시 상해임시정부는 일본 군대에 구금된 조선인 숫자를 1만 5천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었다.¹⁷⁾

상해임시정부는 이처럼 일본 정부를 비판하면서 상해임시정부의 공문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① 불법 강제 구금당한 1만 5천 명의 한국인을 즉시 석방할 것, ② 모든 재해구역에 있는 한국인의 생사 여부와 성명, 연령, 주소, 직업을 조사하여 발표할 것, ③ 한국인을 잔인하게 죽인 무리들을 엄중히 처벌할

朝鮮日報社, 東亞婦人商會, 朝鮮基督教青年會, 朝鮮青年會聯合會, 朝鮮小作人相助會, 東亞日報社, 東京罹災朝鮮人臨時救濟會, 普天教, 天道教, 彰文社, 개인 변호사 등이 참가하였고, 주요 인물로는 俞星濬(東京罹災朝鮮人臨時救濟會 發起會 臨時會長), 金炳旻, 鄭顯模, 洪德裕, 任環宰(徽文高等普通學校 敎長), 金正國, 柳秉龍, 崔元淳, 李順鐸, 張平鍾, 金潤秀, 金喆秀, 金健鎬, 李範昇, 李太偉, 高元勳, 沈明燮, 李仁, 金用茂, 辛泰嶽 등을 들 수 있다.

16) 상해임시정부 외무부(1923. 9. 10),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일 항의 공문」. 원문은 한문으로 작성되어 있다.(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제공)

17) “한인 1만 5천명을 가두어”, 《신한민보》(1923. 9. 13)

것 등을 요구하고, 조사한 것을 기록하여 밝힐 것도 요구하였다.¹⁸⁾ 그러나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답은 없었다.

같은 해 10월 5일 상해 거류 조선인들은 대회를 개최하여 학살사건을 조사하여 세계에 알리고 일본의 포악함과 무도함을 성토했기 위한 목적으로 《독립신문》 사장이었던 김승학을 중심으로 윤기섭, 여운형, 조덕진, 조완구, 이유필, 조상섭을 집행위원으로 선출하였다.¹⁹⁾ 이들 집행위원 7명이 그대로 일본에 파견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김승학과 몇 명이 일본에 파견되었고, 11월 28일에는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 누군가가 김승학에게 제1차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²⁰⁾ 이 글에서는 이를 「상해교민 보고서」라 칭하기로 한다. 이 보고서는 「상해임시정부의 조사보고서」라고도 할 수 있다. 《독립신문》 자체가 상해임시정부에서 간행한 것이었고 7인의 집행위원 역시 임시정부와 깊은 관계가 있는 인물들이었으며, 또한 상해 교민들이 상해임시정부의 지도하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이 보고서를 간혹 상해임시정부 보고서로 기술한 논문들이 있다. 동시에 독립신문 특파원이 투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특파원보고서」로 칭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교민대회가 개최되어 조직된 집행위원회였고, 집행위원이 일본에 파견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명칭은 「상해교민 보고서」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앞서 재일조선인 유학생회에서 상무위원 5명과 상황조사위원 3명을 선정하여 구제활동을 이미 전개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술한 바 있다. 그런데 앞의

18)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일 항의 공문」

19) “上海居留 韓國人들 關東大震災 韓國人虐殺事件에 대한”, 《獨立新聞》(1923. 10. 13); “상해교민대회에서 학살사건 조사”, 《신한민보》(1923. 12. 13)

20) “상해교민대회에서 학살사건 조사”

구제회와 비슷한 성격의 단체가 10월 3일 도쿄 고이시가와구[小石川區] 오쓰카시모마치[大塚下町]의 천도교회 내에서 ‘이재조선동포위안반(罹災朝鮮同胞慰安班)’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어 이동제가 위원이 되어 조선과 도쿄 간의 편지 연락과 구호에 진력하였다.²¹⁾ 이 글에서는 이 단체의 명칭을 ‘위안반’으로 칭하기로 한다. 원래는 ‘동경지방이재조선인구제회(東京地方罹災朝鮮人救濟會)’, ‘재일조선동포피학살진상조사회(在日朝鮮同胞被害殺眞相調查會)’라 칭하였으나 계엄령하에서 경시청으로부터 학살이라는 명칭은 불온하다는 이유로 허가받지 못하고 오히려 압박을 받게 되어 위안반으로 개칭할 수밖에 없었다.²²⁾

위안반의 중심은 도쿄조선유학생학우회였고 여기에 재일조선기독교청년회, 재일천도교청년회, 기타 단체가 참가하였다. 9월 7일 국내에서 설립된 구제회와 비슷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유학생이 일본과 조선의 연락 역할을 한 것 역시 마찬가지 형태다. 그리고 원래 명칭으로 삼고자 했던 ‘동경지방이재조선인구제회’는 구제회 설립에 참가했던 재일조선인 유학생 등을 중심으로 9월 6일 도쿄에 조직되었던 ‘동경이재조선인임시구제회(東京罹災朝鮮人臨時救濟會)’가 한 걸음 발전한 명칭으로 보여진다. 즉 위안반은 10월에 이르러 비로소 발족된 것이 아니라 9월 6일 이미 조직되었던 재일조선인 유학생 중심의 ‘동경이재조선인임시구제회’가 조사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시킬 목적으로 학생 중심에서 종교단체 청년회 등으로 영역을 넓혀 재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일본에 파견되어 학살사건 등의 조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던 구제회는 10월 25일 이전에 이미 일본 정부에 의해 해산당했고, 일본 내의 이재조선인 구제활동 또한 금지당한 상태였다.²³⁾

21) 山田昭次(2011), 앞의 책, 100쪽

22) 山田昭次(2011), 위의 책, 99~100쪽

23) “일본진제시에 학살당한 동포 위하여…”, □ 구미위원부”, 《신한민보》(1923. 11. 8)

이처럼 조사활동이 잘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11월 8일경 하와이 호놀룰루에서는 한국인 500명이 모여 미 국무성에 대해 일본 관동대진재 당시 학살당한 조선인 수를 조사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²⁴⁾ 같은 달 14일에는 중국 중한호조사(中韓互助社)에서 관동대진재 당시의 조선인, 중국인 학살을 규탄하는 선언서를 세계열강에 발표하기도 하였다.²⁵⁾ 마침 독일에 서는, 9월 1일부터 8일까지 도쿄에 있던 부르크하르트(Burkhardt)²⁶⁾ 박사가 목격한, 일본 관민이 조선인을 학살하는 장면을 본국 베를린의 《보시체 신문(Vossische Zeitung)》에 게재하여 유럽인의 각성을 촉구하였다. 이를 본 독일의 교포들은 대회를 개최하거나 부르크하르트의 기사 내용을 한글로 번역해서 교포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 각지에 거류하는 중국인에게 통고문을 발하여 상호 각고분려(刻苦奮勵)할 것을 권하였다.²⁷⁾ 일본의 사회주의계 아카하타(赤旗) 단체는 12월 24일 피학살 조선인 사건에 대한 장문의 통고문을 발표하였다.²⁸⁾ 영국의 자유노동당은 1924년 2월 일본의 조선인 학살에 대한 장문의 선언서를 발표하였는데 이 선언서는 영국 각 신문에 게재되기도 하였다.²⁹⁾

한편, 중국 정부는 관동대진재 이후 일본 관동지역에 재류하던 약 5천 명의 중국인 가운데 3천여 명의 소식을 알 수 없으면서 1923년 11월 조사위원

24) “일본진재시에 학살당한 동포 위하여...”

25) “中韓互助社에서 關東大震災時 韓國·中國人 학살 규탄하는 선언서를 세계열강에 발표”, 《東亞日報》(1923. 11. 14)

26) 부르크하르트의 독일어 표기인 Burkhardt는 독일 연구자 올리안 비온티노를 통해 확인함(2012. 9).

27) “德國人이 目親한 韓人慘殺事件”, 《獨立新聞》(1923. 12. 5); “在德韓人大會의 痛告”, 《獨立新聞》(1923. 12. 26); “(부)博士訪問記 上”, 《獨立新聞》(1923. 12. 26); “(부)博士訪問記 下”, 《獨立新聞》(1924. 1. 19)

28) “赤旗團에서 關東大震災時 韓國人慘殺事件에 대한...”, 《獨立新聞》(1923. 12. 26)

29) “英國의 自由勞動黨은 日本 關東大震”, 《東亞日報》(1924. 2. 23)

을 일본에 파견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중국 정부의 오해라며 부인하였지만, 1923년 12월 말경에 이름,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명부를 건네주었다. 상해임시정부의 요청에 대한 태도와는 전혀 다른 일본 정부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중국 조사원은 조선을 틀러 귀국한 것으로 파악된다.³⁰⁾ 당시 중국이 독립국이었고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하기에는 지나친 차별이고 조선 민족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폭력, 즉 무형의 폭력으로 보여진다. 이후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피학살 조선인 명부 및 매장장소 등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한 바 없으며 일본 정부 역시 관련 자료를 공개하거나 제공한 적도 없다.

현재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6,661명이라는 피학살 조선인 수는 1923년 11월 28일에 《독립신문》 사장인 희산(希山) 김승학에게 보고된 내용을 주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³¹⁾ 그런데 이 숫자는 제1차 보고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편, 1924년 3월에 작성된 독일 외무성에 소장되어 있는 문서 「일본에서의 조선인 학살(MASSACRE OF KOREANS IN JAPAN)」 중, 「피학살자 수와 장소 리스트(The List of killed bodies and places)」에 따르면 피학살 조선인 수는 총 23,059명에 달하고 있어, 종래 알려진 피학살 조선인 수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³²⁾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30) “關東大地震時 中國人被殺事件, 調査委員의 派遣”, 《동아일보》(1923. 11. 10); 「關東大震災 中國인 참살사건 조사한 中國대표 王正廷 서울 도착», 《동아일보》(1923. 12. 30)

31) “一萬의 犧牲者!!!”(本社 被虐殺僑日同胞特派調査員一信), 《독립신문》(1923. 12. 5)

32) 「MASSACRE OF KOREANS IN JAPAN」 중, ‘The List of killed bodies and places’ (『해외의 한국독립운동사료(Ⅲ): 독일 외무성 편(2)』(1924. 2. 29),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 제공)

이 외에도 여러 단체에서 조사를 하였으나 같은 지역인데도 그 수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비교를 돕기 위해 재정리한 몇 가지 표를 소개하기로 한다.

〈표 1-1〉 일본 사법성 조사에 따른 관동대진재 당시 피학살 조선인 수

학살지	학살 수	학살지	학살 수
도쿄부	53명	사이타마현	약 66명(원문대로)
가나가와현	2명	군마현	16명
지바현	84여 명(원문대로)	도치기현	9명
총계 230여 명			

출전: 山田昭次(2003), 『關東大震災時と朝鮮人虐殺-その國家責任と民衆責任』, 創史社, 186쪽, 재인용

〈표 1-2〉 재일본관동지방이재조선동포위문단의 조선인 학살 수 최종조사보고서

학살지	학살 수	학살지	학살 수
도쿄부	1,781명	사이타마현	약 488명
가나가와현	3,999명	군마현	34명
지바현	329명	도치기현	8명
이바라키현	5명		
총계 6,661 명			

출전: 山田昭次(2011), 위의 책, 112쪽

〈표 1-2〉는 참고문헌 속의 「재일본관동지방이재조선동포위문반조선인학살최종조사보고」(이하, 「최종조사보고」)를 축약해서 정리한 것이다. 「최종조사보고」는 전술한 구제회와 위문반, 상해교민 보고서를 종합하여 아마다 쇼지가 정리한 것이다. 현재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표에서 총계로 산출한 6,661명을 당시 학살당한 조선인 수로 인용·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종조사보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상해임시정부 조사단의 최종보고, 혹은 김승학의 보고

등으로 기술한 몇몇 논문이 있어 자료사용에 주의를 요한다.

다음 <표 1-3>은 1923년 12월 5일자 《독립신문》의 ‘일만(一萬)의 희생자(犧牲者)’라는 기사에 나오는 보고 내용을 근거로 삼은 것이다. 전술한 상해교민 보고서란 바로 이 기사 내용을 말한다. 이 기사 내용은 중요 관련 연구문헌에서 표로 작성되어 소개되기도 하였는데,³³⁾ 본고에서도 기사 원문을 중심으로 <표 1-3>으로 작성하여 보았다.

<표 1-3> 상해교민 보고서³⁴⁾

지역	피살지	피살자 수	비고
東 京 府	龜戸	100	시체 미발견 수 (총 1,029)
	龜戸停車場前	2	
	大島 六丁目	26	
	大島 七丁目	6	
	大島 八丁目	150	
	小松川 부근	2	
	小松川 區域內	220	
	小松川 부근	20	
	小松川 區域內	1	
	小松川 區域內	26	
	平井	7	
	清水飛行場 부근	27	
	八千代	2	
	寺島署內	14	
	月島	11	
三戶地	27		
三戶地 부근	32		

33) “一萬의 犧牲者!!!” 참고로 일부 불명확한 지명, 표 형식 등은 「최종조사보고」의 도움을 받았다.

34) “一萬의 犧牲者!!!”

지역	피살지	피살자 수	비고	
	龜戸警察署演武場騎兵 23聯隊少尉 田村 刺殺	86	1차 조사종료 후, 11월 25일의 보고	
	深川	4		
	向島	43		
	寺島清地	14		
	東京府	752		
	합계 1,781			
琦玉縣	琦玉縣 熊谷	60	시체 미발견 수 (총 195)	
	本庄	63		
	寄居	13		
	妻沼	14		
	大宮	1		
	神保原	25		
	北葛飾 早稻村 大字幸房에서 漆谷人	17		
	長野縣과 琦玉縣의 境界	2		
	琦玉縣	293		
	합계 488			
千葉縣	千葉縣 船橋	37	시체 미발견 수 (총 183)	
	法殿村·塚田村	60		
	南行徳	3		
	流山	1		
	佐原	7		
	馬橋	3		
	千葉市	37		
	波川	2		
	我孫子	3		
	馬橋	3		
	成田	27		
	9月 6日경에 習志野軍人營廠	13		시체 발견 수
	千葉縣	133		1차 조사종료 후, 11월 25일의 보고
	합계 329			

지역	피살지	피살자 수	비고
栃 木 縣	東那須野(원문에는 茨城縣으로 되어 있음)	1	시체 발견 수
	宇都宮	3	
	朽木縣	4	1차 조사종료 후, 11월 25일의 보고
	합계 8		
群 馬 縣	羣馬縣 藤岡警察署 内	17	시체 미발견 수
	羣馬縣	17	1차 조사종료 후, 11월 25일의 보고
	합계 34		
茨 城 縣	茨城縣 下	5	1차 조사종료 후, 11월 25일의 보고
	합계 5		
神 奈 川 縣	神奈川 淺野造船所	48	시체 발견 수 (총 1,795)
	神奈川 警察署	3	
	程谷	31	
	井戸谷	30	
	根岸町	35	
	土方橋에서 八幡橋까지	103	
	中村町	2	
	本牧	32	
	山手町埋地	1	
	御殿町附近	40	
	山手本町警察署立野派出所	2	
	若屋別莊	10	
	新子安町	10	
	子安町에서 神奈川停車場까지	150	
	神奈川鐵橋	500	
	東海道 茅崎停車場前	2	
	久良岐郡金澤村	12	
	鶴見 부근	7	
	川崎	4	
	久保町	30	
戶部	30		

지역	피살지	피살자 수	비고
	津間町	40	
	水戸・鴨山	30	
	神奈川縣	1,052	1차 조사종료 후, 11월 25일의 보고
		합계 3,999	
		총합계 6,661	

이상 <표 1-3>에서 알 수 있듯이 조사 구역이 도쿄부·사이타마현·지바현·군마현·도치기현·이바라키현·가나가와현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고, 시신 미발견 수와 발견 수를 구분한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발견된 시신의 총수는 1,500명에 달하지만 조사자 본인이 실지로 본 것은 1,167명이고 나머지 333명은 지금 조사 중이라는 내용을 덧붙인 것으로 보아 매우 세밀하게 조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1차 조사를 종료한 11월 25일에 다시 각 부·현에서 보고된 것은 별도로 기재하였는데, 11월 25일 이전처럼 세밀하게 장소와 인원수를 표기한 것이 아니라 앞서 기술한 7개 지역별로만 나누어 기재하는 형식에 머물렀다. 이 표에 나타나는 총 피학살 조선인 수 6,661명은 11월 28일까지 조사한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 외 이 기사에서 몇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 기사 내용 중 일부를 가능한 원문대로 옮겨 살펴보기로 한다.

슬프다 七千의 可憐한 同胞가 敵地에서 피바다를 이루었다.

希山先生! 바람은 蕭蕭하고 하늘은 높으며 구름은 맑고 해는 따뜻하던 가을 날에 先生과 分袂한 生等은 千辛萬苦中에서 九死一生으로 十日만에야 겨우 焦土로 化한 東京에 이르러서 卽時 責任을 맞은 地方으로 各各 헤어 첫나이

다. 그러나 先生이 想像하실수 있는 것과 갖치 詳細히 所任을 盡하기는 極히 困難하였나이다. 그럼으로 가을을 다 지나고 白雪이 紛紛하는 이때에야 겨우 各地의 報告를 綜合하여 第一次로 大綱을 적어 올리오니 더 仔細한 것은 다음 便을 기다리시고 爲先 各款한 것만 푸시기를 비나이다. 果然 生等の 生活은 甚히 不自由하여 定處가 업사오며 通信은 더욱 不便하여 길게 告할 겨를과 便宜가 업사오니 이것을 深諒하여 주시기를 비나이다.

先生! 敵京의 慘酷한 꼴은 可憐하다는 것보다는 可賀하겠더이다. 그놈들이 우리를 虐殺한 것을 생각하면 더욱 忿하고 니가 같니며 敵土가 全滅되지 않은 것만 恨하나이다.

先生! 左記한 報告는 急急히 맞친 第一次의 調査인데 第二次의 調査도 임의 着手하였나이다.

…… 하략 ……

大韓民國五年 十一月二十八日

피눈물속에서 ○○○上

獨立新聞社 希山先生 암에

먼저, 이 기사 내용상 이 보고는 누군가가 희산(希山) 선생에게 보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희산이란 당시 《독립신문》의 사장이면서 주필을 담당하고 있던 김승학을 가리킨다. 즉 본인이 본인의 호를 붙여 선생이라 칭하면서 보고할 리는 없으니 종래 이 보고를 김승학의 보고라고 한 몇몇 논문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보고의 마지막 부분에 ‘독립신문사 희산선생 암에’라고 써진 것에서도 이 보고는 희산, 즉 김승학에게 보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사제목인 ‘일만의 희생자!!!’ 바로 옆에 ‘본사 피학살교일동포특파조사원일신(本社被虐殺僑日同胞特派調查員一信)’이라고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조사 내용을 독립신문사에 제공한 사람은 독립신문사의 특파원 자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특파원을 당시 나고야(名古屋)의 한 잡지사에 근무

하던 한세복(韓世復)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³⁵⁾ 그러나 한세복 혼자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이고, 앞의 기사에 나타나는 각자 담당지역으로 떠났다는 내용에 비추어볼 때,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지역별 조사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즉, 10월 5일 상해에 거류하는 한국인들이 관동대진재 당시 학살당한 한국인을 조사하기 위해 집행위원 7명을 선출하였다는 기사가 있는데,³⁶⁾ 그 기사대로라면 7명의 집행위원인 김승학, 윤기섭, 여운형, 조덕진, 조완구, 이유필, 조상섭이 조사를 위해 일본에 파견된 것이 된다. 그러나 이 7명이 그 대로 일본 간토 지역에 파견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기사에서 조사 지역을 크게 도쿄부·사이타마현·지바현·군마현·도치기현·이바라키현·가나가와현 등 7개 지역으로 구분한 것에 비추어볼 때 기본적으로 7명 정도는 파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집행위원 7명 선출과 대략 맞아떨어진다.

상해에서 10월 5일 교민대회가 개최되었으니 1주일에서 10일 정도 후에 출발한 것으로 추정하면, 약 4일간의 뱃길을 이용하여 10월 16일 혹은 21일 정도에는 일본의 고베항(神戸港)이나 오사카항(大阪港) 혹은 나가사키항(長崎港)에 도착했을 것이다.³⁷⁾ 날씨 좋고 따뜻했던 가을날에 도착한 희산 김승학과 집행위원들은 곧 헤어진 것 같고, 집행위원들은 천신만고 끝에 구사일생으로 열흘 만인 10월 26일 혹은 10월 말일경에 도쿄에 도착한 후, 또다시 각자 조사

35) 山田昭次(2011), 앞의 책, 166쪽

36) “敵의 韓人虐殺에 對한 上海我僑民大會”·“上海居留 韓國人들 關東大震災 韓國人虐殺事件에 對한”, 《獨立新聞》(1923, 10, 13)

37) 劉婧(2010), 「日本人旅行記からみる20世紀前半の大連航路」, 『或問』 19, 27~40쪽; 孫安石(2010), 「日本人から見た上海イメージ—『上海案内』の世界」, 『中國·韓國舊日本租界』, 181~194쪽

를 책임진 지역으로 떠난 것으로 보인다. 제1차 조사 종료 시기가 11월 25일이었으니까, 7개의 각 지역에서 10월 26일 혹은 10월 말부터 약 한 달간을 이용하여 조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학살 조선인에 대한 조사 진행이 지극히 어려웠던 것 같다. 벌써 가을도 다 지나고 백설이 날리는 11월 28에 이르러서야 겨우 각지의 보고를 종합하여 제1차로 대략 보고한다는 내용과 조사활동이 매우 자유롭지 못하고 통신 또한 불편하여 길게 보고할 틈도 없고 편의도 없으니 이해해 달라는 내용에서 당시의 조사 상황의 어려움을 살필 수 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집행위원들은 이미 제2차 조사에 착수한 상태였고, 이로 보아 이 보고가 특파원의 최종 보고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보고 내용 역시 최종 보고로 인용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상의 표 이외에도 다음의 표들이 여러 관련 문헌에 인용되어 있어 소개하기로 한다.

〈표 1-4〉는 앞의 각 표와 종합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 피살인 수는 일부 지역에서 일치하거나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참고문헌에 근거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원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런데 〈표 1-4〉는

〈표 1-4〉 《독립신문》 사장 김승학의 조사

학살지	학살 수	학살지	학살 수
도쿄부	1,347명	사이타마현	588명
가나가와현	4,106명	군마현	37명
지바현	324명	도치기현	8명
이바라키현	5명		

총계 6,415 명

(※ 참고: 1923년 11월 25일 이후 각 부현에서 알려진 숫자를 포함하였음)

출전: 神奈川縣關東大震災朝鮮人犠牲者追悼碑建立推進委員會(1995), 『關東大震災下の朝鮮人 ~神奈川縣では~』, 24쪽

〈표 1-5〉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 조사

학살지	학살 수	학살지	학살 수
도쿄부	724명	사이타마현	551명
가나가와현	1,227명	군마현	18명
지바현	141명	도치기현	4명
이바라키현	44명	나가노현	2명
총계 2,711여 명			

출전: 神奈川縣關東大震災朝鮮人犠牲者追悼碑建立推進委員會(1995), 위의 책, 25쪽

관동대진재 당시 조선인 학살이 중심으로 행해진 곳으로, 이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김승학 혼자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즉, 각 지역에 파견된 누군가 조사하여 한 사람에게 자료를 보내면 그 한 사람이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김승학에게 보고한 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가나가와현 조사는 김승학이 담당했을 수도 있으나 현재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요시노 사쿠조가 조사한 〈표 1-5〉에는 조선인 학살자 수가 총 1,227명으로 나타나 있지만, 또 다른 자료인 요시노 사쿠조가 집필한 원고 「조선인학살 사건」에는 총 피학살 조선인 수가 2,613명으로 기록되어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자료에는 ‘조선인이재동포위문단 일원에게 들은 것’³⁸⁾이라 하여 본인이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조선인이재동포위문단이란 전술한 위문단을 의미한다.

〈표 1-6〉에서 알 수 있듯이 가나가와 지역의 피학살 조선인 수에 대한 조사 결과를 김승학은 3,054명, 요시노 사쿠조는 1,227명, 제 신문에서는 286명으로 확인하였다. 같은 지역에 대한 조사인데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38) 山田昭次(2011), 앞의 책, 107~108쪽, 재인용.

〈표 1-6〉 관동대진재 당시 조선인 학살자 수: 가나가와현(『勞動運動史研究』 No. 37)

조사자	피학살 조선인 수	조사자	피학살 조선인 수	조사자	피학살 조선인 수
요시노 사쿠조 [吉野作造]	1,227명	김승학 (金承學)	3,054명	제 신문보도	286명

출전: 山本すみ子(1973), 『朝鮮人虐殺と歴史讀本』, 『教育勞動研究』 1, 社會評論社, 104쪽

알 수 있다.

더군다나 〈표 1-1〉에서 확인되는 일본 사법성에서 발표한 가나가와 지역의 피학살 조선인 수가 단 2명이었던 것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일본 정부의 조사와 발표에 대한 신빙성 문제가 제기된다.

김승학이 조사한 수는 〈표 1-6〉에서는 3,054명으로 나타나지만, 전술한 김승학이 조사한 또 다른 〈표 1-4〉에 따르면 4,106명이다. 김승학 조사를 상해교민이 파견한 집행위원이 조사한 보고로 볼 경우, 여기에 「상해교민 보고서」의 2,847명을 포함시켜 비교·분석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이 세 자료 가운데 〈표 1-4〉에 가장 많은 수가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해교민 보고서」가 1923년 11월 28일에 작성된 제1차 보고서이므로, 〈표 1-4〉, 〈표 1-6〉에 나타난 수가 「상해교민 보고서」인 〈표 1-3〉보다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 후의 조사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한편 〈표 1-6〉에서 확인되는, 제 신문에서 조사하여 정리한 숫자가 286명에 불과한 부분은 당시 일본 정부의 언론통제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현재로서는 최종 관련자료라고 말할 수 있는 1924년 3월에 영문으로 작성된 독일 외무성 소장 관련문서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자료는 앞의 자료들보다 더 많은 피학살 조선인 수를 말하여주고 있다. 원자료에 충실을 기하며 피학살 조선인 수에 대한 내용을 〈표 1-7〉로 작성하여 보았다.

〈표 1-7〉 피학살 조선인 수와 학살 장소(The List of killed bodies and places)³⁹⁾

학 살 지	학살 수	학 살 지	학살 수
Aoyama	2	Saitamaken Factory	5
Akayama Betcho	11	Saitamaken Deport.	200
Chibashi	37	Saitamaken Honcho	63
Chibaken	429	Saitamaken Waseda	17
Chibaken Hunabashi	37	Saitamaken Sinbo	26
Gunma	60	Sumidagawa	271
Goyama	2	Sinziku	3
Gomatsken	29	Sitazukizima	85
Godamaken	40	Simits Airship Station	27
Hada	2,000	Siba Park	2
Hukagawa	50	Sinagawa Station	153
Hiroya	7	Sinagawaken	1795
Hotoya	31	Saitamaken Kikiu	27
Hatchibanbashi	103	Sinagawa Police Station	4
Kumaya Temple	144	Sinagawa Ship Building Yard	48
Kunmaken	33	Sinagawa Bridge	500
Kidatomaken	1	Shingo Yasucho	10
Kamedo	350	Tchukizima	11
Kumagomei	27	Terano	14
Kawasaki	34	Tokaido Railroad	2
2Mukozima 43		Toyamacho	2
Minamigawa	59	Ueno	68
Midochi	2	Ueno Park	5
Military clothing factory	13	Wagamago	3
Neikishi	35	Wumabashi	3

39) 「MASSACRE OF KOREANS IN JAPAN」 중, 〈The List of killed bodies and places〉. 향후, 이 자료에 나오는 영문 지명은 일본 학자의 도움을 받아 지명을 확인하고 한자 명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학 살 지	학살 수	학 살 지	학살 수
Nagasendo	120	Wachumabashi	81
Nagano	8	Waragawa	117
Narida	27	Yachio	2
Nagamuramatchi	2	Yanagibashi	15
Near the Zurumi	19	Yokohama	300
Near the KAwasaki	100	Yitoya	15
Omiya	2	Yamadei	33
Ochima	182	Yugoyashucho	10
Sinagawa	300		

㉔총 학살자 수: 8,271명

(이상, 확인된 피학살 장소와 피학살 조선인 수)

The bellow(below의 오기로 판단됨) mentioned numbers and places are confirmed by Dr. Yoshino, the Editor of the Zuokoron, the large circulating Japanes magazin.

(이하 언급된 숫자와 장소는,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잡지인 『중양공론』의 편집자인 요시노 사쿠조 박사가 확인한 것이다.)

㉔7,861	확인된 피학살 조선인 수(killed bodies are discovered): 피학살 장소 미확인, 피학살 조선인 수 확인의 의미
㉔3,249	미발견 피학살 조선인 수(killed bodies are not discovered): 미확인된 피학살 장소와 피학살 조선인 수 = 행방불명
	Komatsugawa, Kunmaken, Ochima, Kamedo, Hukushimaken, Chiyogawa, Saitamaken, sinagawa
㉔577	From the police's killing (경찰에서 학살)
㉔3,100	From the cavellery's killing (From the cavalry's killing의 오기로 보임. 즉 기병(군대)에게 학살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판단됨)
총 2,3059	

By Korean in Korean independence movement.(한국 독립운동가에 의한)

March, 1924.(1924년 3월)

* 이 표는 「MASSACRE OF KOREANS IN JAPAN」 중, 'The List of killed bodies and places'를 표로 작성한 것이다.

이 자료는 이번 발표에서 처음 공개하는 새로운 자료라 할 수 있다. 향후 피학살 조선인 수와 그 장소를 비교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은 <표 1-7>에 대한 만족할 만한 분석과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번 발표에서는 간단하게 마치고자 한다.

앞의 <표 1-7>은 현재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에 소장되어 있는 독일 외무성 소장 사료인 「MASSACRE OF KOREANS IN JAPAN」 중, 'The List of killed bodies and places'를 표로 작성한 것이다. 이 사료에 대해서는 독일인 연구자를 통해 독일 외무성 아카이브에 소장되어 있는 원사료 확인을 마친 상태다.⁴⁰⁾

<표 1-7>에는 확인된 피학살 장소의 확인된 피학살 조선인 총 8,271명^{㉒)} 외에, 미확인 피학살 장소의 확인된 피학살 조선인 7,861명^{㉓)}, 미확인 피학살 장소의 미확인 피학살 조선인 3,249명^{㉔)} 그리고 이 외 경찰에게 학살당한 조선인 577명^{㉕)}과 기병대(군인)에게 피살된 조선인 수 3,100명^{㉖)}을 합한 23,058명이 피학살 조선인 총수로 기재되어 있다.⁴¹⁾

여기에서 ㉓)는 피학살 장소는 확인되지 못했지만 어느 한 곳에 모여진 피학살 조선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며, ㉔)는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피학살 장소와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행방불명 상태의 조선인을 의미할 것이다.

<표 1-7>의 ㉔)~㉖)에 해당되는 명수는 당시 일본에서 가장 구매력이 좋았던 잡지인 『중앙공론』의 편집장이던 요시노 사쿠조가 확인한 것임을 밝히고

40) 이 사료는 당시 북경에서 독일 외무성에 우송된 익명의 한국 항일운동가가 보낸 사료로 확인되었으며, 1991년 독일에 유학 중이던 한국 유학생이 외무성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 관련 자료를 조사·수집하여 국가보훈처에 제공하였는데, 그 가운데 포함된 사료로 이번에 필자가 발굴하여 한국 일반에게 공개하게 된 것이다.(독일 외무성 아카이브 담당자 확인-2013. 9. 2; 국가보훈처 확인-2013. 8. 22)

41) 원문에는 총수가 23,059명으로 표기되어 있다.

있다. 또 가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보고서의 내용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항일 운동가가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전술하였듯이 요시노 사쿠조의 원고인 「조선인학살사건」에 “조선인이재동포위문단 일원(一員)에게 들은 것”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를 최승만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⁴²⁾ 그 이유로는 최승만과 요시노 사쿠조가 작성한 피학살 조선인 수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 견해가 옳다면 여기에서 가리키는 그 일원 또한 최승만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며, 요시노 사쿠조가 확인했다는 내용에 비추어볼 때, 이 자료도 최승만이 관련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㉔~㉞의 피학살 조선인 수인 14,787명에 대한 것이다. 이 숫자는 요시노 사쿠조가 확인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어, 적어도 종래 구제회, 최종보고서, 위문반 등의 조사를 종합 정리한 총 6,661명의 2배가 넘는 숫자다. 여기에 확인된 피학살 조선인 수인 8,271명(㉞)을 합하면 총 23,058명이 된다. 6,661명의 거의 4배에 해당한다. 이 자료는 1924년 3월에 작성된 것으로 전술했던 자료들보다 훨씬 후에 작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앞의 자료들보다 많은 조사 결과의 피학살자 수가 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존의 연구 결과와의 좀 더 세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앞에서 간단히 말하였듯이, 이 자료는 본 논문을 통해 처음으로 소개되는 자료로 현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보다 충실한 연구 내용은 다음을 기하기로 한다.

42) 山田昭次(2011), 앞의 책, 108쪽

III. 일본 정부의 가해자에 대한 처리

여기에서는, 이처럼 6,661~23,058명의 일반 민중인 재일조선인에게 누명을 씌우고 잔학하게 학살한 자경단원 등에 대해 일본 정부는 사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이하 제시하는 <표 2>는 『관동대진재시와 조선인학살-그 국가책임과 민중책임(關東大震災時と朝鮮人虐殺-その國家責任と民衆責任)』의 사법처리 관련 표를 원문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최근이라 할 수 있는 2011년 9월에 간행된 것임을 밝히고 시작하고자 한다.

먼저, <표 2-1>은 구(區)판결소 판결 2건, 지방재판소 판결 55건, 도쿄공소원⁴³⁾ 판결 17건, 대심원 판결 4건을 수집하여, 이 가운데 부상사건을 제외한 학살사건에 관한 지방재판소 판결만을 대상으로 삼아 정리한 것이다.⁴⁴⁾

분류는 ①은 ‘도쿄부’의 하나하타무라[花畑村] 사건·니시아라이 요노[西新井與野]거리 사건·쓰가모마치 미야시타[巢鴨町·宮下] 사건·아라카와[荒川] 방수로 사건²⁾·아즈마마치 오하타[吾嬬町·大畑] 사건·아즈마마치 우케지[吾嬬町·講地] 사건, ‘사이타마현’의 가마가야[熊谷] 사건·가타야나기[片柳] 사건, ‘지바현’의 나가레야마마치[流山町] 사건·아비코마치[我孫子町] 사건·나메가와마치[滑川町] 사건, ‘도치기현’의 마마마치역[間間町驛] 사건·이시바시역[石橋驛] 사건·고가네마치역[小金町驛] 사건, ‘가나가와현’의 쓰루이마치[鶴見町] 사건·요코하마공원[横濱公園] 사건 등 일반 장소에서 발생한 조선인 학살사건이다. ②는 ‘군마현’의 후지오카[藤岡] 사건·구라가노[倉賀野] 사건, ‘사이타마현’의 혼조[本庄] 사건·진보

43) 항소 법원의 예전 칭호.

44) 山田昭次(2011), 앞의 책, 89~91쪽

〈표 2-1〉 학살사건부 제1심 판결분석표

사건 유형		① 조선인 학살	② 경찰서 습격, 조선인 학살	③ 일본인 학살
건 수		17건	5건	16건
실형	실형 5년 이상		2명	2명
	징역 4년 이상		5명	1명
	징역 3년 이상	2명	6명	12명
	징역 2년 이상	5명	15명	30명
	징역 1년 이상	9명	17명	9명
	징역 반년 이상		3명	
	A. 소 계	16명	48명	54명
B. 집행유예		81명	54명	37명
A + B = C		97명	102명	91명
실형률(A/C)		16.5%	47.1%	59.3%
무죄판결된 피고		5명	4명	

참고: 군마현의 후지오가 사건과 사이타마현의 모든 사건은 판결문에 의거한 것이고, 기타는 신문기사에 근거한 것이다.

출전: 山田昭次(2011), 앞의 책, 90쪽

하라[神保原] 사건 · 요리이[高居] 사건처럼 경찰서, 경찰분서, 순사파출소, 경찰 트럭 등을 습격하여 그곳에 수용되어 있는 조선인을 학살한 사건이다. ③은 ‘도쿄부’ 고히쿠무라[江北村] 사건 · 오이마치 미나미하마가와[大井町 南浜川] 사건 · 시나가와 료시마치[品川漁師町] 사건 · 아즈마마치[吾嬬町 葛西川] 사건 · 요쓰야 무라 덴마초[四ツ谷村 傳馬町] 사건 · 나가타초[永田町] 사건 · 니이아마치[新谷町] 사건, ‘사이타마현’의 메누마[妻沼] 사건, ‘지바현’의 후쿠다무라[福田村] 사건 · 미나미교토쿠[南行徳] 사건 · 미카와무라[三川村] 사건, ‘군마현’의 다카사키역[高崎驛] 사건 · 야하타무라[八幡村] 사건, ‘도치기현’의 이에나카무라[家中村] 사건, ‘이바라키현’의 가덴이쿠사키무라[嘉田生崎村] 사건, ‘후쿠시마현’의 사이고무라[西郷村] 사건처럼 일본인 학살사건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③ 가운데 특히 메누마

사건·후쿠다무라 사건은 자경단이 상대를 일본인으로 인식하면서 살해한 사건이고, 기타는 상대를 조선인으로 오인하여 살해한 사건이다.⁴⁵⁾

〈표 2-1〉에서 알 수 있듯이 수집한 판결문 속에서 확인된 ①의 조선인 학살사건은 총 17건으로 해당 피고인은 총 102명이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81명과 무죄를 선고받은 5명을 제외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총 16명으로 징역 1~3년 이상에 한정된다. 실형률은 16.5%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②의 경찰서 등을 습격하여 그곳에 수용되어 있는 조선인을 학살한 사건은 총 5건으로 피고인 수는 총 106명이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4명과 무죄를 선고받은 4명을 제외한 나머지 48명은 징역 반년~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실형률로 보면 47.1%에 해당된다. ①의 조선인 학살 실형률의 3배 정도에 해당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즉 ②의 경우 실형률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후지오카 사건을 예로 들 경우 당시 검사였던 가시다 다다요시(梶田忠美) 검사는 첫날의 조선인 학살 자체보다 둘째 날의 경찰서 습격이나 경찰서 기물 파괴를 조선인 학살보다 중시한 결과였던 것이다.

이러한 자세는, 1923년 11월 5일 마에바시(前橋) 지방재판소에서 있었던 후지오카 사건 심리 법정에서 가시다 다다요시 검사가 경찰서를 습격하고 기물을 파손한 가해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⁴⁶⁾

피고 등이 5일 밤에 시끄러운 일을 일으킨 것은 유언비어를 믿고 열광한 나머지 저지른 일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6일 밤에도 또다시 소요를 일으킨 것은 무슨 일이나. 경찰서를 파괴, 관사나 관내에 침입하여 서랍, 책상, 의자, 모든 장부를 끄집어내어 두드려 부수고 방화하는 것은 어

45) 山田昭次(2011), 위의 책, 90~92쪽

46) 山田昭次(2011), 위의 책, 91~92쪽

째서인가. 조선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경찰에 무언가 유감이 있는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즉 평소에 경찰에 호의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 아니겠는가. [...] 따라서 5일의 소동보다 6일의 소동이 무겁다고 본다.

이상의 문장에서 확인되는 가시다 다다요시 검사의 자세는 당시 경찰서 습격자는 엄하게 처분한다는 사법위원회의 방침을 충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렇다면 ③의 일본인 학살의 경우는 어떠했을까? ③의 경우는 총 16건에 피고인은 총 91명이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7명을 제외하면 징역 1~5년 이상을 선고받은 자가 54명이다. 무죄를 선고받은 자는 없으며 실행률 59.3%로 ①·②·③ 가운데 가장 높은 실행률이 확인된다.⁴⁷⁾

이처럼 실행률과 당시 판결 기준이 조선인 학살 → 경찰서 습격 및 경찰서 기물 파괴 등 → 일본인 학살 순으로 엄해져간 것을 통해, 피학살 조선인이 얼마나 일본 정부로부터 기본적인 인권부터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표 2-2〉와 〈표 2-3〉은 항소심과 상고심의 각 사례를 정리한 표다. 이들 표에서도 조선인 학살과의 차별적 내용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위의 〈표 2-2〉는 항소심까지 간 사례 9건을 정리한 것으로, ①은 '지바현'의 지바시 사건, '도치기현'의 이시바시역 사건, ②는 '사이타마현'의 혼조 사건·신호바라(新保原) 사건, ③은 '도쿄부'의 나가타초 사건, 오이마치 미나미하마가와 사건, '사이타마현'의 메누마 사건, '지바현'의 미카와마치(三川町) 사건, '군마현'의 아하타무라 사건을 중심으로 다룬 것이다.⁴⁸⁾ 항소심 결과 조선인

47) 山田昭次(2011), 위의 책, 92쪽

48) 山田昭次(2011), 위의 책, 93쪽 참고. 지바시 사건은 제1심에서 피고가 실행을 선고

〈표 2-2〉 향소에 의한 판결 변화

사건 유형		① 조선인 학살	② 경찰서 습격, 조선인 학살	③ 일본인 학살
건 수		2건	2건	5건
제 1 심	실형 판결	5명	19명	17명
	집행유예	3명	31명	14명
	무죄		1명	
	합계	8명	51명	31명
향 소 심	실형 판결		3명	
	집행유예	5명	16명	17명
	무죄			
	합계	5명	19명	17명

출전: 山田昭次(2003), 앞의 책, 101쪽; 山田昭次(2011), 앞의 책, 93쪽

과 일본인을 살해한 피고는 감형되어 모두 집행유예가 되었으나 경찰서를 습격하여 조선인을 살해한 피고의 경우는 19명 중 16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2-3〉은 상고심까지 간 사례 4건을 정리한 것이다. 조선인을 학살한 후 지오카[藤岡] 사건의 경우, 제1심에서 실형을 언도받은 피고는 25명이었으나 상고심 때는 9명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구마가야 사건의 경우는 현재 최대 피살자 57명과 그 가운데 부인이나 어린아이가 확인되고 있는데, 제1심과 향소심에서 피고 총 35명 중 34명이 집행유예를 언도받았다. 한편 일본인을 학살한 후쿠다무라 사건의 경우는 제1심에서 실형을 언도받은 피고는 8명이었으나 향소심에서는 1명만 감소하였을 뿐이고 상고심에서는 실형을 언도받은 피고는 1명도 없었다. 그리고 가장 가벼운 형량은 징역 10년이었다. 후쿠다무라 사건은 어린이 3명도 학살당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받은 것이 판명되었으나 형량불명으로 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표 2-3〉 항소·상고에 의한 판결 변화

사건 유형		조선인 학살	경찰서 습격, 조선인 학살	경찰서 습격, 조선인 학살	일본인 학살
사건 명칭		구마가야 [熊谷]사건	후지오카 [藤岡]사건	요리이 [寄居]사건	후쿠다무라 [福田村] 사건
사건발생연월일		1923. 9. 4	1923. 9. 5~9. 6	1923. 9. 6	1923. 9. 6
제1심	실형판결	3명	25명	3명	8명
	집행유예	32명	11명	9명	
	무죄		1명	1명	
	합계	35명	37명	13명	8명
	판결일	1923. 11. 26	1927. 11. 14	1923. 11. 26	1923. 12(추정)
항소심	실형판결	1명	11명	3명	7명
	집행유예	2명	14명		1명
	무죄				
	합계	3명	25명	3명	8명
	판결일	1924. 3. 10	1924. 4. 30	1924. 4. 22	1924. 4. 30
상고심	실형판결	상고기각 1명	2명	상고기각 3명	7명
	집행유예		7명		
	무죄				
	합계	1명	9명	3명	7명
	최고형	징역 2년	징역3년	징역3년	징역 10년
	판결일	1924. 5. 26	1924. 5. 30	1924. 4. 22	1924. 8. 29

출전: 山田昭次(2003), 앞의 책, 102쪽; 山田昭次(2011), 앞의 책, 94쪽

이처럼 조선인 학살과 일본인 학살에 대한 판결은 명확하게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사법 처리의 실례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자료는 앞에서도 여러 번 기술한 군마현 후지오카 사건과 관련된 ‘판결문’을 예로 들기로 한다.⁴⁹⁾ 판결문은 ① ‘제1심 판결문’(1923. 12. 25), ② ‘항소심 판결문’(1924.

49) 「군마현(群馬縣) 후지오카[藤岡] 사건 판결문」은 故 금병동 선생님께서 제공해 주신

4. 30), ③ ‘대심 판결문’ (상고심. 1925. 5. 30), 세 종류다.

①의 ‘제1심 판결문’은 표지를 포함하여 총 159매로, 대량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피고인은 총 34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13명에 대해서는 살인 및 소요 사건으로, 21명에 대해서는 소요 사건으로 처리하여 검사 가시다 다다요시는 간여심리(干與審理)를 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후 기술은 대체적으로 ‘제1심 판결문’을 인용한 내용이다.

징역 5년-2명, 동 4년-4명, 동 3년-4명, 동 2년-3명, 동 1년 6개월-7명,
동 1년-5명, 동 10개월-4명, 동 8개월-4명, 무죄-1명 (총 34명)

그리고 이 가운데 4명은 제1심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간의 집행유예 판결이, 또 다른 4명에게도 역시 2년간의 집행유예 판결이 언도되었다.

‘이유’는 개략하면 다음과 같다.

1923년 9월 도쿄, 요코하마 및 부근 지역 일대를 강타한 격진(激震)은 여러 곳에서 화재를 일으켜 처참함이 극에 달하였다. 군마현하 역시 신에쓰선[信越線]을 경유한 피난자가 시시각각 증가하여 인심이 흉흉하였다. 당시 도쿄와 요코하마시의 혼란을 틈타 조선인 가운데 일부 불령한 무리가 방화·살인·강도·강간 등 범행을 저지르고, 또 음료수에 독약을 투입하려고 한 사실이 있어, 이를 친히 목격하거나 혹은 들어서 아는 몇 명인가의 피난민이 있고, 진재 후 상경한 다수의 군마현민은 열차가 통과한 신에쓰선의 각 역과 기타 등지에서 자주 이러한 내용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유언비어 또한 자주 전해져, 현하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조선인에 대해 극도의 불안을 느끼

자료로, 이 자리를 빌어서나마故 금병동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이 판결문은 ①제1심 판결문(1923. 12. 25), ②항소심 판결문(1924. 4. 30), ③대심 판결문(상고심. 1925. 5. 30),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고, 동월 3일경 이후 각 지역에서는 자경단을 조직하였는데, 피고인 등은 거주하는 同縣의 다노군[多野郡] 후지오카마치[藤岡町] 및 그 부근의 정(町)·촌(村)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자경단을 조직하여 각자 경비하였다.

제1, 동년 9월 5일 동군 후지오카 경찰서는 당시 조선인 등의 불령행위를 두려워하는 동 지방민이 혹시 불온한 행위를 할 것을 우려하여, 동군 신마치[新町] 부근에 거주하는 조선인 신명개(辛命介) 외 16명을 同署에서 검속 보호하는 동시에 그 행동을 조사하던 중, 동일 오후 8시경 다음에 기록한 피고인 등을 비롯하여 수백 명의 군중은 자경용의 죽창, 곤봉, 쇠갈고리[鷹口]⁵⁰⁾ 일본도, 수창(手槍) 혹은 엽총 등을 갖추고 동서에 밀려들어와, 막 근무 중이던 순사부장 고미야 쇼조[小宮正三] 외 6명에게 앞서 동서가 동군 오니시마치[鬼石町]의 자경단에서 인도한 조선인 한 명을 돌려보낸 것을 힐난한 후, 이와 같은 경찰서에 조선인을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조선인을(자경단에게-필자) 인도할 것을 재촉하였다. 또 지금 조선인이 몇 명 있는지 거짓말을 하지 마라, 도주하게 한 것은 무슨 일이라는 등, 제각각 부르짖으면서 전술한 경찰관 등에게 위협을 가할 기세를 보이더니 결국 시시각각으로 증가한 군중은 살기가 넘쳐 동서 유치장 부근의 판자벽을 파괴하고 동서 유치장 앞에 쇠도하여 감시 순사를 돌파한 후에 유치장 안에서 검속 중인 전술한 조선인 중 이재호(李在浩)를 제외한 기타 16명을 끌어내어 그들을 살해하고, 동 유치장 지붕을 파괴하는 등 폭행·협박을 마음대로 하고 소동을 일으켰다.

이상, 판결문 내용의 일부를 살펴보면 후지오카 경찰서에서는 조선인의 소위 불령행위를 두려워하여 지역 주민들이 소동을 일으킬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조선인 총 17명을 '검속'하여 두었는데, 수백 명의 지역 주민이 모여들어 후지오카 경찰서 유치장에 난입하여 17명의 조선인 중 이재호를 제외한 16명

50) 목조건물을 부술 때 사용하는 쇠갈고리로, 끝이 독수리나 매의 부리처럼 생겼으며, 건물 중 나무 부분을 찍어 앞으로 잡아당기거나 하여 부수는 도구다.

을 유치장 밖으로 끌고나와 살해했다는 내용이다.

이재호가 제외된 이유는, 처음에 광분한 군중이 조선인 17명 가운데 3~4명을 유치장 앞으로 끌어내어 살해한 후, 다시 조선인 2명을 사무실 내로 끌고가 도쿄에서 폭탄을 던지지 않았느냐, 방화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하였지만 조선인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자 밖으로 끌고나가 소방전망대 옆에서 죽였다. 그러자 유치장 안의 조선인들은 유치장 바닥 아래나 천정으로 숨었고, 이재호는 지붕을 뚫고나가 어딘가로 도주한 것이다. 그러나 이재호가 도주한 것은 확실하지만 그 후 행방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 이상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어쩌면 도중에 다시 사로잡혀 살해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⁵¹⁾

당시 살해 시 사용한 도구로는 앞의 판결문 내용에서 확인되는 죽창, 곤봉, 쇠갈고리, 일본도, 수창, 엽총 외에 가래[鍬], 목재, 나무막대기, 낫, 철사, 수 많은 돌, 목도, 빗장[心張樞], 철봉 등이 있다. 광분하여 경찰서마저 습격한 수백 명의 군중들의 살해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을 것인지 상상하기 어렵지만, 9월 5일의 후지오카 사건에는 여러 종류의 많은 몽둥이[棒]가 증거로 압수된 것으로 보아 타살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 아라이 시게루[荒井滋]의 경우는 “동서(同署) 뒤의 육지장(六地藏) 부근에서 소지한 일본도로 한 명의 조선인을 자르고, 계속해서 유치장 부근에서 앞의 일본도를 가지고 3명의 조선인의 등과 기타 부위를 찌른 후, 다시 다른 일본도를 가지고 한 명의 조선인 등을 찔렀는데, 모두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순서대로 그들을 살해하였다.”고 하였다. 빗장을 지닌 오하라 가게사요시[大原 袈婆吉]의 경우는 “동서 유치장 앞에서 소지한 빗장을 가지고 2명의 조선인의

51) ‘쵸도지[成道寺] 위령비’에서 그의 이름이 확인되지만 근거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목과 기타 부위를 난타하고, 다른 자와 협력하여 차례로 살해하였다.”고 하였다. 이 두 사람의 조선인 살해 내용은 판결문 뒷부분의 예심조서의 내용을 일부 인용한 부분에 더욱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여기에서 두려운 부분은, 피고인 모두가 처음에 경찰서 혹은 어느 장소에서 조선인 몇 명의 어떤 부위를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하다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살해하였고, 다음에 어디로 이동하여 또 어떻게 하였다는 것을 매우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과 도중에 자경단원 몇 명은 조선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계획한 후 실행했다는 것이다.

후지오카 사건 가해자들이 언제 처음으로 체포되었고, 심문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제1심 판결문이 1923년 11월 14일자 것으로 보아, 사건이 발생한 지 며칠 안 되어 체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보면, 당시 피고인들이 이처럼 담담하고 명확하게 조선인 살해 사실을 말했다는 것은 심문을 받을 당시에도 가해자들에게 조선인은 죽여도 괜찮다는 인식 혹은 의식이 강하게 남아 있었던 것을 말하여주는 것이 아닐까.

한편, 앞에서 확인한 9월 5일의 조선인 17명과 9월 6일의 조선인 1명을 포함한 총 18명 가운데 신명개와 이재호, 최석근 등 세 명의 이름이 확인되는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15명의 이름은 관련 판결문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제1심 판결문’ 서두에서, 후지오카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조선인을 ‘검속,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마치^[新町] 부근에 거주하는 조선인 신명개 외 16명을 후지오카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시켰다고 기록되어 있고, 판결문 중간 부분에는 분명 “9월 5일 아침 신마치에 거주하는 조선인 엽장수 3명, 토공(土工) 12명을 보호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동일 낮에 사로잡았다. 신명개 및 동일 저녁 무렵 스스로 보호를 요청한 최석근을 합쳐 함께 17명을 동서에서 보호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여기에서 후지오카 경찰서는 당시 검속한 조선인의 이

름, 거주지역, 직업 등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판결문에는 모두의 이름, 거주지, 본적, 나이 등을 확인할 수 없다. 더군다나 현재의 최고재판소인 당시 대심원 판결문의 ‘이유’의 ‘제일(第一)’에는 “……성명불명의 조선인 16명을 끌어내어 그들을 살해하고……”라고 기록되어 있다. 제1심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던 피학살 조선인 몇 명의 이름과 주소, 직업조차 최종 판결에 이르러서는 더욱 철저하게 은폐한 것이다. 이것은 무형으로 나타난 또 다른 형태의 ‘조선인 학살’이라고 할 수 있다. 사법부 판결문에서 이처럼 은폐한 사실은 당시 일본 정부 정책의 일환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후지오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9월 6일 정오 무렵에 동현 다노군 히노무라(日野村)의 자경단원과 동행하여 후지오카 경찰서를 찾아온 조선인 차봉조(車鳳祚)의 이름이 확인된다. 후지오카 경찰서에서는 그를 조사하여 불령선인이 아님을 확인하고 이를 지역 주민들에게 밝혔는데도 살해당했다.

그를(차봉조-필자) 뒤쫓아온 다수의 군중들이 경계선을 뚫고 동서의 문앞에 쇠도하여 차봉조를 인도할 것을 다그쳤다. 당시 군마현 보안관이었던 伴折之助가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하자 광분한 군중들은 오히려 그를 반박하였다. 동일 오후 5시에는 그 수가 수천 명을 넘기에 이르렀는데, 드디어 그날 밤 8시경 경종을 난타하는 자가 있어 (그 소리를 들은-필자) 군중은 매우 흥분하여 전날 밤과 같이 각종 흉기를 갖추고 갑자기 동서 및 동서와 연결해 있는 서장 관사 안으로 난입하여 각종 기물을 파괴한 후에 동서에 갖추어져 있는 장부를 꺼내어 태워 없앴다. 또 유치장 안의 검속 중인 전술한 차봉조를 동서 정문 앞의 십자로로 끌어내어 그를 살해하는 등 수많은 소동을 일으켰다.

결국 차봉조는 경찰서의 보호를 받으러왔다가 오히려 광분한 자경단을 비

롯한 민중 ‘수천 명’에게 살해당하고 만 것이다. ‘판결문’에는 약 30분간 경종을 난타한 자의 이름이 후가와 도요지로(府川豊治郎)로 나타나지만, 차봉조를 누가 죽였는지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유치장 쪽에서 잡아 끌어내어 매우 심하게 구타하였다”는 쓰즈키 쓰네조(鈴木常藏)의 예심조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9월 5일 밤에 발생한 사건과 비교할 때 차봉조는 그 때보다 더 많은 일본인 ‘수천 명’에게 물매를 맞아 죽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서 ‘수천 명’이란 숫자는 후지오카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노소와 부녀자를 제외한, 웬만한 청장년 대부분이 참가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9월 6일의 후지오카 사건은 전술한 바 있듯이 조선인 살해보다 경찰서 습격과 관사 및 기물 파괴 등을 중요범죄로 처리하여 판결한 사건이었던 만큼 차봉조 살해에 대해서는 더욱 참담함을 느낄 뿐이다.

이상으로 9월 5~6일에 발생한 후지오카 조선인 학살 사건에서 확인된 조선인은 모두 17명으로, 확인된 피학살 조선인의 성명은 도주한 이재호를 제외한 신명개와 최석근, 차봉조 3명에 불과하다.

후지오카 조선인 살해사건의 총 17명의 조선인 이름은 후지오카 죠도지(藤岡 威道寺) 묘지 내에 건립되어 있는 ‘위령비’ 뒷면에서 확인된다. 새겨져 있는 순서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이 비는 1957년 11월에 세워진 것이다.

그런데 ‘죠도지 위령비’에서는 판결문에 나타나 있는 신명개, 최석근, 차봉조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대신에 도주하였다는 이재호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 후지오카 사건 피살 조선인명: ‘죠도지 위령비’

조수규, 병상곤, 정황곤, 이방수, 김성동, 이재호, 이상호, 김산선,
김두성, 김동원, 조정원, 김철현, 남성규, 김백출, 김인유, 허성일, 김동원

다음의 <표 3-2>는 아직 일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東京日日新聞》에 게재된 최승만의 “극웅필경(極熊筆耕)”의 내용 일부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이름과 더불어 본적지와 함께 나이도 확인된다. 이 자료는 니시자키 마사오[西崎雅夫]가 정리한 것을 필자가 표로 재작성한 것이다.⁵²⁾

<표 3-1>에서 밑줄이 그어진 것은 <표 3-2>에서 그 이름이 확실하게 확인되거나 비슷한 이름으로 확인된 사람이며, 밑줄이 없는 이름은 <표 3-2>에서 확인되지 않는 이름이다. 한편 <표 3-2>의 옆으로 누운 이름은 <표 3-1>에서 확인되지 않는 이름이며 나머지는 확인된 이름이다. 그리고 <표 3-2>에서도 신개명과 최석근, 차봉조의 이름은 확인되지 않으며, 그 대신에 도주하였다는 이재호는 이름이 ‘쵸도지 위령비’에서처럼 확인된다.

이처럼 「제1심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3명의 이름과 <표 3-1>, <표 3-2>

<표 3-2> 후지오카 사건 피살 조선인 신원 확인

이름	연령	본적지	이름	연령	본적지
金東元	27	慶北禮泉郡甘泉面敦山洞	趙秀九	27	慶南晉州郡晉州面中安洞
金喆鎭	41	慶北尙州郡化北面東安洞	金東仁	26	本籍不詳
趙庭遠	43	상동	李相浩	26	慶北榮州郡榮山面浦洞
金白出	29	상동	苗桐坤	27	慶北淸道郡淸道面合川里 「司法省」では芮相坤
南戌圭	38	상동	金周洪	28	상동
金仁洙	22	慶北尙州郡陽南面石村里	鄭龍伊?	22	本籍不詳
許日成	25	상동	鄭貴鳳	25	慶北淸道郡淸道面合川里
金聲來	34	慶北榮州郡榮山面浦洞	泉曲野	24	“ 蔚山郡能村面
金斗星	23	“ 官峴洞			

출전: 崔承萬(1923. 10. 21), “極熊筆耕”, 《東京日日新聞》

52) 專修大學 田中正敬 제공, 「關東大震災朝鮮人犠牲者氏名判明リスト」(2009. 5. 8, 현재 조사, 西崎雅夫 작성)

에서 중복된다고 보여지는 이름 13명은 후지오카 사건의 피학살 조선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름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희생자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하여 향후 보다 세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그동안 학계에서 피살 조선인의 신원을 그나마 확인할 수 있는 후지오카 사건의 피학살 조선인 17명의 신원조차도 이처럼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살해당한 후의 「판결문」에서조차 철저하게 외면당한 피학살 조선인의 신원 규명의 어려움은, 그 유골매장 장소 등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현재도 탈아론으로 거듭 재생산되는 작금의 일본 정부를 바라보며, 부디 일본이 건설한 입아론을 세워 아시아 제국과 상호 협조하는 평화로운 아시아를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IV. 맺음말

기존 연구에 대한 비교·검토 작업의 일환으로 시도된 본 연구는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되어온 연구 성과물 고찰을 통한 새로운 문제점을 제시해주었다. 또한 새로운 자료의 소개는 관련 자료가 일본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 소장되어 있을 가능성도 시사해주어 연구에 작은 힘을 실어주었다고 볼 수 있다. 「판결문」 등의 자료는 여전히 비교·분석 대상으로 폭넓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관련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던져주고 있다.

그러나 관동대진재 당시 조선인 학살에 관한 연구는 문서 연구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문서 자료를 통한 연구는 수십 년에 걸친 치밀한 연구 실적이

쌓여 있지만, 피학살 조선인 수와 시신 매립장소 및 이장장소 그리고 그들의 신원은 거의 밝혀져 있지 않다. 이 부분은 일본 정부의 관련 정보 공개와 제공이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지만 작금 일본 정부의 행태로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바로 현지 실태 조사다. 그러나 이 방법은 많은 시간과 인력 투입이 필요한 까닭에 개인적 차원에서의 실행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팀이 조직되어야만 비로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 학계에서의 연구는 여전히 미진한 상태이고 실태 조사 등 세밀한 부분에 관한 조사·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거의 없는 것이 현상이라고 보면, 앞의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결국 한국 학계의 관련 연구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결코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이다.

재난을 이용해 타민족을 학살한 예가 세계 그 어느 역사에 있을까. 사건 발생 9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의 근대사와 재일조선인사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역사로서, 향후 학계를 비롯하여 정부 차원의 많은 관심을 기대해 본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다나카 마사타카[田中正敬]

한국근대사 전공, 센슈대학 교수

대표논저로는 『移動と定住の文化誌』(2011, 彩流社), 『地域に學ぶ關東大震災』(專修大學關東大震災史研究會編, 2012, 日本經濟評論社), 「船橋における關東大震災朝鮮人虐殺と在日朝鮮人による追悼運動について」(2010, 『專修史學』 48), 「關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とその犠牲者をめぐって」(2011, 『移動と定住の文化誌』, 彩流社) 등이 있다.

전후 일본의 역사교육과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센슈대학 다나카 마사타카

I. 머리말

필자에게 주어진 주제는 역사교육의 문제에 관한 분석이지만, 필자 자신은 이제까지 이러한 연구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발표를 앞두고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첫째, 현행 역사교과서의 분석, 이어 전후의 역사교과서 중에서 관동대지진 당시에 조선인 학살이 언제부터 등장하고, 교과서 기술이 어떻게 변천되어갔는가를 제시한다. 둘째, 역사교육의 주체인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원이 그 지역의 조선인 학살을 조사하는 동시에 희생자의 추도를 행해온 예를 소개하고, 그러한 노력이 연구의 진전과 교과서 기술의 발전에 기여하였음을 서술하고자 한다. 또한 역사교육과 관련된 현재의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II. 역사교과서 분석

일본의 역사교과서에는 제약이 있다. 하나는 문부과학성의 검정시에 수정을 강요받고 있는 점이다. 근년에는 '영토문제'에 관한 기술을 요구받았다. 또 다른 하나는 교과서의 쪽수가 사전에 거의 결정되어 있고, 그 분량의 제약 안에서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교과서 집필자는 이러한 제약조건하에서 기술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이 쓰고자 하는 바를 교과서에 기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교과서를 채택하는 각 지구의 동향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우파 교과서를 지지하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정치적인 압력을 강요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극관계(對極關係)에 있는 한 '좌파'라고 공격받는 교과서는 채택되지 않게 된다. 동경서적이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지만, 도산에 빠지는 원인으로 일본의 아시아 침략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다음으로 현행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기술에 대해 살펴보자(자료 A). 다만 자

	流言	虐殺의 主體	朝鮮人	中國人	日本人	表現	人數
育鵬社	×	自警團 등	○	×	社會主義者	殺害	×
教育出版	○	自警團·警察· 軍隊	○	○	社會主義者· 勞動運動家	살해된다	많은
清水書院	○	警察·軍隊· 自警團	○	○	日本人	虐殺	數千人
自由社	×	×	×	×	×	×	×
帝國書院	○	住民	○	○	社會主義者	살해하다	×
東京書籍	○	×	○	○	社會主義者	살해 되었다	많은
日本文教 出版	住民·警察이라 明記	自警團·軍隊· 警察	○	×	社會主義者· 勞動組合員	殺害	數千人

료에는 고등학교 교과서 기술도 실었지만, 언급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하기로 한다. 고등학교 교과서의 기술차이와 메이세이샤(明成社)의 기술이 이질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고 싶다.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1996년에 발족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계열의 교과서가 문제시되었다. 후소샤(扶桑社)에서 출판되었지만, 그 후 모임의 분열을 거쳐 현재 자유샤(自由社)와 이쿠호샤(育鵬社) 2개 회사에서 출판되고 있다. 자유샤는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유일한 중학교 역사교과서다. 이쿠호샤도 중국인 학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학살된 조선인 희생자의 수를 상기시키는 문언을 넣지 않았다. 또 군대가 학살을 자행한 것도 언급하지 않았다.

자유샤가 조선인 학살을 기술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쿠호샤도 학살의 사실을 그다지 겉으로 나타내지 않았다. 특히 국가의 관여가 알 수 없이 기술이 되어 있다. '학살'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다.

학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교과서는 이 외에도 많이 있다. 또 학살한 주체를 기술하지 않은 교과서, 군대의 관여를 기술하지 않은 교과서는 이 외에도 있다. 희생자 수에 대해서도 기술하지 않은 교과서, '많은'이라는 표현, '수천인'이라는 표현 등 다양하다. 문제는 '새역모' 계열의 교과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총 망라해 기술하고 있는 교과서도 있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한결같이 기술되어 있는 '혼란 속에서'라는 표현이 그것이다. 이것은 지진의 피해가 컸던 지역에서 건물의 붕괴와 화재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했다'라고 입을 수 있지만, 실제로 지진의 피해와 학살이 일어났던 지역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한 예로, 도쿄 동쪽에 있는 지바현(千葉縣)의 마을 주민이 쓴 일기를 살펴보기로 한다.

1일 西區의 A씨와 장기를 두다. 정오 대지진이 일어난다. 여러 차례 계속 해서 일어났다. 오후 2시경 집으로 돌아오다. 돼지가 새끼를 낳아서 보고 있었다. 변함없이. 점심을 먹고 또 A씨에게 가서 장기를 두다.

3일 밤이 되어 동경대화재, 관청에서 불량한 조선인의 폭동 경계를 요하는 내용의 통지가 있었다. 재향군인단, 청년단이 하다.

7일 오후 4시경, 파라크(수용소-인용자 주)로부터 조선인을 내출 테니 데 리러오라는 연락이 있다고 하여, 급히 집합해 주망자에게 받으러 가 기로 했다. 밤중에 조선인을 받으라며 각구에 배당하고, [...] ○○○ 와 공동으로 3명을 맡아, 절 안의 정원에 보초를 서고 있다.

8일 또 조선인을 데리러가다. 9시경에 이르러 2인을 받아오다. 모두 5인 [...] 에게 구덩이를 파게 하여 얹히고 목을 베기로 결정. [...] 구덩이 속에 넣어 묻고 작업 끝. 모두 지친 것 같고, 모두 여기저기서 잠을 자 다. 밤이 되자 또 각자 담당구역의 경계선을 친다.

9일 밤에 또 전부 출동, 12시 지나 또 조선인 1인을 붙잡아왔다는 소식이 있다. 곧바로 앞쪽에 구덩이가 파져 있어 끌고가서 등불 아래에서 베 었다. 『이유없이 살해된 사람들』

9월 1일에 이 일기의 작자는 지진 후에 돼지를 돌보고, 장기를 두고 있었 다. 지진 후에는 변함없이 한가로운 정경이다. 그런데 3일이 되면 관청에서 조선인을 경계하라는 통지가 오고 마을 분위기가 일변한다. 그리고 9월 7일 이후 인근의 군대 시설(수용소)에 있던 조선인 중에서 군대가 선별하여 조선인 총 18명을 마을 사람들에게 인계하여 죽였다. 이 사람이 있던 마을에서는 6명 을 살해했다.

마을의 분위기를 변하게 한 것은 지진이 아닌 행정명령이었고, 조선인을 죽였던 것은 군대의 명령이었다. 학살의 전모와 개개의 학살을 발생시킨 구조 는 아직도 충분히 파악되고 있지 않다.

III. 전후 역사교육과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조선인 학살의 해명은 재일한국인·조선인 연구자를 비롯한 역사 연구자와 지역에서 청취해온 소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사와 지역의 어머니들, 시민단체가 주도하여 왔다.

역사연구의 성과로서 1963년에 출판된 『현대사자료6 관동대진재와 조선인(關東大震災と朝鮮人)』(みすず書房)은 중요한 자료를 수록하고, 연구를 크게 발전시킨 계기가 되었다. 저자의 한 사람인 강덕상(姜德相) 씨는 연구를 진행한 이유로 “필자가 재일한국인이고, 이 문제가 한국인 백년의 피차별 압박의 원점이자 특히 ‘투독방화(投毒放火)’범 오명의 명예회복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虐殺再考, 戒嚴令이 없었다면, 『震災・戒嚴令・虐殺』, 三一書房』라고 기술하고 있다. 강씨와 함께 상기의 자료집을 정리한 금병동(琴秉洞) 씨와 『관동대지진에서 조선인 학살의 진상과 실태』의 집필 중심에 있었던 박경식(朴慶植) 씨에게서 학살을 일으킨 국가와 민중의 역할이 모두 명확히 밝혀지게 되었다. 또 위의 책 속에서 당시의 일을 아는 희생자 동포에게서 증언을 청취한 것도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지역마다 조사의 시기는 다르지만, 지역 중에서 역사교육에 종사하고 있던 중학교·고등학교 교사들도 실태해명에 뛰어들었다. 사이타마현(埼玉縣)의 학살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교사였던 이시다 다다시(石田貞) 씨가 조사의 중심에 있는 한 사람으로, 1974년에 『감추어 있던 역사』를 출판하였다. 동경의 시모마치(下町) 지역의 학살에 대해서는, 소학교 교사인 기누타 유키에(絹田幸恵) 씨가 중심이 되어 1980년대부터 조사를 계속해 1992년에 『바람이여 봉선화의 노래를 실어라,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로부터 70년』을 출판했다. 일조협회(日朝

協會) 등 시민단체도 1960년대부터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성과로서 전술한 『감추어 있던 역사』와 『민족(民族)의 가시(棘) 관동대진재(關東大震災)와 조선인학살(朝鮮人虐殺)의 기록』(1973)이 출판되었다.

이러한 시민단체와 역사교육 교사가 만든 단체(역사교육자협의회 등)는 공동으로 활동하면서 관동대지진 50주년에 추도비를 세우고, 70주년과 80주년에 집회를 개최하였다(90주년 집회도 준비 중).

이상과 같이 연구자 이외에도 지역의 교사를 비롯한 시민이 각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착수했던 것이 조선인 학살 조사연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지역의 발굴’이라는 역사교육자협의회의 슬로건이 상징하듯이 교사들이 지역의 역사에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 사람이 아니면 가해자의 입장에 있는 주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학살의 실태를 밝히고 희생자를 추도하는 일이 조사자의 목적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들 조사는 희생자의 추도와 함께 행해졌다.

그 예로서 앞에 수록한 일기를 발굴한 지바(千葉)의 ‘지바현의 관동대진재와 조선인희생자추도·조사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한다. 실행위원회가 조사한 지역에서는 크게 2개의 사건이 일어났다. 그 사건중 하나는 나라시노(習志野)의 기병연대 주둔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다.

후나바시(南橋)의 송신소는 지진피해를 면한 시설로, 9월 3일 아침에 내무성 발(內務省發) 유언(流言)을 전국에 무전으로 보냈다. 송신소장은 인근의 주민을 무장해 경계를 지시했다. 동경에서 피난온 조선인과 후나바시의 철도건설을 하고 있던 조선인 노동자가 경계하고 있던 주민들에게 살해당했다. 조선인 학살 현장 가까이에 있는 지역의 절에서 ‘법계무연탑(法界無緣塔)’이라는 비를 세웠는데, 건립의 목적도 희생자의 추도라는 사실도 공식적으로 알리지 못한 채 추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되고, 해방 후 1947년에는 학살의 사실을 명

기한 ‘관동대진재희생동포위령비(關東大震災犧牲同胞慰靈碑)’를 건립했다.

나라시노의 기병연대는 대지진 직후에 도쿄 방면 등으로 출동해서 조선인을 학살했다. 그 주둔지 가까이에는 9월 5일 조선인 ‘보호’를 위해 수용소가 설치되고 조선인이 압송되어왔는데, 수용소에서는 헌병이 사상조사를 하고, 수상하다고 판단된 조선인을 군대가 살해하고, 또 인근의 주민에게 살해하게 했다. 일기는 인근의 주민이 쓴 것이다. 이러한 학살은 이 지역 이외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교사들의 조사는 후나바시(船橋)에서는 1974년, 나라시노에서는 1976년에 시작되었다. 이 두 지역의 조사를 한 사람들이 모여 1978년에는 실행위원회가 만들어졌다. 나라시노를 조사한 것은 중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만든 향토사 연구회(郷土史研究會)였다. 그들은 당초 지역의 옛 가도(街道)를 조사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마을에서 조선인 학살이 있었음을 알았다. 나라시노의 중학교 교사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아베[阿部] 씨(학살의 증언자)의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은, 피부로 느낄 정도로 공포와 분노를 자신들의 직감으로 받아들여려고 했다. “밤에 공부하고 있으면, 조선인이 뒤에 서서, 더 밝혀 달라, 더 밝혀 달라고 말하는 느낌을 받는다.”

실제로 그들의 활동을 지지했던 것은 이 공포와 분노였다. 그리고 나를 몰아세운 것도 똑같은 분노였다. 우리들은 이것이 무엇에 대한 공포와 분노였는가를 추구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실행위원회(1983), 『말없이 살해된 사람들』].

그들은 일기에 적은 희생자의 유골을 찾아나섰지만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때 주민들은 그 지역 사찰 주지에게 탐(塔)을 세워달라고 해 몰래 학살현장

에서 위령제를 지냈다. 이것은 주민도 주지도 실행위원회에 알리지 않았다.

다만 학살현장을 발견하고 주민과의 신뢰관계가 구축되어가는 중에 진상이 밝혀지게 되었고, 1983년에는 조사결과가 『이유없이 살해당한 사람들』이라는 책으로 정리되어 실행위원회와 주민이 공동으로 위령제를 행하기에 이르렀다. 실행위원장인 다카하시 마스오[高橋益雄] 씨는 이 위령제에서 『이유없이 살해당한 사람들』을 출판하는 일, 추도를 그 마을 주민과 함께 하는 일, 그리고 장례에는 시신을 발굴해서 정성을 다해 장례할 것을 결의했다. 그러나 이것이 실현된 것은 1998년, 무릇 15년의 세월이 필요했고 위령비가 완성된 것은 그 이듬해였다.

IV. 맺음말

이상과 같이 지역활동에서 밝혀진 것과 연구자의 활동이 교과서 기술을 변하게 하는 것이다. 과문인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에서 가장 빨리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1956년 발행한 실교출판(實敎出版)이었는데, 학살의 기술은 노동운동 관련 기술 가운데 묻힌 것에 불과하다. 다른 교과서에서는 1970년대, 대지진부터 50년을 전후한 시기에 학살 관련 기술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강덕상(姜德相) 씨 등의 활동부터 10년 전후, 지역에서의 활동과 거의 동시기였다.

또 연구의 진전은 당연히 교과서 내용의 변화로 이어졌다. 기술이 대폭적으로 변한 동경서적의 예를 들어 보자(자료 C). 1978년 발행된 교과서에서는 관동대지진이 경제에 타격을 준 것만을 서술하고, 학살에 관한 기술은 전혀 없다. 1983년 교과서에서는 처음으로 학살에 관한 기술이 나오는데, 본문에서

가 아닌 칼럼 중에서 나온다.

그 후 기술이 조금씩 확대되어가는데, 크게 변한 것은 1995년의 교과서다. 이러한 배경에는 1993년에 관동대지진 70주년 기념집회가 열렸고 이어서 지역의 학살을 해명하는 출판물이 간행된 사정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교과서 집필자에 70주년 집회 관계자와 관동대지진 연구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술에서는 학살을 행한 주체와 함께 학살된 장소 등도 있다. 더욱이 2003년 교과서에서는 관동대지진에 이르는 전사(前史)로서 조선인의 일본 도항사가 서술되고, 학살의 배경으로 민중의 배외적 의식이 있었다고 추가적으로 기술되었다. 이제까지의 재일조선인에 관한 기술은 관동대지진과 관련해서였고, 재일조선인사의 흐름에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에 비하면 진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관동대지진을 계기로 일본 사회가 전시기(戰時期)로 이행한다는 전망을 나타냈다는 특징도 있다.

이상과 같이 관동대지진에 관한 기술은 역사연구와 역사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의해 사실이 밝혀졌고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관동대지진 관련 기술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살해인가 학살인가 하는 용어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술의 흐름 속에서 검토하는 일이 중요하다.

최근에 요코하마시(横浜市)와 도쿄도(東京都)가 만든 2개의 부독본(副讀本)에서 관동대지진 기술이 문제가 되고있다. 도쿄도 교육위원회가 작성한 고등학교 일본사 부독본, 『에도(江戸)에서 도쿄(東京)로』의 기술 개변에 대해서, 2013년 1월 25일자 《아사히신문(朝日新聞)》(도쿄지방판)에 “부독본, 기술변경 관동대지진의 조선인 ‘학살’ → ‘생명을 앗아갔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구로다구(墨田區) 요코아미마치(横網町) 공원의 ‘관동대진재조선인희생자추도비(關東大震災朝鮮人犠牲者追悼碑)’의 기술이 2012년도까지는 “대지진의 혼란 속에서 다수의 조선인이 학살되었다.”에서 “비(碑)에는 대지진의 혼란 속에서 ‘조선인의【가】 존

엄한 생명이【을】앗아갔다'로 기술되어 있다.”로 개변되었다(더구나 都教委에 따르면 이 인용은 잘못이고【 】내가 옳다).

이것은 “도교위고등학교교육지도과(都教委高等學校教育指導課)가 부독본의 ‘오해를 초래할 표현’을 재검토”한 결과이고, “담당자는 ‘여러 설이 있고 살해방법이 모두 학살이라고 우리들로서는 판단할 수 없다. (학살의)언어로부터 잔학한 이미지도 환기한다’고 하고 있다. 또 부독본을 감수한 전문가에게는 상담하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들로서는 판단할 수 없다.” 도교위(都教委)가 어떻게 기술을 재검토하고 문언을 변경할 수 있을까. 기술에 책임을 지는 감수자에게 무단으로 기술을 변경하는 것은 절차의 문제다. 역사적 사실을 간단한 비(碑)의 설명과 인용문으로 바꾸고, 조선인의 생명을 빼앗은 일이 재해인가 인간인가조차도 알 수 없게 한 이 문장이야말로 ‘오해’를 초래하는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설명’하든지 결과적으로 이 기술은 ‘잔학’ 그 자체인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고 국가와 민중의 가해책임을 애매하게 하는 수정주의적 역사관에 적합한 서술이다. 대지진부터 90년이 지나 기억은 점점 풍화되고, 희생자의 이름도 유족도 모르는 채 있는 것이 문제다. 이 일이 사실의 왜곡을 쉽게 하는 것이다. 다만 군대·경찰·민중 3자가 조선인 학살을 조직적으로 행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수정론자들은 희생자 수 등 미확정된 부분을 갖고 학살의 사실이 애매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시하며 자료비판 없이 실증적인 ‘논증(論證)’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조선인 희생자 수를 확정하는 일은 지금으로는 불가능하다. 수정론자들은 당시 조선인이 발표한 희생자 수를 애매한 수라고 비난하고, 학살 그 자체를 부정하려고 한다. 그러나 야마다 쇼지(山田昭次)의 『관동대진재시(關東大震災時)의 조선인학살(朝鮮人虐殺)－그 국가책임과 민중책임』(2003, 創史社)에서도 지적하듯이 이것은 관현이 조

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했기 때문이다. 대체로 조사는 조선인이 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일까. 정부가 책임을 갖고 조사해 희생자의 이름을 확정하고 유족에게 사죄와 보상을 한다면, 희생자 수는 판명될 수 있다. 희생자 수의 ‘애매함’은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을 상징한다. 이것이 진상규명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들이 직면한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자료 A. 현행교과서의 기술

[중학교역사]

- 伊藤隆 외 14명, 『中學社會 新しい日本の歴史』(育鵬社, 2011년 검정 완료, 2012년 발행)
교통과 통신이 차단된 혼란 속에서 조선인과 사회주의자가 주민들이 만든 자경단 등에게 살해되었다는 사건도 일어났다(199쪽).
- 笹山晴生, 竹内裕一, 中村達也 외 36명, 『中學社會 歴史 未來をひらく』(教育出版社, 2011년 검정 완료, 2012년 발행)
혼란 속에서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 등의 유언비어가 퍼지고 주민이 조직한 자경단과 경찰, 군대에 많은 조선인과 중국인이 살해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사회주의자와 노동운동가 등에게도 살해된 사람이 있습니다(203쪽).
- 三谷博 외 9명, 『新中學校 歴史 日本の歴史と世界』(清水書院, 2011년 文部科學省 검정 완료, 2012년 발행)

또 조선인 학살사건 외에 군인, 경찰에 의한 사회주의운동가 살해사건도 일어났다(219쪽).

그러나 많은 일본인은 조선인에 대한 차별의식을 갖고 그들을 위협한 사람들로 보고 있었다. 1923년 관동대지진 후의 혼란 속에서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문을 믿은 일본인이 조선인을 학살한 사건이 관동 각지에서 발생했다①.

① 이때 경찰, 군대, 자경단에 의해 살해된 조선인은 수천 명에 달했다. 또 조선인으로 오해받아 살해된 일본인과 중국인도 있었다(221쪽).

- 藤岡信勝 외 13명, 『中學社會 新しい歴史教科書』(自由社, 2011년 文部科學省 검정 완료, 2012년 발행)

(기술 없음)

- 黒田日出男 외 9명, 『社會科 中學生の歴史 日本の歩みと世界の動き』(帝國書院, 2011년 文部科學省 검정 완료, 2012년 발행)

혼란 속에서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고, 자경단을 만든 주민이 조선인과 중국인들을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사회주의자도 이 혼란에 편승되어 살해되었습니다(197쪽).

- 五味文彦, 戸波江二, 矢ヶ崎典隆 외 46명, 『新しい社會 歴史』(東京書籍, 2011년 검정 완료, 2012년 발행)

역사의 기억 관동대지진

혼란 속에서 조선인과 사회주의자가 폭동을 일으켰다는 유언비어가 퍼지고 많은 조선인, 중국인과 사회주의자 등이 살해되었습니다(197쪽).

- 鈴木正幸, 藤井讓治 외 13명, 『中學社會 歷史的分野』(日本文教出版, 2011년 김정 완료, 2012년 발행)

이 혼란 속에서 조선인이 우물에 독극물을 넣었다는 악선전이 주민과 경찰에 의해 퍼지고, 주민이 조직한 자경단 혹은 군대, 경찰이 수천 명의 조선인들을 살해했습니다. 사건의 배경에는 돌발적 재해에 따른 정신적 혼란, 조선인에 대한 차별의식 등이 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군인이 사회주의자와 노동조합원을 살해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217쪽).

[고교일본사]

- 靑木美智男 외 12명, 『日本史B 改訂版』(三省堂, 2007년 文部科學省 검정 완료, 2008년 발행)

이 혼란 속에서 재류(在留)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키려고 한다든가, 우물에 독극물을 넣었다든가 하는 유언비어가 퍼졌다. 그리고 계엄령하에서 군대, 경찰, 제국재향군인회 등이 조직한 자경단도 가세하여 무저항의 6천 명이 넘는 재류조선인이 학살당했다⑤. 또 무정부주의(아나키스트)를 외치던 오스기 사카에(大杉榮)와 노동조합 간부가 군대의 손에 학살된 사건과 재류중국인의 학살사건도 일어났다⑥.

⑤ 1925년에 재류조선인은 약 13만 명이 넘었고,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이 결성되어 노동운동도 활발해지고, 1927년에는 효고현(兵庫縣)에서 민족차별 철폐 등을 내건 파업이 일어났다.

⑥ 오스기 사카에(大杉榮)와 이토 노에(伊藤野枝), 조카인 다치바나 소이치(橘宗一)는 헌병대위인 아마카스 마사히코(甘粕正彦) 등에게 살해되었다(甘粕事件). 가와이 요시토리(川合義虎)와 히라사와 게이시치(平澤計七) 등 사회주의자는 도쿄의 가메이도(亀戸) 경찰서 내에서 군대에 살해되고(龜戸事件), 더욱이 재류(在留)중

국인 노동자의 구제조직인 교일공제회(僑日共濟會)에서 활약하고 있던 왕희천(王希天)이 살해되었다(295쪽).

- 加藤友康, 荒野泰典, 伊藤純郎 외 8명, 『高等學校 日本史B 改訂版』(清水書院, 2007년 文部科學省 검정 완료, 2008년 발행)

1923년 9월 1일, 정치·경제의 중심지인 도쿄·요코하마에 돌연 엄습한 관동대지진②으로 일본 경제는 커다란 영향을 받고(지진공황), 부흥을 위한 물자의 수입증가로 대전 중에 비축한 외화는 유출되었다.

② 전교 12만 호, 전소 45만 호, 사망·행방불명자 14만 명, 손해 55억 엔 이상이라고 하는(全壞·全燒 29만 호, 사망·행방불명 10만 5천 명이라고도 한다.) 이 혼란 속에서 “조선인이 우물에 독극물을 넣었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난무했는데, 이를 진실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죽창을 들고 일본도 등으로 무장하고 통행인을 검문하여 조선인을 습격했다. 살해된 조선인은 약 6천 명이라고도 한다. 또 중국인도 피해를 입었다. 그 외에 무정부주의자와 노동운동 활동가도 경찰과 군대에 살해되었다(201쪽).

- 外園豊基 외 6명, 『高等學校 日本史A 人・くらし・未來』(第一學習社, 2012년 검정 완료, 2013년 발행)

1923년(大正 12) 9월 1일, 관동지방에서 대지진이 일어나 도쿄·요코하마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사망·행방불명인 자가 10만 명을 넘는 등 큰 피해와 혼란이 발생했다(관동대지진). 이 중에서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하는 소문이 퍼져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군대, 경찰, 자경단의 손에 학살되었다. 또 노동운동 지도자와 무정부주의자인 오스기 사카에·이토 노에 등이 군대, 경찰 등에 살해되었다(83쪽).

- 君島和彦, 加藤公明 외 14명, 『高校日本史A』(實教出版, 2012년 검정 완료, 2013년 발행)
대지진 직후 화재가 게이힌(京浜)지방을 봉괴상태에 빠트리고, 혼란 속에서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민족적 편견에 찬 소문이 퍼져 군대, 경찰
과 자경단이 약 6,600명의 조선인과 약 700명의 중국인을 학살하였다. 또
무정부주의자인 오스기 사카에 · 이토 노에가 헌병대위 아마카스 마사히코
에게 살해되고(甘粕事件), 노조운동 지도자 10명이 군대와 경찰에 살해되었다
(龜戸事件).
(99쪽, 기타 「關東大震災와 朝鮮人勞働者」에서 대지진 이후 多摩川 주변의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칼럼
이 있다).

- 脇田修, 大山喬平 외 14명, 『日本史B 新訂版』(實教出版, 2007년 검정 완료, 2008년 발행)
너무나 커다란 피해에 사람들은 패닉상태에 빠지고 조선인이 우물에 독극
물을 넣었다든가 폭동을 일으켰다든가 하는 유언비어가 퍼져, 자경단을 조
직한 민중과 군대 · 경찰의 손에 수천 명이 넘는 조선인이 학살되고①, 많은
중국인이 살해되었다. 또 무정부주의자인 오스기 사카에, 이토 노에 등이
아마카스 마사히코 헌병대위에게 살해되고(甘粕事件), 노동운동 지도자 등 10
명이 경찰서에서 군대에 살해되는(龜戸事件) 사회운동에 대한 탄압사건도 일
어났다.

① 병합 후, 조선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된 조선인이 건너와 강한 민족차별하
에서 토목, 탄광노동 등에 종사하고 있었다(319~320쪽).

- 三宅明正 외 18명, 『日本史A 現代からの歴史』(東京書籍, 2012년 검정 완료, 2013년 발행)
사회적 혼란과 불안 속에서 조선인과 사회주의자가 폭동을 일으켰다고 하
는 사실무근의 유언비어가 퍼졌다. 경찰, 군대, 행정이 유언비어를 적절히

처리하지 않은 일, 더욱이 신문이 언론보도를 자극적으로 내보낸 것이 민중의 불안을 증대해 유언비어가 확산되도록 했다.

관동 각지에서는 유언비어를 믿은 민중이 자경단을 조직했다. 자경단은 재향군인회②와 청년단 등 지역단체를 중심으로 경찰의 압력으로 조직되었다. 이들은 도검과 죽창으로 무장하고 통행인을 검문하고 조선인을 단속하려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수도권으로 일하러 온 수많은 조선인과 중국인이 군대와 자경단에게 학살되었다③. '조선인폭동' 설은 대지진 와중에 소멸되었으나 학살사건이 일어났던 것은 민중 속에 뿌리 깊은 조선인, 중국인 멸시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대지진의 혼란 속에서 노동운동가와 사회주의자들에게도 폭행이 가해지고, 무정부주의자인 오스기 사카에 등이 살해된 사건도 일어났다.

② 현역 이외의 병역경험자의 지역조직

③ 조선인 약 6천 명, 중국인 약 8백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114쪽).

- 渡部昇一, 小堀桂一郎, 國武忠彦 외 20명, 『最新日本史』(明成社, 2012년 文部科學省 검정 완료, 2013년 발행)

1923년(大正 12년) 9월 1일, 지진이 관동일원을 덮쳐 게이힌(京浜)지대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關東大震災).

대지진에 따른 피해는 전과 12만 호, 전소 45만 호, 사망·행방불명자 10만 수천 명에 달했다. 혼란 중에서 무정부주의자인 오스기 사카에와 이토 노에가 헌병대위 아마카스 마사히코에게 살해되었다. 또 조선인에게 불온한 움직임이 있다는 유언비어에 영향받은 자경단이 조선인을 살상하는 사건이 빈발했다. 한편으로는 조선인을 보호한 민간인과 경찰관도 있었다. 또 정부는 계엄령을 내려 사태 수습에 나섰다(243쪽).

- 鳥海靖 외 3명, 『現代の日本史』(山川出版社, 2012년 文部科學省 검정 완료, 2013년 발행)
대혼란 속에서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악소문이 퍼지고, 주민이 조직한 자경단의 손에 다수의 조선인이 살해되었다③. 또 사회주의자와 노동운동가가 군인과 경찰관에게 살해된 사건도 일어났다④.
③ 일본의 한국 병합 이후 살길을 찾아 조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 내지로 이주하고 있었다.
④ 무정부주의자인 오스기 사카에와 그의 처인 여성운동가 이토 노에가 헌병에게 살해된 것도 관동대지진 직후의 일이었다(100쪽).
- 石井進, 五味文彦, 笹山晴生, 高埜利彦 외 9명, 『高校日本史 改訂版』(山川出版社, 2007년 文部科學省 검정 완료, 2008년 발행)
이 혼란 속에서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유언비어가 퍼지고, 정부도 계엄령을 내렸다. 그러나 공포심을 느낀 민중과 일부 관헌에게 조선인 수천명, 중국인 약 2백 명이 학살되었다. 더욱이 사회주의자와 노동운동가 등이 경찰관과 군인에게 살해되었다(241~242쪽).

자료 B. 고교일본사에서 학살 관련 기술의 개시와 내용(주요 교과서 한정)

- 西岡虎之助, 『高校 日本史』(實教出版, 1955년 검정, 1956년 발행)
이듬해 관동지방에 대지진이 일어나고, 인적·물적 손해는 막대했다. 그리고 이 혼란에 연루되어 무정부주의자와 사회주의자, 조선인이 박해를 받은 일이 일어났다. 그러나 사회운동은 발전하고 총동맹에는 공산당계의 계급투쟁주의가 강해지면서 그 영향을 받은 조합원은 노동협력주의 간부와 대

립하여, 결국 1925년(大正 14) 총동맹을 제명하고 일본노동조합평의회를 결성했다(363쪽).

- 安田元久, 井上銳夫, 大石慎三郎, 土田直鎮, 尾藤正英, 大隅和雄, 田崎哲郎, 鳥海靖, 『高等學校 新日本史』(帝國書院, 1968년 발행)

1923년(大正 12) 9월에 발생한 관동대지진으로 9만여 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내고,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여 사회주의자와 다수의 조선인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191쪽).

- 兒玉幸多, 笠原一男, 井上光貞, 大久保利謙, 藤木邦彦, 寶月圭吾, 『精選 日本史(개정판)』(山川出版社, 1973년 발행)

1923년(大正 12) 9월에 일어난 관동대지진은 9만여 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약 70만 호의 가옥이 파괴·소실된 대참사를 일으켰고, 사회에 커다란 혼란과 불안을 불러일으켰는데③, 이를 계기로 관청과 회사의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빌딩으로 세워지고, 동경에서 옛 에도(江戸)의 자취는 사라져갔다.

③ 대지진의 혼란에 즈음하여 많은 조선인과 사회주의자가 살해된 사건이 일어났다(255쪽).

- 小葉田淳, 赤松俊秀, 小澤榮一, 上田正昭, 山本四郎, 古屋哲夫, 坂根義久, 大館右喜, 『日本史』(清水書院, 1974년 발행)

더욱이 1923년(大正 12) 9월 1일에 관동대지진이 일어나①, 경제계는 만성적인 불황에 빠졌다.

① 이때 무정부주의자인 오스기 사카에가 아마가스 현병대위에게 살해되고(甘粕事件), 또 조선인이 우물에 독극물을 넣었다는 소문 때문에 다수의 조선

인이 학살되었다(237~238쪽).

- 竹内理三, 田中健夫, 小西四郎, 『改訂版 新日本史』(自由書房, 1977년 文部省 검정 완료, 1978년 발행)

1919년(大正 8) 이래 무역은 현저한 수입초과가 되고, 주가는 폭락하고, 공장, 회사 등이 도산·정리·축소되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다. 게다가 1923년(大正 12) 9월에 관동대지진이 일어나^①, 이 대피해로 인해 경제계는 더욱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① 피해는 도쿄·요코하마를 중심으로 전교·전소 가옥은 약 58만 호, 사망자·행방불명자는 약 14만 명에 달했다. 이 혼란 속에서 여러 악소문이 일어나 다수의 죄 없는 조선인과 노동운동가 등이 학살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무정부주의자인 오스기 사카에 등도 헌병대에서 살해되었다(274쪽).

자료 C. 고교교과서 기술의 변천: 동경서적(東京書籍)을 예로서(太字는 학살 관련 기술)

- 風間泰男, 菱刈隆永, 尾藤正英, 佐藤誠三郎, 『新訂日本史』(1977년 文部省 改訂 검정 완료, 1978년 발행)

전후의 경제불황

대전 중의 경기 호황 속에서 일시적으로 팽창한 일본 경제는 대전이 끝나면서 순식간에 불황에 부딪혔다. 호조를 보이던 수출이 1920년대가 되어 갑자기 감소했기 때문에 생산과잉으로 조업 단축과 도산이 연이어 일어나고, 주가폭락이 일어나 경제공황이 시작되었다. 게다가 1923년(大正 12)에는 관

동대지진이 일어나 경제계는 더욱 큰 고통을 받았으며 그 후에는 만성적인 불황이 계속되었다(241~242쪽).

- 尾藤正英, 藤村道生, 益田宗, 吉田孝, 大口勇次郎, 久里幾久雄, 菅原昌二, 原口幸男, 『日本史』(1982년 文部省 검정 완료, 1983년 발행)

전후공황과 관동대지진

제1차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전쟁경기를 통해 일시적으로 팽창한 일본 경제는 해외시장의 축소와 함께 곤경에 빠졌다. 1919년(大正 8)부터 다시 수입초과가 되고 이듬해 1920년에는 생산과잉으로 기업의 축소와 도산이 연이어 일어나 실업자가 속출했다(전후 공황). 게다가 1923년(大正 12) 9월 1일 관동대지진으로 도쿄와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한 지역은 괴멸상태가 되었다. 이 때문에 전후 공황에서 재흥하려던 일본 경제는 큰 타격을 받고 그 후에는 만성적인 불황에 허덕이는 상태가 되었다.

- 관동대지진은 지진 발생 후의 화재가 피해를 더 키우고, 이 혼란은 민심을 동요시켰다. 이러한 와중에 조선인과 사회주의자가 폭동을 일으켰다는 유언비어가 퍼져, 3천 명 이상의 조선인과 사회주의자인 오스기 사카에 등이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278~280쪽).

- 田中彰, 金原左門, 加藤章, 今井雅晴, 田中揮一, 坂本昇, 『日本史A』(1994년 文部省 검정 완료, 1995년 발행)

관동대지진과 금융공황

1923년(大正 12) 9월 11일, 관동지방을 매그니튜드 7.9(진도 6)의 지진이 엄습했다. 지진발생시의 화재가 피해를 크게 하고, 도쿄·가나가와(神奈川)를 중

심으로 하는 지역은 괴멸상태가 되었다. 사회불안은 높아가고 도쿄부와 가나가와·사이타마·지바 3현에 계엄령이 내려졌다. 이러한 혼란 가운데 조선인과 사회주의자가 폭동을 일으켰다는 사실무근의 유언비어가 퍼지고, 이것을 믿은 민중과 군대, 경찰에게 수도권으로 일하러 온 수많은 조선인과 중국인이 살해되고①, 노동운동가와 무정부주의자인 오스기 사카에 등이 경찰서와 헌병대 본부에서 살해되었다.

① 조선인은 무릇 6천 명, 중국인 수백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96쪽).

- 田中彰, 天野사유리, 大門正克, 河原則夫, 金原左門, 坂本昇, 田中揮一, 羽賀祥二, 三宅明正, 『日本史A』(2002년 검정 완료, 2003년 발행)

일본 내지의 조선인

한국 병합 이후 일본에 도항하는 조선인이 증가했다. 1910년(明治 43)에 2천인에 불과했던 일본 내지의 조선인은 그 후 1920년(大正 9) 4만 명, 1930년(昭和 5)에 40만 명으로 증가되었다. 이 중에는 유학생도 있었는데, 조선인 도항자가 증가한 것은 토지조사사업 이후 산미증산계획 등 식민지 농정(農政)에 따라 조선의 농민이 빈궁화되어 일본으로 살길을 찾아왔기 때문이었다①. 조선인은 오사카(大阪), 도쿄, 나고야, 요코하마 등의 대도시에 집락을 형성하여 일용직 인부로 일하기도 하고, 탄광에서 광부로 일하기도 했다.

일본 내지의 조선인은 일중전쟁 후 급증하여 1945년에는 236만 명까지 증가했다. 이 시기의 증가는 오직 전시하의 강제연행에 따른 것이었다.

① 토지조사사업은 토지소유권을 확정하여 지세를 징수한 것이고, 산미증산계획은 일본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조선의 농산물을 일본에 반출미로 특화하는 정책이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새로운 부담을 안게 되고, 종래의 농업생산을 변경하도록 강요받은 농민도 적지 않았다(120쪽).

관동대지진과 강요받은 사상통제

관동대지진

1923년(大正 12) 9월 1일, 관동지방을 매그니튜드 7.9의 지진이 었습했다. 지진 발생시의 화재가 피해를 크게 하고, 도쿄·요코하마를 중심으로 한 지역은 괴멸상태에 빠졌다. 사망자가 9만 명을 넘었고, 무너진 가옥은 약 17만 호, 소실 가옥은 38만 호를 넘었다. 도쿄·가나가와·사이타마·지바 등 1부(府) 3현(縣)에는 9월 2~4일에 걸쳐 계엄령이 내려지고, 11월 5일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군의 지휘하에 놓였다.

관동대지진은 제1차세계대전 후의 공황부터 만성적인 불황에 시달린 경제계에 큰 타격을 주었다. 피해를 입은 기업은 일본은행의 특별융자로 받은 어음으로 일시 견뎠으나 결재는 진행되지 않았다.

유언비어와 조선인 학살

사회적 혼란과 불안 속에서 조선인과 사회주의자가 폭동을 일으킨다는 사실무근의 유언비어가 퍼졌다. 경찰, 군대, 행정은 유언비어를 적절히 처리하지 않았던 일, 게다가 신문이 언론보도를 자극시킨 것이 민중의 불안을 증대시켜 유언비어를 확산시키게 되었다.

관동 각지에서는 유언비어를 믿은 민중이 자경단을 조직했다. 자경단은 재향군인회^②와 청년단 등 지역 단체를 중심으로 경찰의 권고에 따라 조직되었다. 그들은 도검과 죽창으로 무장하고 통행인을 검문하여 조선인을 조사하려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수도권으로 일하러 온 수많은 조선인과 중국인이 일본의 군대와 자경단에게 학살되었다^③. ‘조선인폭동’ 설은 지진 와중에서 사라졌지만, 학살사건이 계속되었던 것은 민중 속에 뿌리 깊은 조선인, 중국인 멸시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지진의 혼란 속에서 노동운동가와

사회주의자에게도 폭행이 가해져 무정부주의자 오스기 사카에 등이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강요받은 사상통제

관동대지진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충격을 주었다. 문명붕괴의 감각과 화려한 도시생활에 천벌이 내려졌다는 의식을 낳았다. 지진이 발발한 이후 2개월 반 후, 정부는 천황의 이름으로 ‘국민정신작흥(國民精神作興)에 관한 조서(詔書)’를 내리고, 국민의 생활과 의식의 결집을 촉구했다.

이러한 중에 1923년(大正 12) 말에 섭정 미야 히로히토 친왕(宮裕仁親王, 후에 昭和 天皇)이 무정부주의자 청년에게 저격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른바 도라노몬(虎ノ門)사건이다. 청년은 대역사건과 대지진 하의 가메이도사건(龜戸事件), 오스기 사카에 등의 살해에 대한 분노에서 암살을 꾀했지만, 저격은 실패하고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군비(軍備)에 대해서는 군축이 행해졌지만(宇垣軍縮), 군의 근대화가 진행되고, 학교에서 군사교련이 시작되는 등 군대의 영향은 점차 강해졌다. 지진을 계기로 시대는 전환하고, 가중되는 불안과 심각한 동요가 일어나게 되었다.

② 현역 이외의 병역 경험자의 지역조직

③ 조선인 약 6천 6백 명, 중국인 약 8백 명으로 추정된다(124~12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종진(徐鍾珍)

일본정치 전공,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대표논저로는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식민지기 한국관련 기술 분석」(2011, 『歷史教育論集』 제 47집, 歷史教育學會 編)이 있다.

일본 교과서의 관동대지진과 학살사건 기술 내용 분석

동북아역사재단 서종진

I. 머리말

1923년 9월 1일 정오 직전에 일본 관동지방에 진도 7.9의 큰 지진이 발생하였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와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였고 군과 경찰이 자경단과 함께 ‘조선인’과 중국인, 일본인 노동운동가·사회주의자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사망자와 행방 불명자는 총 14만 2,800여 명, 부상자 10만 3,733여 명, 피난민 약 190만 명이라고 발표되었다.¹⁾ 이것을 ‘관동대지진’²⁾이라 하며 매년 9월 1일은 일본에

* 이 글은 학술지 『歷史教育』 128輯(2013)에 게재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1)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약 14만 명이라는 데이터는 관동대지진이 일어난 2년 후에 종합한 ‘진재 예방 조사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2004년의 ‘일본 지진 공학회’ 논문에서 10만 5천 명으로 보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1923년 이후 80년 이상 14만여 명이라고 추정해왔던 수치에 중복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최근 들어서는 약 10만 명이라고 보는 견해가 각종 통계에서 인용되고 있다.
- 2) 관동대지진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姜德相(1975), 『關東大震災』, 東京: 中央公論

서 '방재(防災)의 날'로 지정되어 있으며, 일본의 초중고 학생들은 대지진으로 인한 과거의 역사와 교훈을 교과서를 통해 배우고 있다. 관동대지진 당시에 학살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근대 식민지 지배의 모순과 일본 내 민족차별 의식과 무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실로 기억되고 학생들에게 전달 되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과 '교과서 개선의 모임' 등을 앞세운 일본 보수우익세력은 기존의 역사관과 교과서를 '도쿄재판사 관'에 근거하여 기술되어 '자학적·반일적·암흑적'이라고 공격한다. 이들의 교과서 공격은 난징[南京]대학살이나 일본군 '위안부'와 같이 근대 일본의 침략 전쟁과 가해자로서의 책임문제를 부각시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교과서 기술에 대한 문제제기의 형태로 전개되었다.³⁾ 교과서 공격으로 일본군 '위안부' 용어가 중학교 교과서에서 사라졌고 관련 기술이 상당히 후퇴하였다. 일본 우익세력은 통계의 부정확함을 문제점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역사적 사건에 대해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자신들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확산시키려고 한다.⁴⁾

이 글은 일본의 초중고 교과서의 관동대지진과 '학살사건'에 대한 기술 부

社; 山田昭次(2003), 『關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 東京: 創史社; 姜徳相·琴秉洞 編 (1963), 『現代史資料6 關東大震災と朝鮮人』, 東京: みすず書房; 강덕상, 김동수·박수철 옮김(2005), 『학살의 기억·관동대지진』, 서울: 역사비평사(東京: 2003, 청구문화사) 등이 있다. 이 글도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 3) 일본의 교과서 공격에 대해서는 倭義文(1997), 『教科書攻撃の深層』, 東京: 學習の友社; 高橋哲哉 외(2005), 『戦争への教育』, 東京: 學習の友社 등 참조.
- 4) 난징대학살의 희생자 수에 대해서 중국 측은 도쿄재판 판결에 근거하여 20만 명 이상, 난징군사법정 판결에 근거하여 30만 명 이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본 측은 2~20만 명이라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서 희생자 수를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笠原十九司(2002), 「南京大虐殺と教科書問題」, 『季刊 戦争責任研究』第36號, 東京: 日本戦争責任研究センター.

분을 분석한 것이다.⁵⁾ 근대 한국 관련 기술 가운데 관동대지진과 '학살사건'에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최근 일본의 보수우익을 대표하는 언론이 이 부분에 대한 교과서와 부교재의 기술에 대해 연이어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⁶⁾ 보수세력의 교과서 공격이 관동대지진 관련 기술에서도 반복되지 않을 까라는 문제의식에서 먼저 일본의 교과서 공격에 대해 살펴보고, 관동대지진과 관련하여 일본 언론에서 반복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보도내용을 소개한 후에 마지막으로 초중고 교과서 총 27종의 관동대지진 기술 현황에 대해 구판과 신판을 비교·분석하도록 하겠다.⁷⁾

II. 일본 보수세력의 교과서 공격

일본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보수세력의 '제3차 교과서 공격'이 진행되고 있다.⁸⁾ 이들 보수세력은 경제계에서 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

- 5) 필자는 일본 교과서의 관동대지진 기술에 대해서 2010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해왔다. 서종진(2010), 「산케이신문의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통계 수치관련 기사 검토」, 『동북아역사문제』 34호; 서종진(2011),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식민지기 한국관련 기술 분석」, 『歷史教育論集』 47; 서종진(2012),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관동대지진에 대한 기술 내용 분석」, 『日本學』 제35집이 있으며, 본고는 이들 논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6) 관동대지진과 학살사건은 다이쇼[大正]기의 일본의 정치·경제·사회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건이며 일본 교과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기술의 부족과 이로 인한 한일 간의 역사인식의 차이가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사건이라는 사례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관동대지진에 대한 기술은 중요한 검토 대상이다.
- 7) 2010~2013년도까지 새로운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에 의거해 제작되어 일본 문부와 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초중고 역사과목 총 27종이 분석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소학교 사회 5종, 중학교 역사 7종, 고등학교는 일본사 15종이다.
- 8) 제3차 교과서 공격에 대해서는 高橋哲哉 외(2005), 앞의 책 참조.

과 보통국가화를 위한 개헌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보수세력을 결집하려고 애쓰고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혁으로 인한 사회갈등이라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먼저 교육문제를 부각시키면서 보수세력의 통합과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번 교과서 공격의 특징은 ‘교과서 의원연맹’, ‘일본회의’ 등 보수우익성향의 정치세력 외에 소위 ‘자유주의사관’을 표방하는 그룹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과 함께 보수세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재계와 언론사 등도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들 보수세력 주도하에 2006년에는 교육기본법을 60년 만에 개정하였다. 개정된 교육기본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국가 주도의 교육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신교육기본법은 교육의 목적으로 도덕심, 공공의 정신, 전통과 문화 존중, 나라와 향토사랑,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 등 20여 개의 항목을 설정하고 있다.⁹⁾ 이에 따라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이 개정·고시되었고 새로운 규정에 의거한 초중고 교과서 검정이 실시되어 지난 3월 말경에 새로운 기준에 의거하여 제작된 초중고 교과서 검정이 일단락되었다.

최근 교과서 검정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학력저하를 우려하여 ‘탈(脫) 유토리 [여유 교육]¹⁰⁾ 방침을 내세워 새로운 규정 하에서 실시한 교과서 검정이었다. 이에 따라 교과서 페이지 수를 증가시켜 학습내용을 늘리고 있다. 역사 과목의 경우, 신학습지도요령에 따라 근대와 현대를 구분하고 역사 수업 시수와

9) 교육기본법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이들을 길러온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하는 동시에, 타국을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를 것”(2조 5항).
 10) 지식 중시형 교육방침을 주입식 교육이라고 비판하면서 경험 중시형 교육방침을 가지고 유토리(여유) 있는 학교를 지향하는 교육방침. 초등학교는 2010년도, 중학교는 2011년도, 고등학교는 2014년도까지 시행된다.

교과서 페이지 수가 증가하였다. 페이지 수의 증가는 기술 내용의 증가로 이어진다. 이러한 변화가 근현대사의 교과서 기술에 반영되었다면 근대 식민지 시기의 한국 관련 기술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교과서 기술 변화의 방향이 '애국심'을 강조한 교과서 관련 규정에 따라 과거로 회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 보수세력의 교과서 공격은 '새역모'를 발족시켜서 먼저 난징대학살과 일본군 '위안부'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었다. 개정된 규정 하에서 진행된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보도된 《산케이신문[産經新聞]》의 기사를 보면, 보수 우익세력의 교과서 공격 대상이 관동대지진과 학살사건에 대한 기술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2010년 1월 25일 《산케이신문》 1면 기사를 시작으로 2012년 6월, 7월, 9월(이상 《산케이신문》), 9월(《아사히신문[朝日新聞]》), 2013년 5월(《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에도 관동대지진에 대한 교과서와 부교재의 기술에 대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산케이신문사는 보수우익 진영을 대변하는 언론사로서 과거 '새역모'와 함께 후소샤[扶桑社]판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발간하였고, '새역모'의 내부 분열 이후에는 '교과서 개선의 모임'과 함께 이쿠호샤[育鵬社]에서 교과서를 발간하였다. 이들은 영·미 등의 일본 관계 문서가 비공개 상태므로 향후 전승국 측의 자료공개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사료 공개까지는 최저 50~60년이 소요되므로 현대사는 실제로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그들은 관동대지진에서의 학살사건도 '정보 및 자료의 정확성 부족'하므로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학설과 통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이 기사에서 "학습지도요령과 교과서편찬에 영향이 강하다고 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조선인 학살에 관한 언급이 없다", "문부과학성이 과거 10년의 교과서 검정에서 희생자 수

에 관해서 김정의견을 붙인 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¹¹⁾

III. 일본 언론의 관동대지진 관련 교과서 · 부교재 기술에 대한 보도

개정된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에 의거하여 제작된 첫 교과서 검정이 진행 중이었던 2010년 1월 25일에 일본의 《산케이신문》 1면에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의 희생자, 수업에서 근거 없는 ‘6,600명’”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실렸다. 기사는 관동대지진에 관한 교과서 기술에서 당시 학살당한 ‘조선인’ 희생자의 통계 수치에 오류가 있으며, 이러한 교과서로 진행되는 학교 수업은 ‘나쁜’ 역사수업이라는 내용이다.¹²⁾

이 기사는 논픽션 작가로 알려진 구도 미요코[工藤美代子]의 저서를 인용하고 있다. 구도 미요코는 2009년에 발간한 자신의 저서에서 “조선인 학살이 과연 정말 있었는가. 일본인은 어찌할 수 없는 모략선전에 휘말려서 그렇게 믿어왔던 것은 아닐까”라며 첫 장을 시작한다.¹³⁾ 구도 미요코에 따르면 6,000명 이

-
- 11) “關東大震災朝鮮人虐殺の犠牲者授業で根據ない‘6600人’”, 《産経新聞》(2010. 1. 25)
 - 12) 2010년 1월 24일, 일본교직원노동조합(이하 ‘일교조’)의 교육연구국집회가 야마가타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때 일교조의 사회과 교육 분과회에서 중학교 수업 사례의 하나로 관동대지진에 대한 수업이 보고되었다. 《産経新聞》(2010. 1. 25)
 - 13) 工藤美代子(2009), 『關東大震災「朝鮮人虐殺」の眞實』, 東京: 産経新聞出版, 8쪽. 이 책은 일본의 잡지 『SAPIO』에 2008년 5월~2009년 7월까지 연재된 원고를 수정하여 출판하였다. 구도 미요코는 새역모가 발간한 교과서의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 선임한 두 명의 여성 이사 가운데 한 명으로서, 일반 서점에서 시판된 지류사관 공민 교과서 표지의 선전용 띠에 사진이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새역모와의 긴밀한 관계를 엿

상이라는 조선인 희생자의 숫자는 당시 일본 내 '조선인' 인구로 보아 있을 수 없다고 보고, 당시 일본 사법성이 발표한 233명의 희생자 수를 강조한다. 나아가 다이쇼(大正)시대를 대표하는 오피니언 리더이자 '민본주의자'로 알려진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의 조사 결과¹⁴⁾가 2,613명이었음을 거론하면서 6,661명이라는 수치에 의문을 제기한다.

관동대지진 당시 희생자 수에 대해서는 강덕상, 금병동, 박경식, 야마다 쇼지(山田昭次) 등 연구자들이 《독립신문(獨立新聞)》에 실린 특파원의 조사·보고에 근거한 자료를 인용함으로써 널리 알려져 있다.¹⁵⁾ 이 통계 숫자에 대해서 이미 야마다 쇼지 교수는 부정확성의 원인을 '관헌이 학살당한 조선인 사체를 은닉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¹⁶⁾ 이에 대해 구도 미요코는 관헌의 조사 방해 사실은 무시한 채로 당시 통계의 부정확한 원인을 '동포위문조사단' 책임으로 돌리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또 구도 미요코는 재해지역에 실제 있었던 조선인이 9,800명이었다는 점을 거론한다. 하지만 강덕상의 연구에 따르면 지진 발생 직전의 조선인 노동자 수는 10만 이상이었으며, 도쿄에만 1만 2~3천 명으로 관동일대 거주 인구는 약 2만여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서 구도 미요코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있다.¹⁷⁾

볼 수 있다.

14) 요시노 사쿠조는 "10월 말까지의 것으로 이후에 조사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山田昭次(2003), 앞의 책, 171쪽

15) 朴京植(1973), 『日本帝國主義の朝鮮支配』, 東京: 青木書店; 山田昭次(2003), 앞의 책; 姜徳相·琴秉洞 編(1963), 앞의 책. 이들 연구자들이 사용한 자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관지인 《獨立新聞》에 게재된 보고서의 기사에 '6,661명'이라고 보도된 수치다. 《獨立新聞》은 관동대지진 당시 조사 특파원을 파견하여 각 지역별로 희생자 수를 파악하여 1923년 12월 5일자에 보고서를 게재하고 있다.

16) 山田昭次(2003), 앞의 책, 183~184쪽

17) 강덕상, 김동수·박수철 옮김(2005), 앞의 책, 311~326쪽. 당시 조선인이 도쿄에 약

《산케이신문》과 구도 미요코는 위에서 언급한 역사가들의 연구결과와 그 밖의 수많은 증언과 자료집, 사진 등 검증되고 알려진 자료보다는 가해자이며 학살의 책임을 회피하고 축소하려는 정부 당국의 조사결과를 신뢰하고 있다.

2012년 6월 25일자 신문 1면에는 요코하마(横浜)시에서 발행하는 중학교 사 회과 부교재 『와카루 요코하마(わかるヨコハマ)』의 관동대지진에 대한 기술을 문 제 삼는 기사가 실렸다.¹⁸⁾ 과거에 발행된 판본에는 “자경단 가운데 조선인을 살해하는 행위를 저지른 자도 있었다.”고 기술되었던 부분이 2012년 발간된 개정판에는 “소문을 믿은 군대와 경찰, 재향군인회와 청년회를 모체로 하여 조직된 자경단 등은 조선인에 대한 박해와 학살을 행하고 또한 중국인도 살상 했다.”고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조선인 학살을 둘러싸고 그 수, 군과 경찰의 관여에는 복수의 학설이 있는데, 부교재의 보다 상세하게 가필된 개정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요코하마시의 아마다 다쿠미(山田 巧) 교육장은 부교재 제작 과정에서 절차상의 ‘불비(不備)’가 있었음을 인정한다 고 보도하고 있다.

7월 20일자 신문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는 2013 년도에 2012년도 판본을 회수하고 내용의 ‘재개정’을 한다는 관련 기사가 게 재되었다.¹⁹⁾ 기사는 아마다 다쿠미 교육장의 시의회 답변을 인용하여 부교재 의 관동대지진 기술 내용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간주하고, ‘학살’ 이라는 표현이 주관적이어서 종래에 사용하던 ‘살해’로 재개정할 것이라고 보

12,000명, 가나가와에 약 3,000명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二谷貞夫 研究代表・梅野 正信 編(2010), 『日韓で考える歴史教育』, 東京: 明石書店, 164쪽

18) “軍や警察 朝鮮人虐殺 横浜市教委 書き換え”, 《産経新聞》(2012. 6. 25), 『わかるヨ コハマ』(요코하마시) 부교재의 구체적인 기술 내용 변화에 대해서는 별첨 자료 참조.

19) “朝鮮人‘虐殺’ → ‘殺害’”, 《産経新聞》(2012. 7. 20)

도하고 있다.

그리고 2012년 9월 《아시히신문》과 《산케이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가 부교재 담당 과장을 관동대지진 관련 부분 표현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문서결재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하고 과장의 상사인 교육 차장 등 3명을 서면훈계 조치하였다. 또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는 부교재의 회수도 결정하였다고 한다.²⁰⁾

올해 5월 《마이니치신문》 보도와 같이 2013년도 판에서는 “살해하는 행위를 저지른 자도 있었다.”라고 구판(2011)의 기술을 회복시키고 ‘박해’와 ‘학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또 최종적으로 요코하마시는 2013년 최신판을 배부하면서 2012년판 회수를 지시하였다.²¹⁾

IV. 초중고 교과서의 관동대지진과 학살사건 기술 사례와 내용 분석


아래 <표 1>, <표 2>, <표 3>은 초중고 교과서의 관동대지진 관련 기술과 도판의 사례다. 지면 관계상 점유율이 높은 교과서와 우익 교과서를 예로써 제시하였다. 이들 자료를 참고로 관동대지진에 대한 교과서 기술을 구판과 신판을 비교하면서 그 변화와 특징, 문제점 등을 정리하도록 하겠다.²²⁾ 다만 여기서는 본문과 칼럼, 박스, 각주 등을 구별하지 않았다.

20) “市教委課長を戒告”, 《朝日新聞》(2012. 9. 29); “横浜市教委の課長戒告”, 《産経新聞》(2012. 9. 29)


21) “横浜市教委 12年度版の回収指示”, 《毎日新聞》(2013. 5. 28). 부교재의 상세 기술 내용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첨부한 자료 참조.

22) 중학교의 이쿠호샤[育鵬社]는 후소샤[扶桑社] 발간 교과서와 비교하였으며, 고등학교




〈표 1〉 초등학교 교과서 관동대지진 관련 기술과 도판

출판사	구분	내용	도판
도 교 서 적	구 판	1923년 9월 1일, 관동지방 남부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쿄, 요코하마 등에서 파괴된 가옥 12만 호, 소실된 가옥 45만 호, 사망자·행방불명자 약 14만 명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 지진의 혼란 속에서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킨다는 소문이 퍼져 <u>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살해되는 사건</u> 이 발생했습니다(99쪽).	
	신 판	관동대지진: 1923년 9월 1일, 관동지방 남부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 도쿄, 요코하마 등에서 파괴된 가옥 약 21만 호, 소실된 가옥 약 21만 호, 사망자·행방불명자 약 11만 명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진의 혼란 속에서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킨다는 소문이 퍼져, <u>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살해되는 사건</u> 이 일어났습니다(123쪽).	 <p>지진 후의 도쿄</p>



〈표 2〉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관동대지진 관련 기술과 도판

출판사	구분	내용	도판
도 교 서 적	구 판	역사로의 접근 〈관동대지진〉 1923년(다이쇼 12) 9월 1일, 관동대지진이 일어나서 도쿄와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한 지역은 괴멸 상태에 빠졌습니다. 피해는 붕괴된 가옥이 25만 호, 불에 탄 가옥이 45만 호였으며, 사망자·행방불명자는 <u>14만 명에 이르렀습니다</u> . 이러한 혼란 속에서 조선인과 사회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킨다는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u>수많은 조선인과 중국인, 사회주의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u> . 한편, 지진은 도시를 개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흥을 꾀하는 가운데 정부는 새로운 도시계획을 추진했고 도쿄와 요코하마는 근대도시로 거듭났습니다(181쪽).	 <p>관동대지진 직후의 도쿄</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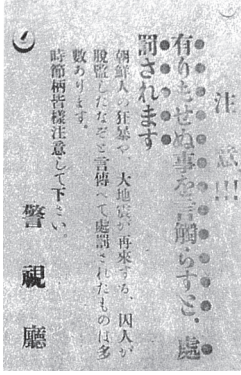
의 경우 실교출판사가 제작한 일본사B는 이번에 새롭게 제작되어 비교 대상이 없어서 신뢰만을 가지고 검토하였다. 또 표의 밑줄과 굵은 글자는 필자가 강조 표시한 것임.

	<p>Box<역사로의 접근: 관동대지진></p> <p>1923년(다이쇼 12) 9월 1일, 간토 대지진이 발생하여 도쿄와 요코하마(가나가와현)를 중심으로 한 지역은 괴멸 상태에 빠졌습니다. 피해는 무너진 가옥이 약 21만 호, 불탄 가옥 약 21만 호,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는 약 11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조선인과 사회주의자가 폭동을 일으킨다는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많은 조선인과 중국인, 사회주의자 등이 살해되었습니다.</p> <p>그러나 진재는 도시 개조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복구 속에서 정부는 새로운 도시 계획을 진행하고 도쿄와 요코하마는 근대적인 도시로 거듭났습니다(197쪽).</p>	 <p>관동대지진 직후의 도쿄</p>
이 쿠 호 샤	<p><관동대지진></p> <p>1923년(다이쇼 12) 9월 1일, 관동지방에서 대지진이 일어나서 도쿄와 요코하마 등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고, 사망자·행방불명자는 10만 명이 넘었다(관동대지진). 이 혼란 속에서 조선인과 사회주의자 사이에 불온한 기도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주민의 자경단 등이 조선인·중국인과 사회주의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관동대지진 결과, 일본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다(189쪽).</p>	 <p>관동대지진 (1923년 9월)</p>
개 정 판	<p><관동대지진></p> <p>1923년 9월 1일, 간토 지방에서 발생한 대지진은 도쿄·요코하마의 인구 밀집지를 직격하였습니다(간토 대지진). 이 지진은 사망자·행방불명자 10만 수천 명*, 소실 가옥 약 45만 호라는 큰 피해를 가져오고, 우리나라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교통과 통신이 두절된 혼란 속에서 조선인과 사회주의자가 주민들이 만든 자경단 등에게 살해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또 지진 후는 고토 신페이 등에 의해 새로운 도시 계획이 진행되었습니다(199쪽).</p> <p>* 신청본: 14만 명</p>	 <p>관동대지진(1923년 9월)</p>

〈표 3〉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의 관동대지진 관련 기술과 도판

출판사	구분	내용	도판
제일 학 습 사	구 관	<p>〈관동대지진〉</p> <p>1923년(다이쇼 12) 9월 1일, 관동지방에서 대지진이 일어났다. 도쿄·요코하마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서 사망자·행방불명자가 10만 명을 넘는 등 큰 피해와 혼란이 발생했다(관동대지진).</p> <p>그러한 와중에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조선인과 중국인이 군대·경찰·자경단의 손에 학살되었다. 또한, 노동운동 지도자와 무정부주의자 오스기 사카에·이토 노에 등이 군대와 경찰에게 살해되었다(89쪽).</p>	 <p>관동대지진</p>
	신 관	<p>〈관동대지진〉</p> <p>1923년(다이쇼 12) 9월 1일, 관동지방에서 대지진이 일어나, 도쿄·요코하마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서 사망자·행방불명자가 10만 명을 넘는 등 큰 피해와 혼란이 발생했다(관동대지진). 그러한 가운데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군대·경찰·자경단②의 손에 학살되었다. 또한, 노동운동 지도자와 무정부주의자인 오스기 사카에·이토 노에 등이 군대와 경찰 등에게 살해되었다(83쪽).</p> <p>② 재해·도난 등에서 지역을 자위하기 위해 조직된 주민단체.</p>	 <p>관동대지진</p>
야 마 카 와 일 본 사 B	구 관	<p>Box〈관동대지진의 혼란〉</p> <p>1923년(다이쇼 12)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사가미만 북서부를 진원으로 하는 매그니튜드 7.9의 대지진이 발생해서 중앙기상대의 지진계 바늘이 모두 날아갔다. 지진과 화재로 도쿄시·요코하마시의 대부분이 폐허가 되었고 그 피해는 관동 일대와 야마나시·시즈오카 두 현까지 미쳤다. 도쿄의 육군 피복창 터의 공터로 피난한 이재민 약 4만 명이 불길에 휩싸여 사망한 것을 비롯해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는 10만 명 이상에 달했다. 전과·유실·전소 가옥은 57만 호에 달했고 피해 총액은 60억 엔이 넘었다.</p> <p>지진과 화재의 대혼란으로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 방화했다'는 유언비어가 나돌았고 정부도 계엄령을 공포해서 군대·경찰을 동원했으며, 그 외에 주민에게 자경단을 조</p>	

	<p>직하게 했다. 관동 전역에서 철저한 ‘조선인 사냥’이 벌어졌고 공포심에 사로잡힌 민중과 일부 관헌에 의해서 수천 명의 조선인과 약 200명의 중국인이 살해되었다. 가메이도 경찰서 내에서는 군대에 의해 10명의 노동운동 지도자가 살해당했으며, 헌병에 의해서 오스기 사카에가 살해당해서 사회주의 운동은 큰 타격을 입었다(310쪽).</p>	
<p>신 관</p>	<p>Box<관동대지진의 혼란> 1923년(다이쇼 12)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사카미만 북서부를 진원으로 하는 매그니튜드 7.9의 대지진이 발생하여 중앙기상대의 지진계 바늘이 모두 날아갔다. 지진과 화재로 도쿄시·요코하마시의 대부분이 폐허로 변했고, 도쿄 료고쿠[兩國]의 육군 피복창 터의 공터로 피난한 이재민 약 4만 명이 강한 불길에 휩싸여 사망한 것을 비롯해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는 10만 명 이상에 달했다. 전과·유실·전소 가옥은 57만 호에 달했고 피해 총액은 60억 엔이 넘었다.</p> <p>관동대지진 후에 일어난, 조선인·중국인에 대한 살상사건은 자연 재해가 인위적인 살상행위를 대규모로 유발한 예로써 일본의 재해 사상 유래가 없는 것이었다. 유언비어에 의해 많은 조선인이 살상된 배경으로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저항운동에 대한 공포심과 민족적인 차별의식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9월 4일 밤 가메이도 경찰서 구내에서 경비 중이던 군대에 의해 사회주의자 10명이 살해되었고, 16일에는 헌병에 의해 오스기 사카에와 이토 노에, 오스기 사카에의 조카가 살해되었다. 시민·경찰·군이 함께 예외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규모로 무력과 폭력을 행사한 것을 알 수 있다(331쪽).</p>	
<p>구 관</p>	<p><전후 공황과 관동대지진> 1923년(다이쇼 12) 9월 1일, 대지진이 관동 일대를 덮쳤고, 게이힌 지대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관동대지진). 이로 인해 은행 소지의 어음이 결제 불능 상태가 되어서 일본 은행의 특별 용자라도 불황을 회복하지 못했다(지진 재해 공황)(228쪽).</p>	

메이세이샤 일본사 B	<p>신판</p> <p>〈전후 공황과 관동대지진〉 1923년(다이쇼 12) 9월 1일, 대지진이 관동 일원을 덮쳤고, 게이힌 지대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관동대지진)③. 이로 인해 은행 소지의 어음이 결제 불능 상태가 되어서 일본 은행의 특별 용자로 일시적으로 버렸지만, 불황을 회복하지 못했다(진재공황)(239쪽). ③ 대지진에 의한 피해는 전과 12만 호, 전소 45만 호, 사망자·행방불명자 10만 수천 명에 이른다. 혼란 속에서 무정부주의자 오스기 사카에와 이토 노에가 헌병 대위 아마카스 마사히코에게 살해되었다. 또한 조선인에게 불온한 움직임이 있다는 유언비어에 영향을 받은 자경단에 의해서 조선인에 대한 살상사건이 빈발했다. 한편 조선인을 보호한 민간인과 경찰관도 있었다.</p>	 <p>관동대지진 당시의 유언비어방지 전단지</p>
-------------	--	---

1.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총수(總數)

당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총수는 학살된 희생자의 수와 관련이 있으므로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동대지진 기술 내용 가운데 총수 부분에 대한 검정의견이 중학교 2종, 고등학교 2종으로 문부과학성의 검정의견이 상당히 많이 제시된 부분이었다.²³⁾ 구판 총 26종 교과서 가운데 11종 교과서(소학교 도교서적·오사카서적=일본문교출판, 중학교 도교서적·제국서원·일본문교출판·시미즈서원, 고등학교 실교출판A B2·도교서적B·시미즈서원B)에는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총 14만 명으로 기술되어 있었다. 그런데 신판 총 27종에서는 대부분 9~10만 명(중학교 도교서적은 11만 명)으로 기술하고 있다. 중학교 제국서원과 이쿠호샤 신청본에는 14만 명

23) 주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약 14만 명이라는 데이터는 1925년에 '진재 예방 조사 보고서'에서 발표한 것인데, 80년이 지난 2004년에 10만 5천 명으로 보는 견해가 제시되었고 최근에는 이를 근거로 하여 약 10만 명이라고 보는 견해가 확산되어 사용되고 있다.

으로 기술하여 신청하였는데, 문부과학성이 수치가 '부정확'하다는 검정의견을 붙여 10만 명으로 수정하게 하였다. 고등학교 실교출판(세계사 A와 B)은 신청본에 '14만 3000명'(세계사A)과 '약 14만 명'(세계사B)으로 기술하였는데, 이에 대해 '사망자·행방불명 수로서 부정확하다'는 의견이 붙어 합격본에는 '10만 5천 명'으로 기술되었다.

2. '조선인' 희생자 수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이 희생자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²⁴⁾ 이는 학살사건이 조선인에 대한 민족차별문제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구판을 보면, 구체적인 조선인 희생자 통계 수치를 제시하는 소학교 교과서는 없으며, 중학교는 시미즈서원이 유일하고, 고등학교는 시미즈서원 A·실교출판A·도쿄서적A·실교출판 B·도쿄서적B·시미즈서원B 등 초·중·고 총 26종 교과서 가운데 7종 교과서에 불과했다. 신판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기술하던 중학교 시미즈서원은 '수천'으로 그것도 각주 기술로 후퇴하였고, 신판에도 기술되어 있는 교과서는 고등학교 시미즈서원A·실교출판A·도쿄서적A·실교출판B·시미즈서원B 등 5종 교과서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조선인 희생자를 '수천'이나 '많은'이라고 서술한 교과서가 대부분이고 조선인과 중국인, 일본인 희생자를 평면적으로 나열한 교과서도 있었다. '수천'과 같은 대략적인 희생자에 대한 기술이나, 막연하게 '많은'이라고 기술하는 것도 문제인데, 학살사건 발생 자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은 관

24) 당시 《獨立新聞》에 게재된 보고서(1923.12.5)의 '조선인' 희생자 수는 6,661명이었다. 山田昭次(2003), 앞의 책, 170쪽

동대지진과 학살사건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은폐’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익 계열에서 발간한 교과서의 기술을 보면, 중학교 자유사는 각주에서나마 다루었던 학살 관련 기술마저 삭제하였고 이쿠호사는 희생자 가운데 중국인이 있었다는 기술을 하지 않고 있다. 또 고등학교 메이세이사는 구판에서는 학살사건 자체에 대해 기술하지 않았는데 신판에서는 자경단에 의한 조선인 ‘살상사건’이 발생하였다고 기술하였지만 중국인 학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²⁵⁾

3. 학살의 주체

당시 학살에 관헌이 관여하였다는 것이 여러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었고 이에 대한 연구도 있다.²⁶⁾ 그런데 학살의 주체가 관헌과 주민이 조직한 자경단이라고 기술한 구판 소학교 교과서는 교육출판과 미쓰무라도서 2종, 중학교는 교육출판과 일본문교출판 2종, 고등학교는 시미즈서원A·야마카와A·실교출판A·제일학습사A·도쿄서적A·도쿄서적B·실교출판B2·야마카와B3 등 11종 교과서였다. 이번 신판에서는 소학교 교과서는 교육출판과 미쓰무라 2종, 중학교는 교육출판과 일본문교출판, 시미즈서원(각주)에 새롭게 기술하였고, 고등학교는 시미즈서원A·실교출판A·제일학습사A·도쿄서적A·도쿄서적B·실교출판B2·야마카와B2 등 9종으로 감소하였다.

학살의 주체에 대한 기술에서는 자경단이 조선인과 중국인, 일본인 등을

25) 조선인 학살사건과 마찬가지로 중국인 학살사건도 중요한 연구과제며, 중국인 희생자 수도 명확하지 않아서 중국인 희생자 수에 대한 과거 교과서 기술을 보면 200~700명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있다.

26) 山田昭次(2003), 앞의 책; 강덕상, 김동수·박수철 옮김(2005), 앞의 책

살해하고, 경찰과 군대는 사회주의자와 노동운동자를 살해했다고 기술하고 있는 교과서가 적지 않았다. 다음으로 학살의 주체를 기술하더라도 ‘일부’ 관헌이라고 기술하거나 자경단만 언급하고 관헌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거나 아예 학살의 주체에 대한 기술이 없는 교과서도 있었다. 특히 고등학교 교과서인 메이세이샤의 경우는 ‘오해할 우려’가 있다는 검정의견에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학살의 주체를 자경단으로만 기술하고 “조선인을 보호한 민간인과 경찰관도 있었다.”라고 수정하여 검정을 통과하고 있다.²⁷⁾

4. 유언비어

당시 학살사건과 관련하여 그 원인이 된 유언비어에 대한 기술을 살펴보면, 구판에서는 소학교와 중학교 모든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었지만, 우익 계열이 발간한 이쿠호샤와 지유샤의 교과서 신판에서는 제외되었다. 중학교 교과서 총 7종 가운데 2종에서 유언비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이다. 기술 지면이 적은 소학교 교과서에도 언급되어 있는데 중학교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문제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구판의 메이세이샤 교과서를 제외하고 모든 교과서에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당시 유언비어는 관헌이 치안유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유포하거나 확산을 방조하는 등 관여를 했다는 연구가 있다. 아마다 쇼지는 최근 연구에서도 조선인 학살을 불러일으킨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킨다”는 등의 왜곡된 정보 확

27) 문부과학성은 이 부분에 대해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는 검정의견을 제시하였다. 참고로 검정 신청본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었다. “또한 조선인에게 불온한 움직임이 있다는 유언비어가 퍼져 각지의 자경단 등이 조선인을 살해했다. 경찰은 조선인을 보호했다. 또 정부는는 계엄령을 선포하여 사태의 수습에 나섰다.”

산과 계엄령 선포에서 ‘국가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²⁸⁾ 하지만 유언비어의 ‘확대’의 주체가 ‘주민과 경찰’이라고 기술한 교과서는 중학교의 경우는 일본문교출판이 유일하며, 고등학교의 경우는 도쿄서적A가 ‘경찰·군대·행정이 유언비어를 적절하게 처리 못한 것, 신문이 유언비어를 부추긴 것’을 언급하여 확산의 원인을 기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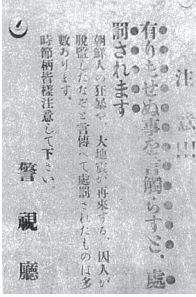
5. 도판

교과서에 사용된 도판은 문자화된 내용을 보완하는 학습자료다. 관동대지진에 대한 서술 부분의 도판도 본문과 각주 등을 통해서 전달하는 역사 정보 이상으로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구판과 신판에 게재된 도판의 총수를 단순히 비교해보면 소학교의 경우는 2개에서 3개로 1개 증가, 중학교의 경우 11개에서 7개로 감소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19개에서 17개로 감소하였다.

도판에는 관동대지진 직후의 파괴된 시가지의 모습이 가장 많으며, 화재의 모습, 오스기 사카에[大杉榮]와 이토 노에[伊藤野枝], 자경단, 이송되는 조선인, 전단지 관련 신문보도 등이 게재되어 있다. 이 가운데 학살사건을 연상시키는 죽창과 일본도를 들고있는 자경단이나 무장한 관헌이 이송하는 조선인의 도판은 소학교 교과서에는 없고 중학교 교과서에 자경단 사진이 2종(시미즈서원·일본문교출판),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구판의 경우 자경단 2종(시미즈서원A·도쿄서적A), 신판 2종(도쿄서적A·시미즈서원B)이며, 이송되는 조선인의 도판은 도쿄서적B가 신·구판에 게재하고 있다.

28) 山田昭次(2011), 「今日における關東大震災時朝鮮人虐殺の國家責任と民衆責任」, 趙景達·宮嶋博史 編, 『「韓國併合」100年を問う』, 東京: 岩波書店, 230~245쪽

〈표 4〉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의 관동대지진 관련 도판

			
<p>아사쿠사 십이층 (아마카와출판사)</p>	<p>자경단 (시미즈서원)</p>	<p>이송되는 조선인 (도쿄서적)</p>	<p>유언비어방지 전단지 (메이세이샤)</p>

총 27종 교과서에 사용된 도판을 보면, 자경단 등 당시 ‘학살사건’의 실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도판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판 도쿄서적A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관동계엄사령부’의 도판이 게재되었으나 이번에는 이 도판이 제외되었다. 신판에 새롭게 게재된 메이세이샤(일본사B) 도판은 유언비어를 발설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의 경시청 전단지 사진이다. 이 도판은 유언비어의 발생과 확산에서 관현이 무관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도판으로도 읽힐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표 5〉는 관동대지진 관련 신·구판 교과서 기술 내용을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총수, 조선인 희생자 수, 학살 주체, 유언비어 관련 기술, 그리고 도판 등에 대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총수 기술에서는 종전 14만 명이라고 기술된 부분이 대부분 9~10만 명으로 축소되었다. 조선인 학살과 관련하여 희생자 수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교과서는 7종에서 5종으로 감소하였고, 학살의 주체를 관현과 자경단이라고 명확하게 기술한 교과서는 15종에서 14종으로 줄었다. 유언비어와 관련하여서는 중학교 우익 계열의 교과서가 학살사건 자체에 대한 기술을 하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기술이

〈표 5〉 일본 초중고 검정 교과서의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기술 변화²⁹⁾

	초등학교(5)		중학교(7)		고등학교(15)		합계 (27)		
	구판	신판	구판	신판	구판(14)	신판(15)	구판(26)	신판(27)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총수(14만 명)	2	0	4	0	5	0	11	0	
희생자 수 제시 (조선인 6,661명)	0	0	1	0	6	5	7	5	
학살의 주체 (자경단+군경)	2	2	2	3	11	9	15	14	
유언비어	5	5	7	5	14	15	26	25	
도판	총수	2	3	11	7	19	17	32	27
	자경단	0	0	2	2	2	2	4	4

사라졌다. 도판은 총 32개에서 27개로 감소하였고 이 가운데 학살사건을 연상시키는 자경단의 사진은 적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맺음말

일본의 초중고 교과서에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선인’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던 실상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관동대지진과 학살사건에 대한 교육은 식민지 지배와 피지배 상황에 있었던 한일

29) 구판과 신판의 합계가 각각 26종과 27종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고등학교 신판 교과서에 일본사B 교과서(실교출판사)가 새롭게 발간되었기 때문이다. 각 주제별 기술과 도표의 변화를 비교하는 〈표 5〉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유언비어 기술 경우에 전체적으로 1종이 줄었지만, 중학교 교과서 7종 가운데 이번에 2종이 유언비어 기술을 하지 않았다.

양국 관계의 실상을 엿볼 수 있으며, 현재 약 60만 정도의 '재일(在日) 코리언'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관동대지진과 학살사건에 대한 교과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총수에 대한 기술에 검정의견이 붙어 총수가 축소되는 변화가 있었으며, 희생자 수를 막연하게 기술하고 학살의 주체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한 교과서가 적고, 자경단 도판과 같이 학살사건을 연상시키는 도판 역시 적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외에도 학살 관련 기술이 본문이 아닌 칼럼이나 박스, 각주에 기술·언급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었다. 학살사건에 대한 언급 없이 경제적인 관점만을 강조한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였다는 점은 일본 보수우익 세력을 대표하는 언론보도와 관련지어 볼 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인 학살사건을 자학의 원점'³⁰⁾의 하나로 보는 일본 내 보수우익 세력의 주장이 교과서 기술에 직접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주장들을 근거로 신문보도가 이어지고 이를 문제로 삼은 부분의 교과서 기술에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코하마시와 도쿄도[東京都] 등 보수우익 성향의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위원회에서 교과서 채택에 개입하려고 부교재 기술 내용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³¹⁾ 특히 검정 교과서 외에 요코하마와 같이 보수우익 세력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의 부교재의 경우에 '학살'이란 용어 대신 '살상사건'이나 '살해'되었다는 표현으로

30) 工藤美代子(2009), 앞의 책, 8쪽

31) 『わかるヨコハマ』(요코하마市)와 『江戸から東京へ』(도쿄都)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하는 부교재의 내용 변화에 대해서는 별첨 <자료> 참조. 또 표의 밑줄과 굵은 글씨는 필자가 강조표시한 것임.





변경하였다.³²⁾ 계엄령하에서 이민족에 대한 멸시와 차별의식에 의해 ‘부당’하게 야기된 사건이므로 ‘학살’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만 교과서 공격의 영향으로 역사적 사실을 호도하는 서술경향이 검정 교과서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본 보수세력의 교과서 공격과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제도 ‘개혁’ 및 검정 강화를 통해 관동대지진과 학살사건에 대한 서술을 부분적으로 약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모든 교과서에서 기술을 삭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 기술 내용을 비교할 때,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에 놓여 있었던 근대 식민지시기에 대한 기억과 해석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공통의 역사인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의 방향에서 역사교과서가 기술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역사연구와 대화가 지속되고 활성화되면서 연구성과를 축적하는 가운데 교과서 내용 개선을 위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관동대지진의 학살사건에 대한 서술에서 식민지기에 조선인을 위해 변호활동을 하였으며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을 보호하였던 후세 다쓰지[布施辰治]를 소개하는 것은 위에서 지적한 교과서 기술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³³⁾

32) 학살의 정의에 대해서는 村山高夫·矢野久 編著(2007), 『大量虐殺の社會史』, 京都: ミネルヴァ書房 참조. 20세기의 대량학살을 자국의 정부와 군대 등 국가 권력의 주로나 집행기관에 의한 대량살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량학살로 근대 일본의 학살 사례인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을 거론하고 있다. 고등학교의 검정 교과서의 경우, 살해와 학살이란 용어가 혼재되어 있는데, 메이세이사(일본사B)와 아마카와(일본사A, 일본사B)가 신판에서 학살 대신 ‘살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33) 일본인 쉐들러(Shindler)라고 불리는 후세 다쓰지[布施辰治, 1880~1953] 변호사는 식민지 통치하에서 관동대지진 당시 한국인을 변호하고, 보호한 활동 등을 인정받아 2004년 10월에 한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이 수여되었다. 二谷貞夫 研究代表·梅野正信 編(2010), 앞의 책, 156~170쪽

【자료】 도쿄와 요코하마 지역 부교재의 관동대지진 관련 기술과 도판

제목	구분	내용	도판
『江戸から東京へ』(에도에서 도쿄로)	구판	<p><관동대지진의 발생></p> <p>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남관동(南關東) 일대를 거대한 지진이 덮쳤다. 이것이 관동대지진이다. 매그니튜드는 7.9로 추정되며, 중앙기상대가 시작된 이래의 격진으로 진원지는 도쿄에서 약 80km 떨어진 사가미만[相模灣] 북서부의 해저, 진원의 깊이는 약 15km였다. 피해는 도쿄를 중심으로 가나가와현[神奈川縣]의 쇼난[湘南] 지방·미우라반도[三浦半島]·보소반도[房總半島] 전역에 미쳤다.</p> <p>[...]</p> <p>관동대지진이 일어나자, 사회 불안과 사람들의 동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쿄시에는 계엄령이 내려졌고, 외출이 금지되었다(103쪽).</p> <p>Box : 관동대지진의 사적을 탐방해보자 (전략) ‘관동대진재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는 대지진의 혼란 속에서 수많은 <u>조선인이 학살된 것을 애도하여 1973년에 세워졌다.</u></p> <p>이처럼 요코야미초[横綱町]공원은 도민(都民)의 위령의 장이 되었다(105쪽).</p>	 <p>진재로 파괴된 아사쿠사의 상징 12층</p>  <p>도쿄도 위령당</p>  <p>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p>
	신판	<p><관동대지진의 발생></p> <p>(전략)</p> <p>관동대지진이 일어나자, 사회 불안과 사람들의 동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쿄시에는 계엄령이 내려졌고, 외출이 금지되었다(105쪽).</p> <p>Box : 관동대지진의 사적을 탐방해보자 (전략) 이 가운데 ‘관동대진재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는 지진 발생 50주년에 해당하는 1973년에 세워져, 비에는 대지진의 혼란 속에서 <u>‘조선인이 소중한 생명을 빼앗겼다’</u>고 기술되어 있다.</p> <p>이처럼 요코야미초[横綱町]공원은 도민(都民)의 위령의 장이 되었다(105쪽).</p>	 <p>복구기념관</p>

11년 판	<p>정부는 계엄령을 발동하여 군대를 요코하마에 출동시켰다. 이유는 자경단 가운데 조선인을 살해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요코하마 시내 안에서만도 다수의 희생자를 내고 말았다.</p>		폐허가 된 요코하마역	
12년 판	<p>2일 정부는 군대의 힘으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도쿄에 계엄령을 적용하였다. 소문을 믿은 군대와 경찰, 재향 군인회와 청년회를 모체로 하여 조직된 자경단 등은 조선인에 대한 박해와 학살을 자행하고, 또한 중국인도 살상했다. 요코하마에서도 각지에서 자경단이 조직되어 비정상적인 긴장 상태에서 조선인과 중국인이 학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p>		요코하마시 대진 화재 희생자 합장 묘	
13년 판	<p>2일 정부는 군대의 힘으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도쿄에 계엄령을 적용했고, 3일에는 가나가와현에도 확대되어 요코하마에 군대를 파견했다.</p> <p>이런 가운데 비정상적인 긴장 상태하에 각지에서 재향군인회와 청년회를 모체로 조직된 자경단 가운데 조선인과 중국인을 살해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자가 있었다. 요코하마 시내에서도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다.</p>			임시 청사에서의 사회 풍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김인덕(金仁德)

재일조선인사 전공, 청암대학교 재일코리아연구소 연구실장

대표논저로는 『재일본조선인연맹 전체대회 연구』(2007, 경인문화사), 『망국의 추억-재일조선인 민족운동』(2011, 재팬리서치21), 『극일에서 분단을 넘은 박애주의자 박열』(2013, 역사공간) 등이 있다.

한국 역사교육 속의 재일조선인과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청암대학교 재일코리아연구소 김인덕

I. 머리말

1982년 6월 이래 한국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로 외교와 시민적 차원에서 상흔을 갖게 되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왜곡된 일본 역사교과서 시정을 위한 노력을 해왔고, 역사학계도 관련 학술회의를 통해 상당한 연구성과를 축적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역사교과서를 둘러싸고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현재는 일본의 우경화와 함께 일본 사회 내부의 모순이 이를 증폭시키고 있다.¹⁾

한국의 역사교과서를 비롯한 한국사 관련 서적은 재일조선인 역사와 문제에 대해 제대로 지면을 할애하지 않고 있다. 재일조선인의 역사에 대한 선행

* 본고의 사진은 오충공 감독이 제공했다. 귀중한 사진을 제공해주신 오충공 감독에게 감사드린다.

- 1) 김인덕, 「일본 중학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관련 서술의 변화-재일조선인에 대한 서술을 중심으로」



〈사진출처〉 오충공

연구사²⁾를 생각해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역사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과학적 연구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가 하면 관동대지진 70주년을 기해 일본 내 각지에서 조선인 학살에 대한 재

인식의 필요성이 제고되어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사건’을 주제로 『역사평론(歷史評論)』 특집호가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서는 학살의 책임문제, 군대의 비인간적 행동, 관동대지진의 현재적 의미를 분석하고 이와 함께 관동대지진 연구의 논쟁점을 정리했다. 특히 모치스키 마사시(望月雅士)는 학살사건과 부흥론을 통해 관동대지진을 둘러싼 논점을 정리하여 학살사건론적 시각에서 유언비어 문제, 조선인 학살사건,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에 대한 평가, 중국인 학살문제, 가메이도(龜戸)사건, 아미카스(田相)사건 문제 등을 정리하고 있다.

한국의 역사교과서에서도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³⁾ 그 내용은 관동대지진은 1920년대 재일조선인의 삶을 바꿔놓은 큰 사건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절대다수의 조선인이 죽어갔고, 조선인 피해자의 신원과 전체 숫자는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5천 명이라고도 하

2) 外村大(1995. 9), 「在日朝鮮人史研究の現状と課題についての一考察-戦前期を対象とする研究を中心に」, 『在日朝鮮人史研究』 25; 김인덕(1996), 「일본지역 독립운동에 관한 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국사론』 26; 金仁德(2003), 「韓國における在日朝鮮人史の研究の現況」, 『在日朝鮮人史研究』 33

3) 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고 6천명이라고도 한다. 당시 일본에 와 있던 재일조선인은 약 8만 명이기에 때문에, 15명에 1명꼴로 희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 교과서의 서술은 국내 학계의 연구동향과 관련이 깊다. 한국 학계에서는 역사학 전공자들의 일부만이 연구를 해왔다.⁴⁾ 노주은의 일련의 연구와 연구사 정리는 1923년 관동대지진시 조선총독부의 역할과 재일조선인 정책, 조선인 학살 연구성고가 정리되어 있다.⁵⁾ 그런데 최근에는 일본 문학 연구자들도 연구성고를 생산하고 있다.⁶⁾

한편 한국에서는 1993년에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70주년을 맞아 순국선혈유족회에서 간행하는 잡지 『순국』에서 특집을 실은 적이 있다.

이 글은 한국 역사교과서 안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서술과 연구경향에서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관련 내용의 올바른 서술방향을 구체적으로

- 4) 申載洪(1984), 「관동대지진과 한국인 대학살」, 『史學研究』 38호, 한국사학회; 이진희(2008), 「관동대지진을 주도함: 일본제국의 '불령선인' 과 추도의 정치학」, 『아세아연구』 131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박경하(2009), 「1930년대 한 조선청년의 구직 및 일상생활에 대한 일고찰- 『旂判鈺日記』(1918~1947)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31호
- 5) 盧珠恩(2007), 「관동대지진과 조선총독부의 재일조선인 정책-총독부의 '震災處理' 과정을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12호; 노주은(2008),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연구의 성과와 과제: 관동대지진 85주년에 즈음하여」, 『學林』 29집, 연세대학교 사학연구회
- 6) 이지형(2004), 「마사무네 하쿠초[正宗白鳥] '살인을 저질렀지만'(人を殺したが)의 풍경-살인의 추억 그리고 관동대지진」, 『일본문화연구』 10집, 동아시아일본학회; 이지형(2005), 「관동대지진과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아들에게 보내는 편지(子に送る手紙)를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13집; 조경숙(2008), 「아쿠타카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와 관동대지진」, 『한국일본학연합회 제6회 학술대회 발표문집』; 김지연(2011), 「다케히사 유메지[竹久夢二]와 관동대지진 그리고 조선-회화와 사상성」, 『아시아문화연구』 21집,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황호덕(2012), 「재난과 이웃, 관동대지진에서 후쿠시마까지-식민지와 수용소, 김동환의 서사시 '국경의 밤' 과 '승천하는 청춘'을 단서로」, 『일본비평』 7호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국내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연구경향과 서술내용을 다시 확인하겠다. 그리고 선행연구에 기초해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서술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II. 한국의 재일조선인사 서술 경향

1. 최근의 재일조선인사⁷⁾

국내에서는 1970년대 이후 이민사 내지는 재일조선인의 현재적 문제와 관련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⁸⁾ 즉 국내에서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이후 이민사와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일정한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물론 김상현⁹⁾과 민관식이 재일조선인의 현재적 문제에서 출발한 연구와는 별도로 본격적인 연구는 김대상, 이광규, 고승제, 현규환 등이 수행했다. 전준의 경우는 경찰자료를 원용한 조총련에 대한 편향된 연구를 수행했다.

1980년대에는 국내정세의 변화와 함께 식민지시대사의 지평이 넓어져 1970년대보다 다양한 주제들이 연구되기 시작했다. 연구의 경향성을 크게 나누어 보면, 1970년대의 연장선상에서 이민사·생활실태에 관한 연구를 우선 거론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노동자 실태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리고 본

7) 김인덕(2010, 12), 「재일조선인과 관동대지진에 대한 연구 및 서술 경향」, 『한일역사 쟁점논집 - 일본 역사교과서 대응 논리』, 동북아역사재단

8) 시대별 연구 경향은 다음의 글을 참조. 임영언·김인덕(2011), 「재일코리아 연구」, 윤인진 외 지음, 『재외한인 연구의 동향과 과제』, 북코리아

9) 이 가운데 김상현의 연구가 주목된다. 김상현(1988), 『재일한국인 재일동포 100년사』, 한민족

격적으로 독일유학생 문제를 한국사 연구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하여 이후 김기주가 단행본으로 발간하였다.¹⁰⁾ 이와 함께 재일조선인 운동사에 대한 개별 논문이 여환연, 정진성 등의 연구로 나왔다.

1990년대 국내에서는 본격적으로 식민지시대 재일조선인과 재일조선인운동에 대한 연구가 전개되었다. 연구의 다양성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가운데 1980년대에 축적된 식민지시대사에 대한 연구가 주요한 기반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중요한 연구의 흐름은 노동자 상태에 관한 생활사적 연구, 본격적인 운동사에 대한 연구 그리고 강제연행기에 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그런가 하면 해방 이후 재일조선인사에 대한 연구로 최영호의 도쿄대학(東京大學) 박사학위논문이 단행본으로 나와 국내의 해방 이후 연구자와 재일조선인 연구자들에게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데 일조하고 있다.¹¹⁾

1980년대 이후 국내에서의 식민지시대 재일조선인 운동사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일천하여 전면적인 언급은 곤란하나 일본 편향적 재일조선인 연구를 극복하는 것이 자료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이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1990년대 이후 김인덕의 일련의 인물연구,¹²⁾ 정혜경의 대판지역 지역연구 그리고 단체연구와 재일조선인 이민 등에 대한 업적이 주목된다. 그리고 박경식 선생의 추도논문집이 간행되었다.¹³⁾

『한국독립운동사강의』(1998, 한울아카데미)에는 일본지역 독립운동사가 정리되

10) 金淇周(1993), 『韓末 在日韓國留學生의 民族運動』, 느티나무

11) 최영호(1995), 『재일한국인과 조국광복』, 글모인

12) 김인덕(2002), 『일제시대 민족운동가 연구』, 국학자료원

13) 정진성 외(1999), 『근·현대 한일관계와 재일동포』, 서울대학교출판부. 이후 한일민족문제학회가 출법했다.

어 있다. 아울러 단체활동 중심의 『일본지역 독립운동사 연구-1920년대 단체의 활동을 중심으로』(김인덕 저, 1998, 국가보훈처)가 나왔다. 이연식의 「해방 직후 해외동포의 귀환과 미군정의 정책」(1998,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과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의 귀환 관련 연구성과 중 재일조선인 관련 내용이 주목된다.

최근에 김인덕의 재일본조선인연맹 전체대회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¹⁴⁾ 그리고 해방 이후 재일조선인 민족교육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오자와 유사쿠(小澤有作)의 『재일조선인교육론(在日朝鮮人教育論)』이 번역·출간되었다. 그리고 김덕룡이 한국어판 책을 냈다.¹⁵⁾

김덕룡은 1945~1972년까지의 25년의 역사를 통사적으로 살펴보고, 조련과 민전 그리고 총련의 민족교육을 학교설립, 교재편찬, 교원양성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은 선행연구와 많은 1차 자료를 통해 민족교육의 상황을 서술하고 있으나, 총련 중심적인 서술을 전개하고 있어 관련 자료를 채택하는 데 한계를 안고 있다.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에 대해 국내에서도 연구논문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송기찬의 석사학위논문,¹⁶⁾ 김대성과 정희선의 박사학위논문¹⁷⁾ 등이 있다. 이들은 주로 민족교육의 실천 사례, 민족학교 현황과 문제점, 일본 정부의 교육정책 등을 분석한 연구성과다. 이와 함께 북한의 '재외동포 정책'을 다루면서 민족교육에 대해 정리한 경우도 있다.¹⁸⁾

14) 김인덕(2007), 『재일본조선인연맹 전체대회 연구』, 경인문화사

15) 김덕룡(2009), 『바람의 추억』, 선인

16) 송기찬(1999), 「민족교육과 재일동포 젊은 세대의 아이덴티티」,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7) 김대성(1996), 「재일한국인의 민족교육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정희선(2006),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운동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18) 조정남·유호열·한만길(2002), 『북한의 재외동포정책』, 집문당. 아울러 최근에는 민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한신(阪神)교육투쟁에 대해서도 연구성과가 나왔는데, 김경해, 양영후 등은 각종 구술과 실증적인 연구서를 내고 있다. 특히 김경해는 한신교육투쟁에 대한 자료집을 발간했으며, 그의 책이 번역·출간되었다.¹⁹⁾ 최근에는 국내에 일본에서 집적 투고한 글이 보이는데, 오규상의 글이 주목된다.²⁰⁾

한편 김광열, 허광무 등은 박사학위논문들 책을 간행했다.²¹⁾ 특히 김광열은 박사학위논문 「전간기 일본에서 정주조선인의 형성과정(戰間期日本における定住朝鮮人の形成過程)」(1997, 一橋大學 박사학위논문)을 책으로 공간하여, 선학의 연구에 기초하여 전전의 조선인 독일의 시기구분을 유치기(1910~1919), 억제기(1920~1938), 집단적 강제노무동원기(1939~1945)로 하고, 독일한 원인을 조선 내의 열악한 취직환경에서 찾고 있다. 또한 독일규제정책과 독일한 조선인의 상태에 대해 밝히고 있는데, 제1차세계대전 이후부터 시작된 독일규제는 기본적으로 여비 이외의 여윳돈이 있거나 취직선이 확실하며, 신원이 분명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이를 만족하는 자만을 도항을 허가하는 것이라는 통설을 정리했다. 그리고 규제는 몇 번에 걸쳐 추가·강화되었으며, 1930년대 중반에는 일본 정부 방침으로 총력적인 독일억제체제가 확립되었다고 한다.

족교육의 실태와 관련하여 조선학교와 민족학급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岸田由美(1993), 「在日韓國·朝鮮民族學校の史的變遷及び現状」, 筑波大學大學院修士論文; 宋基燦(2012), 『「語られないもの」としての朝鮮學校』, 岩波書店; 中島智子(2013), 「第2部 コリア系學校」, 『「外國人學校」の社會學』, 大阪大學]

19) 정희선 외 역(2006), 『1948년 한신교육투쟁』, 경인문화사

20) 오규상(2007. 8), 「조선학교가 걸어온 길」, 『민중의 소리』 참조.

21) 김광열(2010), 『한인의 일본이주사 연구(1910~1940년대)』, 논형; 허광무(2011), 『일본제국주의 구빈정책사 연구: 조선인 보호 구제를 중심으로』, 선인

2. 재일조선인사 서술의 일반

그나마 한국의 근현대사를 다룬 교과서가 재일조선인사에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²²⁾ 2007년도 국내 근현대 교과서에서는 재일조선인과 관련해서 제한된 서술밖에는 하고 있지 않다. 주요한 내용은 ‘일본 이주 동포’, ‘학우회’, ‘2·8독립선언’, ‘이봉창의거’ 그리고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먼저 ‘일본 이주동포’에 대해서 보면, 19세기 말에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들은 정치적 망명자와 유학생들이었다. 1910년 이후에 일본으로 건너간 재일조선인은 생계유지를 위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그들의 도일은 철저히 일본 정부의 정책에 따라 좌우되었다. 두산출판사와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유사하다.

국권 피탈 이후에 일제의 경제적 수탈이 강화되자 생활 터전을 상실한 농민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산업 노동자로 취업하게 됨으로써 이주민이 증가하였다.²³⁾

주권을 상실하고 일제의 경제적 수탈이 강화되자 생활 터전을 상실한 많은 농민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산업 노동자로 취업하였다. 이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본인 자본가에게 착취당하였으며, 민족 차별로 온갖 수모를 당하였다.²⁴⁾

22) 이하의 내용은 필자의 글과 관련 교과서를 참조. 김인덕(2007. 9), 「한일 양국의 근현대사 서술과 재일조선인사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17호, 동북아역사재단

23)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2007, 두산출판사, 219쪽

24)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2007, 금성출판사, 222쪽

이주 노동자들은 일제의 자본가들에게 착취당하면서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고통을 겪었다. 그리하여 이들 일본 이주민들은 다른 어느 지역 이주민보다 배일사상과 민족의식이 강하였다.²⁵⁾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광복 이후 돌아왔지만, 남아 있는 인구도 적지 않아 오늘날 재일 동포 사회가 이루어지는 토대가 되었다.²⁶⁾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도입은 시기적으로 그 모습이 달랐다. 1920년대 도입은 유학생과 독신이 많았고, 1930년대 경우는 정착의 길로 이행해갔다. 결국 이들은 민족적·계급적 차별을 받았고 배일의식과 민족의식을 강하게 갖게 되었다. 여기에는 노동환경이 큰 역할을 했다. 결국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남게 되어 오늘날 재일조선인 사회가 형성되었다.

재일조선인 유학생 문제를 다룰 때 ‘학우회’에 주목한다. 일본지역 유학생 단체의 핵심적인 학우회는 재일본동경조선유학생학우회(이하 ‘학우회’로 줄인다)이다. 이 학우회는 대중강연과 기관지 『학지광』을 발간하여 당시 사회발전 이론과 반일투쟁을 선도했다.

두산출판사 교과서는 학우회를 ‘조선 유학생 학우회’로 지칭하고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유학생 간의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면서 각종 모임을 통하여 배일사상과 애국심을 고취하고 일본인의 잘못된 한국인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²⁷⁾

25)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2007, 두산출판사, 219쪽

26)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2007, 금성출판사, 222쪽

27)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2007, 두산출판사, 220쪽

학우회는 일본인의 잘못된 '한국인관'을 시정하는 노력보다는 반일투쟁을 전개했다. 학우회는 유학생조직으로 대중적인 반일투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일찍이 '2·8독립선언'에 대해 2002년 판 중학교 교과서는 3·1운동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재일유학생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²⁸⁾ 2·8독립선언 결의문을 '읽기자료'로 배치했다.

교과서 개편에서 2·8독립운동에 대한 서술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두산출판사 교과서도 그 내용은 거의 동일한데, 3·1운동과 관련지어 서술하고 있다.

유학생들은 1919년 2·8 독립 선언을 발표하였으며 국내에서 3·1운동이 일어나자 동맹 휴학을 한 후 국내로 들어와 만세시위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²⁹⁾

한편 이봉창의 경우 '재일' 경험이 그에게 반일투쟁을 일깨워 주었다. 문제는 그의 일본 경험에 대한 서술이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두산출판사 교과서는 이봉창의 투쟁을 서술하면서, 김구의 역할과 역사적 의의를 높이 평가했다.

김구의 지령을 받은 이봉창은 단신으로 일본 도쿄에 가서 관병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일본 국왕이 탄 마차를 향해 일본 왕궁 부근에서 폭탄을 던졌으나 …… 이 의거는 대륙 침략에 나선 일제에게 한민족의 항일 의지를 보여

28) “일본에 있던 한국인 학생들은 이렇게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독립 운동의 기회로 생각하여, 일본 도쿄에서 조선 청년 독립단을 조직하고 한국의 독립을 요구하는 독립선언서와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이것이 2·8 독립 선언이다.(1919. 2. 8)” 『중학교 국사』, 2002, 265~266쪽

29)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2007, 두산출판사, 220쪽

준 것이며, 일본에게는 경종을 울려준 것이었다.³⁰⁾

실패로 끝난 이 사건은 결국 상하이사건의 발미를 제공했다. 상하이사건이란 일제가 만주국 수립 음모에 대한 세계의 이목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상하이를 무력 침공한 사건이다. 이봉창의 일본 국왕 저격에 대한 중국 신문의 보도는 “불행하게도 뒤따르던 마차 폭파에 그쳤다.”고 되어 있었다.³¹⁾ 이것이 발미였다.

3. 1923년 관동대지진 속 조선인 학살 서술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가 간행한 『중학교 국사』에는 1923년 일본의 관동대지진시 조선인 학살에 관한 언급이 없다. 이 책의 연표에도 1923년 자체가 기록에서 빠져 있다. 그리고 2011년 개정된 『중학교 국사』(하)의 두산·동아출판사와 대교출판사, 그리고 (주)미래엔에도 서술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이들 출판사가 간행한 본 교과서의 연표에서도 동일하게 다 빠져 있다. 이에 반해 (주)교학도서와 천재교육이 간행한 교과서에는 일부 확인된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교학도서가 간행한 『중학교 국사』(하)에서는 ‘열린 자료’라는 서술에서 사진과 그 내용에서 ‘간토대지진과 한국인 학살’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1923년 일본 간토 지방에 큰 지진이 발생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고 민심이

30)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2007, 두산출판사, 184쪽

31)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2007, 금성출판사, 188쪽

크게 흔들렸다. 일본 당국은 “조선인 폭도가 떼를 지어 몰려다니며 불을 지르고 일본인을 죽이고 우물에 독약을 넣고 부녀자를 폭행한다.”는 소문을 퍼뜨려 사회불안을 한국인 탓으로 돌려 위기를 벗어나려 하였다. 그 결과 군인, 경찰, 자경단, 청년단, 소방단에 일반인들까지 합세하여 한국인을 무참하게 학살하였다. 일주일 동안 무고하게 학살당한 한국인은 6천여 명이나 되었다.³²⁾

천재교육이 간행한 『중학교 국사』(하)³³⁾에서는 ‘관동대지진 당시 제일한국인 학살’이라는 설명을 부가한 사진을 서술하면서 “1923년 일본 관동 지방에서 대지진이 일어나자, 일본은 사회 불안의 원인을 한국인의 탓으로 돌렸다. 이에 일본인들은 자경단을 조직하여 한국인을 학살하였다.”라고 했다.³⁴⁾

고등학교용 『고등학교 동아시아사』를 보면, 교학사 간행본에는 서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천재교육이 간행한 것에는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이 서술되어 있다.

1923년 간토 지방에 대지진이 일어났다. …… 대혼란 속에서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 “조선인이 우물에 폭약을 넣었다.”라는 등의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퍼져, 군대·경찰과 민중이 약 6,700명의 한국인을 학살하였다. …… 정부는 ‘조선인 폭동’이라는 유언비어를 이용하여 계엄령을 공포하고, 청년단·재향군인회·소방단 등으로 자경단을 조직하여 무고한 한국인을 살해하였다. -한일 교류의 역사³⁵⁾

아울러 천재교육이 간행한 교과서 연표에도 ‘1923년 관동대지진 발생’으

32) 『중학교 역사』(하), 2012, (주)교학도서, 95쪽

33) 천재교육, 2012

34) 『중학교 역사』(하), 2012, 천재교육, 92쪽

35)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2012, 천재교육, 196쪽

로 기록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두산출판사 교과서에서는 일본 내 민심의 동요와 유언비어에 주목한다.

1923년 일본 관동 지방에서 발생한 대지진은 인명과 재산상의 큰 피해를 냈을 뿐만 아니라 일본 내의 민심도 크게 동요시켰다. 이때 일본 당국은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켜 일본인을 죽이고 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사회 불안의 원인을 한국인 탓으로 돌림으로써 광분한 일본인들이 한국인을 공격하게 되었다.³⁶⁾

최근 간행된 고등학교 한국사의 기술은 다음과 같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일본으로 이주한 재일 한국인들은 관동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겪었다. 일본 당국이 한국인에 대한 적대감을 조장하여, 대지진으로 인한 일본의 사회 불안을 마치 한국인 탓인 것처럼 위장했기 때문이다. 일본 당국과 언론은 “조선인이 방화했으며, 우물에 독약을 뿌리고, 일본인을 살해하며, 일본 여인을 강간한다.”라는 등의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퍼뜨렸다. 이에 따라 한국인에게 적대심을 갖게 된 일본인에 의해 적어도 6,000명 이상의 재일동포들이 무참히 학살당하였다.³⁷⁾

관동대지진이 일어난 1923년 9월은 조선인에게서는 학살의 날이었다. 조선인 학살은 준비된 행동이었다. 그리고 직접적인 원인은 유언비어와 일본 정부의 정책, 즉 사회주의자 척결과 불령선인의 정리였다. 두산출판사 교과서는 일본 내 민심의 동요와 유언비어에 주목했다.

결국 재일조선인 6천 명 이상이 이 사건으로 죽어갔다. 관동대지진의 키워

36)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2007, 두산출판사, 220쪽

37) 『고등학교 한국사』, 2012, (주)미래엔, 265쪽

드는 조선인 학살과 대참사다.

그런가 하면 일본에 '잔류'한 재일조선인 문제도 현대 한일관계를 고려할 때 중요한 문제다.³⁸⁾ 문제는 이들의 귀환을 다룬 책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서술하더라도 단순히 '독립지사'의 귀환만을 언급하는 수준이고, 해외 한인의 이주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III. 관동대지진 속 조선인 학살³⁹⁾ 서술안

1923년 관동대지진은 1920년대 재일조선인의 삶을 바꿔놓은 큰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절대다수의 조선인이 죽어갔다. 민단의 역사교과서는 “조선인 피해자의 신원과 전체 숫자는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5천 명이라고도 하고 6천 명이라고도 한다. 당시 일본에 와 있던 재일조선인은 약 8만 명이기 때문에, 15명에 1명꼴로 희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⁴⁰⁾고 했다.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서술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38) 최영호(2007. 9), 「한국과 일본의 중고교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현대 한일관계 관련 서술」, 『동북아역사논총』 17호, 200쪽
- 39) 본 내용은 김인덕의 『한국독립운동사사건』(1-5)(2004,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의 '관동대지진과 조선인학살사건'을 참조, 아울러 다음의 글로 보완했다. 姜德相(1975), 『關東大震災』, 中央公論社; 김건(1976), 「학살」, 『한국독립운동사』 3, 국사편찬위원회; 朴慶植(1979), 『在日朝鮮人運動史8·15解放前』, 三一書房; 이연(1992), 「관동대지진과 언론통제조선인 학살사건과 보도통제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27; 松尾章一(1993), 「關東大震災の歴史研究の成果と課題」, 『多摩論叢』 9, 法政大學校; 김인덕(1993. 9), 「재일운동사 속의 1923년 조선인 학살」, 『순국』 32; 강덕상 지음, 홍진희 옮김(1995), 『조선인의 죽음』, 동쪽나라
- 40) 『역사 교과서 재일 코리언의 역사(在日コリアンの歴史)』 작성위원회 펴냄, 신준수 외 옮김(2007), 『역사 교과서 재일 코리언의 역사(在日コリアンの歴史)』, 역사넷, 72쪽

1.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일본의 간토(關東) 일대에 일어난 대지진과 유언비어로 인해 조선인이 학살된 사건. 1923년 9월 1일 대지진은 도쿄(東京)·요코하마(横浜) 일대를 혼란에 빠뜨렸다. 간토 지방에 2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10만 명의 사망자를 냈으며, 100억 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도쿄·요코하마를 비롯한 시가지에서는 지진 직후부터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가 확대되었다. 관동대지진이 일어난 전후의 재일 조선인에 대해 살펴보면, 재일조선인의 형성은 1914~1917년 제1차세계대전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조선의 궁핍에 그 원인이 있었고, 그것은 곧 식민지 통치 때문이었다. 소작인 출신으로 일본에 건너간 재일조선인은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했으며 주로 자유노동에 종사하였다. 저임금을 요구하는 소공장에 고용된 조선인 노동자는 낮은 임금에 시달렸으며 일본 자본 착취의 제1대상이 되었다. 이들은 일본 자본주의의 최하층 노동자로 편입되었다. 그리고 철저히 일본 경제의 필요에 따라 수요·공급이 조절되었다. 이들 조선인 노동자는 4대 공업지대에 집중되었다.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 도쿄에 있던 조선인의 수는 대체로 9천 명으로 노동자는 약 6천 명, 학생은 3천 명 수준이었다. 일제는 노동과 학업을 위해 도일한 조선인을 주목하며 지속적으로 감시하였다. 1920년 간행된 『조선인개황(朝鮮人概況)』에서는 “불령선인(不逞鮮人)의 배일사상이 1919년 독립소요 발생 이래 점점 경화의 모습이 있는 것은 주목할 사실이다.”라고 하였다. 1922년 간행된 『조선인근황개황(朝鮮人近況概況)』에서는 “최근 일본 재류 조선인 학생 중 점차 공산주의에 감염되어 일본인 사회주의자에 접근하는 자가 나타나고”라고 하여 재일조선인 사상의 추이를 파악하였다. 특히 1923년 3·1운동기념일에 일본 경시청은 상해 프랑스 조계의 상하이(上海) 고려공산당과 하와이 조선

인 단체가 연락하고 있다는 정보를 탐지하고, 만일 폭동이 일어나면 검거하기 위해 파출소장이 중심이 되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다.

2. 유언비어

최소한 6천 명 이상이 학살당한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이 학살당하게 된 요인은 유언비어였다.

조선인을 학살한 유언비어는 9월 1일 오후 1시경부터 유포되기 시작하여 2~3일 사이에 퍼돌았다. 그 내용은 주로 조선 사람들이 관동대지진의 혼란을 틈타서 폭행·약탈·방화·부인능욕·폭탄투척·집단습격·우물에 독극물을 투입했다는 등이었다. 특히 1일 오후 3시경에는 사회주의자와 조선인의 방화가 많다는 유언비어가 나돌았다. 터무니없었던 유언비어의 내용을 살펴 보면, ① 조선인들이 분필로 표시를 하여 폭탄을 던지도록 하였다, ② 조선인들이 폭탄을 가지고 다닌다, ③ 흰 셔츠에 통이 좁은 바지를 입은 남자와 한국 옷을 입은 여자가 독약을 우물에 넣고 있다, ④ 폭탄과 독약을 가지고 다니는 조선 사람이 있었다, ⑤ 각처에 조선인이 폭행·습격·방화 등의 계획을 암호로 기록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허무맹랑한 것이었다. ①의 경우는 청소회사 인부들이 작업 할 집을 표시한 것이었다. ②의 경우는 조선인이 갖고 다닌 것은 폭탄이 아니라 사과였다. ③의 경우는 독약을 우물에 넣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여자들이 쌀을 씻은 것이었다. ④의 경우는 폭탄과 독약은 각각 파인애플 깡통과 설탕이었다. ⑤의 경우는 조선인이 테러를 위해 기록을 남겼다는 내용은 사실은 분노수집인과 신문·우유 배달부들이 단골집을 표시해둔 것이었다. 그리고 조선인이 폭발물을 소유하였다고 하는 사실은 고춧가루였다.

군경이 날조한 유언비어는 일본 국민 사이에 빠른 속도로 유포되었다. 일본 사람들이 유언비어를 믿었던 원인으로서는 다수가 천황제 국가의 충실한 신민으로 위로부터의 말을 맹신하고 국가가 인정하면 주저없이 조



〈사진출처〉 오충공

선인, 중국인을 학살할 수 있는 정신구조를 갖고 있었던 것이 제1의 원인이었다. 그 근거에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통해 민중의식에 깊이 뿌리내린 조선, 중국 멸시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의 차별의식만으로는 이 정도의 대량 학살사건을 유발하지 못했을 것이다. 둘째로 신문을 통해 조선인에 대한 공포감이 민중에게 뿌리내린 것이었다. 셋째로 도쿄·요코하마 등의 도시 공업지대에서는 일본인 하층노동자들이 불황의 불안에서 조선인, 중국인 노동자를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상대로 보고 여기에 반감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3. 일본 사회운동과 치안상황

1920년대 일본에서는 사회운동이 활발해져 1921년에는 일본노동자총연맹이 결성되었고, 1922년 4월에는 일본농민총조합이 조직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에는 일본공산당이 조직되었다. 이때 관동대지진이 발생하자 민심은 더욱 흥흥하게 되었고, ‘조선인 내습’이라는 등의 유언비어가 급격히 전파되면서 흥분한 일본의 군·관·민들이 조선인들을 학살하게 되었다. 이 진상

(真相)을 분명히 하려면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은 은폐되어 거의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계엄령 선포로 언론이 통제되고, 계엄사령부와 치안당국이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은폐했기 때문이다.

4.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조선인 학살

현재 유언비어의 진원지는 여러 가지 설(說)이 있는데, ① 내각설, ② 군별설, ③ 경시청설, ④ 가메이도(龜戸)설, ⑤ 사회주의자설 등이 있다. 지진이 발생했던 당시 도쿄에는 수많은 이재민들이 히비야(日比谷)공원이나 궁성 앞 등지에 50만 명, 우에노(上野)공원·야스쿠니(靖國)신사 등에 10만 명 정도의 군중이 모였다. 그들은 부모형제와 헤어지거나 집이 불에 타 목숨만 부지해서 피난 나온 자들로, 이들 군중은 후속되는 여진과 함께 사회불안의 큰 요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민중 대집단들이 먹을 것을 요구하고 있던 극도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치안당국자들은 대책수립에 부심하게 되었다.

당시 내무대신 미즈노 렌타로(水野鍊太郎), 내무성 경보국장 고토 후미오(後藤文夫), 경시총감 아카이케 미노루(赤池濃) 세 사람이 이재민 구호와 치안대책을 숙의하게 되었다. 마침 다이쇼(大正)는 와병으로 낮고(日光)에 요양 중이고, 쇼와(昭和) 천황은 어릴 때였으며, 가토 도모사부로(加藤友三郎) 총리대신은 와병으로 사임하여, 우치다 고사이(内田康哉) 외상이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을 때여서 사실상 전술한 세 명이 최고 결정권자였다. 이 세 사람은 일찍이 내무성에 근무하였으며, 1918년 쌀소동 때는 치안당국자로 민중 탄압의 선두에서 과잉진압을 자행했던 인물들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민중 폭동의 힘을 잘 알고 있었다. 3·1운동 때 미즈노 렌타로는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으로, 아카이케 미노루는

경무국장으로 각각 부임하여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조선총독 밑에서 조선인의 반일투쟁을 무력으로 탄압하였다. 이상과 같은 경험으로 이들은 일본인 군중의 폭동이나 조선 민중의 독립운동에 대한 거대한 위력과 두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경보국장 고토 후미오는 9월 1일 오후 진재의 참상을 둘러보고, 불안한 민심을 진정시키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비상수단으로 계엄령을 선포해야 한다는 결의를 이미 관계자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경시총감 아카이케 미노루도 진재의 참상을 둘러보고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돌발적인 불행한 사태를 심히 우려하면서, 궁성 내에 있던 내무대신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궁성을 나온 아카이케 미노루는 경보국장과 민중 폭동으로 치안사태가 일대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하게 된다. 아카이케 미노루는 대화에서 가토 도모사부로와의 대화에서 군당국자에게 군대의 출병을 요청하고 내무대신에게 계엄령 선포를 건의하였다면, 경찰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전력을 기울여 치안유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때가 오후 2시경이었다. 참상을 보고받은 내무대신 미즈노 렌타로도 같은 생각이었다. 문제는 계엄령을 선포할 구실이 없었다. 계엄령의 선포에는 전시나 내란이 전제 조건인데 반해 관동대진재는 단지 지진에 따른 혼란일 뿐 전쟁도 내란도 아닌 상태였다. 미즈노 렌타로는 계엄령 선포 이유를 ‘조선인 내습’이라는 폭동설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상과 같이 일본 정부는 9월 2일 오후 6시를 기해서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사실 ‘조선인 폭동설’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실제로는 조선인들의 학살사건을 은폐하고 당시의 불안하던 국내정세 속에서 일본의 집권자들의 권력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조선인 폭동에 관한 유언비어는 1일 저녁부터 일본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전파하였다. 첫째, 지바(千葉)



〈사진출처〉 오충공

현 선교(船橋) 해군송신소에서 내무성 경보국장 명의로 전국의 부(府)·현(縣)·지사(知事)에게 보낸 전문은 “도쿄 부근의 진재를 이용해서 조선인들이 각지에서 방화하고, 현재 도쿄 시내에서는 폭탄을 소지한다든지 석유

로 방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미 도쿄부에는 계엄령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각지에서는 시찰을 강화하여 엄밀히 단속할 것” 등의 내용이였다. 둘째, 간토 각 현에 보낸 조선인의 폭동을 단속하는 내무성의 통달문에는 다수의 불령선인이 과격사상을 가진 자와 규합하고 있으니 각지에서는 재향군인회와 소방수, 청년단원 등과 일치·협력해서 그들을 경계하고, 일단 유사시에는 신속히 적당한 방책을 강구할 것 등을 알렸다. 이것은 사실상 조선인 살해를 허가하는 내용이였다.

5. 일본 언론

관동대지진 당시 일본 언론들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보도하여 조선인들의 학살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였다. 《東京日日新聞》은 9월 1일자로 일본에서 최초로 관동대지진에 관한 뉴스를 호외로 발간하였고, 9월 3일에는 ‘불령선인’이라는 조선인에 대한 차별적인 용어도 최초로 사용하여 1면 톱으로 보도하였다.

또한 “조선인 200명이 경찰과 충돌하여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현장에서 20명을 검거했으나 모두 달아났다. 불명선인들이 절도·강간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보도 내용은 모두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었다. 일본 정부의 고지(告知)에 흥분한 일본 민중은 9월 1일 저녁부터 조선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하였다. 군경이 출동해서 학살을 자행하고 군인과 경찰의 지도로 자경단을 구성하여 조선인이라고 확인되면 현장에서 살해했다.



〈사진출처〉 오충공

희생자들은 거의 일본어를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었다. 여기에는 어린이나 임신부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학살방법은 죽창이나 철장, 몽둥이, 총칼 등으로 닥치는 대로 학살하여 강물에 버리거나 소각 또는 매장하여 학살 사실조차도 철저하게 은폐했던 것이다. 조선인의 학살이 본격적으로 자행된 것은 4일을 전후해서이며 도쿄에서 가장 심했던 곳은 가메이도(龜戸)경찰서로, 하루 저녁에 312명이나 학살된 사건도 있었다. 그 외 요코하마·지바·사이타마(埼玉)·군마 현 등에서도 수천 명이 학살되었다. 조선인 학살과 마찬가지로 ‘중국인 폭동설’이 유포되어 중국인도 학살되었다.

6. 6천 명이 넘는 조선인의 죽음

일본 정부는 조선인 학살을 소수 일본 국민들이 우발적으로 일으킨 양 다루면서 진상에 대해 한 번도 공식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23년의 조선인 학살사건은 일본 정부의 유언비어에 일본 민족이 현혹되어 관동대지진을 빌미로 조선인을 학살한 것이었다.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는 일본의 각 신문에 당시 간토지방에 살고 있던 조선인은 노동자 3천, 학생 3천, 합계 6천 명으로, 이 중 조사 결과 살해당한 자는 2명뿐이라고 하였다. 사실의 은폐는 일본 정부 발표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는 1923년 11월 15일 현재 피살자 233명, 중상 15명, 경상 27명으로 발표하였다.

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상조사를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 바 있던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는 '조선진재동포위문단'에서 2,613명이라고 밝혔다.

김승학의 조사에 따르면 학살된 조선인은 관동 전체에서 6,661명이었다. 최근 일본의 학계에서도 대체적으로 6,000명은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당시 간토지역 인구통계에 기초해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조선인은 1만 명이상이 학살당했던 것으로 보기도 한다.

7. 일본 사회주의자

관동대지진 당시 일본 정부에서 계획·조작한 유언비어로 인해 조선인 학살사건 이외에도 가메이도사건·오스기(大杉榮)사건이 발생하였다. 1923년 관동대지진이 일어나 조선인 학살이 자행될 시기 일본 국내는 대중운동의 고양기였다. 쌀소동 이후 대중운동은 점점 성장하여 1922년 7월 일본공산당이 결성되었다. 일본공산당은 일본 운동의 전위임을 자임하며 대(對)러시아 간섭 반대 대중운동을 조직하고 3대 악법 반대투쟁을 주도하였으며, 특히 일본 내 활동가들은 조선 민중과 불충분하나마 공동전선을 구축하여 조·일연대의 투쟁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관동대지진이 발생하자 달라졌다. 지금까지

지 조·일노동자의 계급적 연대를 내걸던 사회주의·노동운동세력은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국제적 연대를 내버렸다. 9월 3일 오후 10시경 사회주의자가 검거되었고 다음 날 학살되었다. 사회주의자의 검거는 대체로 3일 밤과 4일 이후였다.

문제는 관동대지진이 일어난 1일부터 사회주의자는 무엇을 했는가다. 사회주의자들은 자경단의 일원으로 학살자 측에 섰던 것이다. 이들은 충실한 충견으로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민족적 이해에 복무하였다. 즉 관동대지진으로 사람들의 평판이 극에 달했을 때인 9월 1일부터 4~5일간 적극적으로 조선인 학살에 참여하였다. 일본노동총동맹은 1924년 1월 일본 노동운동가를 살해한데 대한 규탄성명을 냈는 데 반해 조선인 학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관동대지진 직전까지 “조선 노동자는 우리들의 동료이고 우리들의 형제이며 우리들의 전우다.”라고 연대적 입장을 주장하며 공동투쟁을 강조한 사람들이 바로 일본의 사회주의자와 노동운동가들이었다.

8. 조선인 학살과 그 뒤

1923년 관동대지진이 발생하고 조선인들이 무참히 죽어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재일조선인 조직은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재일조선인 가운데 선진적인 활동가들은 투옥되거나 감금상태였기 때문에 학살사건에 대응하는 전술도 없었고 규탄활동을 할 체제도 갖추지 못하였다. 물론 일본 노동자와의 국제적인 연대도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았다. 그들에게 연대의식이란 평상시 일상적인 수준에 머문 것이었다.

1923년 학살 이후 죽을 고비를 넘긴 조선인들은 당시 소실을 면한 유일한 조선인 단체였던 천도교 청년회 사무실에 모였다. 예정없이 모인 왕시진·이

철·한위건·김은송·이동제·고재욱·이욱·김낙영·최승만·박사직·이근무 등은 제기된 문제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여 도쿄지방이재조선인구제회가 중심이 되어 조사사업에 착수하였다.

한편 상해회의 박춘금은 조선인이 무참히 학살당한 상황인데도 학살의 주범인 경시총감 아카이케 미노루를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경시총감이 박춘금 등의 상해회 일파의 신변을 보호해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상해회 일파는 선두에 서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화합을 과시하듯 지진 뒷정리의 일환으로 도쿄 시내 청소를 하였다. 이후 일제 주구인 상해회는 그들의 지원 아래 세력을 확장해갔다.

9.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의미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일본 정부는 일본인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식적 이나마 책임을 묻은 반면 조선인 학살자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다. 특히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했으며 희생자·유가족에 대해 한마디 애도의 말도 없었고 보상은 말할 것도 없다.

9월 1일 아침, 학교에서 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잠시 놀고 있었다. 점심 때가 되어 어머니가 불을 피우고 있는데, 갑자기 흔들흔들 집이 심하게 흔들리더니 물이 나왔다. …… 조선인이 사람을 죽이고 난폭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조선인이 오니까 모두 모이시오.’라고 해서 몸이 딱 얼어붙어서 부들부들 떨렸다. …… 오빠와 언니는 어머니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나섰다. 마침 그때 조선인이 도망오는데, 그 뒤에 사람들이 통나무나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와서 그 조선 사람을 때리고 있었다. 그 중 한 조선인은 죽어버렸다.⁴¹⁾

IV. 맺음말

한국에서의 재일조선인 연구사를 정리하려면 문제점이 있다. 첫째, 총체적 시각의 부재다. 둘째, 사회 집단으로서 재일조선인 사회 형성의 실체와 일본인과의 관계 파악의 제한성이다. 셋째, 단절된 시기별 연구의 경향성 등이다.

재일조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교과서는 현재 '자이니치[在日]'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현재 그대로의 민간계와 총련계가 울드커머, 뉴커머 등의 존재를 서로 인정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에서 시작해야 한다. 특히 정치적인 관점에서 먼저 이해의 폭을 넓히려는 시도와 동시에 동아시아 공동체 역사 속의 일부라는 관점에 설 필요가 있다.

그런가 하면 현재 한국의 역사교과서가 과연 이런 관점을 견지하려고 했는지 의문이다. 동시에 한국 교과서는 일본 이주, 2·8독립선언과 3·1운동, 이봉창의거, 관동대지진, 강제연행 등에만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보다 다양한 주제에 대한 서술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일본 시미즈쇼인(清水書院) 간행 중학교과서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서술 내용은 한국에서도 적극 참고해야 할 것이다.

본문에서 서술안을 통해 기술했듯이, 1923년 관동대지진의 의미를 재일조선인에 맞춘다면 구체적인 재일조선인의 움직임이 서술되는 것도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상해회의 박춘금은 조선인이 무참히 학살당한 상황인데도 학살의 주범인 경시총감 아카이케 미노루를 방문하고, 도쿄 시내 청소를 청원하

41) 「조선인 학살에 대한 일본어린이 증언수기」(본 내용은 『조선인 학살관련 아동증언자료』, 1989, 녹음서방의 일부임), 『순국』 32(1993. 9)

고 적극 수행했던 점이다.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은 실상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이에 기초한 역사교육 현장에서의 활용이 절차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적 차원의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일 역사논쟁이 아닌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본적 공유차원에서 공동조사단을 조직하는 일도 절실하다. 물론 시민사회의 적극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제3부

관동대지진과 남겨진 과제들

1. 장세윤 _ 관동대지진시 한인 학살에 대한 <독립신문>의 보도와 최근 연구동향
2. 모리카와 후미토 _ 1923~2013년 관동대지진 90년, 우리들은 국가·민족을 극복했는가?
3. 김중수 _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을 규명하는 한국에서의 시민운동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장세운(張世胤)

한국근대사·근현대 한중일관계사 전공,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대표논저로는 『중국 동북지역 민족운동과 한국현대사』(2005, 명지사), 『1930년대 민주지역 항일무장 투쟁』(2009, 독립기념관), 『History Education and Reconciliation – Comparative Perspectives on East Asia』(공저, 2012, Peter Lang), 『韓日強制併合100年－歴史と課題』(공저, 2013, 明石書店) 등이 있다.

관동대지진시 한인 학살에 대한 《독립신문》의 보도와 최근 연구동향

동북아역사재단 장세윤

I. 머리말 - 진상규명을 위한 현황 파악의 필요성

2013년 9월 1일은 일본의 관동대지진 발생 90주기였다.¹⁾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대지진 발생 이후 일본 당국과 군경, 자경단(自警團) 등이 무고한 한인들을 대거 학살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그동안 관동대지진시 학살된 한인(조선인) 문제에²⁾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아직 그 진상을 규명하기에는

1) 관동대지진은 1923년 9월 1일 일본 관동지방과 일부 시즈오카·야마나시 지역에서도 발생한 진도 7.9의 대규모 지진이였다. 이로 인해 사망자 10만 5천여 명, 부상자 11만 5천여 명의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진으로 민심이 흉흉해지자 일본 내 무성은 계엄령을 선포하며 사태수습에 나섰으나 혼란이 심해지자, 일본 국민들의 불만을 한인들과 일부 사회주의자들에게 돌리기 위하여 이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조직적으로 유포하여 사태를 악화시켰다[강덕상(2005), 『학살의 기억, 관동대지진』, 역사비평사, 27~33쪽, 야마다 쇼지 지음, 이진희 옮김(2008),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일본 국가와 민중의 책임』, 논형, 100~118쪽; 김인택(2004), 「관동대지진과 한국인 학살사건」, 『한국독립운동사사전(운동·단체편)』 3, 독립기념관, 308~311쪽].

2) 필자는 ‘한인(韓人)’이란 명칭을 주로 사용코자 한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임시정부나

요원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관동대지진의 발생과정이나, 그 피해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일본의 중앙방재 회의에서 2006년 공식보고서(제1판)를 간행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공식기관에서 어떻게 한국인 관련 부분을 정리했는지 궁금하다. 하지만 아쉽게도 필자는 아직 이 책을 보지 못했다. 추후 일본 측의 공식통계는 이 보고서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³⁾

관동대지진시 한인(조선인) 문제에 대해서는 강덕상(姜德相)과 야마다 쇼지(山田昭次, 금병동(琴秉洞) 선생 등이 일찍이 관심을 갖고 자료집과 전문적 단행본을 간행한 바 있다.⁴⁾ 특히 강덕상은 1990년대 말에 주목되는 일련의 논문을 발표하여 학계의 관심을 끌었다.⁵⁾ 강덕상의 한인학살 관련 일련의 저작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국내에서 번역·간행되었으나,⁶⁾ 2000년대에 진입하여 한일 관계사와 한인 학살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학살의 기억, 관동대지진』이란 제목으로 2005년에 재번역·출간되어 한국에서도 재일한인의 피해

그 기관지라 할 수 있는 《독립신문》에서 ‘한인’이란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일조선인’ 등 일본에서 관례적으로 쓰는 사례가 많으므로, 경우에 따라 ‘조선인’으로도 표기하기로 한다.

- 3) 『災害教訓の繼承に關する専門調査會 編(2006), 『一九二三 關東大震災報告書』 第1編, 東京: 中央防災會議
- 4) 姜德相·琴秉洞 編(1963), 『現代史資料 6: 關東大震災と朝鮮人』, 東京: みすず書房; 姜德相(2003), 『關東大震災·虐殺の記憶』, 東京: 青丘文化社; 琴秉洞 編(1991), 『關東大震災 朝鮮人虐殺問題關係史料』 2(朝鮮人虐殺關連 官廳史料), 東京: 綠陰書房; 山田昭次 編·解説(2004), 『朝鮮人虐殺關連 新聞報道 史料』, 東京: 綠陰書房
- 5) 강덕상(1998), 「1923년 관동대진재(震災) 대학살의 진상」, 『역사비평』 45호; 강덕상(1999), 「관동대진재 조선인 학살을 보는 새로운 시각-일본측의 '3대테러사건' 사관의 오류」, 『역사비평』 47호
- 6) 강덕상 지음, 홍진희 옮김(1995), 『조선인의 죽음』, 동쪽나라; 홍진희(1998), 『관동보고서: 관동대진재 조선인 학살』, 나무와 숲

와 피학살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⁷⁾ 아마다 쇼지의 책도 2008년에 번역되어 이 문제에 대한 연구와 국민 계몽에 이바지하고 있다.⁸⁾

관동대지진 때 한인 학살의 진상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피살된 한인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⁹⁾ 지진 발생 직후부터 일본 당국과 조선총독부에서 강력한 언론통제를 실시하여 사실의 전파를 철저히 차단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의 아마다 쇼지와 한국의 이연의 연구로 관동대지진시 일본에서의 언론(통제)에 관한 진상의 일부가 해명되었다.¹⁰⁾

현재 한국 학계에서는 역사학 전공자들의 일부 연구가 있지만,¹¹⁾ 아직도 미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최근 한국 학계에서 이형식(李炯植)과 노주은(盧珠恩)의 일련의 연구와 연구사 정리로 관동대지진시 조선총독부의 역할

7) 강덕상(2005), 『학살의 기억, 관동대지진』, 역사비평사

8) 아마다 쇼지 지음, 이진희 옮김(2008),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일본 국가와 민중의 책임』, 논형

9) 다만 일본인 학자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는 그의 저서 『압박과 학살』에서 2,613명으로, 중국 上海에서 발간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기관지 《독립신문》(1923. 12. 5)은 6,661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 조선총독부 경무국은 처음에는 2명, 나중에는 813명으로 정리하였으며, 당시 일본 신문들은 400여 명으로 추산했다(「관동대지진 한인 학살 국제사회도 분노했다」,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알림마당'의 「학술회의 보도자료」 참조, 2013년 9월 9일 검색).

10) 山田昭次(1979), 「關東大震災期朝鮮人暴動流言をめぐり地方新聞と民衆—中間報告として」, 『在日朝鮮人史研究』 5호; 在日朝鮮人運動史研究會 및 이연(1992), 「관동대지진과 언론통제—조선인 학살사건과 보도통제를 중심으로」, 『언론학보』 27 참조.

11) 申載洪(1984), 「관동대지진과 한국인 대학살」, 『史學研究』 38호, 한국사학회; 이진희(2008), 「관동대지진을 추도함: 일본제국의 '불명선인' 과 추도의 정치학」, 『아세아연구』 131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박경하(2009), 「1930년대 한 조선청년의 구직 및 일상생활에 대한 일고찰—『旂判鈺日記』(1918~1947)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31호; 장세윤(2013), 「관동대지진 때 한인 학살에 대한 《독립신문》의 보도와 그 영향」, 『史林』 46호, 수선사학회 등을 들 수 있다.

과 제일조선인 정책, 조선인 학살 연구성과가 일부 정리되었다.¹²⁾ 특히 노주은은 2013년 8월 말 발표한 연구사정리 논문에서 관동대지진 시기 ‘조선인 학살’ 연구가 아직도 한국과 일본의 근대사 속에 제대로 자리잡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동아시아 근대사의 공백’을 메울 연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여 주목을 끌었다.¹³⁾ 노주은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 문학 연구자들을 통해 오히려 다양한 연구성과가 축적되는 경향이 있다.¹⁴⁾

지금까지 학살의 폭력성과 그 책임을 규명하고 이를 고발하는 데 치우친 나머지 사건 이후, 즉 진재(震災)처리 과정과 그 결과, 영향, 조선총독부와 일본의 관계 규명 등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지만,¹⁵⁾ 여전히 한인 학살의 피해규명과 그 책임규명은 미흡한 상황이다.

-
- 12) 李炯植(2010), 「중간내각 시대(1922.6-1924.7)의 조선총독부」, 『東洋史學研究』 113집, 동양사학회; 盧珠恩(2007), 「관동대지진과 조선총독부의 제일조선인 정책-총독부의 震災處理 과정을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12호; 노주은(2008),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연구의 성과와 과제: 관동대지진 85주년에 즈음하여」, 『學林』 29집, 연세대학교 사학연구회
- 13) 노주은(2013), 「동아시아 근대사의 ‘공백’-관동대지진 시기 조선인 학살 연구」, 『역사비평』 104호, 역사문제연구소, 233~235쪽
- 14) 이지형(2004), 「마사무네 하쿠초[正宗白鳥] ‘살인을 저질렀지만’(人を殺したが)의 풍경-살인의 추억 그리고 관동대지진」, 『일본문화연구』 10집, 동아시아일본학회; 이지형(2005), 「관동대지진과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아들에게 보내는 편지’(子に送る手紙)를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13집; 성해준(2007), 「日帝期 한국 신문을 통해 본 大杉榮」, 『일본문화연구』 24집; 조경숙(2008), 「아쿠타카와 류노스케와 관동대지진」, 『한국일본학연합회 제6회 학술대회 발표문집』; 김홍식(2009), 「관동대지진과 한국문학」, 『한국현대문학연구』 29호; 김지연(2011), 「다케히사 유메지와 관동대지진 그리고 조선-회화와 사상성」, 『아시아문화연구』 21집,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도미야마 이치로[富山一郎](2012), 「계엄령에 대하여-관동대지진을 상기한다는 것」, 『일본비평』 7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황호덕(2012), 「재난과 이웃, 관동대지진에서 후쿠시마까지-식민지와 수용소, 김동환의 서사시 ‘국경의 밤’과 ‘승천하는 청춘’을 단서로」, 『일본비평』 7호
- 15) 노주은(2007), 앞의 논문, 6쪽

필자가 아는 한 한국 학계에서 관동대지진 당시 한국 언론, 특히 중국 상해(上海)에서 발행되고 있던 《독립신문》의 동향을 연구한 성과는 거의 없는 것 같다. 이에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에서 발행하던 《독립신문》이 관동대지진 및 한인 관련 보도를 어떻게 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상해판(上海版) 《독립신문》에서 1923년 9월 4일 맨 처음 호외를 발행하여 관동대지진 및 재일한인 관련 소식을 보도했고, 그 뒤에도 큰 관심을 갖고 사실상 최초로 한인들의 피해를 체계적으로 조사·보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아직까지 국내외에서 관동대지진 당시 얼마나 많은 한인(조선인)들이 학살되었는지 정확한 통계가 없는 실정인데, 《독립신문》은 이해 12월 5일자(제167호)에서 모두 6,661명이 희생되었다고 밝혀 큰 파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후 관동대지진시 학살된 한인의 숫자는 거의 이 보도에 따라 정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한국사 개설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6천여 명이 희생되었다는 내용으로 서술되고 있는 것이다. ‘관동대학살’로 불려야 한다는 최근의 언론보도가 있었지만,¹⁶⁾ 이미 일부 개설서와 교과서에는 ‘관동대학살’이란 용어가 쓰이고 있어 향후 ‘관동대학살’로 개념이 정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3년 9월 관동대지진 때 한인들이 대거 학살된 지 90주년을 맞아 이 문제에 대한 《독립신문》의 보도와 그 파급효과, 특히 6,661명 피살설과 그에 따른 남·북한 및 일본 학계·교육계 등에 끼친 영향을 간단히 검토하여 향후 진상규명과 대응방안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16) 《조선일보》(2013. 8. 30), 1·10·11면

II. 《독립신문》의 관동대지진시 한인 학살 관련 보도

1. 《독립신문》 개관

한국 근대사에서 《독립신문》은 모두 5종이 발간되었다. 서재필 등 개화파가 1896년 4월 7일 발간한 한글신문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 소론에서 검토·분석하는 《독립신문》은 1919년 4월 중국 상해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기관지 역할을 한 신문이다. 이 신문은 1919년 8월 21일에 창간호가 발행되었다. 창간 당시 제호(題號)는 《獨立》이었으나, 같은 해 10월 25일(22호)부터 《獨立新聞》으로 제호를 변경하였다. 그리고 1924년 1월 1일자(169호)부터 다시 제호를 한글 《독립신문》으로 바꾸었다. 처음에는 주 3회 발행되었으나, 점차 발행 간격이 길어졌으며, 일정치 않게 되었다. 자금난 등 여러 사정
으로 1925년 11월 11일자(189호)를 발간하고 폐간되고 말았다.¹⁷⁾

한편 중문판(中文版)도 1922년 7월부터 발행되었는데, 중국인 기자도 고용하여 중국인 독자들의 호응을 얻고자 하였다. 주로 중국의 관공서·학교·공공단체 등에 배포하여 한국 독립운동의 실상을 널리 전파하였다. 관동대지진 발생 당시 독립신문사의 사장은 김승학(金承學, 호 希山), 주필은 윤해(尹海)였는데, 중문판 주필은 임시정부 요인이자 대표적 민족주의 사학자로 꼽히는 박은식

17) 鄭晉錫(1990), 「上海版 독립신문에 관한 연구」, 『汕垣史學』 4집, 汕垣史學會; 조범래(2004), 「독립신문(2)」, 『한국독립운동사사전(운동·단체편)』 4, 독립기념관, 235쪽. 일제의 사주를 받은 프랑스 租界 당국의 탄압으로 《독립》의 발행이 끝나고, '독립신문'으로 제호를 바꾸게 되었다고 한다[이연복(1983),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사회문화운동-독립신문의 사설 분석」, 『史學研究』 37호, 199쪽].

(朴殷植)이 맡았다.¹⁸⁾ 박은식은 1924년 11월경 독립신문사 사장을 맡았다가 임시정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¹⁹⁾ 초기의 발행부수는 국한문판이 4,000부, 중문판이 1,000부, 모두 5,000여 부가 발행되었다. 이 신문은 상해는 물론, 중국 관내(關內)지역과 중국 동북(滿洲), 연해주(沿海州), 하와이와 미주(美洲), 국내지역 등에 배포되었는데, 국내지역에 1,500부 정도가 반입되었다.²⁰⁾ 하지만 운영난 등으로 발송지역과 부수도 차츰 줄어들었다. 신문의 크기는 27×38.5cm 정도의 타블로이드판형이다.

그럼에도 이 신문은 독립운동의 생생한 실상을 널리 알리고, 독립운동 진영의 어젠다를 선도하며, 때로는 격렬한 논쟁을 지면에 증계하는 등 독립운동을 대변하는 기관지 노릇을 톡톡히 하였다. 물론 한계도 있었지만, 한국 언론사에서 독특한 위상을 차지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상해지역은 물론, 해외 동포가 거주하는 주요지와 국내에 널리 배포되어 일제 당국은 이 신문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삼엄한 감시를 하곤 하였다. 《독립신문》은 국내의 독립운동을 고무하고 홍보하며, 해외 교민들을 단결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였다.²¹⁾ 특히 발간 초기에는 일본 당국을 '적', 또는 '원수'로 규정하고 일제 통치의 야만성과 잔학상을 폭로하는 기사와 논설 그리고 사진을 다수 게재하였고, 국내의 《동아일보》 등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중국 국민정부를 따라 1940년 9월 충칭(重慶)으로 옮겨간 뒤 1943년 6월 충칭에서 중문판으로 재간되었다. 이 신문의 대부분의 원

18) 조범래(2004), 위의 논문, 237쪽

19) 최기영(1999), 「上海版《독립신문》의 발간과 운영」,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80주년 기념 논문집』 하, 국가보훈처, 400쪽

20) 최기영(1999), 위의 논문, 397쪽

21) 김희곤(2008), 『대한민국임시정부 1-상해시기』, 독립기념관, 135~138쪽

본은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일부는 독립기념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필자는 1985년 10월 독립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에서 영인한 독립신문을 주로 활용하였다.

2. 한인 학살 관련 보도내용의 개략적 검토

관동대지진 당시 독립신문사 사장으로 일하고 있던 김승학은 후일 『망명객 행적록』이란 회고록을 남겼는데, 그는 여기에서 당시 일본 나고야(名古屋) 잡지사에 근무하던 한세복(韓世復, 본명 韓光洙)을 도쿄 등지로 파견하여 한인 학살의 진상을 파악·보고토록 했다고 하였다.²²⁾ 그러나 진상파악 활동은 ‘재일본 관동지방 이재(罹災)조선동포위문반’의 도움으로 가능했다.

한편 1923년 10월 5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주도로 상해 거류 한인들은 학살사건을 조사하여 일본의 포악함을 비판·성토했고 중국 등 세계 각지에 널리 알리기 위해 《독립신문》 사장 김승학과 윤기섭(尹琦燮), 여운형, 조덕진(趙德津), 조완구(趙完九), 이유필(李裕弼), 조상섭(趙尙燮) 등 7명을 집행위원으로 선출하였다.²³⁾ 그러나 이들 집행위원 7명은 실제로 일본에 가서 진상을 직접 조사할 수 없었다. 《독립신문》 보도 관동대지진 관련 기사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1923년 9월 3일 발행된 호외는 매우 주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재일한인 200여 명이 무장봉기 등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보도하여 ‘적국’ 일본의

22) 김승학(1998), 「망명객 행적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2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431~432쪽

23) “적의 韓人학살에 대한 上海 我 僑民大會”, 《獨立新聞》(1923. 10. 13); “상해교민대회에서 학살사건 조사”, 《신한민보》(1923. 12. 13)

〈표 1〉 《독립신문》 보도 관동대지진 관련 기사

날짜	유형	기사 크기 (대·중·소)	제목 (주요 내용)	비고
1923. 9. 4 (화)	호외	36×17cm	“東京을 中心으로 한 敵國內의 大震災”- 地震·暴風·海嘯·大火가 竝起하여 全市가 焦土로 化함 • 일본 도쿄 일대의 피해소식을 전하는 한편, 한인들의 조직적 무장봉기, 200여 명 한인 일단이 八王寺 진입설 등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함	國漢文 혼용
9. 19(수) (164호)	정규신문	1단(대)	“敵地 災變에 대하여” • 피해 소식을 전함	1면 톱
		2단(대)	“敵地의 大地震 大火災” • 首都와 名港이 全滅되어 可驚할 인명과 재산의 손해 • 사상자 50만, 손해액 50억	2면
		3단(중)	“在留同胞의 동정” • 일본 측의 유언비어를 가감없이 수용하여 일부 한인들의 무장투쟁 사실을 보도하고, 일부 한인들의 피살 사실을 보도	2면
		3단(소)	“我 임시정부에서 敵 정부 항의 제출”- 災中韓人 학살에 대하여 • 천재지변의 화를 韓人에 전가, 軍營에 囚禁된 한인 1만 5천 명, 한인 慘殺 등 항의 • 1만 5천 한인 석방, 생사자 조사 공포, 韓人虐殺 亂徒의 엄중징벌 등 요구	3면
10. 13(토) (165호)		1단(대)	“적의 죄악” • 軍에서 동포 11,100인 별도수용 후 宇田川 河畔에서 기관총으로 사살, 慘絕屠殺된 자 6·7千人 • 한인 피살자를 6~7천 명으로 파악· 보도함	1면 톱
		2단(중)	“본 震災와 余의 辛苦”(吳竹) - 지진 始初의 광경, 화재 당시의 광경, 收容餘裕地 탐방, 방화혐의로 被捉, 被捉同胞의 慘景 • 지진 당시 도쿄에 머물며 고초를 겪은 吳竹(가명인 듯-필자)의 피학대 경험과 구사일생의 귀환 手記임	1면
		3단(소)	“광고” 上海韓人僑民大會 집행위원 - 尹琦燮·趙德津·呂運亨·趙玩九·趙尙燮·李裕弼·金承學	1면
		3단(중)	“흉독한 軍閥의 手에 大杉榮 一家 全滅”	2면

날짜	유형	기사 크기 (대·중·소)	제목 (주요 내용)	비고
		3단(중)	“敵地 災後の 彙聞”-사상된 總人數(사망자만 22만여 명), 소실된 總戶數, 부흥원의 설치, 일본의 負債國化, 교통기관의 손해, 도서관 손해 1억 원, 우편저금 3억 원 전부 사라짐. 토지소유권 불명, 石川島 조선 폐지, 災區同胞의 소식, 적 관리배의 추행, 強盜黨은 노동당	2면
		3단(소)	“敵의 한인 虐殺에 대한 上海 我 僑民大會” • 10월 5일 오후 8시 三一堂에서 개최한 교민 보고 대회 및 결의문을 보도	3면 톱
		4단(소)	“한인 학살에 대한 적의 발표, 모함적 꾀변으로” • 군부의 조작 날조된 한인 방화, 우물에 독약, 약탈·강간 등 폭행 설을 비판	3면
		2단(중)	“韓人 학살의 彙報” • 東京과 京城의 日文 및 韓文 신문, 통신, 중국 언론, 조사원 보고 등 각 출처별 소식을 종합, 한인들의 피해상과 困境을 보도함	4면 톱
11. 10(토) (166호)		2단(중)	“慘死한 동포” • 우리 동포 수천 명이 무고하게 귀중한 생명을 잃었음을 통탄하고 일본 정부를 규탄함	1면
		3단(중)	“我 동포 학살한 적의 대응모 발견”-내무당국의 악독한 정책으로 격분된 民怨을 韓人에게 밀어 • 우리 동포 수천 명이 학살되었다고 하며, 그 원인이 일본 당국이 일본인들의 民怨을 한인 동포들에게 전가한 데 있다고 파악하여 보도함	1면
		2단(소)	“신문 통신 등을 압수하는 倭총독부의 폭행”	2면
		2단(소)	“災時 한인에 대한 적 의무성의 발표”	2면
		3단(소)	“적이 발표한 피살한인의 총수”-총 3백 수십 명	2면
		3단(소)	“적이 모함하는 소위 한인 범행 수”	2면
		4단(소)	“한인의 所爲라하나 其實은 일인의 범행”	2면
		4단(소)	“慘殺사건의 자백”-上海 적 상임회의소에서 자기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	2면

날짜	유형	기사 크기 (대·중·소)	제목 (주요 내용)	비고
		1단(중)	“震災時 倭 官民이 협동하여 무죄동포를 참살한 鐵證과 진상이 폭로” • 영국인이 上海에서 발행하는 『字林報』 기사를 번역 소개	4면
		3단(중)	“흑막의 폭로”-자경단 폭행과 군경의 불법학살을 보도, 규탄	4면
		5단(중)	“적이 발표한 所謂 한인의 폭행”-일본 정부 발표 한인 폭행 사실을 날조라고 비판하면서도 각 사례를 게재	4면
11. 14(수) 中文版 (36호)		2단(대)	“震災時日政府虐殺韓僑之大陰謀 發見”	1면 2단
		2단(대)	“中國人不要受欺!” • 중국인들이 일본 당국의奸計에 속지 말라는 호소	2면 2단
12. 5(수) (167호)		1단(대)	“1만의 희생자!!!”(본사 被虐殺僑日同胞 특파조사원 제1신) - 슬프다 7천의 가련한 동포가 敵地에서 피바다를 이루었다 • 각 지역별 희생자 통계를 적시하고 합계 6,661인이 피살된 것으로 파악, 보도함	1면 톱
		3단(중)	“학살된 동포를 위하여 悽愴痛切 추도회”	1면
		4단(소)	추도문	1면
		5단(소)	추도가	1면
		3단(소)	“德國인이 目覩한 한인 慘殺 사건”	2면
		3단(소)	“한인 학살에 대한 在美韓友會 쉼기”	2면
		3단(소)	“可殺者 駐日美使 한인 학살설을 부정”	2면
		3단(소)	“千葉縣에서 생긴 한인 학살사건”	2면
		4단(소)	“한인 慘殺犯人을 겨우 징역 5년 이하”	2면
		5단(소)	“倭當局 詭譎手段”	2면
		1단(대)	“韓人 학살에 대한 日人の 평론”-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의 『中央公論』에 실린 논평을 소개함	4면 톱
12. 26(수) (168호)		3단(대)	“攄博士 訪問記(상)” - 韓人 大虐殺은 眞正	1면

날짜	유형	기사 크기 (대·중·소)	제목 (주요 내용)	비고
		5단(중)	“적에게 학살된 동포 橫濱에만 1만 5천”- 총계 2만 1천 6백여 명 • 독일인 부르크하르트 박사의 증언을 토대로 한인 2만 1,600여 명 피살로 종합 보도	2면
		5단(중)	“殘極虐極한 慘狀”	2면
1924. 1. 1 (화) (169호)		3단(중)	“敵 議會에 現한 韓人 虐殺問題”- 議員의 질문에 대하여 정부 當局은 답변 回避, 학살의 책임이 政府에 있다고	2면

출처: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1985), 《獨立新聞》(영인본)에서 발췌

심장부 도쿄에서 독립운동이 전개되기를 기대하는 심정을 반영하였다. 당시 와전된 소식을 전해 듣고 게재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러한 신속한 보도는 중국 상해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의 기민한 국내외 정세 및 동향 파악과 긴급 대응활동 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²⁴⁾

《독립신문》은 1923년 12월 5일자 1면에서 도쿄 일대 각 지역별 조사를 토대로 모두 6,661명의 한인이 피살되었다고 보도하여 큰 충격을 주었다(표 1) 참조). 한편 1923년 12월 26일자 기사는 더욱 충격적이다. 피살 한인 총계가 무려 2만 1,600여 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4) 이하 주요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東京橫濱에 거류하는 我 동포가 금번 재난의 機를 乘하여 何等의 운동이 有함은 사실인 바 소문에 의한즉, 아 韓人이 赤羽와 기타에 在한 회약고를 폭파하였다 하며 또 2일 午正 계엄령 發布에 伴하여 東京에서 追出된 我 韓人 2백인 一團이 무기를 휴대하고 八王寺에 聚入하여 격렬한 형세를 作함에 적 경찰은 官公吏와 청년단을 무장케 하여 此에 對峙케 하는데 我 韓人團은 橫濱 東京 양 方面에 연락을 취하여 대대적 활동을 開하려 함으로 3일 夜半에 高田 제13사단이 출동하여 頗히 엄중히 경계하며 충돌도 잇서다더라”(《독립신문》 호외, 1923년 9월 3일 발행).

적에게 학살된 동포 橫濱에만 1만 5천 총계 2만 1천 6백여명
 敵地 震災時 적에게 학살된 동포의 수에 대하여 자못 的確한 數字를 알기
 어렵다가 본사 특파원의 조사한 바에 의하여 6천 6백여 명으로 알게 되었던
 바 德國(독일-필자) 뿌박사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橫濱에서만 1만 5천의
 학살이 잇섯다한즉 본사 특파원이 조사한 바는 橫濱의 分이 포함되지 아니
 한 모양이니 그리고보면 지금까지 보도되는 바를 종합하면 전부 2만여 명이
 라는 可驚할 多數로 算定되더라.²⁵⁾

이 보도에 따르면 독일 부르크하르트 박사가 요코하마에서만 1만 5,000명
 의 학살이 있었다고 증언한 바에 따라 《독립신문》 특파원이 조사한 6,600여
 명을 합산하여 2만 1,600여 명으로 파악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이
 숫자에 대해서는 당시 관동지방에 거주하던 한인 규모에 비하면 너무 많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²⁶⁾ 따라서 좀 더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검토하여 치
 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북한 학계에서 이미 1980년
 대 초반 2만 3천여 명 피살설을 정립했기 때문에²⁷⁾ 이 수치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나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한인 대학살의 참상을 목격하고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폭로하고 비판
 한 독일인 목격자 부르크하르트 박사를 방문해 대담하고 쓴 기사 “뿌박사 방
 문기”를 게재하였는데, 당시 참상을 매우 사실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고일청(高一淸)·황진남(黃鎭南) 양인 재독유학생의 방문을 맞아 대담한 부
 르크하르트 박사는 다음과 같이 힘주어 강조하였다.

25) 《독립신문》(제168호)(1923. 12. 26), 2면

26) 독립기념관 윤소영 연구위원은 당시 일본 關東지방에 거주하던 한인이 2~3만여 명
 규모였기 때문에 2만 1,600여 명 또는 2만 3천여 명은 지나치게 많은 숫자가 아닌가
 하는 의견을 밝혔다(9월 14일 전화 통화).

27) 『조선전사』 ‘연표’, 1983,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47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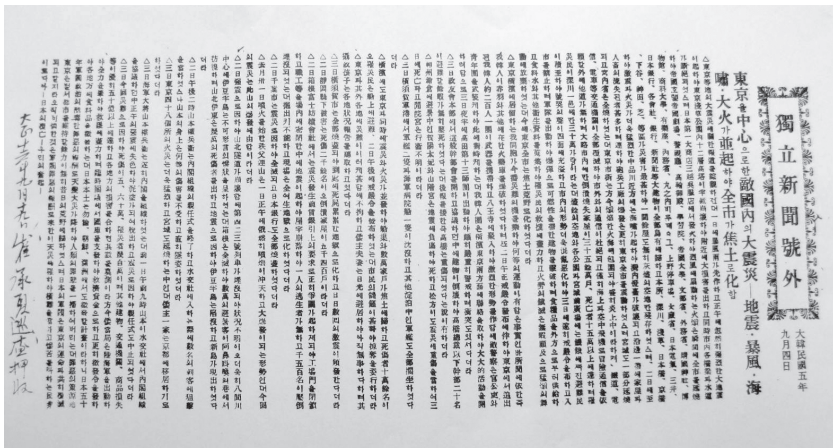


그림 1_ 《독립신문》 호외(1923. 9. 4). 1923년 9월 19일 최승열(崔承烈) 순사가 압수했다고 인콰 끝에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로써 독립신문사에서 국내로 발송했다가 일제 당국에 압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_ 《독립신문》의 관동대지진 최초 보도기사(1923. 9. 19). “敵地 災變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1면 톱기사로 대서특필하고 있다.

사실에 당하여 아무 것도 모르게 된 민중을 군인이 그와 같이 지도한 때문에 그런 참극이 생하였습니다. 원래 석방된 3천여 명의 죄수중 일본인은 적어도 한인의 10배는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橫濱에서는 약탈하는 것은 전부 韓人이라고 군인이 민중을 선동한 때문에 인민들은 모두 한인이 그런다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이 참상은 나만 보고 들을 뿐 아니라 일본서 발표한 英字報에 公報로 發布한 것이 있고, 瑞西國(스위스-필자) 친구 한 사람은 나보다 더 자세히 보았습니다.²⁸⁾

학살사태의 책임이 결국 군 등 정부 당국에 있고, 일본인들이 군인들의 잘 못된 선동에 따라 한인 학살을 자행하였으며, 그러한 목격의 사실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귀중한 증언기록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독립신문』의 한인(또는 중국인) 학살 사실에 대한 수차의 대서특필 등 적극적 보도를 통한 여론 조성활동은 상해(上海)를 중심으로 한 중국으로 점차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상해에서 일본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었고, 상해 일본상공회의소는 11월 3일 건의서를 상해 일본 총영사관에 제출하고 일본 당국의 진상발표와 해명을 요구하였다.²⁹⁾ 또한 중국 정부도 중국인 학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본에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하였다.³⁰⁾ 또한 상해지역 독립운동가와 한인(韓人) 교민들은 학살의 진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국한문판(國漢文版)과 중문판, 영문판 소책자를 제작하여 배포기로 하였다.³¹⁾ 이에 따라 《독립신문》의 위의 보도기사를 토대로 제작한 영문 소책자 *Massacre of Koreans in Japan*을 1924년 3월 발간하여 중국은 물론 구미권(歐美圈) 국가

28) 《독립신문》(168호)(1923. 12. 26), 1면

29) 「慘殺사건의 자백-上海 적 상공회의소에서 자기정부에 건의서를 제출」, 《독립신문》(166호)(1923. 11. 10), 2면

30) 「華僑 학살에 대한 중국의 엄중교섭」, 《독립신문》(1923. 12. 5), 2면

31) 「광고」, 《독립신문》(1923. 10. 13), 1면

에도 널리 배포하였다.³²⁾ 이를 통해 일본에서의 한인 학살을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필자가 2013년 7월 29일 도쿄 현지 출장조사에서 만난 일본 NGO 니시자키 마사오[西崎雅夫] 선생은 위 《독립신문》(12월 5일자 1면)의 가나가와[神奈川] 한인 피살 기록은 좀 과장된 듯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도쿄는 위 통계가 실제 진상과 비슷할지 모른다고 했다.

이하에서 《독립신문》의 보도가 끼친 파급효과와 그 영향, 특히 한국과 북한, 일본, 미국 학계의 동향과 서술 내용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III. 《동아일보》·《조선일보》의 보도 개관

국내에서 발행되던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보》 등은 조선총독부와 일본 본국의 강한 통제와 감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제대로 된 사실을 보도하기 어려웠다.

특히 이른바 ‘민족지’로 출발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큰 수난을 겪어야 했다. 일본 관동대진재(關東大震災) 시기에 있었던 한인 학살사건, 이와 관련된 유언비어 등 소위 ‘불온언동’ 관련 보도문제로 이 두 신문은 수백 차례의 기사 게재금지 조치 등 탄압을 받아야 했던 것이다.

특히 9월 1일~11월 1일까지 이 두 신문은 학살사건 관련 기사 게재금지

32) 「在廣東總領事 天羽英二가 外務大臣 男爵 松井慶四郎에게 보내는 공문, 日本ニ於ケル朝鮮人虐殺ト題スル小冊子送付ノ件[機密公文 제66호(1924. 5. 31)]」; 이명화(2013. 9), 「관동대진재와 한국독립운동」, 『關東大震災朝鮮人虐殺から90年, 國家暴力と植民地主義を超えて』(關東大震災90周年國際シンポジウム 발표자료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立命館大學코리아研究センタ 공동개최, 109~110쪽에서 재인용. 국한문본과 중문본이 제작되어 배포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602건, 차압조치 18회를 받아야 했다.³³⁾ 물론 이 시기(1923년 9~10월 동안) 식민지 ‘조선’의 민중 역시 조선총독부 경무당국(警務當局)의 탄압으로 큰 수모를 겪었다. 즉 일본에서 한인(韓人) 학살사건에 관한 ‘불온언동(不穩言動)’ 혐의로 훈방(訓放) 1,156건에 1,317인, 법규위반 검거 111건에 122인이 관련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³⁴⁾

《조선일보》는 지진발생 직후인 9월 8일자에 실린 “중도(中途)에 귀환한 유학생”이란 표제하에 “그곳 신문 호외에는 品川(시나가와)에서 조선동포 수백 명을 ○○(‘살해’로 추정, 조선총독부가 검열로 삭제) 하였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대개 우리 동포의 소식은 엇지 되었는지 모른다.”라고 보도하였다.³⁵⁾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부 경무당국의 보도통제 하에서도 나름대로 독자들에게 학살사건의 진상을 알리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동아일보》는 9월 10~11일자 기사에서 “관동대진재가 일어난 이래 일본 각처에 재류(在留)하는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의 만행에 못이겨, 혹은 일본 정부의 귀국명령에 따라 혹은 재난을 피하여 속속 귀국하고 있는 바, 지난 9월 5일부터 이날까지 1,086명이 귀국하였으며 그중에 東京(도쿄)·橫濱(요코하마)으로부터 돌아온 숫자는 74명이다.”라고 보도하였다.³⁶⁾ 학살의 진상을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동아일보》는 조선총독부의 강력한 보도통제 아래에서도 나름대로 관동대지진시 한인 동향을 전파하려고 노력하였다. 주요 기사를 예시하

33) 朝鮮總督府 警務局(1923), 『朝鮮の治安狀況』; 김홍식(2009), 「관동대지진과 한국문학」, 『한국현대문학연구』 29호, 181쪽에서 재인용.

34) 김홍식(2009), 위의 논문, 181쪽

35) 《조선일보》(2013. 8. 30), A10면

36) 《동아일보》(1923. 9. 10·11·13·1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참조.

면 다음과 같다.

일본 浦和지방재판소에서, 관동대진재시에 埼玉縣에서 韓人을 참살한 자경단원 121명에 대한 판결이 있었던 바 18명에게는 실형이, 그 외는 1년 내지 3년간의 집행유예가 언도되었으며 2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되었다.³⁷⁾

조선신문사 주최 관동대진재 보고회가 京城 長谷川町 公會堂에서 개최되었는 바 현지를 시찰하고 돌아온 조선신문사 사회부장 野崎眞三은 한인이 폭행을 하였다거나 단체를 조직하여 건물을 파괴, 인명을 살상하였다거나 우물에 독약을 풀었다고 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浪說임을 보고하였다.³⁸⁾

한편 당시 《동아일보》 편집국장으로 재직하던 이상협(1930년대 중반에 친일신문 《마이니치신문(毎日申報)》 부사장을 지냄)은 1934년 9월 발간된 『삼천리』에 직접 일본으로 달려가 관동대지진시 한인들의 구호 및 취재활동을 전개하였던 회상기를 남겼다. 그는 상상을 초월하는 지진 피해와 한인들의 참상을 현장에서 목격했지만, 한인들의 수난상을 직접 표현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회상하는 데 그치는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당시의 참상을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다.³⁹⁾

37) 《동아일보》(1923. 11. 3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9월 6일 검색)

38) 《동아일보》(1923. 9. 2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9월 6일 검색)

39) “〈돌연한 飛報〉 9월 1일 돌연 東京에 큰 지진이 이러나서 관동일대 - 東京 橫濱 鎌倉는 말할 것 없고 그 부근 전부가 - 실로 삼시간에 초토로 화하였다는 飛報가 서울에 떠러지기는 그날 오후이였다. 처음은 전신전화가 모다 파손되어 무선전선으로 그 참상이 겨우 세상에 알려졌다. [...] 그날 나는 동아일보 편집국실에 안것다가 이 전문을 맞고 다른 동료들과 함께 몹시 놀내었다. 그래서 신문사에서 爲先 할 일로 初號 活字를 써가며 호의를 내었다 그리고는 초조하게 後報오기를 고대하였다. 그때 우리 심리

를 지배한 것은 東京 천지가 불속에 들었스니 거기 잇은 백의동포의 생사는 엇지 되었슬고, 전조선 각지로부터 드러간 수만의 유학생들은 엇지 되고 부모처자를 내버리고 노동으로 드러간 고단한 노동자의 운명은 엇지 되었는고 함이다. 그 당시에는 몇 백만명이 죽었스리라고 추측하는 소리가 높았스니만치 사상자가 생겼다면 그 중에 조선사람이라고 아니 끼었슬리가 업겟고 요행 생명을 구하였었다 할지라도 알몸둥이만 뛰어나왔겟스니 무얼 입고 무얼 먹고 살는고 하는 근심이었다. 이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을 구할 방책을 세우는 일이라 하였다. <직접 현장으로> 그리하여 간부회의곁에 爲先 동경의 진재현장으로 누구를 파우기로 되었는데 생각하여 본즉 그러한 위험지대에 남더러 가라할 수 업서 내가 떠나기로 決心하고 나는 9월 6일 이츰 京釜線車로 남대문역을 發하였다. 震災 이러난 뒤 인심은 수선수선 하였다. 더구나 자녀의 생사와 남편의 생사를 근심하는 全朝鮮의 수만의 가족들은 신문사로 편지질하고 더러는 직접 玄海灘을 건너 떠났다. 이러케 갈피를 못찾는 유족 수효가 점점 늘어가기에 경찰에서는 위험지대인 현장으로 드러가는 것을 짝 막아버리었다. 평안도 함경도로부터 일부러 자녀소식 알고저 부산까지 왔다가 쫓기어 간 사람들이 으쓱 만드고, 關東一帶에는 마춤내 계엄령이 내렸다. 무시무시하기 짝이 업섯다. 이러한 공기속에 단신 외로히 남의 눈을 피하여 東京行을 결심한 그때의 나는 대담하였다 할가 무모하였다 할가. 그러나 오죽 나의 가슴에서 끌어오르는 동포의 안전을 슬하는 일편의 정성이 물불을 헤아리지 안은 이번 거름을 짓게 함이었다. 釜山水上傭의 경계도 下關서의 이중삼중의 경계로 모다 용하게 돌파하여 천행만고로 大阪까지 도착하였다. 정거장에 첫거름을 내려노차 災害地로부터 쪽겨온 피난민으로 수선한 광경을 이루었다. 그네의 입으로부터 東京 잇은 조선사람의 소식을 들었다. 가슴을 놀래이는 여러가지 소식이 잇는 한편에 일면으로는 또 살아 잇는 사람도 만타는 말에 안도하는 생각도 났다. <동포구제 급무> [...] 그때 조선 難民이 수용된 곳은 趨町區에 잇은 留學生 감독부와 시의 千葉縣 下習地野 등 4~5처다. 나는 감독부를 차졌다. 햇빛은 유학생들이 아죽도 공포에 떨고 있다. 생존자와 사망자들을 대개 조사하고 다시 그 길고 習地野로 달녀갔다. 거기는 원來 日獨戰爭 때 靑島攻衛軍에 붙잡어 온 독일 포로병을 휴전당시까지 수용하여 두엇든 곳이라 그 부근에는 騎馬練兵長이 잇섯다. 나무板塙으로 한 빠락집 十餘대에 이삼천명의 朝鮮人이 수용되고 잇섯다. 벧집으로 자리를 하여 깐 그 집안의 광경 잔디밭 우에 누어 고향 생각에 愁心끼 하는 그 얼굴들 나는 도라 나오면서 한숨을 쉬었다. <回路의 哀愁> 9월 6일 서울을 떠나서 스무사흘 날 도라오든 날까지 그사이에 내가 신문기자로써 적근 고민은 일일히 기억치 안노라 다만 십여년후의 오늘까지 머리 속에서 사라지지 안는 인상은 실로 커섯다. 서울 도라 나가서 나는 父老에게 무슨 말로 보고할는 신문의 독자에게는 엇더한 소식을 전하여야 조흔는고, 그보다도 무어라고 형용할 수 업는 비애가 가슴을 찢는다. 그래서 흐르는 대로 나는 한참 눈물을 흘렸다. [...] 여기에 따르는 그때 예비쑈-드가 만했스되

IV. 한국 학계의 관동대지진시 한인 학살문제 연구와 서술

1. 한국 학계의 연구동향

한국에서는 일찍이 독립운동가와 관련 인사들이 조직한 단체, 김승학(金承學)이 간행한 『독립운동사』 단행본에 한인 학살문제가 중요시되어 꽤 상세히 서술되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독립신문』이 보도한 기사(1923년 12월 5일자)를 거의 그대로 전재하여 한인 6,661명이 학살되었다고 파악하였다.⁴⁰⁾

노주은에 따르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조선총독부는 관동대진재시 한인 처리 문제를 3·1운동 때 실추되었던 총독부의 위상을 만회하고 차기년도 조선 예산의 삭감을 막는 기회로 활용했다고 한다. 이후 조선총독부는 결국 진재처리를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예산과 정책방향에서도 성공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⁴¹⁾

그동안 한국 학계에서는 관동대지진시 한인 학살문제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것은 한국사 연구 입문서가 수차례 간행되었지만, 최근 발

모다 割愛하노라”[李相協(1934 .9), 「명기자 그 시절 회상(2), 東京大震災때 특과, 『三千里』 제6권 제9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9월 6일 검색].

40) 애국동지원호회 편(1956), 「東京震災時韓人 학살사건, 『한국독립운동사』, 417~420쪽; 김승학 편(1966), 「東京地震과 한인 학살사건, 『한국독립사』, 독립문화사, 481~484쪽

41) 노주은(2007), 「관동대지진과 조선총독부의 제일조선인 정책 - 총독부의 '震災處理' 과정을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12호; 노주은(2007), 「관동대지진과 일본의 제일조선인 정책: 일본정부와 조선총독부의 '진재처리' 과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간된 입문서에 최초로 이 주제를 다룬 글이 수록된 사실로 증명된다. 즉 ‘관동 대지진 때 광란의 조선인 대학살’에서 이 문제를 정리하였는데, 한인들의 피해상에 대해서는 도쿄지역에서만 3천여 명, 관동지방 전체에서 6천여 명이 살해당한 것으로 파악하였던 것이다.⁴²⁾

최근 가장 널리 보급되고 있는 한국사 개설서에도 1923년의 관동대지진 때 일본인 자경단(自警團)이 7천여 명의 교민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하며 이를 ‘관동대학살’이라고 한다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어 매우 주목된다.⁴³⁾

한편 한국의 대표적 역사 관련 사전이라 할 수 있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관동대학살’이란 항목으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1923년의 일본 관동대지진 때 일본 관헌과 민간인들이 한국인과 일본인 사회주의자를 학살한 사건. [...] 계엄령 아래에서 군대·경찰을 중심으로, 또한 조선인 폭동의 단속령에 의해 각지에 조직된 자경단에 의해 6천여명의 조선인 및 일본인 사회주의자가 학살되었다. [...] 일본정부는 10월 20일 학살사건의 보도금지를 해제하였으나, 그들은 군대·관헌의 학살은 모두 은폐하고, 그 책임을 자경단으로 돌리는 데만 급급하였다.⁴⁴⁾

한국인과 일본인 사회주의자를 학살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주축이 된 단체 순국선열유족회가 발간하는 월간지 『순국』 1993년 9월호는 「특집: 관동대진재 조선인 학살의 진상을 밝힌다」에

42) 정태현(2008), 「일제의 강제동원과 민족이산」,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하)』, 한국사 연구회 편, 211쪽
43) 한영우(1997), 『다시 찾는 우리역사』, 경세원, 502쪽
44) 김의환(1991), 「관동대학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45~46쪽

서 3인 전문가의 자료 번역 소개와 논문을 게재하여 큰 관심을 표명하였다.⁴⁵⁾ 또 이 잡지는 1997년 9월호에도 관련 논문을 게재하여 관심을 반영하였다.⁴⁶⁾ 한편 관동대지진시 한인 학살문제에 관한 전시회가 광복50주년인 1995년 8월 서울에서 개최된 적이 있었다.⁴⁷⁾ 추후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남북한 학계나 유관 단체, 기관 등에서 공동 전시회, 공동 학술회의, 공동 연대활동을 통한 진상규명과 연구, 자료집 발간, 추모행사, 일본 정부에 대한 책임 추궁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관동대지진 때 한인 학살문제는 한국 학계에서 큰 관심을 갖지 않았으나 90주기가 되는 2013년 9월 1일을 전후하여 일시적으로 관심을 끌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자료수집과 연구가 절실한 실정이다.

2. 최근 고등학교 교과서의 관동대지진시 한인 학살 서술

제7차 교육과정에서 시행된 ‘한국근·현대사’ 과목과 그에 따라 편찬되어 2003~2012년까지 사용된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6종은 모두 관동대지진시 한인 학살사건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거나 상당한 비중을 두어 서

45) 특집 게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연, 「조선인학살에 대한 일본 어린이 증언 수기」; 이연, 「조선인 학살사건의 실태와 언론보도」; 김인덕, 「재일운동사 속의 1923년 조선인 학살」; 서정민, 「관동대진재 조선인 학살의 진상이 알려지기까지 - ‘봉선화’ 노래를 부르며 잠든 원혼」

46) 홍진희(1997), 「관동대진재와 조선인 학살-유언비어를 중심으로」, 『순국』 9월 호

47) 광복50주년기념 사진 전시회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 일시: 1995년 8월 7일~9월 6일, 장소: 서대문독립공원 내 독립기념전시관(구 서대문형무소), 내용: 관동대지진시 조선인 학살 관련 사진·자료·도서 전시, 관련 비디오 상영(오전 11시, 오후 3시), 주최: 사단법인 순국선열유족회·역사를 생각하는 모임, 후원: 민족문제연구소, 협찬: 도서출판 동쪽나라·월간 아리랑·Photo C&G

술하였다. 대부분 《독립신문》의 피살 숫자에 근거하여 6천여 명의 한인들이 학살당했다고 서술하였다.⁴⁸⁾ 이 가운데는 일본인의 증언을 생생하게 서술한 교과서도 있어 학살의 진상을 학생들에게 실감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⁹⁾ 그런데 일부 교과서는 6천~2만여 명의 한인들이 학살되었다고 서술하여 주목된다.⁵⁰⁾ 또 ‘관동대학살’이란 용어를 쓴 교과서도 있어⁵¹⁾ 이 사건의 본질을 이미 잘 파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최근 시행하고 있는 신교육과정에서 고교 1학년생들의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한국사 과목에 부응하여 2011년부터 6종의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가 사용되고 있다.⁵²⁾ 이 가운데 관동대지진시 한인 학살문제에 대하여 본문에서 서술한 교과서는 2종(법문사, 지학사)에 그치고 있다. 비교적 자세히 서술하고 있는 지학사 발간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쉽게도 학살된 한인의 숫자는 정확히 제시하지 않았으나, 정부와 경찰 등이 학살을 주도하였음을 명확히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⁵³⁾

48) 김광남 외(2005),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주)두산, 220쪽; 김중수 외(2005),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법문사, 210쪽; 김한중 외(2005),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금성출판사, 222쪽; 김홍수 외(2005),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천재교육, 240쪽; 주진오 외(2005),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41쪽; 한철호 외(2005),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대한교과서, 217쪽(이 책은 ‘6천명 이상으로 표현’)

49) 김한중 외(2005), 위의 책, 222쪽

50) 김홍수 외(2005), 위의 책, 240쪽

51) 주진오 외(2005), 위의 책, 241쪽

52) 도면희 외, 『고등학교 한국사』, 비상교육; 이인석 외, 삼화출판사; 정재정 외, 지학사; 주진오 외, 천재교육; 최준채 외, 법문사; 한철호 외, 미래엔 등 6종이다.

53) 서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인들은 주로 노동자나 유학생들이었다. 일본의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노동력 수요의 증가로 노동자들의 이주가 이루어졌다. 이들은 저임금을 강요당하고 민족차별의 고통을 겪었다. 1923년 관동대지진 때에는 조작된 유언비어로 인해 많은 한국인이 학살을 당하였다.” (도움자료: 관동대지진

또한 2012년부터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규 학교 교육과정에서 시행되고 있는 동아시아사 교과서에도 본문서술은 아니지만, ‘주제탐구’ 부분에서 관동대지진시 한인 학살문제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의 피해: 1923년 간토지방에 지진이 일어났다. …… 대혼란 속에서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는 등의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퍼져, 군대·경찰과 민중이 약 6,700명의 한국인을 학살하였다. …… 정부는 ‘조선인 폭동’이라는 유언비어를 이용하여 계엄령을 공포하고, 청년단·재향군인회·소방단 등으로 자경단을 조직하여 무고한 한국인을 살해하였다. -한일 교류의 역사⁵⁴⁾

《독립신문》이 보도한 한인 피살 숫자를 제시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사실 일본 정부가 위 유언비어 유포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실을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거의 사실에 가깝게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과 한국인 학살) 1923년 아침 11시부터 일본의 관동지방에서 5분씩 세차례의 지진이 발생했다. 일본 내무성은 계엄령을 선포하였고, 각 경찰서에 “재난을 틈타 이득을 취하려는 무리들이 있다. 조선인들이 방화와 폭탄에 의한 테러, 강도 등을 획책하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공문을 내렸다. 이러한 조치가 “조선인들이 폭도로 돌변해 우물에 독을 풀고 방화·약탈을 하며 일본인들을 습격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바뀌어 일본 전역에 나돌기 시작했다. 과격한 민간인들은 자경단을 만들고 불시 검문을 하면서 조선인으로 확인되면 가차없이 때리고 죽였다”[정재정 외(2012), 『고등학교 한국사』, 지학사, 212쪽].

54) 안병우 외(2012),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천재교육, 196쪽

V. 북한 학계의 관동대지진 관련 서술

북한 학계에서는 1960년대 초반부터 일본에서의 한인 학살문제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연구를 진행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⁵⁵⁾ 특히 북한 역사학계는 일찍부터 관동대지진 때 ‘집단적’ 한인 학살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본 정부에서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감행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학살된 재일한인 숫자는 수만 명에 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⁵⁶⁾ 이러한 경향은 일본에서 1950년대부터 재일동포들이 북송되어 상당수가 거주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이 주제가 관심이 되지 않았나 추정된다.

북한의 『력사사건』은 ‘관동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사건’이란 항목을 두고 꽤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주요 내용만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1923년 관동대지진 때에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일본에 끌려갔던 조선사람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한 사건. [...] 이 때 일본 반동정부는 대지진이 발생하자 아무런 구호대책도 세우지 않은 정부에 불만을 품고 있던 일본인민의 이목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하여 재일 조선인에 대한 학살만행을 감행하였다. [...] 조선총독부의 정무총감을 하면서 조선인민을 야수적으로 탄압학살하던 일제 내무상 미즈노 렌타로란 놈은 조선사람을 학살할 것을 전국에 지시

-
- 55) 김태선(1993), 『극악한 범죄자: 일제의 만행자료』, 평양: 근로단체출판사; 력사과학 편집부(1964), 「자료: 일본 니이가다현[新潟縣]에서의 학살사건 조사자료 중에서」, 『력사과학』 2호; 최대진(1965), 「강좌: 1923년 간포대진재 당시 재일조선인 동포들에 대한 일제의 야수적 학살만행」, 『력사과학』 4호; 리종현(1983), 「관동대지진 때 일본군국주의자들이 감행한 조선사람들에 대한 야수적 학살만행」, 『력사과학』 4호; 고정봉(2000), 「간포대지진 당시 재일조선동포들에 대한 일제의 대학살만행」, 『력사과학』 1호 등의 연구성과를 찾아볼 수 있다.
- 56) 정재정(2002), 「북한의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인식」, 『북한의 역사학(1)』, 국사편찬위원회, 248~250쪽

하였다. 이에 따라 군대, 헌병, 경찰, 테로단, 자경대들은 이리떼처럼 달려 들어 죄없는 제일조선인 남녀로소 할 것 없이 닥치는대로 잔인하게 학살하였다. [...] 이 사건으로 인하여 도쿄에서만도 학살된 조선인민의 수는 초보적으로 알려진 것만해도 1923년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기간에 6,161명에 달하였다.⁵⁷⁾

한일 양국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되기 전인 1971년에 출간되었지만, 사실을 정확히 서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친 표현이 다소 거슬리지만,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조선인 피살숫자 6,161명은 《독립신문》 기사에 나오는 6,661명의 착오로 추정된다.

1980년대 초 소위 주체사관으로 새롭게 쓰여진 『조선전사』의 ‘연표’에서 “일본 간토히방에서 대지진, 간토히대지진 때 일제가 조선인을 2만 3,000여 명을 학살, 일제가 간토히대지진 이후 조선인 학살죄행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악법 ‘류언비어취체령’을 공포”라고 기술하였다.⁵⁸⁾ 지금까지 간행된 발간물 가운데 가장 많은 희생자 수를 제시한 최초의 문헌이 아닌가 판단된다. 어떤 자료를 근거로 이 수치를 내세운 것인지 궁금하다. 《독립신문》(1923. 12. 26)이 보도한 최대 피해자 2만 1,600여 명과 근접한 숫자라는 점에서 이 신문의 파급이 아닌가 추정해볼 수 있다.

이 책은 또 “일제가 9월 1일~11월 11일까지 간토히대지진 때의 조선인대학살 만행을 가리우기 위해 18회에 걸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 조선 안의 신문 배포를 금지”라고 기술하여 국내 언론 탄압의 실상도 확실히 밝혔다.⁵⁹⁾

57)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1971), 『력사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東京: 학우서방, 1972 번각발행), 386~387쪽

58) 『조선전사』 ‘연표’, 1983,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478쪽

59) 위의 책, 478~479쪽

또한 근래 북한에서 출판된 대표적 백과사전 역시 ‘간포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사건’ 항목으로 상세히 서술하고 있어 매우 주목된다.⁶⁰⁾ 제일한인 학살의 주체를 일제, 즉 일본 정부로 명확히 서술하였으며, 학살된 한인수를 『조선전사』와 마찬가지로 2만 3천여 명으로 서술하고 있는 사실이 이색적이다.

결국 이를 종합하면, 북한 학계는 1970년대 초까지 ‘조선인’ 6천여 명이 학살된 것으로 파악하였지만, 1980년대부터 2만 3천여 명이 피살된 것으로 정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I. 일본과 미국 학계의 동향

1. 일본 학계의 동향

일본에서는 일찍이 1963년에 강덕상과 마쓰오 다카요시(松尾尊兌)가 관동대 지진시 희생된 한인문제에 대한 학술적 문제제기를 하였다.⁶¹⁾

일본 학계에서는 관동대지진시 ‘조선인’ 학살문제에 관해 2000년대 초반

-
- 60)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23년 일본 간포지방에서 일어난 큰 지진을 계기로 일제가 조선동포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한 사건. [...] 일제가 간포대지진 때 학살한 제일조선인수는 무려 2만 3,000여 명이 달한다. 일제는 학살만행의 진상을 가리우기 위해 엄격한 보도관제를 실시하는 한편, 도교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사람들을 한곳에 수용하고 출입을 단속하였다. 이 사건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야수성과 잔인성을 집중적으로 보여주었으며 놈들이야말로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라는 것을 온 세상에 다시 한번 드러내 놓았다”[『조선대백과사전』 1, 1995,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61~262쪽].
- 61) 姜德相(1963), 「關東大震災における朝鮮人虐殺の實態」, 『歴史學研究』 278호; 松尾尊兌(1963, 1964), 「關東大震災下の朝鮮人虐殺事件」, 『思想』 1963년 9월호, 1964년 2월호

까지 다수의 저작이 간행되었으나, 최근에는 주목할 만한 단행본이나 자료집이 별로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⁶²⁾ 그러나 2003년 관동대지진 80주년에 일본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참가한 연구자의 기록이 있어 당시 일본 학계와 시민사회의 동향을 참고할 만하다.⁶³⁾

한편 일본의 대표적 일본사사전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진재(震災)의 혼란 가운데서 유언(流言)이 발생,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자경단을 결성하여 조선인을 학살했다. 그 수는 6,000명에 이르렀다고 한다.”⁶⁴⁾ 군대와 경찰 등 학살의 주체를 분명히 서술하지 않고 있으나 피살 조선인 숫자를 6천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이처럼 진실을 밝히는 양심적 저작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일본의 구도 미요코(工藤美代子)는 관동대지진시 ‘조선인’ 학살문제가 과장·왜곡된 내용이 많으며 이를 비판하는 단행본을 발간하여 물의를 일으

- 62) 일부 (관련) 성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樋口雄一(1979), 「在日朝鮮人戰災者 239, 320人」, 『在日朝鮮人史研究』 4호, 在日朝鮮人運動史研究會; 高柳俊男(1983), 「朝鮮人虐殺についての研究と文獻」, 『季刊三千里』 36호; 山田昭次(2003), 『關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 東京: 創史社; 山田昭次(2010), 「今日における關東大震災時朝鮮人虐殺の國家責任と民衆責任」, 『思想』 1029호(1월호), 岩波書店; 山田昭次(2013), 「關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の歴史的・思想的意味－日本人社會主義者や先進的労働者の植民地解放の課題意識の生誕とその挫折」, 『季刊 戦争責任研究』 79호(春季號), 日本 の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 松尾章一(1993), 「關東大震災の歴史研究の成果と課題」, 『多摩論叢』 9호, 東京: 法政大學; 松尾章一(2003), 『關東大震災と戒嚴令』, 東京: 吉川弘文館; 山岸秀(2002), 『關東大震災と朝鮮人虐殺』, 東京: 早稻田出版; 今井清一(2007), 『横濱の關東大震災』, 横濱: 有隣堂; 北原絲子(2012), 「關東大震災の被災者の東向」, 『日本史研究』 598호, 日本史研究會; 吉田律人(2012), 「關東大震災と山下公園の誕生」, 『歴史と地理』 662호(『日本史の研究』 240호), 日本史研究會
- 63) 森脇孝廣(2004), 「關東大震災80周年記念集會參加記」, 『歴史評論』 647호(3월호), 校創書房
- 64) 『岩波 日本史辭典』, 1999, 東京: 岩波書店, 276쪽

켰다.⁶⁵⁾ 일본인들의 ‘조선인 학살사건’ 문제시 자체를 ‘자학(自虐)의 원점’으로 간주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⁶⁶⁾

한편 일본의 중앙 언론은 2013년 9월 1일을 전후하여 관동대지진 90주년 특집 기사를 다수 게재하였지만, ‘조선인 학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보도한 언론은 필자가 아는 한 《마이니치신문》이 거의 유일했다.⁶⁷⁾

일본군과 경찰, 자경단에게 한인 수천 명이 학살되는 참극의 발단이 된 관동대지진이 일어난 지 90년이 지났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진상규명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희생자의 신원도 밝히지 않았고, 책임자가 누구인지도 가리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도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죄를 일본에 요구한 적이 전혀 없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 보수세력들은 한인 학살의 역사를 감추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 도쿄도[東京都] 교육위원회는 고교 일본사 부독본(副讀本, 부교재) 『에도에서 도쿄로』에 실린 ‘간토대진재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에 대한 글에서 “대지진의 혼란 중에서 수많은 조선인이 학살되었다”고 되어 있던 내용을, 2013년도판에서는 “비(碑)에는 대지진의 혼란 중에서 ‘조선인이 귀중한 생명을 빼앗겼다’고 적혀 있다.”는 내용으로 바꿨다.⁶⁸⁾ 한인들이 왜, 어떻게 희생당한 것인지 알기 어렵게 개악(改惡)한 것이다.

65) 工藤美代子(2009. 12), 『關東大震災: ‘朝鮮人虐殺’の眞實』, 東京: 産経新聞出版

66) 工藤美代子(2009. 12), 위의 책, 8쪽; 서종진(2013. 8), 앞의 글, 187쪽 재인용

67) 川口裕之(2013. 8. 29), “朝鮮人虐殺 眞相究明を－關東大震災90年 日韓で取り組み活發に”, 《毎日新聞》, 23면

68) 야마다 쇼지(山田昭次)(2013. 8), 「일본인 민중은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금일의 일본의 정치적 사상적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日本人民衆は關東大震災時朝鮮人虐殺事件の歴史的意味をどのように受け止め, 今日日本の政治的思想的狀況にどのように對處すべきか」), 『관동대지진과 조선인학살사건』, 동북아역사재단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61·86쪽

또 요코하마시(横浜市) 교육위원회는 중학생용 부교재 『요코하마 알기』 2013년 판에서, 간토대지진 때 “군대나 경찰 등이 조선인에 대한 박해와 학살을 자행하고 중국인을 살상했다”(2012년 판)라고 서술한 문장 가운데 군대와 경찰이 관여했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학살’이라는 표현을 ‘살해’로 바꿔 문제가 되었다.⁶⁹⁾ 따라서 일본의 한인 학살 관련 사실의 은폐·왜곡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2. 미국 학계의 동향

1941년 미국에서 영문으로 출판되어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과 중국 혁명의 진상을 세계에 널리 알린 불후의 명작 『아리랑의 노래(*Song of Arirang - A Korean Communist in the Chinese Revolution*)』에도 관동대지진시 한인 학살 관련 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언급되고 있다. 이 책 구술의 주인공 김산(본명 張志樂)은 이때 6천 명의 한인들이 학살당했는데, 이 가운데는 1천 명의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⁷⁰⁾ 또한 이 책은 600명의 중국인도 학살당했다고 서술하여⁷¹⁾ 일본

69) 정남구(2013. 9. 2),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90년’ 추모·조명 활기”, 《한겨레신문》, 2면. 이 문제는 국내언론에도 신속히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조준형(2013. 8. 28), “日 요코하마,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교과서 왜곡”, 《연합뉴스》; 이철(2013. 8. 29), “日 요코하마 교육위 교과서 왜곡 ‘간토 대지진때 조선인 학살’ 삭제”, 《동아일보》. 도쿄의 경우는 田中正敬(2013. 8), 「戰後 일본의 역사교육과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관동대지진과 조선인학살사건』, 동북아역사재단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32쪽을 참조 바람.

70) Nym Wales(Helen Foster Snow) and Kim San, 『*Song of Arirang: A Korean Communist in the Chinese Revolution*』, New York: John Day Company(1941), San Francisco: Ramparts Press(1973), 제2판 94쪽. 이 책은 해방 직후인 1946년 10월부터 서울신문사에서 발행하던 종합지 『新天地』에 16개월 동안 일부가 번역되어 소개되었고, 일본, 중국, 홍콩, 한국에서 번역·발간되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한

군·경과 민간인들이 저지른 참혹한 만행을 비교적 실상에 가깝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김산은 《독립신문》 등에 보도된 기사를 보았거나, 이에 근거한 동료 독립운동가들의 전언을 듣고 이렇게 회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 강점기에 관동대지진시의 한인 학살 관련 사실을 진상에 가깝게 구미권(歐美國) 외국인들에게 널리 알린 책으로서는 거의 유일하지 않은가 한다.

한편 미국 학계에서도 관동대지진시 한인 학살문제를 연구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 향후 이 문제에 관한 국제적 연구성과 확산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소냐 양의 2003년도 논문과 이진희의 2004년 일리노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그리고 2013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들 수 있다.⁷²⁾

한편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지진의 영향으로 최근 미국 학계에서도 관동대지진 관련 연구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데, 한인 학살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관동대지진을 주제로 한 연구서 두 권이 출판되었다고 한다.⁷³⁾

국에서는 동녘출판사가 1984년 『아리랑』이란 제목으로 발간하였으나, 곧 금서로 지정되었다. 1992년에 개정판이 나왔다.

71) 『*Song of Arirang: A Korean Communist in the Chinese Revolution*』(1973), 제2판, San Francisco: Ramparts Press, p. 94; 『아리랑』(1992), 78쪽

72) Sonia Ryang(2003), “The Great Kanto Earthquake and the Massacre of Koreans in 1923: Notes on Japan’s Modern National Sovereignty”, *Anthropological Quarterly*, 76–4, Autumn; Jinhee Lee(2004), “Instability of Empire: Earthquake, Rumors, and the Massacre of Kororans in the Japanese Empire(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Jinhee Lee(2013), “Malcontent Kororans(Futei Senjin): Towards a genealogy of colonial representation of Kororans in the Japanese Empire”, *Studies on Asia*, 3–1

73) Jennifer Weisenfeld(2012), *Imaging Disaster: Tokyo and the visual culture of Japan’s Great Earthquake of 1923*, Berkeley · Los Angeles ·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J. Charles Schencking(2013), *The Great Kanto Earthquake and the Chimera of National Reconstruction in Japan*, New York:

VII. 2013년 관련 학술회의 동향

2013년 한국과 일본에서는 세 차례의 관동대지진 때 한인 학살사건과 관련된 국제학술회의와 세미나가 열렸다. 즉 국회에서 유기홍 의원실 주최로 ‘간토 조선인 학살사건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6. 19), 동북아역사재단 주최로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사건’ 국제학술회의(8. 22~23), 일본 리츠메이칸대학[立命館大]에서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와 리츠메이칸대학 코리아연구센터 공동으로 ‘관동대지진 한인학살 90년 한일 공동학술회의’(9. 7)를 개최하였다.

국회 세미나 「간토조선인 학살사건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학살·은폐·왜곡의 90년,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⁷⁴⁾ 학술회의라기보다 관동대지진시 한인 학살문제에 대해 너무나 무관심했던 한국 정부나 학계, 관련 기관,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 긴급 토론회의 성격을 띠었다. 이 세미나에서 일본인 NGO 니시자키 마사오가 2009년 5월 현장조사 이후에 만든 조선인 희생자 명단에는 ‘강양순 외 6명, 9월 3일 스미다구에서 일본도와 쇠갈고리 등으로 전원 살해(법무부·신문·경시청 자료)’ 등 도쿄, 지바 등에서 살해당한 조선인 115명과 부상자 12명의 이름과 나이, 살해장소와 출처 등이 나와 있어 큰 관심을 끌었다.⁷⁵⁾

Columbia University Press

74) 개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국회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의원 모임·국회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의원 모임·1923 한일 재일시민연대, 후원: 동북아역사재단

75) 니시자키 마사오(2013. 6), 「간토대진재 조선인 희생자 이름 리스트」, 『간토조선인 학살사건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학살·은폐·왜곡의 90년,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한다”』(6.19 국회 세미나 발표자료집), 13~18쪽; 김효섭(2013. 6. 20), “관동대

이를 계기로 국회 유기홍 의원, ‘국회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의원모임’은 ‘한일 재일시민연대’와 공동으로 ‘간토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9월 정기국회 때 발의할 예정이었는데,⁷⁶⁾ 이대로 관철될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하겠다.

한편 동북아역사재단은 8월 22일(목)~23일(금)까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관동대지진 90년 한일학술회의’, 「관동대지진과 조선인학살사건」이란 주제로 한일 양국 학자들이 참가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⁷⁷⁾

이 회의에서 강효숙(원광대학교)은 「일본 정부의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문제 사후 처리」라는 주제 발표에서 독일 외무성 자료에 근거하여 당시 피학살 조선인은 총 23,058명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숫자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한일 양국에서 공식화된 숫자는 《독립신문》에 보도된 6,661명이었다.

서종진 연구위원(동북아역사재단)에 따르면 최근 검정이 통과된 일본 초·중·고교 역사교과서의 경우 관동대지진시 한인 학살과 관련하여 희생자 수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교과서는 7종에서 5종으로 감소하였고, 학살주체를 일본 군경과 자경단이라고 명확하게 기술한 교과서는 15종에서 14종으로 줄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⁷⁸⁾ 한편 일본의 다나카 마사타카(田中正敬) 교수는 교육출판·일본문교출판·청수서원(淸水書院) 간행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학살주체로

지진 조선인 학살명단 첫 공개”, 《서울신문》, 27면

76) 김효섭(2013. 6. 20), 위의 기사

77) 장세윤의 발표논문은 「관동대지진 때 한인 학살에 대한 《독립신문》의 보도와 그 영향」이란 제목으로 首善사학회 발간 『史林』 46호(2013. 10)에 투고되었다.

78) 서종진(2013. 8), 「일본 검정교과서의 관동대지진과 학살사건 기술내용 분석」, 『관동대지진과 조선인학살사건』, 동북아역사재단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186쪽

자경단, 군대와 경찰을 명기하였지만,⁷⁹⁾ 한인들의 피해 범위에 대해서는 “많은(또는 수천인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살해되었고, 또 조선인으로 오해받아 살해된 일본인과 중국인도 있었다.”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 사실을 밝혔다.⁸⁰⁾ 또한 ‘학살’을 ‘살해’라고 바꾼 점이 매우 주목된다. 이러한 용어의 변경은 최근 검정이 통과된 고교 교과서 2종(明成社 『일본사B』와 야마가와[山川] 출판사 『일본사A』·『일본사B』)에도 보여 문제다.⁸¹⁾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와 리츠메이칸대학 공동주최 학술회의에서는 모두 6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가운데 이명화와 홍선표의 발표문이 주목된다. ‘관동대진재’에 대한 한국 독립운동계와 구미(歐美) 한인세력의 대응을 고찰한 것이다.⁸²⁾

VIII. 맺음말 - 당면과제와 전망

90년 전 관동대지진의 대혼란, 편견과 차별, 일본 당국의 사주 속에서 발생한 재일한인 학살사건을 우리는 정말 기억이라도 하고 있는 것인가? 기억하고 있다면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그 실상과 의미, 오늘에 주는 교훈을 성찰하고 올바른 계승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관동대지진은 재일한인의 민족차별

79) 田中正敬(2013. 8), 「戰後 일본의 역사교육과 관동대진재 조선인 학살사건」, 『관동대지진과 조선인학살사건』, 동북아역사재단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28쪽

80) 田中正敬(2013. 8), 위의 논문, 234~235쪽

81) 서종진(2013. 8), 앞의 논문, 187쪽

82) 이에 대해서는 이명화(2013. 9), 앞의 논문; 홍선표(2013. 9), 「관동대지진에 대한 歐美한인 세력의 대응」, 『關東大震災朝鮮人虐殺から90年, 國家暴力と植民地主義を超えて』 참조.

문제에서 비롯된 일제하 최대의 수난사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일본에서 진행된 관련 연구와 역사교육, 시민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확인하고, 나아가 한국 학계의 연구와 역사교육, 시민운동을 통해 관동대지진시 한인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과 문제점, 미해결 과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관동대지진 시기 한인 학살 관련 문제로 일본 정부에 요구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과 체계적 연구도 시급한 실정이다. 2013년 11월 중순 국가기록원이 공개한 『일본 진재시 피살자 명부』에서 290명의 한인 피살자 명단이 새로 확인되었다. 이제부터 본격적 조사·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관동대지진 발생 직후 일본 당국은 계엄령을 선포하여 일본 국민을 강력히 통제하는 한편, 언론 보도도 통제하였다. 이 때문에 일본 당국과 군·경, 자경단(自警團) 등 민간인들이 저지른 한인 학살의 진상은 오히려 파악되지 못했고, 일본 내외부로 알려질 수 없었다.

이러한 어려운 조건에서 《독립신문》 특파원과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던 한인단체들의 조사를 기초로 한 《독립신문》의 관동대지진시 한인 학살문제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보도, 즉 한인 6,661명 피살설이 설득력이 컸기 때문에 널리 수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물론 한계도 있었지만, 현재 남·북한과 일본 학계와 교육계에서는 이 기사를 근거로 대략 6천 명 내지 7천여 명의 재일 한인들이 관동대지진시 희생된 것으로 파악하여왔다. 사건 당시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부에서는 진상을 왜곡·은폐하고 호도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상황에서 《독립신문》의 관련 보도가 큰 영향을 끼친 사실이 검증된 것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이러한 근거조차 무시하고 한인 학살 만행을 호도·왜곡하려는 일련의 수정주의 동향이 대두하고 있다. 실로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에서는 일찍이 6천여 명 피살설을 정립했으나, 1980년대 초부터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 2만 3천여 명이 학살된 것으로 공식식화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상해판 《독립신문》 1923년 12월 5일자의 희생자 숫자 6,661명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강덕상은 1999년 『역사비평』 게재 논문에서 당시 관동(關東)지방에 약 2만 명의 한인이 거주했는데, 진재(震災) 후 일본 관헌이 모든 조선인을 강제수용했을 때 그 수는 1만 1천 명이었다고 했다. 그 차(差)인 9천 명 모두가 살해당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6천 6백여 명이란 숫자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⁸³⁾ 따라서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이 신문은 같은 해 12월 26일자(168회)에서 독일인 목격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2만 1,600여 명의 한인이 학살되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따라서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학살된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진상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며, 그 교훈을 오늘에 되살리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어떻게 기억하고 추모하느냐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근래 일본이 전반적으로 우경화하고 역사인식이 퇴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일본에는 양심적인 시민이나 시민단체, 학자들도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따라서 일부 정치 지도자와 우익세력의 발호와는 별개로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시민단체와 언론, 교육계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지만,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관동대지진 때 학살된 한인 관련 공동연구와 교육, 자료집 발간, 공동 전시회와 학술회의 개최, 추모행사, 일본 정부에 대한 공동대응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남·북한 학계의 이견을 해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중국 및 구미권 학계와 공동연구도 모색할 필요도 있다.

83) 강덕상(1999), 앞의 논문, 194쪽

앞으로도 우리 학계와 관련 연구기관 등이 풀어야 할 숙제는 산적해 있다. 튼튼한 기초연구를 토대로 학살의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관련 정부기관과 단체, 학계, 교육계, 시민단체, 언론 등과의 유기적 협력과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다양한 교류와 협력,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자료수집, 연구, 대응활동이 긴요한 실정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모리카와 후미토[森川文人]

법학부 전공, 피플스법률사무소 변호사

1923~2013년 관동대지진 90년, 우리들은 국가·민족을 극복했는가?

일변연(日弁連) 권고의 의의와 일본 정부의 민중분단정책의 책임

피플스법률사무소 모리카와 후미토

I. 문제의식 - 배외주의는 다시 힘을 갖는 것인가

”1923년 이래 조선인은 결코 일본인을 신용하지 않았고, 일본인도 조선인을 신용하지 않았다.” (김산, 『아리랑의 노래』)

배외주의(排外主義)는 다시 힘을 갖는 것인가 - 일본의 증오주의[在特會] 현실

근년 동경의 코리아타운 신오쿠보(新大久保) 등에서는 ‘좋은 한국인도 나쁜 한국인도 죽여라’라는 플래카드와 일장기 등을 든 수백 명이 ‘재일특권(在日特權)을 허락하지 않는 모임(在特會)’이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내각부(內閣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친근감을 느끼는 사람은 2011년 10월 62.2%에서 2012년 4월에는 35.2%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애국심이 강하다는 사람의 비율도 58%로 과거 30년 동안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2013년 7월 21일 참의원 선거에서는 여당인 자민당이 압승하고, 이른바

‘중참(衆參)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헌법 9조를 개정해 ‘국방군’ 창설을 노린 개헌 체제로 정비되어갔다. 세계적으로는 2008년의 리먼 쇼크에서 시작된 대공황 정세가 수습되지 않았고, 세계 각국 모두 찰나적 연명의 경제정책에 쫓기고 있었다.

역사상 이러한 경제위기 시대에는 내셔널리즘, 민족주의, 배외주의가 국내 문제에서 눈을 돌리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그것은 대체로 성공하고 있다. 배외주의는 국내의 계급대립을 ‘회수’해버리고, 민중은 전쟁에 동원된다. 그리고 관동대지진시의 학살도 일어난다. 배외주의는 드러나 있는 ‘계급’을 은폐시키고 사람들 생활의 불만을 ‘회수’하여 외국으로 관심을 향하게 한다. 이제까지 수차례 ‘성공’해 전쟁과 학살을 일으켰다.

우리들은 역사에서 배우고 있는 것일까, 배우는 것은 가능한 것일까, 타국 민의 민중끼리 서로 죽이는 비극이 두 번 일어나지 않을까.

‘국가’, ‘민족’의 벽은 두텁다. 언어, 습관, 지역 등으로 인한 분단을 넘어 국제연대는 가능한 것일까, 시대는 반복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일까.

II. 1920년대 관동대지진시 일본, 아시아의 계급을 둘러싼 상황

1920년대 아시아는 제1차세계대전 이후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 있었다. 1917년의 러시아혁명과 한일병합을 거쳐 1919년 3·1독립운동(1919. 2. 8. 동경 독립선언), 동년 5월 중국에서는 5·4운동이라는, 세계사상 최초의 공산주의 혁명과 그 영향을 받은 반제국주의·민족독립투쟁이 고양된 시대였다.

일본 국내에서는 1918년 쌀소동에 따른 데라우치[寺内] 내각의 타도, 1920

년대 ‘전후불황(戰後不況)’의 영향에 따른 노동운동 등의 계급투쟁이 활발했다. 여기에 대항해서 3악법(惡法, 과격사회운동방지법안·노동조합법안·소작쟁의조정법안)이 계획되었고, 이에 대한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1921년 11월에는 수상 하라 다카시[原敬]가 암살되는 등 사회는 불온한 상황이었다.

대중이 놓여 있던 상황은 2013년 현재와 비슷하다. ‘오이다스베야(퇴출)’, ‘프레카리아트(불안정)’도 근년의 조어(造語)인데, ‘감옥부옥(監獄部屋, 비인간적 환경 속에서 가혹한 육체노동을 하는 곳)’은 당시의 조어다. 감옥부옥으로 떨어진 ‘패잔자(敗殘者)들’ 중에는 미숙련 노동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교사, 양복장이, 이발사 등 ‘대체로 지식계급에 속하는 사람’도 있었다.

1920년 공황은 제국대학 졸업생을 포함한 회사원 등의 ‘정신노동자’에게도 사정없는 습격이었고, ‘샐러리아’(샐러리맨과 프롤레타리아의 합성어)라는 ‘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사회문제가 된 것은 ‘지식계급’ 실업자들의 절대적인 구인 수가 적었으므로 재취직은 대단히 곤란해 보였기(尾原宏之, 『大正大震災-망각된 단층』) 때문이다. 대체로 보통선거라고 해도, 직접 국세 3엔 이상을 납부한 25세 이상의 남자만이 선거권을 갖는 전 인구의 5.5% 정도가 유권자 계층을 형성하고 있고, 95%의 사람들은 정치참여의 법적인 권리조차 없는 상태였다. 그러한 일본의 도쿄[東京]와 가나가와[神奈川] 지역에는 2~3만 명의 조선인 노동자가 있었던 것이다.

한편 당시 일본의 사회주의자는 아직 소수파이고 아나키스트와 볼셰비키의 대립 등으로 분열·고립되어 있었으며 대중적 기반은 취약했다. 그러나 1922년 일본의 제3회 메이데이에 조선인 노동자가 참가하고, ‘부르주아지에게는 국경이 있어도 우리들에게는 무슨 국경이 있겠는가’라는 연설을 하고 있다. 그리고 1923년 메이데이 준비회에서는 슬로건의 하나로 ‘식민지 해방’이 거론되고 있었는데 경찰은 허가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당일에는 자유논단에

서 조선인 노동자가 ‘조선 동포를 해방하라’, ‘노동자에게 국경은 없다’라는 연설이 있었다. 재일조선인 노동자와 일본 사회주의자 연대의 맹아가 있었던 것이다.

9월 2일 ‘국제청년의 날’에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었다(중심적인 조직자인 히라사와 게이시치[平澤計七]는 9월 3일 살해되었다). 이러한 사회 상황들이 9월 1일의 관동대지진에서 사람들을 습격하게 한 것이다.

III. 관동대지진시 학살의 국가책임 – 일본변호사연합회 권고의 의의

2003년 8월 25일자 일본변호사연합회의 내각총리대신에 대한 권고서에는 “국가는 관동대지진 직후에 조선인과 중국인에 대한 학살사건에 관해 군대에 학살된 피해자와 유족, 허위사실의 전달 등 국가의 행위로 자경단에게 학살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 그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현재 더욱 반동화가 진행되는 정세이고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상황을 고려할 때 10년 전 위와 같은 권고가 나왔다는 것은 의의가 깊다. 변호사연합회의 권고는 법적 효력은 없다. 하지만 사실인정에서 위의 전문적인 판단이 변호사연합회의 책임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의의가 크다.

군대와 경찰의 살해뿐만 아니라 민간 자경단의 살해에 대해서도 “지진을 틈타 ‘불온한 조선인’에 의한 방화, 폭탄 투척, 우물에 독극물 투입 등의 불법 행위와 폭동이 있었다는 잘못된 정보를 내무성이라는 경비당국의 견해로 전달하고 인식시켰다.” 즉 허위사실과 유언비어의 전달에 대해서 “국가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는 심도 있는 사실 인정과 역사적인 판단을 변호사연합회

가 하고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유언비어를 이용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진 다음 날인 9월 2일에는 계엄선고에 대한 위법성(초규제적)도 지적되고 있다. 제국헌법 8조에 의한 긴급칙령의 형태로 발표되었지만, 추밀고문(樞密顧問)의 자문을 거치는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 또 “계엄령을 선고(宣告)하고 군대를 출동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대체로 계엄령은 ‘전시 혹은 사변에 즈음해서’라는 전쟁·내란 상태를 전제로 해 적의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권 등의 집행을 정지시켜 ‘병비(兵備)로서’ 군(軍)에게 국민생활을 총괄시키는 것”이고, “계엄령을 지진이라는 자연재해에 대해 선고하는 일 자체가 의문으로 지적된다.

결과적으로 계엄령에 기초한 명령의 시행목적으로서 ‘불량을 거론한 것에 대해 이재민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사유가 거론되고 있고, ‘계엄령’은 노골적이고 쓸데없는 위기감을 증폭시켰던 것이다. 8월 26일 가토 다카아키(加藤高明) 수상이 사망하고, 조각(細閣)도 이루어지지 않은 9월 1일 지진의 혼란 중에 행해졌다. 이 계엄령이야말로 체제 유지상 공포와 지진을 호기로 삼아 탄압하려는 의도가 현저하게 나타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IV. 국가책임의 본질 - 내셔널리즘에 의한 계급 대립의 ‘회수’

당시 일본의 국가권력이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국내외에서 노동자 계급의 국제연대·단결, 구체적으로는 ‘3·1운동의 국제연대’, 그 위에 ‘혁명’이었을 것이다. 러시아혁명과 3·1운동이 있는 지 10년도 지나지 않았

다. 혁명과 민중봉기는 체제에 대한 현실적인 ‘위기’였다.

즉 국가권력과 지배계급의 인식으로는 결국 국가주의자인 흑룡회(黑龍會)의 우치다 료헤이[内田良平]가 말하는 “러시아가 일본의 적화운동에 뜻을 두어 일본의 사회주의자와 조선인을 선동하고, 일본의 사회주의자 등이 이에 공명해서 항상 망동을 지향했음과 조선의 고려공산당 등이 금품을 공급받아 이에 조종되었던 것은 사실이며, 또 사회주의자와 불령 조선인이 암암리에 연락하는 일도 사실이다”(『黑龍會 근황에 관한 건』, 『現代史資料6』(제1820호), 憲兵隊報告文書), 그런 까닭에 조선인 학살은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 반혁명 예방으로 행해진 것이다. 바로 국내에서의 계급대립을 ‘민족·국가’ 대립으로서 ‘회수’하고, 국가에 대한 투쟁을 타국 인민 간의 투쟁으로 돌린다고 하는 국가권력의 의도가 분명해진 것이다.

※ 내무성(內務省), “최근 내지(內地) 거주 조선인 학생 중 점차 공산주의에 몰들어 내지사회주의에 접근하는 자가 있다.”, 재일조선인은 “왕왕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에 참가하고 단체행동에 나서려는 경향이 현저하다.”

※ “종래 한일병합기념일에 즈음하여 일본인이 의기양양했던 것에 반해 조선인은 조국상실의 비애를 느끼고 유쾌하게 즐길 수 없었던 것과는 정반대로 이번 지진 재해에는 조선인은 즐거워하고 일본인은 비관에 빠져있다. 아마도 강폭(強暴)한 일본에 대한 하늘의 벌이라고 누설하고, 사회주의자와 동류인 서울청년회·노동연맹회·조선교육협회·천도교 등은 제도(帝都, 東京)의 대참화 및 아마모토 곤노효에[山本權兵衛] 총리의 암살설 등을 퍼트려, 이번 사태는 우연이 아닌 일본 혁명의 상징이다. 가까운 시일 안에 각지에 내란이 일어나 현재의 제도는 개혁될 것이다.”(『現代史資料6』, 朝鮮總督府警務局文書)

V. ‘일본인으로서 책임’이라는 것은

국가권력의 의도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과제는 강덕상(姜德相) 선생의 이하 물음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생명의 존엄에 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없고 다름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지만, 가족 3인(주: 大杉榮 등의 살해를 가리킴)의 생명과 6천 명 이상이나 되는 생명의 양적 차이를 동일시할 수는 없다. 양의 문제는 질의 문제이고, 사건은 완전히 이질적인 것이다. 이질적인 것을 무리하게 동일화하고 병렬화하는 것은 관헌이 은폐공작에 가담했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양자가 관헌의 완전한 권력범죄이고 자민족 내의 계급문제인 것에 반해, 조선인 사건은 일본 관민 일체의 범죄이고 민중이 동원되어 직접 학살에 가담한 민족범죄이며 국제문제다.

일본의 국가권력과 지배층의 의도가 어떠한 학살은 당시 제일 조선인·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관민일체’로 행해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반성하며 그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는 것이다.

VI. 우리들은 국가·민족을 극복할 수 있을까?

90년이 지난 현재도 배외주의 데모를 민중들이 하고 있다. 때로는 민족이라는 깊은 균열을 극복하는 일이 도저히 무리가 아닌가 하는 절망감이 엄습해 온다. 민족이란 자신들의 선조에 대해 품고 있는 공통의 오해와 주변 사람에 대해 갖고 있는 공통의 혐오를 통해 결합된 사람들의 집단(田中一生, 유고슬라비아

언어, 문학연구자)인가.

또 국가라는 공동체 틀 속의 압도적인 존재, 독도(竹島)를 둘러싼 ‘준비된 대립’에서 국민의 배외의식은 감각할 사이에 확대된다. (內閣府의 여론조사 등)

강덕상 선생이 지적한 대로 관·민일체가 되어 배외의식을 갖고 학살을 행한 것은 아닌가. 국민 중에 본질적으로 뿌리 깊은 배외의식이 존재한 것은 아닌가. 자경단이 ‘조선인’을 학살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어떤 의식인가.

당시 ‘일본’은 ‘대한제국’을 침략·병합하고 있었다. 일본인의 의식에도 조선인의 의식에도 그러한 역사적 사실은 깊이 인식되고 있었다. 그중에서 ‘민족’으로 3·1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3·1독립운동의 대탄압 과정에서 일본인은 조선반도 각지에서 판매하는 음료수, 생선, 설탕 등 각종 식료품에 독을 넣어 조선인을 대량으로 살해했다. 이러한 비인도적인 방법을 스스로 행한 일본 관헌은 대지진시에는 재일조선인이 이러한 일을 했다고 하는 비열한 유언비어를 사방에 퍼트린 것은 아닌가 추측된다.” (松尾章一, 『關東大震災와 戒嚴』)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일본의 위정자와 군부 그리고 일반서민도 한일협정서 체결 이래 병합까지의 의지를 완전히 무시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또 통감부의 가혹한 경제정책으로 인해 생활고로 일본에 건너간 조선인 노동자들이 평온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그 내부에는 격한 분노와 증오가 숨겨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동정하면서도 그것은 피압박민족의 숙명으로 간과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즉 일본인 내부에 조선인에 대한 일종의 죄의식이 숨겨져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사회주의 운동만은 조선인 노동자와 단결을 강조하고, 전년도 말에는 조선인 노동자동맹회의 창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吉村昭, 『關東大震災』)라는 지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정부=위정자라는 국가의 침략행위를 통해 국민·민족으로서 의식이 형성되고 있었음은 분명하

다. 이러한 의식하에서 '자경단'이 조직되었고 자경단은 민간조직인 동시에 국가와 민족의식의 체현이라는 성격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VII. 2013년 정세 - 세계적인 공황정세의 계속과 세계의 민중투쟁

2008년 9월 15일 리먼프로세스(이른바 리먼쇼크)로 시작한 금융위기는 세계로 파급되었고 19세기 말 대불황, 1929년 공황에 이은 세 번째 '대공황'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질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정책하에서 누적된 과잉자본, 과잉생산력의 모순이 금융정책의 폭주와 파탄으로 노정되었던 것이다.

금일(2013. 7. 현재) 미국과 일본의 추가상승을 시작으로 "세계경제위기는 극복되었다."고 발표되었지만, FRB(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일본은행, ECB(유럽중앙은행) 등 각국의 중앙은행이 경쟁적으로 초금융완화정책(미국은 10년간 10회 채무상환 인상을 실시하고, 국공채의 무기한·무제한 구입, 잉여자금의 금융시장으로 유입(일본에서는 '아베노리스크')에 따른 것이고 주식'버블', 자산'버블'에 불과한 것은 근일의 역사적인 주가등락(5월 하순)으로도 명백하다.

인플레이션과 국채폭락이 불가피한 동시에 대체로 민중과 노동자가 놓인 상황 개선에는 전혀 이어지지 않지만, 실업률은 유럽 17개국에서 12%(1월)에 달하고 미국에서는 완전실업률이 7.5% 전후에서 멈추고 일본에서도 재해로 인해 20만 명이 실직했다고 추정되고 있으며 실업률 5%의 추세라고 하여 근본적인 개선 전망은 없다. 각국의 경제정책이 자본과 금융을 일시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한편, 2011년 튀니지 봉기에서 시작되 이집트 혁명 등 북아프리카 지역의

민중봉기가 있었고, 런던을 중심으로 불만이 확대되어 이슬람에서도 저임금·물가고 등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면서 30만 명의 시위가 일어났다. 게다가 오쿠파이·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되 전 세계에 '99%'의 투쟁이 확대되고 금년 들어 터키·브라질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일본에서도 지금 10만 명이 넘는 집회와 시위는 당연한 일이라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달 민중 봉기의 바탕에는 저임금·물가고 등에 관한 불만,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민중의 절실한 분노가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1억 총 중류 캠페인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 그 시대 계급이란 보기 어렵지만, 일본에서도 계급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생활보호 수급자 215만 명, 비정규노동자 38.2%(2013. 7)의 '격차사회(隔差社會)'가 현실이 되었다. 지배층의 위기의식은 90년 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일 것이다.

VIII. 민중·노동자 계급 공통의 적으로서 신자유주의 - 민영화·외주화·비정규화

1970년대 이래 과잉자본·과잉생산에서 자본주의 말기적 상황을 돌파해야 할 찰나적인 연명정책으로 '신자유주의'가 등장했다.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시대다. 구체적으로는 민영화(民營化), 외주화(外注化) 그리고 비정규화(非正規化)다. 이것들이 효율화, 코스트 삭감 등 자본 측 사정을 위해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개인화되고 상대적으로 무력한 노동자(David Harvey)'가 연대하고 단결해서 투쟁하는 일을 저지하는 것 자체가 목표라는 것은 오늘날 명확하게 되었다.

즉 기업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Peter Ferdinand Drucker)’인 인재육성도 방치하고, 노동자 고용의 책임(사회보장, 안정성, 합법성) 일체를 포기하는 일이 제일의 목적이다. 게다가 노동조합의 결집을 어렵게 해 노동조합을 분산·해체하고, 더욱이 조합에 참여하지 않는 자를 유리하게 하여 ‘유동화(流動化)’한 노동자의 노동력만을 착취하는 일이야말로 제2의 중요한 목적인 것이다.

“신자유주의화의 주요한 실적은 부와 수입을 낳는 것이 아닌 재분배하는 일이었다(David Harvey, 『新自由主義』).”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자본축적의 재황성화가 아닌 말기적·찰나적인 재분배 책동으로 노동자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고 책임을 회피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외주화·비정규화의 불안정고용을 꾀하는 것이다.

“노동자에 대한 총공격은 이면적인 것이었다. 각국에서는 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자 계급이 제 기관의 힘을 억눌러 해체하였다(필요하다면 폭력을 통해). 유연한 노동시장이 확립된다. …… 노동에 대한 자본의 지배가 시장에서 완성된다. 그리고 개인화되고 상대적으로 무력한 노동자는 자본가 개개의 요망에 기초한 단기계약밖에 없는 노동시장에 직면한다(동 233쪽).”고 지적하듯이 21세기의 신자유주의는 민중·노동자를 분산시키고, 폭력적으로 탄압하여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 ‘신자유주의’=민영화·외주화·비정규화는 세계 공통의 노동자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비정규화는 일본과 한국에서 30~40%나 된다. 이 신자유주의는 각국 민중·노동자 계급에 대한 자본가 계급의 공격이고, 말하자면 각국의 민중·노동자가 자국에서 공통의 적=자본·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IX. 국가의 책임을 철저히 추급하는 일이 민중(계급)의 국제연대

일본변호사연합회는 내각총리대신에게 국가는 관동대지진 직후의 조선인·중국인에 대한 학살사건에 관하여, 군대에 의한 피해자·유족 및 허위사실 전달 등 국가의 행위로 유발된 자경단에 학살당한 피해자·유족에 대해 그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가는 조선인·중국인 학살의 전모와 진상을 조사하고 그 원인을 밝혀야 한다. 즉 학살의 국가책임을 추급하고 있다.

또 “전쟁은 시민이 서로 죽이는 것이 아니다. 시민은 서로 죽음을 당하는 것이다. 원인은 정치가였다. 소수민족을 둘러싼 문제라는 것은 일부 정치가가 선동하여 선거민의 지지를 높이는 도구로서 사용되어 왔다. 그놈들은 중범죄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 문명화된 정치가야말로 야만인이었다.”고 하는 에미르 쿠스투리카(Емир Кустурица, 영화감독)의 지적은 지금도 다양한 사람 들에게서 언급되고 있다.

‘어느 시대의 지배적인 사상은 지배계급의 사상’(마르크스, 『독일 이데올로기』)이라고 지적되었다. 즉 그 시대의 권력자는 사상을 지배하고 민중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다. 매스미디어가 고도로 발달한 현재 그 경향은 더욱 현저하다.

‘배외주의’는 관민일체로 배양되지만, 본질적으로는 권력이 욕망하는 지배 사상에 불과하다. 대체로 노동자에게 국경은 없다. 각국의 노동자는 공통의 적을 갖는다. 배외주의에서 이익을 얻는 것은 자본과 권력이다. 우리들은 민족으로 서로 죽일 필요는 없다. 이것은 몇 번이나 확인된 일이고 이것을 이해했다는 증거로 각국에서 공통의 적인 자본, 정부(국가)의 책임을 철저히 추급

할 것, 이것이 민중·노동자 계급의 국제연대와 연결되어 있는, 반전(反戰)투쟁이다.

헤이트 스피치(중오표현)는 지금도 있다. 이것과 대치하는 것은 국제연대의 사상이다. 이를 위해서는 1923년의 조선인 학살이라는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국가의 의도는 분명하다. 다만 '민족범죄'라는 지적도 틀리지 않다. 이 '민족범죄'와 '국민으로서 책임'을 지기 위해 우리들은 감히 국가에 대한 '불량한 집단'이 될 필요가 있다. '비국민(非國民)'이 될 필요가 있다. 시대 속에서 스스로 설 장소는 어디인가, 어느 계급에 있는가를 냉정하게 인식하고 그곳에 있는 동료·동지들과 국제적으로 연대하고 공통의 적과 싸우고 있다는 점을 서로 이해해야 한다.

1923년에도 연대의 가능성은 있었다. 그런 까닭에 권력이 앞서 가 그 싹을 베어버렸다. 따라서 2013년 우리들이 배워야 할 점은 관동대지진 당시 권력이 두려워하는 구도를 실현하는 일이다. 그것이 투쟁하는 민중·노동자의 계급의사 연대다. 공통의 적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연대를 만들 수 있다. 배외주의가 횡행하는 시대, 민중·노동자는 손을 마주잡고 함께 싸우자. 적은 서로가 아니라 자신을 직접 탄압하는 자국의 자본과 권력이다.

“민국(萬國)의 노동자여, 단결하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김종수(金鍾洙)

신학(종교교육)전공, 1923 간토한일 재일시민연대 상임대표
대표논저로는 『서로를 살리는 인권교육』(공저, 2003, 해오름)이 있다.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을 규명하는 한국에서의 시민운동

1923 간토한일 재일시민연대 김중수

I. 간토¹⁾ 조선인 학살사건 규명활동의 출발

한국에서 간토 조선인 학살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민활동의 출발은 극작가 김의경이 희곡(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을 쓰기 위해 지바의 간온지(觀音寺)에 간 일이 계기가 되었다. 언론인 신우식이 중심이 되어 1985년에 종을 만들고 종루를 짓기 위해 모금공연을 하면서 문화예술인과 언론인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언론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1985년 9월 1일 지바의 간온지에 추도의 종과 보화종루가 세워지면서 한국의 시민들이 중심이 된 첫 추모제가 열렸다. 그 후 80주년이 되던 2003년에는 '관동대지진 한국인희생자 추모회'(신우식, 대한언론인회 명예회장)에서는 '보화종루'를 보수·정비하고 추모제를 거행하기도 하였다.

이후 한국에서 간토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활동이 다시 한번 계

1) 필자는 도쿄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동쪽지역인 '關東'(한국식 발음으로는 관동)의 지명을 일본 현지발음에 따라 '간토'로 표기하였다.

기가 된 것은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일꾼을 양성하지는 두 시민단체, 한국의 '아힘나운동본부'와 일본의 '아시아하우스'가 공동의 역사교육 및 교류활동을 위한 '아힘나평화캠프'를 개최하면서 시작되었다.

1. 계절학교에서 만난 증언자 야키가야 다에코

2006년 여름(7. 29~8. 1), 해마다 아힘나운동본부가 주최가 되어 계절학교 캠프를 열어왔다. 이해에는 도쿄 히노시에서 개최되었다. 이번에는 일본 NPO '아시아하우스'와 아이들의 자연과 자유활동을 지원하는 '도롱코노쿠니(஽투성이의 나라)'와 함께 한·일·재일(在日)이 함께 준비하였고, 참가자도 한·일·재일의 차세대 청소년들로 구성되었다. 당시 동북아는 역사문제로 한·중·일 간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던 때였기에 '아시아의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애써왔던 세 단체는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에서 아시아의 평화'가 시작된다는 데 합의하고 캠프 주제를 "미래의 역사를 써가는 아이들"로 정하였다.

이때에 초청된 강사가 야키가야 다에코[八木ヶ谷妙子] 선생이었다.

1913년에 태어난 만 10세 소녀 시절, 지바에서 조선인이 자경단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상황을 목격하였다.



"[...] 도착한 공동묘지에는 이미 구덩이가 파져 있고 그곳에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끌려간 사람은 눈을 가려 소나무에 붙들어 매어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총을 쏘 구덩이에 묻혀졌습니다 만 나는 무서워서 그 자리를 도망쳐 집으로 뛰어갔었습니다. 내 앞에 묶여 있던 그 사람은 대체 어디서 태어나 어떻

게 자라서 일본으로 어떻게 왔다가 어디에 정착해서 살았던가, 여기까지 어떻게 잡혀왔는지 잇을 수가 없었습니다.” [...] “생활 터전을 빼앗겨, 살기 힘들어 일본으로 건너왔을 그들은 슬프고 어둡게 이유 없이 조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야키가야 다에코 선생이 목격했던 시기와 장소는 1923년 9월 7일, 지바현의 나라시노시였다. 현 야치오시 농촌 몇 군데에 위치한 일본 군대가 나라시노 수용소 내의 조선인을 ‘주겠으니 받으러와’라고 명했으며, 이에 조선인 18명을 자경단에게 불하(拂下)하였고 자경단은 조선인을 칼과 총으로 살해하였던 것이다.

그날 이후로 야키가야 다에코 선생은 오랜 세월이 지나서까지도 학살당해 죽어가는 조선인의 모습과 희미한 목소리로 자신을 바라보며 ‘말해줘, 말해줘’ 하는 마지막 음성이 들려 때로는 꿈속에서 불현듯 환청으로 괴로워했다고 한다. 그리고 학살사건의 목격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깊어져갔다. 그 트라우마를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 야키가야 다에코 선생이 한 일은 일본에서 살아가는 유학생들을 위한 쉼터를 제공하는 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 간토 조선인 학살사건의 희생자를 추도하는 집회에서 수십 년 동안 묻어두었던 상처를 꺼내어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이었다.

2. 신주쿠 고려박물관에서 열린 간토 패널 전시회

2007년 5월 25일, 신주쿠 고려박물관에서 간토 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패널 전시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패널들 속에는 군대와 경찰, 자경단에게 끌려가고 학살당하는 사진들이 있





었고, 조선인들을 죽여 마땅한 존재들로 만든 유언비어와 그것을 받아 소설을 쓴 신문기사들이 있었다. 기사들 속의 조선인은 모두 ‘불명(不逞)한 선인(鮮人)’ 이었고, ‘제도(帝都)의 적(敵)’이었다.

송부자 명예관장을 만나 사진과 자료의 해설을 들으며, 이것은 단순히 역사를 아는 차원을 넘어 1923년 이후에 일본도 한국도 단 한 차례의 진상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시민활동가이며 목사인 필자는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한을 풀어주어야겠다는 제사장적 책임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송부자 관장에게 한국에서 패널 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였다. 당일 저녁부터 십야까지 고려박물관 이사회가 열렸고 허락을 얻을 수 있었다. 이사회의 허락 소식을 전하러 신오쿠보에 있는 모처로 찾아온 송부자 관장은 ‘자, 이제 어디에서 전시하려고 하느냐?’고 물었고 우리는 지체 없이 ‘대한민국 국회’라고 하였다.

3. 간토 조선인 학살사건이 한국 국회로

아힘나운동본부는 국회에서 간토 사진자료 전시회를 열기 위해서 역사를 전공한 의원으로서 당시 재일동포들의 인권에 기여한 바가 있던 민주신당 유기홍 의원을 찾아갔다. 유기홍 의원은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의원모임’의

대표간사로 국회에서의 행사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행사 당일엔 기자회견을 열기로 합의하였다.

2007년 9월 3일 오전 11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유기홍 의원과 한국 아힘나운동본부, 일본 고려박물관, 일본 아시아하우스, 일본 NPO법인 아힘나 피스빌더스(Ahimna Peace Builders) 등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단체 인사 20여 명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를 향해 관동대진재시 학살된 재일조선인 명예회복과 한일 진상조사단 구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오후에는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유기홍 의원과 이미경 의원, 관동대진재 일본인 현장 증언자 등이 참석해 오프닝 행사를 거쳐 사진 및 보도자료 전시회를 열었으며, 일본 고려박물관 관장의 1인극이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펼쳐졌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관동대진재 84주기 재일조선인 학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한일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심포지엄에는 아마다 쇼지[山田昭次] 박사(일본 릿쿄대학 명예교수), 강덕상 교수(시가현립대학 명예교수), 이은자 박사(간사이학원대학) 등이 발표자로 참석했고 그 밖에 일본 아시아하우스 및 일본 NPO법인 관계자 등 10명이 함께 했다.

II. 도쿄에서 간토 조선인 학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연대조직 출범

2007년 11월 17일, 아힘나운동본부의 제안으로 사건 후 85년을 맞이하는 간토대진재 조선인 학살문제의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의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 그리고 재일의 시민과 연구자 등이 모여, ‘간토대진재 조선인학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한·일·재일 시민모임’을 출범시켰다.

이날 모임에서는 향후 ‘한·일·재일 시민모임’에서 이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실현하기 위해, 한·일·재일이 연대하여 한·일 양측 정부에 대해 「간토대진재 조선인 학살에 관한 특별 입법 제정」을 촉구해나가자고 결의하였다.

‘간토대진재 조선인학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한·일·재일 시민모임’의 발기인 명단은 아래와 같다.

在日

姜徳相 (關東大震災時朝鮮人虐殺事件史 研究者, 滋賀縣立大學 名譽教授)

琴秉洞 (關東大震災時朝鮮人虐殺事件史 研究者, 前 朝鮮大學校 教授)

朱文洪 (在日大韓基督教會 小倉教會 牧師)

鄭宗碩 (韓國·朝鮮·在日と日本の歴史と文化を知る會 代表, 關東大震災朝鮮人犠牲者を追悼する會 幹事)

宋富子 (高麗博物館長)

李恩子 (關西學院大學 客員講師)

한국

김중수 (아침나운동본부 대표, 한신대학교 외래교수)

박경서 (한국기독교장로회 외국인선교협의회 회장)

박진우 (한일민족문제학회,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서굉일 (역사학자, 한신대학교 교수)

유기홍 (국회의원, 국회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의원모임)

조진경 (일본 NPO法人 Ahimna Peace Builders 이사장)

하종문 (한일민족문제학회, 한신대학교 교수)

日本

山田昭次 (關東大震災時朝鮮人虐殺事件史 研究者, 前 立教大學 名譽教授)

松尾章一 (關東大震災70周年・80周年記念行事實行委員會 委員長, 法政大學 名譽教授)

八木ヶ谷妙子 (NPO法人共に生きる國際交流と福祉の家 代表, 朝鮮人虐殺 目撃者)

사무국

日本 高橋伸子 (アジアハウス 代表)

한국과 在日 金令順 (아침나운동본부/NPO法人 Ahimna Peace Builders 事務局長)

다음은 발기인을 대표하여 아마다 쇼지 박사의 인사말이다.

한국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일본에서 간토대진재 조선인 학살사건을 생각하는 오늘의 의미는 무엇일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강덕상 선생님은 저서 『간토대진재』(1975, 중공신서)에서 이 사건을 '일본 관민 일체의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조선인 학살을 막으려고 한 민중이나 이 사건을 비판한 아키타 우자쿠[秋田雨雀], 후세 다쓰지[布施辰治],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 나가니시 이노스케[中西伊之助] 등의 지식인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수파였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규정은 올바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중은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하는 관헌의 정보를 왜 용이하게 믿었는가. 그것은 당시의 왜곡된 교육이나 매스컴의 영향에 원인이 있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고, 국민에게 국가에 대한 강한 일체 감이나 그로부터 발생하는 무조건의 신뢰가 있었던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상기와 같이, 소수라고 해도 조선인 학살을 막으려고 한 일본인 민중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재일 조선인을 접하고 있었고, 일본 국가의 테두리를 넘어 조선인의 인간적인 장점을 알고 있었겠지요. 여기에 미래를 향한 유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류는 지금 당장 국가를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상대화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없이 각국 민중의 교류와 연대를 통한 국제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전후의 역대 일본 수상들의 상당수는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대한 반성은 없고, 일본인 전사자를 나라에 생명을 바친 순국자로 계속해 현창해왔습니다. 야스쿠니신사에 매년 참배해 전사자에게 경의와 감사를 바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수상은 그 전형이었습니다. 민중을 침략전쟁에 동원해 무의미하고 유해한 죽음으로 몰아넣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한 수상은, 유감스럽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한 간토 대지진시 조선인 학살의 국가 책임에 대한 국가의 80여 년에 걸친 침묵이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국가의 편달을 받은 지방자치체가 공립 초중고교나 양호학교의 졸업식이나 입학식에는 히노마루(일장)기 게양, 기미가요(일본 국가) 제창을 강요해, 도쿄도는 이에 복종하지 않은 교원을 척척 징계처분에 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일본에서는 그만큼 열심히 국가 권위의 회복을 도모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사상 현황 중에서, 한국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간토대진재 조선인 학살사건을 조사해 추도하는 것은, 국가의 테두리를 넘은 민중 교류의 일환으로서 큰 의미를 가지겠지요.

지금까지 시민을 통해서 계속되어온 간토대진재 조선인 학살사건의 조사와 추도의 귀중한 유산을 계승하면서, 이 운동이 진진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당시 참의원 오카와라 마사코[大河原雅子] 의원의 축하 메시지다.

‘간토대진재 조선인 학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한·일·재일 시민모임’의 출범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사건 후 84년이 지난 지금, 사건의 진상을 찾는 조사·발굴 및 연구는 그야말로 시간과의 싸움이며, 관계자 여러분의 수고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월에 서울시 한국 국회의원 회관에서의 특별행사는 많은 한국 시민의 관심을 끌었다고 들며, 일본에서의 활동에도 새로운 기대감을 갖게 되리라고 짐작되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신 분들과 유족의 명예회복 실현을 위해서, 변변치 않은 힘이나 마 보탬 생각합니다.

오늘의 ‘한·일·재일 시민모임’의 출범과 향후의 활약이,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넓게는 아시아 시민 연대를 펼쳐 함께 아시아의 미래를 개척해가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7년 11월 17일

참의원의원 오카와라 마사코[大河原雅子]

사무국을 맡아 수고하신 니시자키 마사오[西崎雅夫](그룹 호센카 대표)의 인사말이다.

우리들은 매해 9월 첫째 토요일에 아라카와[荒川] 하천, 지금은 기네가와[木根川]라는 곳입니다만, 그곳에서 추도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

면 자유롭게 가져가십시오. 25년 전부터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당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기누타 씨가 아라키와 방수로가 인공의 강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모르고 있는데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혼자 조사를 하고 몇 년 연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지금은 없는 요쓰기바시[四ツ木橋]를 조사하는데 간토대진재 때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해 지금도 유골이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고난 후입니다. '간토대진재시에 학살된 조선인의 유골을 발굴하고 추도하는 모임'이라는 긴 이름의 모임입니다. '그룹 호센카'는 그 이후에 만든 스미다구의 사회등록단체입니다. '추도하는 모임'의 지부 같은 것입니다.

시민이나 회사원 등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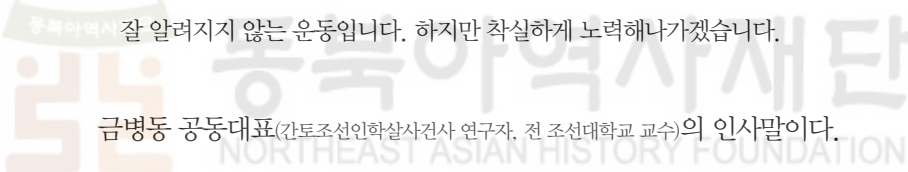
처음에는 아직도 유골이 묻혀 있다고 들었기에 그 장소를 파보기도 하였는데 그때 시굴한다는 것이 호소성이 있어 독에는 사람들이 죽 나란히 서 있는데 거기서도 증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증언들을 정리한 것이 이 책입니다.

스미다 지역에 한한 것이기는 하지만 지역의 학살 실체가 어느 정도 밝혀진 것 같습니다. 증언이 나온 시기는 증언자들의 연령 등 제한이 있어 1982~1985년경까지가 한계였습니다.

그 이후는 발굴을 하는데 있어서도 실제로는 아라키와 독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닌가라든가 신문 자료를 자세히 보니 가메이도[龜戸]사건의 희생자도 여기에 같이 묻혀 있어 가메이도 경찰이 두 번에 걸쳐 유골을 파내서 어디 가져갔다든가 하는 등 여러 이야기가 나와 발굴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 후 추도비를 그곳에 세우자고 했으나, 1급 하천의 하천 부지는 법률 규제가 엄해서 당시 건설청에 교섭을 해봤지만 안 된다는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미다구와 같은 공공단체가 뒷받침을 해준다면 생각을 해본다고 하여 우리는 진술서를 스미다구에 제출하였습니다. 아까 정중석 씨도 말씀을 하셨지만 스미다구 의회에서 한 차례 검토되기는 했으나 계속 심의로 들어가 결국 안 된다는 결정이 났습니다. 공적 자료가 없고 시민들에게 유리하지 않으며 위령추도라는 일종의 종교적 행위에 구(區)가 관계하지는 못 하겠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좀처럼 추도비도 현장에, 하천부지에 세우지도 못한 채 시간이 흘러 25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든 사유지라도 얻어 거기에다가 세워볼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늦은 발걸음이기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노력을 해서 운동을 계속해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오래간만에 이곳에 나왔는데 많은 분들을 뵈게 되어 아주 반가웠습니다. 송부자 씨는 제가 대학교 때 어느 모임의 강사로 초대를 해서 강연을 하셨습니다. 강덕상 선생님은 오늘 안 계시지만 선생님 덕에 제일 친구와 함께 가기도 하였고, 또 아마다 쇼지 선생님은 ‘추도하는 모임’ 대표를 맡아 주시라고 텃교대학으로 부탁드리러 간 것을 기억합니다. 아마다 쇼지 선생님은 당시 재일한국인의 정치범 구원자료를 열심히 봉투에 채우시면서 바쁘니까 절대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사람이 워낙 좋으셔서 결국은 해주십니다. 모임의 준비회를 출범할 때 대표를 맡아줄 사람이 없어 이 상태로는 더이상 모임을 출범할 수 없으니까 꼭 해달라고 부탁드려 임시대표로 모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실제로는 아직 일본 안에서, 일본인 안에서조차 알려지지 않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착실하게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금병동 공동대표(간토조선인학살사건사 연구자, 전 조선대학교 교수)의 인사말이다.

오늘 이 시민연대가 출범함으로써 간토대진재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말하자면 오늘이 역사적인 날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우선 제 자신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3개월쯤 전에 만 80살이 되었습니다. 일본인의, 장수국의 평균수명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70살 때 오래 살았구나 라고 느꼈는데 그때부터 벌써 10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치를 털어놓아도 별로 상관없겠다고 할까, 그리고 이제는 더 몇 년을 살 수 있는지 모르고, 또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수치를 털어놓는 것인데 아까 마쓰오 쇼이치[松尾章一] 선생님이 식민지조선에서 태어나셨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군국소년이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저와 반대의 뜻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반대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예전 7월이었는데, 아사히신문 기사를 하셨던 분이 자신의 아버지가 관계하신 『싸우는 조선』이라는 아사히의 사진집을 다시 신간서로 내었는데 그 출판기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나카츠카 아키라[中塚明] 선생님 다음에 지명을 받아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석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한 적은 없는데 사실 저는 재일 2세입니다. 예전부터 놀라시는 분들이 많지만, 만 80살인 재일 2세입니다.

그 역사적인 8월 15일은, 저는 만 17살, 곧 만 18살, 아시겠지요,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자랐습니다. 마쓰오 쇼이치 선생님이 13, 14살 때 군국소년이라면 저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즉 8월 15일 역사적인 교쿠온[玉音]방송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삼촌이 이타바시[板橋]에 계셔서 작은 공장을 경영하고 계셨습니다. 누나가 4월에 결혼하여 시즈오카[靜岡]에 소개(疎開)해서 후지노미야[富士宮]에 있었는데 부부가 8월 15일에 거기에 오니까 너도 오라는 연락을 받고 삼촌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11시경 전보가 와서 표를 살 수 없어서 못 가겠다고,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삼촌과, 그리고 저와 동갑인 사촌과 점심으로 소면을 먹었습니다. 그러더니 정오가 되어 라디오에서 교쿠온방송을 시작한다고 하기에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혼자 라디오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교쿠온방송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소년이었습니다. 교육의 성과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가를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싸우는 조선', 저는 바로 거기서 일본의 지배층이 조선인에게 요구한 것을 그대로 하고, 일본의 요구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원했고 저는 그것을 그대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황의 교쿠온방송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삼촌이 가만히 보고 있어서, 제가 자리로 돌아가니 삼촌은 첫마디에 일본은 졌다, 조선은 독립이다라고 저와는 정반대라고 할까 이놈을 어떻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던 것이지요. 사촌은 17살이었는데 마르크스와 레닌을 논하는 사람이어서, 저는 그와 동갑이었음에도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이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레닌은 어렵듯이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쪽에 레닌이 있고 동쪽에

하라 다카시[原敬]가 있다는 유명한 와세다의 나카이 류타로[永井柳太郎]의 연설을 들어 본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 속에서 제가 일가친척 중에서 혼자 라디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삼촌은 걱정을 하셨던 것이지요, 어떻게 해야겠다고. 그래서 “독립이다”라고 말을 하시면서 동시에 화를 내셨습니다. “일본이 지고 조선이 독립한다고 해서 기쁜 얼굴을 하지 마라, 그것을 일본인들은 보고 있다.”라고.

거기서 처음으로 간토대진재의 이야기를 삼촌에게 들었습니다. 간토대진재에서 조선인이 몇천 명이나 살해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간토대진재가 있었던 것은 알지만 조선인이 살해된 사실은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날에 실은 저는 간토대진재에 대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일본인이어서, 일본 국민은 어떻게 되겠는가, 천황께서는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계실까 하고 생각을 했을 뿐, 충격의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제가 간토대진재에 관심을 가졌는가, 저와 같은 어리석은 자라도 패전에서 반년이나 1년이 지나면 알지요, 모든 구조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 얼마나 제가 어리석었는지도 통감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고 있었지요, 자기회복이라는 것은.

그리고 오타구[大田區] 이케가미[池上]에 하숙하던 시기, 하숙집 할머니가 70세쯤이었는데 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 조선인은 신사적으로 되어 아주 좋은 사람이 많은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간토대진재 때 불을 지르고 독을 집어넣거나 해서 ……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 그런가고, 실은 이것으로 하여 간토대진재에 정말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삼촌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는 저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하여 그 이야기를 들고 나오셨겠지만, 이 할머니의 말은, 이것은 큰일이다, 알고 있다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간토대진재는 전부 날조라는 것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간토대진재에 관심을 갖고 자료를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획기적이라고 하면 이상한데 저와 강덕상 교수가 젊었을 때 같은 연구모임에 나갔었는데 거기는 일한우방협회라고 해서 총독부의 고관이었던 사람들, 정무총감이라든가 국장이라든가 그리고 경성일보의 기자라든가 그

런 사람들이 전부 모였습니다. 거기서는 우리 젊은 것들이 공격하면 사람들이 그에 응해주었습니다. 조선에 오래 계신 관계로 이분들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강덕상 군이 젊었기 때문에, 30 전인가 30이 되는 나이, 저는 5살 위이기 때문에 대략 30 좀 넘는 나이 때, 그가 간토대진재의 보고를 한다고 하니, 그렇구나 싶어서 듣고 있었습니다. 아, 이 정도 논리정연하게 말을 할 수 있구나 라고 감탄하였고, 또 제가 모으고 있던 자료를 그가 역사학 연구에 투영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 자료를 전면적으로 그에게 맡기기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것을 거의 내놓았는데 그러던 중 저도 1961년부터 조선대학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제안으로 서로 2, 3년간 작업을 하다가 함께 자료집을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출판사에 맡길 것인지, 대체로 이와나미[岩波]에서 낼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신기하게도 서로의 의견이 미스즈서방의 현대사자료에 넣자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오비[小尾]라는 편집장을 만나 출판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초기 제6집인 현대사자료 속에 집어넣겠다고 하여 1963년에 저와 강덕상 교수의 편지로 현대사자료가 나왔습니다. 아까 마쓰오 쇼이치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강덕상 교수는 그 후에 중공신서에 『간토대진재』를 냅니다.

한편 저 역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만, 료쿠인서방[綴漆書房]에서 4권의 자료집을 냈습니다. 간토대진재와 관련하여 아동증언자료나 관청자료, 그 외 식민지조선의 신문에서, 동아일보 뿐만이 아니라 조선일보 등의 주요한 사설을 번역해서 출판하였고, 진재에 대한 지식인의 반응이라는 상·하 2권으로 된 책을 내었습니다.

그러한 경과가 있어서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만, 저는 단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다른 단체에서도 운동에 참가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으나 저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때 써야 할 것들이 있어서 도저히 그런 데 시간을 낼 수가 없다. 그러한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9월 1일 간토대진재에 대한 강연의 의뢰를 받아 가톨릭의, 사이타마현과 도쿄 세키구치 교회와 요코하마의 교회였는데, 신부님을 비롯한 30여 명 앞에서 강연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저는 바로 오늘 이 발언의 결어로 말씀드려야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강

연을 들은 사람들에게서 이를 주도하는 단체나 모임이 있느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정성껏 간토대진재 문제를 다루어왔던 것 같아도 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때 제가 결어부분에서 이야기한 내용의 요지만이라도 말씀드리고, 나중에 본문을 다시 써볼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4가지인데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일본 정부에 사건의 정확한 조사와 사죄를 요구한다. 아까 한국에서 오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증거로 될 만한 것이 없다는 일은 없다. 우리는 증거를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모아왔고 마쓰오 쇼이치 선생님도 군의 관계를 3부 내었습니다. 대단한 자료입니다. 또한 목격자도 있고, 목격담도 있습니다.

둘째로, 일본 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각 당에 공작·호소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책임하지만 저는 자신이 운동체를 만들지 않으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셋째로, 학살사건이 금후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한다. 즉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일본 정부에 요구한다.

넷째로, 이것을 아시아 제 민족의 신뢰회복을 위해 꼭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

최근 수년 동안 이상 네 가지 중점 사항을 실은 간토대진재에 관한 강연을 부탁받았을 때, 이것들을 강연의 결어부분에서 언급하고는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민연대가 출범함으로써 이제 운동을 주도하는 핵심체라고 할까, 빛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린 골자에 덧붙일 내용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주시고, 만일 저에게 시민연대 찬동호소문을 만들라고 한다면 이것들을 골자에 넣고자 합니다.

수치와 함께, 아니, 80이 되면 부끄러운 것도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III.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한일재일 시민연대 사업

‘간토대진재 조선인학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한·일·재일 시민모임’의 한국 사무국으로서 ‘1923 간토한일 재일시민연대’를 조직하고 한국 내에서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로 등록하였다. 간토 조선인 학살문제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서는 유일하다.

한·일·재일 시민연대의 사업은 크게 대중홍보사업, 학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학술토론회, 학살현장을 찾아가는 스터디투어,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입법화,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추도사업, 학살희생자 유족 찾기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1. 사진자료 전시회와 학술 심포지엄

대중홍보사업으로서 사진·자료전시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학술토론회와 맞물려 진행되었다.

1) 동일본[關東]에서 서일본으로 넘어간 간토 조선인 학살사건 전시회 (2008년 1 ~ 2월)

한·일·재일 시민연대가 첫 사업으로 시작한 것은 간토 조선인 학살사건을 서일본지역에 알리는 일이었다. 북부 규슈와 시모노세키에는 한일교류를 주된 활동으로 삼는 시민단체들이 많고, 재일조선인들도 많이 살고 있다.

기타큐슈시[北九州市]를 시작으로 하여 시모노세키시[下關市], 다가와시[田川市]



를 거쳐 다시 기타큐슈에서 진행되었던 순회전시회는 한일의 우호와 평화,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를 바라는 한·일·재일 시민들이 힘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마당이 되었다.

간토대진재 조선인 학살과 관련한 패널들은 1월 17~19일까지는 재일조선인의 인권운동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재일대한기독교회 고쿠라교회에서 전시되었고, 1월 23~27일까지는 시모노세키 시민활동센터에서 전시되었으며, 1월 30일~2월 3일까지는 다가와시 석탄·역사박물관에서 전시되었다. 2월 13~17일까지는 기타큐슈로 넘어가 시립 남녀공동참획센터 '무브'에서 진행되었다.



(左) 《아마구치 신문》
 (左) 《요미우리 신문》
 (右) 《니시니혼 신문》

2) 한신대학 학술원과 공동주최로 열린 학술 심포지엄과 사진·자료전시회 (2008. 3. 27)

2007년 9월에 열린 국회에서의 1차 심포지엄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2차 심포지엄에서는 간토 조선인 학살과 3·1운동의 연계성을 강조하였고(강덕상, 서평일), 또한 일본의 정치적 상황과 사회주의 운동과의 연계성 속에서 학살사건의 원인(아마다 쇼지)을 조명하였다.

강덕상 교수는 이날 발표의 말미에 한국 정부를 향해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졌다.

제의 공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하물며 까닭도 없이 학



살된 사람들이 있다. 일본 정부는 물론 이 항의를 무시하고, ‘불명한 놈들’이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 후 80여 년, 일본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해방 전, 진상규명을 언급하면 형무소행이었다. 대일본제국이 붕괴한 전후는 어떤가. 진상규명의 요구는 여전히 봉쇄되었다. 필자의 기억에 따르면 1950년대, 중의원에서 모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 당시 이케다 수상은 “과문하므로 알지 못함”이라고 답변했을 뿐이다. 이상한 일인데, 한국 정부부터도 이 재의 공민 대학살에 대해 일본 정부에 진상규명과 사죄를 요구하는, 또 독약 투입, 방화 등의 유언비어에 대해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그러한 외교적 제의는 한번도 없었다. 상하이에 있던 망명정부가 요구한 사죄, 진상규명을, 그 계보를 이어서 오늘이 있는 한국 정부가 왜 소리를 높이지 않는 것인가. 역사에 시효는 없다. 불행한 시대의 극복에는 진상규명이 불가결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3) 민족문제연구소와 공동주최한 학술 심포지엄

(2009. 3. 28, 종로 기독교회관)

3·1절 90주년 그리고 강제병합 10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일본의 우익들은 식민지 범죄를 전면부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아시아의 민주화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제4차 국제심포지엄 (2009. 3. 28 기독교회관)

'한 걸음의 진전'을 위하여 / 김종수

독립운동 · 불령선인 · 학살 / 강덕상

간토대진재 시 조선인학살 사건에 대한 일본의 국가책임 /
야마다 쇼지

간토대진재 시 조선인학살 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국가 책임에
대하여 / 박한용

코리안 제노사이드란 무엇인가? / 마에다 아키라

국제연대를 통한 코리안 제노사이드 해결 제안 / 윤미향

일본변호사연합회 권고의 취지와 재발 방지 / 아즈사와 카즈유키

간토조선인학살과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의 전망 / 위대영

간토조선인학살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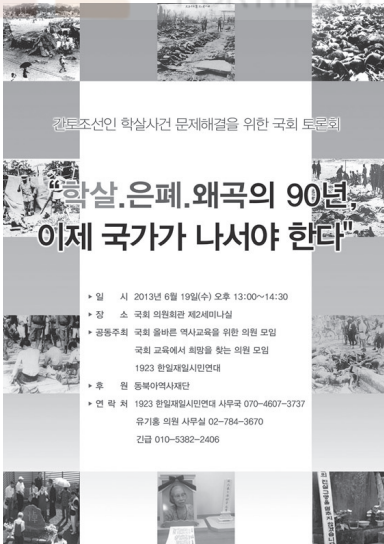


때 열린 제4차 국제 심포지엄은 조선인 학살을 제노사이드적 관점에서 조명 (마에다 아키라, 일본 조형대학 교수)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향후 일본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한·일·재일 시민연대를 넘어 이 소송을 위한 국제적 해결공조의 가능성을 내다보기 위한 의도로 기획되었다.

‘1923 간토한일 재일시민연대’는 ‘4·3의 땅’ 제주에서 ‘간토 제주행사실행위원회(공동대표 고희범, 이정훈, 홍성지, 김창규)’를 조직하고 간토 사진자료전을 보며 동안 열었다. 자료제공은 일본의 협력파트너인 ‘국가책임을 묻는 모임’과 ‘재일한인역사자료관’에서 제작한 것을 한국어로 번역·제작하였다. 시민·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각급학교나 시민단체 및 종교기관에서 전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총 22점으로 구성되었다.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이 행사를 기획한 이유는 학살된 조선인 중 3명이 제주 출신이었기 때문에 유족을 찾는 일을 하기 위함하였고, 제주 평화공원 내 제노사이드 역사관에 간토 조선인 학살이 빠져 있어 이를 시정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함이었다.

5)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의원회관 및 기장중학교교육원에서의 토론회
(2013. 6. 19 ~ 20)



간토조선인 학살사건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학살은폐, 왜곡의 90년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한다”**

- 일 시 2013년 6월 19일(수) 오후 13:00~14:30
-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주최 국회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의원 모임
국회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의원 모임
1923 한일재일시민연대
- 후 원 동북아역사재단
- 연 락 처 1923 한일재일시민연대 사무국 070-6607-3737
유기홍 의원 사무실 02-784-3670
간급 010-5382-2406



2013년은 간토 학살사건이 일어난 지 90년이 되는 해로 유기홍 의원과 특별법 제정에 대하여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그리하여 ‘국회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의원모임’과 ‘국회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의원모임’이 ‘1923 간토헌일 재일시민연대’와 공동주최하여 일본에서 연구자와 진상조사활동가 9명과 국회의원들이 진상규명을 위한 의회에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좌담회 형식으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다음 날에는 7월 초에 파송될 한국민간조사단을 위한 사전교육으로서 학술토론회가 진행되었고, 조사단 이외에 대안학교 학생들과 종교인들이 참여하여 진지한 학습이 이루어졌다.

2. 학살현장을 찾아가는 스터디투어

간토 조선인 학살현장은 크게 도쿄, 요코하마, 지바, 사이타마, 군마 지역으로 나뉜다. 학살지역이 워낙 광범위하고 지역마다 학살의 주체와 양태가 달랐기 때문에 비교적 자세한 듣기조사를 위해서는 보통 4박 5일로 진행되는 일정으로는 모든 곳을 돌아볼 수는 없었기에 한번 갈 때마다 그 특정지역의 몇 가지 사례에 집중해서 듣기조사를 하였다.

2008년 1월에는 도쿄와 지바 지역을 돌아보았다. 듣기조사라기보다는 사전답사의 성격이었다. 그리고 8월 마지막 주에 도쿄 YMCA에서 열린 85주기



추도행사에 서핑일 공동대표는 발표자로 한신대학교의 국사학과, 일본지역학과 학생들과의 스터디투어를 기획하였다.

300여 좌석을 가득메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85주기 추도행사에 간온지에 보화종루를 세우는 공사를 감독하였던 고령의 심우성 선생을 모셔 갔다. 간토 조선인 학살사건의 연구자와 활동가들 대부분 이 이미 70대를 넘어섰다. 모두 고령이었으나 이날 참석한 만 95세의 야키가야 다에코 선생께서 자신들을 향해 “젊은이들이 더 나이들기 전에 진상규명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라”는 말에 모두 폭소하였다.

다음 날부터 시작된 투어는 도쿄 요코야미초공원에 있는 추도비와 아라카와 학살현장, 지바 간온지의 보화종루와 나기노하라 학살터, 그리고 역시 지바에 유언비어를 전국으로 퍼뜨린 해군송신소와 조련이 세워놓은 학살주체와 희생자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새긴 추도비를 찾아가 설명을 들었다.

지바 간온지의 나기노하라는 수용된 조선인을 군대에서 살해용으로 이 지역 자경단들에게 불하하였고, 수일 동안 밤마다 칼과 총으로 학살되었다. 학살된 조선인들이 묻혀진 구덩이에 목련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는 주변의 어떤 나무보다 울창하게 자라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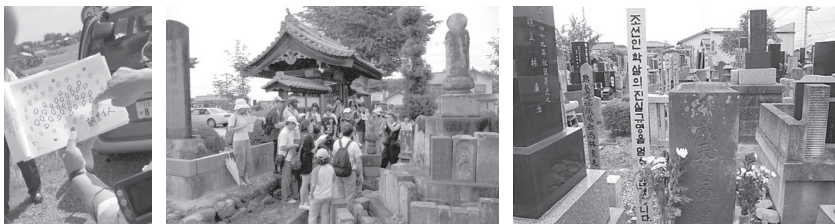
아라카와 학살현장에서 추도비를 세운 니시자키 마사오 선생은 대학시절부터 간토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희생자들의 주소를 들고 유족을 찾기 위해 수차례 한국을 방문하였고 도한보고서를 쓰기도 하였다. 이 지역의 진상규명 활동가들은 아라카와 강가에서 학살된 조선인을 묻었다는 다수의 증언들이 나오자 구청에 집요하게 요청한 끝에 발굴허락을 받았으나 끝내 유해는 나오지 않았다. 후에 확인해보니 1923년에 일본 사회주의 희생자들의 가족이 유해를 묻은 곳을 알아내 찾으려 하자, 밤중에 유해를 모두 어디론가 옮긴 것으로 추정되는 신문기사를 찾아내었다. 당시 신문기사의 제목은 “의문의 괴공

사”였다. 결국 ‘유골을 발굴하여 추도하는 모임’에서는 처음 묻혔던 강가에 봉선화와 무궁화밭을 만들고 잘 키워 씨를 받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학살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였다. 니시자키 마사오 씨는 그룹 ‘봉선화’를 만들고 교사직도 그만둔 채 진실규명을 위해 애쓰고 있으며, 그 뜻에 동참하는 많은 시민들의 도움으로 비록 아라카와 강가는 아니지만 독 너머에 작은 땅을 사서 학살의 주체와 희생자, 학살의 동기를 명확히 새겨넣은 추도비를 세웠다(2009. 8. 29).

흥미로운 것은 각 지역에서 간토 진상규명 활동을 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지역사를 가르치거나 다문화공생교육을 하면서 간토 조선인 학살사건을 접하게 되었고 지역에서의 진실규명활동에 더욱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2009년에는 아힘나평화학교 학생들과 역사현장수업의 일환으로 도쿄, 사이타마, 군마 지역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특히 사이타마, 군마 지역은 지진의 피해가 전혀 없던 지역이었음에도 많은 학살이 일어났던 것은 계엄령이 발포되면서 마을의 유지들이 자경단을 조직하여 조선인들을 다치는 대로 살해하였기 때문이었다. 이곳에 유일하게 학살자의 이름으로 세워져 있는 강대흥·구학영의 추도비가 있는데, 특히 구학영의 비문에는 나이와 고향 주소가 새겨져 있었다(具學永, 28세, 경남 울산군 상면 산전리).

일본에는 석비 이외에 해마다 추도의 마음을 담아 추도목비(토비)를 세우는 풍습이 있어, 아힘나평화학교 학생들은 한국에서 소나무를 가져가 ‘조선인 학



살의 진상규명을 멈추지 않겠습니다'라는 결의를 담아 현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연명하여 학살희생자 추도비 뒤에 목비를 세웠다.

2010년 8월 9일에는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회원들과 함께 도쿄 요코야미초공원에 있는 추도비 앞에서 머리 숙여 추도하고 아라카와 학살현장을 찾아가 니시자키 마사오 선생의 기나긴 노력으로 세워진 추도비에 얽힌 역사이야기를 들었다.

‘한국민간조사단’

간토 조선인 학살 90년을 맞아 기획한 ‘한국민간조사단’의 학살현장 조사는 그동안 찾아가지 못했거나 시간상의 이유로 스쳐지났던 곳에 대한 조사활동에 무게가 실렸다. 일정은 2013년 7월 2~6일까지였고, 참가자는 1923 간토한일 재일시민연대, 간토90주년행사준비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 사회위원회, 인터넷신문 ‘에큐메니안’ 등 7명으로 구성하였다.

조사활동은 한국에서의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이 입법화에까지 상당히 근접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 일본의 활동가들이 예년보다 더욱 신중을 기하여 준비하였고, 하나라도 더 많은 조사결과를 들려주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조사활동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일본의 각 지역 조사단의 안내로 당시의 사건 정황을 알아볼 수 있는 현장을 돌아본다.

둘째, 조사과정에서 수집된 다양한 증거자료, 다양한 증언들을 수집한다.

셋째, 한국 정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할 경우, 그동안 조사할 수 없었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견을 모아본다.

넷째, 한국 정부가 학살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경청하고 이를 위한 일본 시민사회와의 협력방안을 생각해본다.

4박 5일간의 일정은 아래와 같다.

▶ 7/2(화) : 지바[千葉] 조사

안내 및 설명: 히라카타 지에코, 오타케 요네코

1. 다카쓰 간온지[觀音寺]

(1) 나기노하라(유골발굴장소)

(2) 위령의 종, 종루

(3) 시(詩)탑

(4) 간토대진재 조선인희생자 위령의 비

2. 죠후쿠지[長福寺] 지심공양탑

▶ 7/3(수) : 사이타마[埼玉], 군마(群馬) 조사

안내 및 설명: 다나카 마사타카, 다카하시 다카스케, 야마다 쇼지

1. 죠펬지[常泉寺] 조선인 강대흥 묘

2. 쇼주인[正樹院] 감천수우신사 조선 경남 울산군 상면 산전리 구학영

3. 죠도지[成道寺] 위령의 비 17명의 희생자 성명

4. 후지오카 공양탑

▶ 7/4(목) : 도쿄[東京] 조사

안내 및 설명: 강덕상, 니시자키 마사오, 다카노 히로야스

1. 구(舊) 쓰키시마 3호지

2. 에이타이 다리 동쪽 끝

3. 요코아미쵸공원 도쿄도위령당, 간토대진재 조선인희생자 위령의 비,
부흥기념관

4. 구 오쿠라 다리

5. 라칸지[羅漢寺]

- 6. 죠신지[淨心寺] 가메이도 사건 희생자의 비
- 7. 호센지[法泉寺] 감사의 비
- 8. 스미다구 야히로 한국·조선인 순난자 추도의 비

▶ 7/5(금) : 요코하마[橫濱] 조사

안내 및 설명: 이마모토 요코, 야마모토 스미코

- 1. 나카무라 강가의 학살지
- 2. 호쇼지[寶生寺] 간토대진재 한국인위령비
- 3. 간토대진재 순난조선인 위령의 비
- 4. 미쓰자와 묘지(학살조선인 매장지)
- 5. 렌쇼지[蓮勝寺]
- 6. 코튼하버 아사노 조선소 터 (학살현장, 당시의 매립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민간조사단의 학살현장 지역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재차 확인하였다.

계엄령과 관련하여

1. 일본 국가는 단순한 재해임에도 유언비어를 근거로 삼아 계엄령을 발포하였다. 계엄령에서는 '조선인은 적(敵)'이라 하였고, 즉시 체포 또는 반항할 시에 즉결처형을 허용했으므로 이는 사실상 '전쟁상태'를 선포한 것이었다.
2. 일본 국가는 계엄령 발포의 근거를 유언비에 두었다. 실제 그러한 일이 일어난 사건은 없었다. 학살이 겹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국가기구에 의한 학살을 중단하고 민간으로 하여금 학살하도록 유인하고 방조하였다. 그리고 유언비를 사실화하려고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날조하였다. 유언비가 처음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확실한 것은 경찰과 군대가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를 유포하였고, 그것을 빌미로 계엄령을 발포하였다는 것이다. 사실 확인도 없이 유언비를 국가가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유언비를 계엄령 선포의 정당한 이유로 삼아 자경단이 이를 근거로 조선인을 무차별로 학살할 수 있었다면 분명 일본 국가는 위법적 행위를 한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에 있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학살했는가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3. 군대, 경찰, 자경단은 학살의 주체로서 아주 잔혹하게 조선인을 학살하였다. 목을 자르고 사지를 잘라버리거나, 양쪽 팔과 다리를 줄로 매달아 찢어 살해하였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성기에 죽창을 꽂아 넣고 임신부의 배를 갈랐으며, 땃줄에 감겨 우는 아이까지 무참하게 학살하였고, 사지와 머리를 베기도 하였다는 증언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4. 국가는 학살의 주체가 된 자경단에게 책임을 씌우고 있으나 자경단을 만들 것을 '지시'하고 행동지침을 내린 것은 국가였으며, 군대는 수용된 조선인을 자경단에게 넘기는 등 학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그러나 자경단 역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황국신민이기에 명령에 따르는 민중이라 할지라도 사실확인도 없이 단지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인도(人

道)를 저버린 살인마의 광기로 닥치는 대로 학살한 저변에는 뿌리 깊은 조선인 차별의식과 내셔널리즘에 예속된 집단광기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 국가의 은폐 및 왜곡에 대하여

5. 일본 국가는 학살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진재 피해로 사망한 일본인 사체와 함께 소각하여 그 신원을 알 수 없게 하였으며, 학살 관련 기록을 소각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통해 사건을 은폐하여왔다. 또한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명분으로 계엄령을 발포하였고 학살을 자행하였으며, 국제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유언비어를 사실화하려고 노력하는 등 학살에 뒤이어 은폐, 왜곡 등 제2, 제3의 국가적 범죄를 잇달아 저질러왔다.

일본의 사건처리에서 보여주는 책임전가 및 형식재판에 대하여

6. 학살에 가담한 자경단들에 대한 일본 사법부의 재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재판에서는 판사와 피고인 간에 농담이 오갈 정도로 형식적인 재판이었으며, 조선인을 죽인 것에 대한 죄의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조선인을 학살한 자 대부분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선고받은 이들 가운데에는 국가가 상을 주지 않고 벌을 내렸다는 것에 반발하기도 했다.

일본의회와 일변의 질의에 관한 정부의 공식입장에 대하여

7. 1923년 12월 15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헌정회 소속 의원 나가이 류타로 [永井柳太郎]가 간토[關東]대진재 당시 조선인 학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할 것과, 조선인 희생자의 '유족을 위안하는 최선의 방법'을 보일 것을 촉구했으나, 당시 총리의 '현재 조사 중'이라는 책임회피성 발언이 있는 뒤 지금까지 일본 의회에서 정부의 책임을 묻은 일이 없다.

일본변호사연합회는 2003년 재일조선인 문무선의 호소로부터 사건을 조사한 일이 있다. 그리고 학살에 국가가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2003년 8월 일본 정부에 대하여

- 국가는 간토대지진 직후의 조선인·중국인에게 대한 학살사건에 관하여 군대가 행한 학살의 피해자·유족에 대하여, 허위사실 전달 등으로 국가의 행위에 유발된 자경단에 의한 학살의 피해자·유족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
- 국가는 조선인·중국인 학살의 전모와 진상을 조사하고, 그 원인을 밝혀야 한다.

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이를 묵살하고 아무런 공식입장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간토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교과서의 역사왜곡에 대하여

8. 2012년 요코하마 교육위원회가 발행한 중학교 역사 부교재인 『와카루 요코하마』에서 간토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기술 중 “군대와 경찰, 재향 군인회와 청년회를 모체로 조직된 자경단 등이 조선인에 대한 박해와 학살을 자행했다.”는 내용에 대하여 일본 우익세력들의 압력에 못 이겨 교과서를 회수하라는 조치를 하였다. 왜곡된 교과서에는 “정부가 계엄령을 발동해 군대를 요코하마에 출동시켰다. 이유는 자경단 가운데 조선인을 살해하는 행위로 나아간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로 바꾸고 ‘학살’을 ‘살해’로 바꾸는 등으로 기술하여 일본 청소년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진상규명에 대한 노력이 전무함에 대하여

9. 1923년 학살사건이 있던 해 상해임시정부가 조선인 학살사건을 조사한 이후, 현재까지 국가적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사건 당시는 식민지였기 때문에 적절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

했다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미루어왔다는 것은 국가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역사교육에 간토 조선인 학살사건이 사라진 것에 대하여

10. 한국의 역사교과서에는 이 사건에 대한 무지 혹은 식민사관에 의한 역사기술로 '유언비어에 의한 우발적 학살' 등 일본 교과서의 왜곡된 내용을 그대로 수록해왔으며, 최근 역사교과서에는 아예 간토 조선인 학살 사건에 대한 기술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주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90년 전, 간토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범죄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현재도 재일동포들에 대한 차별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일본 정부에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단호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이는 재외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의 기본적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간토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억울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의 의회와 정부가 나서야 할 것이다.

2013. 7

3.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입법화 운동

2007년 9월 3일,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의원모임 대표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신당 유기홍 의원과 한국 아힘나운동본부는 오전 11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일본 고려박물관, 일본 아시아하우스, 일본 NPO법인 아힘나 피스빌더

스 등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단체 인사 20여 명이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를 향해 간토대진재 사건으로 학살된 재일조선인 명예회복과 한일 진상조사단 구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008년 선거에서 유기홍 의원이 낙선하면서 1923 간토훑일 재일시민연대는 여러 관련 정치인들을 만나 간토훑문제의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 결국 18대 국회에서의 입법활동은 다음 19대에서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국가로 하여금 진상조사를 통한 일본 정부에 책임을 묻기 위하여 정부기구인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간토훑 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23년의 간토훑 조선인 학살사건은 동 위원회의 조사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종 입장을 정리하였다. 한국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전향적인 움직임을 기대하며 위원장을 만나 설득하려던 일본 공동대표 아마다 쇼지 박사를 비롯해 마에다 아키라 교수, 하리카타 지에코 등 연구자·활동가들은 한국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최종입장을 확인하고 돌아갔다. 간토훑 조선인 학살사건은, 일제하 식민지 범죄를 다루는 어느 기관에서도 이 문제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국가에 책임을 묻게 하는 방법은 이 문제를 진상조사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유일했다. 1923 간토훑일 재일시민연대는 학술 심포지엄과 사진자료 전시회를 열고 종교기관이나 대학에서 특강을 할 때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펼쳐왔다.

동시에 2009년부터는 한국의 역사단체와 연대하여 '강제병합 100년 공동행동 한국실행위원회'를 조직에 참여시키고 식민지 과거사 해결을 위한 공동실천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인 실천 어젠다를 만들기 위한 기타큐슈에서 한일 과거사청산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가들과의 학습토론회를 기획하고 실행하였

으며, 한국 실행위의 2010년 활동에도 힘을 모아갔다. 워낙 미청산과제가 많을 뿐만 아니라, 제 단체들의 당면과제들을 추진하는 일에도 힘이 모자랄 지경이었기 때문에 식민지 범죄청산을 위한 포괄적인 법제정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뜻대로 이루지는 못하였다. 또한 언론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연행 문제, 사할린동포 문제 해결 등에 집중되었다. 다만 간토 조선인 학살 시민운동이 대중들에게 보다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강제병합 100년 특집'으로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서 간토 조선인 학살문제에 대해 집중보도하면서였다. 이후 웹상에서 네티즌들의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간토문제 해결의 보다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한국과 일본의 기독교 대표기구인 NCC를 통한 법제정 운동을 호소하였다. 일본 NCCJ-URM(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 도시농어촌선교위원회)의 목회자들은 일본에서 민주화운동과 평화운동에 몸담고 있는 종교인들이라 비교적 어렵지 않게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한편,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 정의와평화위원회, NCCJ-URM, KCCJ(在日大韓基督教會) 등 한국과 일본의 종교계에서 간토 조선인 학살문제와 현재 재일동포들이 당하는 차별문제가 선교의 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관련 대회가 열릴 때마다 이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결과적으로 한일 양국이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일을 함께 기도하자는 결의를 이끌어냈고, 교회력에 9월 첫 주일을 재일동포인권선교주일로 확정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은 2013년 한일 URM협의회(3월 18~20일, 교토 일본 크리스천아카데미)에서 간토 조선인 학살 진상규명을 한국·일본 양 정부에 촉구하는 매우 의미 있는 성명서를 만들어냈다. 국가의 책임과 사과를 촉구하며 한국과 일본의

기독교계가 먼저 이 사건에 대한 공통의 역사적 시점에서 공식적인 문서를 채택한 것이다.

이미 제9회 대회(한국 제주)에서 강제병합 100년과 일제 식민지 범죄에 대한 역사적 입장을 발표한 일에 대하여 한일 URM협의회에서 여전히 차이가 없었음을 확인하였고, 제10차 협의회에서는 간토 조선인 학살사건 90주년을 맞아 단독적인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간토대진재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공동성명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 도시농어촌선교위원회(NCCJ-URM),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평화위원회(NCCK-Justice and Peace Committee-이하 NCCK-JPC)는 일제에 의한 강제병합 100년의 해에 개최되었던 제9회 한일 NCC-URM협의회에서 일본의 강제병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NCCJ-URM과 NCCK-JPC는 한국 강제병합은 일본의 무력에 의해 위협받은 것이고, 그것은 국제법상으로도 체결시부터 무효였기에 일본 정부의 조선 식민화에 대하여 그 어떤 구실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오늘날 남겨진 식민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선언하였음을 확인하고, 조선의 식민화로 인해 발생된 문제, 즉, 간토대진재시 조선인 학살문제, 야스쿠니신사 합사문제, 사할린 잔류 조선인 피해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 식민지 지배 결과 일본에 거주하게 된 재일 한국·조선인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포함하며, 한국 정부는 일련의 문화재 반환요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일기본조약의 재검토를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선언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과제로써 한일 양국 교회는 일본 정부가 식민지 범죄에 대하여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한·일의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근현대사 교육을 교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9월 첫째 주일을 '재일한국·조선인 인권주일'로 선포하고 이를 지켜가며, '간토대지진시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을 위해 협력해간다고 선언하였음을 다시 확인하였다.

특히 올해는 '간토대지진시 조선인 학살사건'이 일어난 지 꼭 9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간토제노사이드 희생자 90주기 추도식 한일공동준비위원회'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WCC 제10차 부산 세계총회에서 'NEVER AGAIN GENOCIDE'를 주제로 한 전시회와 국제학술토론회를 부대 행사로 개최하게 되었다. 이 행사를 통해 '간토대지진시 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일본 정부와 지역교육위원회의 책임회피를 위한 역사 왜곡을 지적하고, WCC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기로 하였다.

이에 NCCJ-URM과 NCCK-JPC는 각 소속 교단과 지역 교회와 함께 아래의 사항들을 계속해서 추구해나갈 것을 선언한다.

- 일본 정부는 '간토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모든 자료를 왜곡·은폐하려한 모든 시도를 공개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일본 총리는 '간토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저지른 범죄를 공개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킨 죄를 사죄하고, 유족들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한다.
- 일본과 한국의 국회에 대하여 '〈간토대진재 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상조사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 한국 정부는 '간토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기초조사를 이어받아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건 관련 자료 일체의 공개를 일본 정부에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 한국과 일본 역사 교과서에 '간토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수록할 것을 요구한다.

NCCJ-URM과 NCCK-JPC는 이러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가기로 한다.

2013. 3. 20

제10회 한일 NCC-URM협의회 참가자 일동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 도시농어촌선교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외평화위원회

입법화 논의는 결국 2012년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다시 국회로 돌아온 유기홍 의원과 시작하게 되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언론에서 언급되면서 간토 조선인 학살문제가 서서히 대중들에게 알려졌고, 올해가 90년이 되는 해라는 점, 그리고 일본 사회의 급속한 우경화 현상에 맞물려 지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입법화에 대한 국회의 공감대도 확산되었다. 또한 동북아역사특별대책위원회에서 유기홍 의원과 임수경 의원의 노력으로 특위의 사업으로 되어 향후 국가적 차원에서 진상규명의 첫출발이 될 전망이다.

간토 조선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화는 결국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을 위한 기구 설치가 목표이며, 조사기구의 역할은 일본 연구자들과 진상규명 활동가들이 수집하고 저술한 모든 자료를 한국어로 DB화하는 업무, 국가로부터 학살사실의 인정을 받아내기 위한 제반업무, 학살로 희생된 조선인 유족을 찾는 것이 주업무가 될 것이다.



4.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추도사업

한국기독교장로회의 교회력에는 매년 9월 첫 주일이 재일동포선교주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회가 왜 그렇게 제정하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심코 지나간다. 하지만 2007년 간토 조선인 학살사건을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 알리기 시작하면서 한국기독교장로회를 중심으로 추도행사를 해오고 있다.

2007년에는 신주쿠 고려박물관을 돕고 있는 서울노회 초동교회에서 송부자 관장의 1인극과 함께 추도예배를 드렸고, 85주년을 맞는 2008년에는 서울노회 향린교회에서, 2011년에는 제주노회 주관으로 그리고 2012년에는 간토 제노사이드희생자 90주기추도행사준비위원회 주관으로 기독교회관에서 열렸다.

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 시작된 9월 첫 주일 재일동포선교주일의 의미를 한국과 일본 재일기독교교단이 공동으로 지킬 것을 권고하는 중요한 문서가 채택된 것이다. 그 이후로 많은 교회들이 일본 사회와 재일동포 문제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향후 재일동포의 차별문제와 협력에 대한 의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앞서 제시한 제10차 한일 URM협의회(2013. 3. 18~20) 성명서에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재일한인기독교단이 9월 첫 주를 기해 일제히 '재일동포인권선교주간'으로 선포하고 간토 희생자를 추도하는 집회를 열자는 결의를 하였다. 이를 계기로 하여 개신교에서 먼저 시작된 추도행사는 앞으로 시민운동의 활성화에 더욱 큰 힘이 될 것이다.

5. 학살 희생자 유족찾기 사업

한국에서 간토 조선인 학살 유족을 만난 것은 규슈의 평화운동가 구와노 야스오 씨의 소개로 2007년 재일동포 조건치 씨를 만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는 목포에 사는 유족 김대원 씨(1926년생으로 2013년 3월에 별세)의 일을 돕다가 중단하였다고 하였다.

2008년 김대원 씨는 청소년기에 한낱한시 제사를 지내는 유족들에게서 어른들의 한맺힌 삶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김대원 씨의 친족들은 도쿄로 갔다. 먼저 일본에 갔던 마을 사람이 돌아와 일본의 공장에서 일하기를 설득했던 것이다. 이 와중에 간토대진재가 있었고, 김대원 할아버지의 친족들이 몰살당했다. 그중 일본어를 잘 하는 한 사람이 이웃집으로 숨어들어 피해를 면하고 고국으로 귀향하여 이 사실을 전해준 것이다. 돌아가신 친족들의 사망기록은 도쿄 아사쿠사에서 같은 날 지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김대원 씨는 어른신들의 삶이 너무 슬프고 억울하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국가가 나서서 진상조사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였다. 일본에서 죽어간 6천여 명의 조선인들이 폭도가 아니고, 테러분자도 아니며, 흉악범이 아닌 것을 한국 정부가 나서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일본

간토 희생자 추도집회에도 참여하고, 어른들이 일했을 가능성이 있는 요코아미초공원(옛 군수공장 자리)에 있는 위령당에도 찾아가 영혼이라도 만나고 싶어 했다.

김대원 씨는 그동안 돌아가신 어르신들의 억울한 원혼을 풀어드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고 한다. 해방 후 박정희 정권에서는 말도 못하고 지내왔지만,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자 그래도 한줄기 희망을 가졌던 모양이다. 박지원 비서실장을 통해 진상규명을 요청했지만 형식적인 대답뿐, 이렇다 할 정부의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고 한다. 참여정부 들어서도 이런저런 노력을 기울이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몸져누웠다.

2008년 추도식을 마친 후, 목포로 내려가 김대원 씨를 만났다. 그는 “학살 사건 이후에 일본에서 헌병이 와서 200원을 주었고, 김씨는 그 돈으로 땅을 사서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일본 헌병이 와서 한국의 유가족을 찾아 위로금을 주었다고 하면 당시 그 유가족 명단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고, 그 문서를 찾으면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무언가 실마리를 찾으려고 애를 썼다.

2009년 3월에 열린 간토 심포지엄을 마치고 일본에서 온 분들과 함께 또 다른 유족들이 살고 있는 전남 신안으로 내려갔다. 그곳에서는 희생된 선친들



의 헛모가 여러 곳에 있었다. 대부분 유족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간신히 살아 돌아온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생사를 확인할 수 있었을 뿐이었고, 사건을 철저히 은폐한 일본 정부에 더구나 식민지 조선인으로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조차 없었다.

김대원 씨는 요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올해 3월에 세상을 떠났다.

유족찾기 사업의 실마리는 일본에서의 진상조사 활동을 통해 어렵사리 구한 자료들에 나타난 학살된 조선인의 신원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당시 조사한 바로 6,661명이 학살되었다고 밝혔지만, 당시 학살당한 조선인의 이름, 고향주소가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불과 23명에 불과하다. 이들 유족 중 일부라도 찾게 된다면 일본에 국가 책임을 묻고 국가 차원의 사죄를 요구하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IV. 한국에서의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운동의 평가와 과제

1.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운동의 평가

일제하 식민지 범죄에 대하여 일본 국가에 책임을 묻는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처럼 '1923 간토헌일 재일시민연대' 역시 일정한 조직 속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채 출발하였다. 그리고 수년 동안 그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처음부터 이 일을 전업으로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일은 아힘나캠프에서 시작되었기에 이 캠프를 주최한 시민단체 '아힘나운동본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었으며, 행사준비에 필요한 재정은 주로 동북아역사재단의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받았으나 그 실무는 모두 아힘나평화학교 교사들이 나누어 맡았다.

2009년과 2010년은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해 많은 대일 관련 역사단체들과 연대하여 식민지 범죄에 대한 포괄적 해결을 모색하고자 활동을 벌였고, 그 결과 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해에 간토 조선인 학살사건도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대중홍보사업과 특별법추진사업, 그리고 추도사업에 큰 힘이 되었던 것은 2011년부터 결합하여 힘이 되어준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 사회위원회(이하 기장 교사위)와 생명선교연대였다. 기장 교사위는 9월 첫 주가 재일동포선교주일로 제정된 이유를 교회에 알리기 위하여 전국 교회에 권고문과 자료들을 발송 해주었다. 또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간토학살희생자 추모예배와 재일동포 선교사역을 총회 사업으로 채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일 기독교계의 공식적 기구 중 하나인 한일 URM협의회에서 간토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자

는 결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마침 90주년이 되는 해이기에 언론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3년 추진된 '한국민간조사단'의 현장조사 활동은 SBS 8·15특집 다큐멘터리와 재외한국인을 위한 아리랑방송국에서도 오는 9월 초에 방영할 예정이다.

다가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간토 코리안제노사이드희생자 90주기행사 준비위원회'로 조직을 정비하게 된 것은 향후의 일을 추진해가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특별법 제정의 법안 마련을 위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이상희 변호사가 협력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유기홍 의원과 임수경 의원이 앞장서서 간토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고, 최근 동북아역사왜곡특위에서도 간토 조선인 학살사건을 역사왜곡의 중요한 주제로 삼아가기로 하였다.

무엇보다 한국에서의 진상규명 활동이 가능했던 것은 적은 인원으로 움직이는 '1923 간토한일 재일시민연대'를 위해 수십 년간의 진상조사 활동의 자료들을 지원하며, 학술적 지원과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비를 들여 한국을 찾아주는 일본의 연구자들과 진상규명 활동가들의 시들지 않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평가한다.

2.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운동의 향후 사업과 과제

- 간토 조선인 학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일
- 학살된 희생자의 유족을 찾는 일
- 일본 정부에 국가적 책임을 묻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일

- 일본에 있는 간토 관련 문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번역, 출판)하는 일
- 전 세계인이 간토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만드는 일
- 한일 민간단체가 공동의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간토 역사 부교재를 제작해 교육현장에 보급하는 일
- 한일 역사 및 사회교과 교사들을 위한 교육자료 제공과 연수를 실시하는 일
- 정기적인 스터디투어를 실시하는 일
- 간토 조선인 학살사건을 연구하는 연구생들을 지원하는 일
- 위 사업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재정과 인력을 늘려가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조직을 확대해가는 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찾아보기

- <ㄱ> 268, 278
- 가나가와 251
- 가나가와현[神奈川縣] 57, 90
- 가네코 후미코[金子文子] 58
- 가메이도[龜戸]사건 272
- 가시다 다다요시[檀田忠美] 118
- 가와이 요시토라[川合義虎] 49
- 가톨릭 276
- 간도문제 28
- 간온지[觀音寺] 263, 289
- 간토90주년행사준비위원회 288
- 간토대지진 263
- 간토대지진시 조선인 학살사건 298
- 간토[關東]대진재 276, 292
- 간토대진재 순난조선인 위령의 비 290
- 간토대진재시에 학살된 조선인의 유골을 발굴
하고 추도하는 모임 272
- 간토 대진재 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상조사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298
- 간토대진재 조선인 학살에 관한 특별 입법
제정 268
- 간토대진재 조선인학살의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촉구하는 한·일·재일 시민모임
- 간토대진재 조선인희생자 위령의 비 289, 290
- 간토 사진자료전 284
- 간토 조선인 학살문제 296
- 간토 조선인 학살사건 294
- 간토조선인 학살사건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241
- 간토 조선인 학살사건 전시회 278
- 간토 조선인 학살현장 285
- 간토 코리아국제노사이드희생자 90주기행사 준
비위원회 305
- 감사의 비 290
- 감천수우신사 289
- 강대흥 287, 289
- 강덕상 87, 133, 208, 245, 255, 268
- 강재언 87
- 강제병합 281
- 강제병합 100년 공동행동 한국실행위원회
295
- 강제병합 100년 특집 296
- 강제연행 203
- 강제연행 문제 296
- 게이힌[京浜] 144

- 경성일보 275
 경향신문 296
 계엄령 21, 196, 253, 287, 291
 계엄령에서는 '조선인은 적(敵)' 291
 高橋伸子 269
 고도[江東] 지구 22
 고등학교『한국근·현대사』 231
 高麗博物館 269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77, 293
 고일청(高一淸)·황진남(黃鎭南) 219
 고쿠라교회 279
 고회법 284
 공동성명 297
 공동실천 295
 공양탑 289
 관동대지진 한국인희생자 추모회 263
 關東大震災時朝鮮人虐殺事件 269
 關東大震災70周年·80周年記念行事實行
 委員會 269
 관동대진재희생동포위령비 135
 關西學院大學 269
 관청자료 276
 관현 270
 관현설 21
 교과서 검정 156, 157, 158, 174
 교과서 공격 154, 155, 156, 157
 교육기본법 156
 교육출판 242
 교쿠온[玉音]방송 274
 구도 미요코[工藤美代子] 237
 구(舊) 쓰키시마 3호지 289
 구 오쿠라 다리 289
 구와노 야스오 301
 구학영 287
 具學永 287
 국가책임을 묻는 모임 284
 국회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의원모임 285
 국회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의원모임 269,
 285
 군마[群馬] 285, 289
 군마현[群馬縣] 90
 규슈 278
 그룹 '봉선화' 287
 그룹 호센카 271, 272
 금병동 88, 133, 208, 273
 기네가와[木根川] 271
 기누타 272
 기미가요(일본 국가) 270
 기타큐슈 295
 기타큐슈시[北九州市] 278
 김경해 185
 김광열 185
 김낙영 92
 김달수 37

- 김대원 301
- 김승학 94, 212
- 金令順 269
- 김의경 263
- 김인덕 184
- 김종수 269
- 김창규 284
- 깃카와 미쓰시다[吉川光貞] 57
- 〈ㄴ〉
- 나카이 가후[永井荷風] 37
- 나카이 류타로[永井柳太郎] 275, 292
- 나기노하라 289
- 나기노하라 학살터 286
- 나라시노 135
- 나라시노 수용소 265
- 나라시노시 265
- 나카노 세이스케[中野清助] 30
- 나카니시 이노스케[中西伊之助] 270
- 나카무라 강가 290
-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258
- 나카츠카 아키라[中塚明] 274
- 남갈노동회 49
- 남녀공동참획센터 ‘무브’ 279
- 내셔널리즘 292
- NEVER AGAIN GENOCIDE 298
- 노주은 209
- 니시오 간지 74
- 니시자키 마사오[西崎雅夫] 225, 241, 271, 286, 287
- 니항사건 28
- 〈ㄷ〉
- 다가와시[田川市] 278
- 다나카 마사타카[田中正敬] 289
- 다문화공생교육 287
- 다카노 히로야스 289
- 다카쓰 289
- 다카하시 다카스케 289
- 다카하시 마스오[高橋益雄] 136
- 대한학교 285
- 대중홍보사업 304
- 대한민국임시정부 211
- WCC 제10차 부산 세계총회 298
- 데라우치[寺内] 내각 250
- 도롱코노쿠니 264
- 도야마 미쓰루[頭山滿] 29
- 도자와 니사부로[戸澤仁三郎] 87
- 도치기[栃木] 85
- 도쿄[東京] 85, 285
- 도쿄도[東京都] 교육위원회 238
- 도쿄도위령당 289
- 도쿄 세키구치 교회 276
- 도쿄조선유학생학우회 95

- 독립 275
- 독립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 214
- 독립신문 94, 211
- 독일 96
- 동경지방이재조선인구제회(東京地方罹災朝鮮
人救濟會) 95
- 동북아역사재단 242, 304
- 동북아역사특별대책위원회 299
- 동아시아사 233
- 동아일보 225
- 듣기조사 285
- 〈ㄹ〉
- 라칸지[羅漢寺] 289
- 레닌 274
- 렌쇼지[蓮勝寺] 290
- 력사사전 234
-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258
- 료쿠인서방[綠蔭書房] 276
- 리츠메이칸대학 241
- 릿쿄대학 273
- 〈ㄹ〉
-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 258
- 마르크스 274
- 마쓰오 다카요시[松尾尊兌] 19, 87, 236
- 마쓰오 쇼이치[松尾章一] 273
- 마에다 아키라 295
- 마에바시[前橋]지방재판소 114
- 망명객 214
- 망명정부 281
- 매일신보 225
- 메이데이 251
- 목련나무 286
- 문무선 293
- 문화재 반환요구 297
- 미쓰자와 모지 290
- 미즈노 렌타로[水野鍊太郎] 22, 27, 234
- 미청산과제 296
- 민족교육 184
- 민족문제연구소 281, 304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305
- 민주신당 266
- 민중면제론 20
- 〈ㄴ〉
- 박경서 269
- 박열 58
- 박은식 27, 212
- 박진우 269
- 박한용 282
- 발기인 268
- 法政大學 269
- 보시체 신문 96

보화종루 263, 286
 본번호사연합회 282
 부르크하르트(Burkhardt) 96, 219
 부흥기념관 289
 불령선인 199, 282
 불하(拂下) 265
 뿌박사 방문기 219

 〈스〉
 사법처리 112
 사이타마[埼玉] 85, 285, 289
 사이타마현 55, 133, 276
 사이토 히데오[齊藤秀夫] 86
 사할린동포 문제 해결 296
 사할린 잔류 조선인 피해문제 297
 사회주의자 35, 50, 251
 산미증산계획 149
 山田昭次 269
 3·1운동 26, 253, 280
 3·1절 281
 상하이 281
 상해임시정부 93, 293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71, 130~
 131
 생명선교연대 304
 서굉일 269, 280
 선인(鮮人) 266
 소개(疎開) 274
 松尾章一 269
 宋富子 269
 송부자 명예관장 266
 쇼주인[正樹院] 289
 순국선열유족회 230
 스미다구 야히로 290
 스미다천 59
 스타디투어 285
 시모노세키 278
 시모노세키시[下関市] 278
 시베리아 출병 28
 시즈오카[靜岡] 274
 시(詩)탑 289
 시효 281
 식민사관 294
 식민지 과거사 해결 295
 식민지 범죄청산 296
 신교육과정 232
 신명개 121
 신오쿠보 266
 신우식 263
 신자유주의 259
 신주쿠 고려박물관 265
 신태옥 92
 실교출판 136
 실험률 114

- 싸우는 조선 274
- 쓰보이 시게하루[坪井重治] 23
- <○>
- 아동증언자료 276
- 아라카와 학살현장 286
- 아라카와[荒川] 271
- 아리랑방송국 305
- 아리랑의 노래(Song of Arirang—A Korean Communist in the Chinese Revolution) 239
- 아베 신조[安倍晋三] 75
- 아사쿠사 301
- 아사히신문 274
- 아시아·태평양전쟁 270
- 아시아하우스 264
- アジアハウス 269
- 아카하타 96
- 아키타 우자쿠[秋田雨雀] 270
- 아힘나운동본부 264
- 아힘나평화캠프 264
- 아힘나평화학교 287
- 안광천(安光泉) 86
- 아마다 다쿠미[山田巧] 70
- 아마다 쇼지[山田昭次] 88, 138, 208, 268, 289, 295
- 아마모토 곤노효에[山本權兵衛] 36, 93
- 아마모토 스미코 290
- 아마카와 히토시[山川均] 48
-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288
- 야스쿠니신사 270
- 야치오시 265
- 야키가야 다에코[人木ヶ谷妙子] 264, 286
- 에도에서 도쿄로 238
- SBS 305
- 에이타이 다리 289
- 에큐메니안 288
- NCC 296
- NCCJ-URM(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 도시농어촌선교위원회) 296
- NCK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96
- 엔젤스 274
- 여운형 94, 214
- 역사교육 179
- 역사교육자협의회 134
- 오비[小尾] 276
- 5·4운동 27
- 오스기 사카에[大杉榮] 145
- 오충공 89
- 오카와라 마사코[大河原雅子] 271
- 오타구 이케가미[大田區池上] 275
- 오타케 요네코[大竹米子] 289
-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의원모임 266
- 와세다 275

와카루 요코하마(わかるヨコハマ) 293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 86, 270
 요시오카 요시노리[吉岡吉典] 87
 요쓰기바시[四ツ木橋] 272
 요코야미초공원 286, 302
 요코하마[横濱] 85
 요코하마 교육위원회 293
 요코하마시[横濱市] 교육위원회 239
 요코하마 알기 239
 우경화 299
 우에노[上野]공원 53
 우치다 료헤이[内田良平] 29, 254
 위령당 302
 위령비 21
 위령의 종 289
 유골매장 89
 유골을 발굴하여 추도하는 모임 287
 유기홍 의원 266, 269, 299
 유성준 92
 유언비어 194, 266, 292
 유족찾기 사업 301
 6,661명 303
 윤기섭(尹琦燮) 94, 214
 윤해 212
 의문의 괴공사 286
 이동제 95
 이마모토 요코 290

이미경 의원 267
 이바라키[茨城] 85
 이상협 227
 이상희 변호사 305
 이와나미[岩波] 276
 이유헌(李裕弼) 94, 214
 李恩子 269
 이은자 박사 268
 이재조선동포위안반(羅災朝鮮諍司胞慰安班) 95
 이재호 119
 이정훈 284
 이조메 료쿠로[井染祿郎] 34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36, 281
 이타바시[板橋] 274
 이토 노에[伊藤野枝] 145
 2·8독립선언 188
 이형식 209
 인도(人道) 291
 일본군위안부 문제 296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 도시농어촌선교위원회
 299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 도시농어촌선교위원회
 (NCCJ-URM) 297
 일본문교출판 242
 일본변호사연합회 90, 260, 293
 일본사A · 일본사B 243
 일본사사전 237

- 일본의 우경화 179
- 일본 이주 186
- 1인극 267
- 1923 간토헌일 재일시민연대 278, 284~285, 288
- 일한우방협회 275
-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 263
- 임수경 의원 299
- 임정교 92
- 〈ㅈ〉
- 자경단 207, 230, 238, 287
- 자유주의사관 71
- 자이니치[在日] 203
- 자학사관 71
- 장제스 39
- 재동경이재조선인임시구제회(在東京罹災朝鮮人臨時救濟會) 92
- 재외 공민 대학살 281
- 재일대한기독교회 279
- 재일동포인권선교주간 301
- 재일동포인권선교주일 296
- 재일본 관동지방 이재(罹災) 조선동포위문반 214
- 재일본조선인연맹 184
- 재일유학생 92
- 재일조선기독교청년회 95
- 재일조선동포피해살상진상조사회(在日朝鮮同胞被害殺真相調查會) 95
- 재일조선인 179, 256, 278, 293
- 재일천도교청년회 95
- 재일한국인 273
- 재일한인기독교단 301
- 재일한인역사자료관 284
- 전남 신안 302
- 前 立教大學 269
- 전쟁상태 291
- 정무총감 234, 275
- 정종석 269, 272
- 정치범 273
- 정희선 184
- 제9회 한일 NCC-URM협의회 297
- 제노사이드 역사관 284
- 제도(帝都)의 적(敵) 266
- 제10회 한일 NCC-URM협의회 299
- 조건치 301
- 조덕진(趙德津) 94, 214
- 조런 286
- 조상섭(趙尙燮) 94, 214
- 조선노동동맹회 47
- 조선대백과사전 236
- 조선인 노동자동맹회 256
- 조선인 학살사건 179, 263
- 조선인희생자의 비 289

조선일보 225
 조선전사 235
 조선총독부 25, 226
 조소앙 93
 조완구(趙琬九) 94, 214
 조진경 269
 조도지[成道寺] 289
 조센지[常泉寺] 289
 조신지[淨心寺] 290
 조후쿠지[長福寺] 지심공양탑 289
 朱文洪 268
 중공신서 276
 중국인 학살문제 180
 중앙공론 110
 중한호조사(中韓互助社) 96
 즉결처형 291
 지바[千葉] 85, 263, 285, 289
 지바현 265
 진상규명 304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95
 집단학살(genocide) 88

 <ㄷ>
 차별의식 292
 참여정부 302
 천도교청년회 201
 천황제 196

 청수서원(淸水書院) 242
 총독부 275
 최석근 121
 최승만 111
 추도목비(토바) 287
 추도비 286
 추도사업 304
 추도하는 모임 272

 <ㅋ>
 KCCJ(在日大韓基督敎會) 296
 코리안 제노사이드 282
 코튼하버 아사노 조선소 290

 <ㅌ>
 테러분자 301
 테로단 235
 토지조사사업 149
 특별법 제정 295
 특별법추진사업 304

 <ㅍ>
 판결문 91
 8·15특집 다큐멘터리 305
 패널 전시회 265
 폭동 270
 피학살 85

<ㅎ>

하니 고로[羽仁五郎] 87

하라 다카시[原敬] 275

하리카타 지에코 295

하중문 269

학살사건 154, 157, 168, 171, 173, 174

학습지도요령 156, 157

학우회 187

한겨레신문 296

한국근·현대사 23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 평화위원회
(NCKK-Justice and Peace Committee-
이하 NCKK-JPC) 297, 299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 288,
296

한국기독교장로회 외국인선교협의회 269

한국민간조사단 285, 288

한국사 교과서 232

한국 실행위 296

한국의 역사단체 295

한국·조선인 순난자 추도의 비 290

한세복(韓世復, 본명 韓光洙) 104, 214

한신[阪神]교육투쟁 185

한신대학교 269

한일 URM협의회 296, 297

한일 과거사청산 295

한일 교류의 역사 233

한일민족문제학회 269

해군송신소 286

허광무 185

헌병정치 25

헌정회 292

헛모 303

호놀룰루 96

호센지[法泉寺] 290

호소카와 모리히로 75

호쇼지[寶生寺] 290

홍성직 284

황국신민 291

후나바시 134

후세 다쓰지[布施辰治] 270

후지노미야[富士宮] 274

후지시마 우나이[藤島宇内] 87

후지오카[藤岡] 사건 91

후지오카 노부카쓰[藤岡信勝] 71

흙투성이의 나라 264

희산(希山) 97

히노마루(일장)기 270

히리카타 지에코[平形千恵子] 289

<기타>

Massacre of Koreans in Japan 224

The List of killed bodies and places 110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 57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초판 1쇄 인쇄 2013년 12월 20일

초판 1쇄 발행 2013년 12월 31일

지은이 강덕상 · 야마다 쇼지 · 강효숙 · 다나카 마사타카
서종진 · 김인택 · 장세운 · 모리카와 후미토 · 김종수

펴낸이 김학준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e-mail book@nahf.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13

ISBN 978-89-6187-317-8 93910

- * 이 책의 출판권과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CIP2014000621)
- *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